

국립국어원 2018-01-4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44-01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연구 책임자
김 미 선

국립국어원 2018-01-4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44-01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연구 책임자
김 미 선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김미선(중앙대학교)

연구 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미선
공동연구원 임현열, 조윤정, 최유숙

목차

국문 초록	iii
Abstract	iv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개요	22
II. 세부 진단 방법 및 절차	26
1. 진단 대상 보도 자료 수집	26
2. 보도 자료 진단 절차	53
III. 진단 결과	64
1. 정확성 평가 요약	64
2. 소통성 평가 요약	66
3. 정확성·소통성 평가 합산	68
4. 군별 평가 결과 비교	70
5. 정확성 평가 결과 분석	71
6. 소통성 평가 결과 분석	77
IV. 진단 결과 요약 및 기관별 개선안 사례	82
1. 진단 결과 요약	82
2. 기관별 개선안 사례	84
V. 공공언어 진단의 영역 확장 및 개선 방안	415
1. 정부 업무보고 자료 진단	415
2.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 진단	420
3. 언어 관계망을 활용한 보도 자료 소통성 평가 결과 분석	425

VI. 보고서 활용 및 정책 제언	435
1. 보고서 활용 방안	435
2. 정책 제언	436
붙임	438
1. 2018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연수회 일정표	438
2. 보도 자료에 나타난 어려운 한자어 목록	439
3. 보도 자료에 나타난 외래어 전체 목록	442
4. 18부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어려운 정책 용어	454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보도 자료의 평가, 진단, 교육을 ‘지속’하였고, 소통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평가 요소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보도 자료 외에도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기관 누리집 첫 화면 등으로 공공언어 진단의 대상을 ‘확장’하였다.

이전 사업의 ‘지속’인 보도 자료 평가는 1월~10월에 생산된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5월, 7월, 9월, 11월,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진의 정확성 평가 20%, 시민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 30%, 전문가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 50%를 반영하여 보도 자료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어 이상의 두 기준에 의거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평가와 진단을 통해 마련된 개선 방안으로 보도 자료 작성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회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여 보도 자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보도 자료 소통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평가 요소의 ‘개선’도 제안하였다. 지난 7년간의 보도 자료 평가 및 진단을 통해 평가 체계가 안정화되었고,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왔지만, 소통성 평가의 타당성,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연구진은 온라인 설문 시스템인 ‘서베이몽키(SurveyMonkey)’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바 이를 통해 소통성 평가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 요소의 개선도 제안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보도 자료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새로운 범주로 공공언어의 진단 대상을 ‘확장’한바 18개 부단위 기관의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누리집 첫 화면이 그 대상이 되었다.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누리집 첫 화면의 진단을 통해 소통을 저해하는 어려운 한자어나 낱선 외래어, 외국어 등에 대해 대안어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8년 공공언어진단 사업에서는 2011년 이래의 공공언어 진단을 지속, 개선, 확장함으로써 공공언어의 모범 사례 확보와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국어사용 환경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였다.

Abstract

The 2018 Public Language Diagnosi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2018 Public Language Diagnosis continued the evaluation, diagnosis, education of press releases, not only improved upon the evaluative methods of engagement but also proposed to improve the rubric itself, and broadened the scope of public language to activity reports and the first pages of websites.

The continuation of the previous project, the evaluation of press releases, were conducted four times on May, July, September and November, with the subjects being the press releas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ssued during from January to October. An evaluation of accuracy by the researchers themselves, an evaluation of engagement by citizens and also by professionals took up 20%, 30%, and 50% of the points, respectively. The researchers then analyzed the results and created a plan for improvement. With the plan created via evaluation and diagnosis, a coaching program for the staffers writing the press releases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ress releases.

Moreover, the evaluative methods of engagement were improved, and it was also proposed that the rubric needed improvement. Even though the evaluative system stabilized with the seven years of press release evaluation and diagnosis, and the quality of press releases has improved, that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on the validity and efficiency of engagement evaluation was duly noted. The researchers employed the online survey system ‘SurveyMonkey’ to improve efficiency, and through this were able to analyze the engagement evaluation and propose a new evaluative rubric.

Furthermore, as the scope of public was broadened, the activity reports and websites of government agencies were became subject to evaluation. Replacements for difficult Sino-Korean words, uncommon loan words, and foreign words that deter engagement were proposed.

The 2018 Public Language Diagnosis continued, improved, and broadened the public language diagnosis from 2011 onwards, and thus improved the quality of the Korean-using environment by collecting model samples and improving upon the public language environment.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민현식 외(2010)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2009년 공공언어지원단으로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학술대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0년 국립국어원 주도로 진행된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나타냈다.¹⁾ 민현식 외(2010)²⁾에서는 공공언어의 장르를 [표 1]과 같이 ‘법률문, 보도 자료, 공고문, 기사문, 식사문, 안내문’ 등으로 나누었다.

공공언어의 장르	하위 유형
법률문	입법예고, 고시, 조례, 약관 등
보도 자료	일반 보도 자료, 해명 보도 자료 등
공고문	공모 공고, 인사 공고 등
기사문	
식사문	인사말, 축사, 신년사, 기념사 등
안내문	기관 안내, 업무 안내 등

[표 4] 민현식 외(2010)의 공공언어 장르

공공언어의 범주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4)에서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³⁾ 생산 주체를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으로 나누고 유형을 문어와 구어로 구분하였다. 공공기관 공공언어의 범주를 ‘보도 자료, 법령, 판결문, 게시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민원서류 양식’ 등으로 분류하였다.

1) 최유숙 외(2018:62), 「진단 대상 공공언어의 범주 확장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17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 민현식 외(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3)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생산 주체	종류	
	문어	구어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도 자료, 법령, 판결문, 게시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민원서류 양식 등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	(신문, 인터넷 등의) 기사문,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방송 언어, 약관이나 사용 설명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표 5] 민현식 외(2010)의 일반적인 공공언어 생산의 주체 및 유형⁴⁾

공공언어 진단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인 민현식 외(2010)⁵⁾에서는 공공언어의 진단 항목을 [표 3]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영역	요소	항목
1. 정확성 (범용 기준)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표 6] 민현식 외(2010)의 공공언어 진단 항목

4)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p.6.

5) 민현식 외(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이와 같은 진단 항목을 진단 과정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진단 지표(PDDI, Public Document Diagnosis Index)로 체계화하였으며, 이는 정확성 400점 만점, 소통성 600점 만점의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먼저 [표 3]에서 제시한 정확성의 6개 진단 항목은 A에서 E까지의 5개 등급으로 항목별 진단을 실시한 후 이를 4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또한, 소통성의 9개 기준 각각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어 정확성에 비해 다소 복잡한 지표 환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정확성과 달리 소통성 진단 기준은 모든 공공언어 범주에 동일한 배점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성과 마찬가지로 9개의 진단 기준에 따라 각각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고, A에서 E까지의 5개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 후, 공공언어의 범주별로 각각 상이한 가중치를 반영한 뒤, 그 합을 일정한 수식에 따라 6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요소	항목	배점	수식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00	등급별 점수 부여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00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00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00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00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100	
각 정확성 영역 합계		600	$C = \text{SUM}(G1.1.1 : G1.1.6)$
PDDI Correctness Criteria		400	$\{(C \times 0.666) + 0.4\}$

[표 7] 민현식 외(2010)의 정확성 영역 배점 방식

요소	항목	배점	수식	가중치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100	등급별 점수 부여	= G' × 가중치 변동 값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100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100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100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100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100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100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100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100		
각 소통성 영역 합계		변동값	C = SUM(G' _{2.1.1} : G' _{2.1.6})	
PDDI Intelligibility Criteria		600	C' = [{SUM(G' _{2.1.1} : G' _{2.1.6})} × α] + β	

[표 8] 민현식 외(2010)의 소통성 영역 배점 방식

[표 5]에서의 보도 자료 소통성 평가에서는 설문 조사에 따라 일반 국민이 부여한 가중치(P)와 전문가들이 부여한 가중치(E)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세부 항목 내용	가중치 수식 $I = \{G_{\text{세부항목}} \times (P_{\text{가중치}} + E_{\text{가중치}})\}$	배점 (I 보도 자료)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I_1 = \{G_{2.1.1} \times (2.34+4.00)\}$	634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I_2 = \{G_{2.1.2} \times (2.69+4.29)\}$	698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I_3 = \{G_{2.1.3} \times (2.46+4.43)\}$	689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I_4 = \{G_{2.2.1} \times (2.58+4.57)\}$	715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I_5 = \{G_{2.2.2} \times (2.62+3.86)\}$	648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I_6 = \{G_{2.2.3} \times (2.69+4.29)\}$	698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I_7 = \{G_{2.3.2} \times (2.83+3.86)\}$	669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I_8 = \{G_{2.3.2} \times (3.02+3.14)\}$	616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I_9 = \{G_{2.3.3} \times (3.12+4.43)\}$	755
	만점	6,122
I 합계	$\{6,122(I \text{ 보도 자료}) \times 0.098(\alpha) - 0.044(\beta)\}$	600

[표 9] 민현식 외(2010)의 소통성 영역의 가중치 수식

민현식 외(2011)에서는 실제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를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40곳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의 보도 자료 4건씩을 선정하여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였다.

등급	점수	해당 기관
1등급 (7곳)	총점 96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2등급 (28곳)	총점 940점 이상 960점 미만	행정안전부, 통일부, 법무부, 기상청, 특허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수산물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보건복지가족부,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해양경찰청, 국방부
3등급 (5곳)	총점 940점 미만	관세청, 산림청, 병무청, 외교통상부, 경찰청

[표 10] 2011년 중앙행정기관의 진단 결과

구본관 외(2012)에서는 민현식 외(2011)와 같은 방식을 따르되 몇 가지 수정을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국무총리실’을 추가하였고,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로 10건의 보도 자료를 진단하였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앙행정기관에 ‘국무총리실’을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 41곳,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의 총 57곳의 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진단했다.
- ② 2011년 진단에서는 기관별로 4건씩의 보도 자료를 선정하여 진단하였는데,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진단에서는 기관별로 10건씩의 보도 자료를 진단한다. 이를 전반기 7건, 후반기 3건으로 나누어 진단했다.
- ③ 2011년 진단에서는 민현식 외(2010)에서 개발한 15개 진단 항목, 가중치 적용 방식, 배점 방식 등을 사용하였는데, 2012년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이 크게 늘어남을 고려하여 진단 항목을 7개로 축소하고 가중치도 적용하지 않았다.
- ④ 2011년 진단에서는 세부 진단 항목별로, 등급 간 점수를 5점씩 차등하여 부여하였는데, 2012년 진단에서는 10점씩 차등하여 부여했다.

구본관 외(2012)에서는 2차에 걸친 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단 결과를 등급화하였다.

등급	점수(700점 만점)	해당 기관(순위순)
1등급 (3곳)	총점 65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2등급 (31곳)	총점 600점 이상 650점 미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기상청, 법제처, 병무청,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검찰청,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중소기업청, 국방부, 통일부, 관세청, 농림수산물식품부
3등급 (7곳)	총점 600점 미만	국세청, 국무총리실, 조달청,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표 11] 2012년 중앙행정기관의 진단 결과

뒤이어 최흥열 외(2013)⁶⁾에서는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을 통해 문서를 쉽게 진단하는 방법을 고안

6) 최흥열 외(2013),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 국립국어원.

하였다. 총 59곳의 행정기관 보도 자료를 진단하였으며, 전반기 10건, 후반기 10건으로 나누어 기관별로 총 20건의 보도 자료를 진단하였다. 2013년도 연구의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 등 총 59곳의 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진단했다.
- ② 2012년 연구에서는 전반기 7건, 후반기 3건으로 나누어 기관별로 총 10건씩의 보도 자료를 진단하였는데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진단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작업 효율 향상을 살피기 위해 2013년 연구에서는 전반기 10건, 후반기 10건으로 나누어 기관별로 총 20건의 보도 자료를 진단했다.
- ③ 진단 대상 자료를 ‘보도 자료’로 한정하며, 보도 자료가 부족할 경우라도 다른 장르의 문서로 채워서 진단하지 않았다.
- ④ 2013년 연구에서는 진단 대상이 크게 늘어남을 고려하여 새로운 진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2012년 진단 기준을 따라 총 7개의 항목으로 진단하고 가중치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등급 간 점수도 기존 10점씩 차등 점수로 유지했다.
- ⑤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 진단은 최초 진단 후 2회의 교차 재검을 거쳐 총 3회 진단했다.
- ⑥ 진단 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수 진단자의 접근이 가능한 웹하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사용했다.
- ⑦ 전반기 진단 결과 ‘③’의 진단 기준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후반기에는 수정하여 진단했다.
- ⑧ 2013년도 연구 과제에서 개발하는 진단 자동화 도구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변환 도구: 한글(HWP) 문서를 수기 진단 도구로 진단할 수 있게 일괄 변환해 주는 도구
수기 진단 도구: 수기 진단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서 진단 도구
자동 진단 도구: 수기 진단 시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자동으로 진단해 주고 진단된 내용을 학습하여 다음 진단에 반영하는 도구
결과 출력 도구: 진단한 문서의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해 주는 도구
- ⑨ 전반기 진단 과정에서는 ‘수기 진단 도구’ 개발에 집중하고, 후반기 진단에서 ‘자동 진단 도구’를 ‘수기 진단 도구’에 탑재하여 이를 점검했다.
- ⑩ 문서의 진단과 진단 자동화 도구 오류의 개선을 병행했다.

2013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42곳의 중앙행정기관과 17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와 2차 진단에서 각각 기관별 10건씩 보도 자료 진단을 실시하였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 결과를 합산하여 그 결과를 순위화하면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700점 만점)	해당 기관(순위순)
1등급 (6곳)	총점 65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기상청, 통계청
2등급 (25곳)	총점 620점 이상 650점 미만	국토교통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국세청,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민권익위원회, 통일부, 검찰청, 관세청, 교육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3등급 (11곳)	총점 620점 미만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표 12] 2013년 중앙행정기관의 진단 결과

최홍열 외(2014)⁷⁾의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통성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진단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류하여 문서를 진단하였다.

소통성 진단은 매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문서 2건과 연구진이 선별한 문서 2건, 총 4건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개월 동안 생산된 총 1,056건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였다. 시민평가단의 소통성 진단이 1차로 이루어지고, 전문가 평가단의 소통성 진단이 2차로 진행되었다.

2014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 각 기관의 우수 기관 선정 횟수와 미흡 기관 선정 횟수는 다음과 같다.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1	3
	국민권익위원회	0	3
	기상청	4	0
	농촌진흥청	2	0
	문화재청	1	2

7) 최홍열 외(2014), 『2014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정밀화』, 국립국어원.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문화체육관광부	1	0
	법제처	2	1
	병무청	0	4
	산림청	0	2
	새만금개발청	0	2
	소방방재청	2	0
	여성가족부	2	0
	통일부	3	0
	해양경찰청	0	1
나군	경찰청	1	3
	공정거래위원회	3	0
	국가보훈처	0	2
	국방부	0	3
	국세청	6	0
	대검찰청	0	0
	방송통신위원회	0	3
	방위사업청	0	1
	법무부	2	0
	보건복지부	2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조달청	2	0
	해양수산부	0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2
	환경부	1	0
다군	고용노동부	3	0
	관세청	3	0
	교육부	1	1
	국토교통부	2	0
	금융위원회	1	3
	기획재정부	0	5
	농림축산식품부	0	1
	미래창조과학부	0	1
	산업통상자원부	2	2
	안전행정부	2	1
	외교부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0	3
	중소기업청	0	0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통계청	0	0
	특허청	3	0

[표 13] 2014년 중앙행정기관 소통성 평가 모듬별 우수·미흡 기관 선정 횟수

정확성 진단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대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생산된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매달 4건씩의 문서를 수집하여 5개월 동안 생산된 총 340건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정확성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기관	음절 수	총점 평균
1	세종특별자치시	20,256	652.5
2	부산광역시	24,045	651.0
3	대구광역시	25,431	649.0
4	충청남도	26,595	647.0
5	경기도	27,872	642.5
6	대전광역시	25,605	641.0
7	울산광역시	22,548	639.0
8	광주광역시	20,751	634.0
9	전라남도	22,069	630.5
10	인천광역시	27,410	628.0
11	경상남도	25,734	627.5
12	경상북도	27,331	620.0
13	충청북도	21,699	619.5
14	서울특별시	37,525	617.5
15	제주특별자치도	24,528	614.5
16	강원도	25,166	596.5
17	전라북도	27,277	596.0

[표 14]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확성 평가 행정기관별 순위

2015년에는 정확성 진단 40점, 시민 소통성 진단 60점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개 기관을 우수 기관, 하위 3개 기관을 미흡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으로 진단을 진행하였다. 2015년 연구에서의 주요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개편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보도 자료를 진단했다. 또한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생산되는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44곳의 중앙행정기관을 3개의 군으로 나누어 진단했다.
- ②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관에서 직접 제출한 문서 2건을 진단에 포함한다. 따라서 매월 제출 문서 2건, 선별 문서 2건, 총 4건의 보도 자료를 진단했다.
- ③ 진단 대상 자료를 ‘보도 자료’로 한정하며, 보도 자료가 부족할 경우라도 다른 장르의 문서로 채워서 진단하지 않았다.
- ④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소통성 진단 항목을 간소화하여 진단했다.
- ⑤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 진단은 정확성 진단, 시민 평가단 진단, 전문가 평가단 진단의 세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 ⑥ 각 군별로 시민 평가단 4인, 전문가 평가단 3인을 배정하여 평가했다.
- ⑦ 시민 평가단은 무작위 선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학계 및 한글 단체계’, ‘언론계’, ‘홍보계’의 세 개의 전문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각 군별로 고르게 배정했다.
- ⑧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전문가 평가단의 진단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전문가 평가단 진단은 시민 평가단 진단과 정확성 진단 결과를 합산한 후 상위 3개 기관, 하위 3개 기관, 총 6개 기관으로 한정했다.
- ⑨ 위 ‘⑧’은 시민 평가단 평가를 60%, 정확성 평가를 40%로 하여 합산했다.
- ⑩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시민 평가단은 ‘소통성 평가 세부 규정’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⑪ 진단 결과 ‘④’의 진단 기준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하여 진단했다.
- ⑫ 매월 진단이라는 특성상 ‘⑥’의 평가단은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2016년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의 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총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도 자료 평가를 진행하였다. 진단 주기를 격월로 바꾸었고, 정확성 평가의 비중은 20%로 낮추고, 시민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 30%, 전문가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 50%를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 결과를 참조하여 전문가 평가 회의에서 각 군별 상위 3개, 하위 3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 및 미흡 기관, 최우수 문서 및 미흡 문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우수 보도 자료 2건 제출 + 기관별 미흡 보도 자료 2건 임의 선정 (나군 대검찰청은 4건 모두 임의 선정)
7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우수 보도 자료 2건 제출 + 기관별 미흡 보도 자료 2건 임의 선정 (나군 대검찰청은 4건 모두 임의 선정)
9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8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우수 보도 자료 2건 제출 + 기관별 미흡 보도 자료 2건 임의 선정 (나군 대검찰청은 4건 모두 임의 선정)
11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0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우수 보도 자료 2건 제출 + 기관별 미흡 보도 자료 2건 임의 선정 (나군 대검찰청은 4건 모두 임의 선정)

[표 15] 2016년 진단 시기 및 진단 대상 보도 자료 문서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기관 제출 문서 종합(기관당 2건) 연구진의 문서 선별(기관당 2건) ※ 평가 대상 보도 자료 총 176개 수합 	매일 첫째 주 완료
↓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의 정확성 평가 시민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 전문가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 	매일 셋째 주 완료
↓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점수의 통계 처리 ※ 가중치 반영 점수 산출 및 각 평가단 점수 합산 전문가 평가회의 자료 생산 	매일 넷째 주 완료
↓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평가회의 소집 최우수 기관 및 미흡 기관 선정 최우수 문서 및 미흡 문서 선정 	매일 넷째 주 완료

[표 16] 2016년 중앙행정기관 대상 진단 절차

이러한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한 2016년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의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평균값)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74.28	76.88	75.91	80.92	77.00	14
	국민권익위원회	82.71	84.63	78.29	84.36	82.50	5
	국민안전처	75.33	81.28	77.62	83.18	79.35	10
	기상청	81.61	86.19	85.25	83.32	84.09	2
	농촌진흥청	78.95	79.34	81.36	80.78	80.11	8
	문화재청	84.24	83.83	81.62	81.39	82.77	4
	문화체육관광부	85.58	86.19	83.99	83.37	84.78	1
	법제처	77.76	82.12	82.63	81.42	80.98	7
	병무청	78.10	85.01	81.36	82.09	81.64	6
	산림청	79.79	85.20	86.04	84.31	83.84	3
	새만금개발청	75.55	80.51	79.64	81.06	79.19	11
	여성가족부	81.66	83.51	75.27	79.71	80.04	9
	통일부	76.21	80.77	74.66	77.92	77.39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6.89	84.32	75.20	79.74	79.04	12
나군	경찰청	81.25	77.40	76.34	76.03	77.76	11
	공정거래위원회	86.64	77.65	83.70	80.94	82.23	2
	국가보훈처	79.83	77.51	74.05	73.65	76.26	14
	국방부	82.42	78.84	79.36	74.59	78.80	8
	국세청	80.52	74.51	80.57	76.03	77.91	10
	대검찰청	78.98	76.31	79.84	77.90	78.26	9
	방위사업청	73.78	71.29	79.60	75.87	75.14	15
	법무부	86.67	76.78	84.84	78.95	81.81	4
	보건복지부	83.24	82.43	80.24	81.21	81.78	5
	식품의약품안전처	90.18	82.35	79.18	78.28	82.50	1
	인사혁신처	80.11	75.17	76.96	75.63	76.97	13
	조달청	77.33	76.45	79.71	76.33	77.46	12
	해양수산부	86.21	81.35	82.55	76.02	81.53	6
	행정자치부	85.01	78.08	79.00	78.92	80.25	7
	환경부	88.09	79.57	80.98	79.09	81.93	3
다군	고용노동부	72.46	72.07	71.63	73.98	72.54	12
	관세청	79.75	75.62	76.12	78.37	77.47	3
	교육부	77.52	77.68	73.02	77.18	76.35	4
	국토교통부	73.83	70.54	73.81	75.98	73.54	10
	금융위원회	67.43	70.93	74.48	62.72	68.89	15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평균값)
	기획재정부	69.23	71.54	72.75	70.41	70.98	14
	농림축산식품부	72.93	74.84	80.13	75.33	75.81	5
	미래창조과학부	73.22	76.76	77.00	73.06	75.01	6
	방송통신위원회	73.58	71.54	75.61	74.23	73.74	9
	산업통상자원부	73.01	81.53	76.06	79.35	77.49	2
	외교부	72.74	70.72	73.09	71.35	71.98	13
	원자력안전위원회	74.41	70.76	78.68	73.93	74.45	8
	중소기업청	69.67	71.85	74.68	77.62	73.46	11
	통계청	74.95	75.51	73.62	74.92	74.75	7
	특허청	77.11	79.05	76.66	79.22	78.01	1

[표 17] 2016년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 진단 결과

2016년 사업에서 제시한 우수, 미흡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구분	가군	나군	다군
5월 (1차)	우수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관세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금융위원회
		국민안전처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7월 (2차)	우수	기상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특허청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원자력안전위원회
9월 (3차)	우수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시기	구분	가군	나군	다군
	미흡	여성가족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11월 (4차)	우수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	특허청
	미흡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통일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혁신처	외교부

[표 18] 2016년 우수, 미흡 기관

2017년 공공언어 진단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되어 온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를 수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은 ‘평가’, ‘진단’, ‘교육’, ‘확장’이라는 단계로 수행하였다. 평가에 있어서는 모두 4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정확성 진단을 강화하였다. 소통성은 각 군별로 전문가 평가위원 3명, 시민 평가위원 6명을 두어, 보다 신뢰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였다.

진단 단계에서는 이상의 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 단계에서 통계 전문가인 연구진이 평가 점수를 통계 처리하고, 언어 전문가인 연구진이 이를 바탕으로 공공언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엄밀한 통계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공언어의 문제점이 세밀히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개선 방안 역시 엄밀해졌다.

평가는 5월, 7월, 9월, 11월에 걸쳐 4단계로 진행하였다. 추진 일정의 주요 사항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로 제출된 보도 자료 종합(2건씩) ■ 연구진의 기관별 보도 자료 수집(2건씩) ※ 평가 대상 보도 자료 총 176건 수합⁸⁾ 	평가 월 첫째 주 완료
↓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의 정확성 평가(표기, 표현) ■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시민, 전문가) 	평가 월 셋째 주 완료
↓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점수의 통계 처리 ■ 전문가 평가회의 자료 작성 	평가 월 넷째 주 완료
↓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평가회의 소집 ■ 최우수 기관 및 미흡 기관 선정 ■ 최우수 문서 및 미흡 문서 선정 	평가 월 넷째 주 완료

[표 19] 2017년 추진 일정 주요 사항

2017년 연구에서는 2016년 연구의 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표 17]의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도 자료 평가를 진행하였다.

8) 9월과 11월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변동이 있어서 가군이 14개에서 15개 기관으로 개수가 바뀌었다. 이로 인해 평가 대상 보도 자료는 176건에서 180건으로 늘어났다.

모듬	해당 기관	개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 국민안전처 폐지 (5월, 7월 평가 진행) ■ 소방청, 해양경찰청 신설(9월, 11월 평가 진행)	15
나군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세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환경부 ■ ()는 9월, 11월 명칭 변경	15
다군	고용노동부, 관세청,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특허청 ■ ()는 9월, 11월 명칭 변경	15

[표 20] 2017년 소통성 진단 대상 중앙행정기관

2017년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변동이 있어서 9월 평가부터 전체 행정기관의 수와 명칭이 바뀌었다. 가군에서 국민안전처는 폐지되었으나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되어 전체 개수가 14개에서 15개 기관으로 변동되었다. 나군과 다군에서는 명칭이 바뀐 기관만 존재하여 전체 개수는 변동이 없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의 명칭이 바뀌었다.

정확성 평가의 비중은 20%, 시민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는 30%, 전문가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는 50%를 반영하여 보도 자료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보도 자료의 평가는 총 4차례 이루어졌다. 진단 시기와 보도 자료 선정 기준은 [표 18]과 같다. 각 평가 시기마다 평가 대상이 될 보도 자료의 수합, 소통성 및 정확성 평가 결과 수합, 통계 처리 및 결과 산출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군별 최우수 기관 및 미흡 기관, 최우수 문서 및 미흡 문서를 선정하고 그 개선 방안을 연구진에서 작성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 평가를 마무리하였다.

5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4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우수 보도 자료 2건 제출 + 기관별 미흡 보도 자료 2건 임의 선정
7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6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우수 보도 자료 2건 제출 + 기관별 미흡 보도 자료 2건 임의 선정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나군 대검찰청은 4건 모두 임의 선정)
9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8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우수 보도 자료 2건 제출 + 기관별 미흡 보도 자료 2건 임의 선정 (나군 대검찰청 3건이 해당 기간 평가 대상 보도 자료 없음)
11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10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우수 보도 자료 2건 제출 + 기관별 미흡 보도 자료 2건 임의 선정 (나군 대검찰청은 4건 모두 임의 선정)

[표 21] 2017년 진단 시기 및 진단 대상 보도 자료 문서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 2017년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의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평균값)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82	84	84	80	83	9
	국민권익위원회	83	85	84	83	84	3
	국민안전처	79	84	-	-	82	11
	기상청	83	84	81	83	83	8
	농촌진흥청	84	81	79	80	81	12
	문화재청	81	83	83	82	82	10
	문화체육관광부	86	84	87	88	86	1
	법제처	81	85	83	82	83	7
	병무청	81	84	78	81	81	13
	산림청	86	84	82	82	83	5
	새만금개발청	78	87	86	83	83	4
	소방청	-	-	83	83	83	6
	여성가족부	83	83	86	90	85	2
	통일부	78	82	79	80	80	15
	해양경찰청	-	-	79	81	80	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0	80	81	81	80	14
나군	경찰청	77	75	72	72	74	13
	공정거래위원회	84	76	76	83	80	1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평균값)
	국가보훈처	74	74	74	74	74	12
	국방부	74	74	75	74	74	11
	국세청	78	77	79	80	78	4
	대검찰청	80	77	74	75	77	6
	방위사업청	74	75	71	73	73	15
	법무부	82	81	77	78	79	2
	보건복지부	73	74	76	79	75	9
	식품의약품안전처	77	77	70	77	75	8
	인사혁신처	76	76	70	72	73	14
	조달청	78	77	71	74	75	10
	해양수산부	81	80	80	75	79	3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80	79	77	75	78	5
	환경부	80	78	76	71	76	7
다군	고용노동부	69	73	84	82	77	14
	관세청	81	73	82	82	79	6
	교육부	75	76	87	84	81	3
	국토교통부	78	77	87	85	82	1
	금융위원회	72	73	78	82	76	15
	기획재정부	74	72	81	83	78	12
	농림축산식품부	77	74	82	84	79	7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	73	84	82	79	9
	방송통신위원회	71	75	82	85	78	10
	산업통상자원부	76	73	84	84	79	8
	외교부	74	71	81	82	77	13
	원자력안전위원회	72	72	82	86	78	11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75	78	83	85	81	4
	통계청	75	77	86	83	80	5
	특허청	77	77	85	87	81	2

[표 22] 2017년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 진단 결과

2017년 사업에서 진단한 결과 우수, 미흡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구분	가군	나군	다군
5월 (1차)	우수	산림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미흡	국민안전처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7월 (2차)	우수	새만금개발청	법무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해양수산부	통계청
		법제처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미흡	통일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방부	외교부
9월 (3차)	우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새만금개발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미흡	병무청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조달청	외교부
11월 (4차)	우수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청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인사혁신처	관세청
		통일부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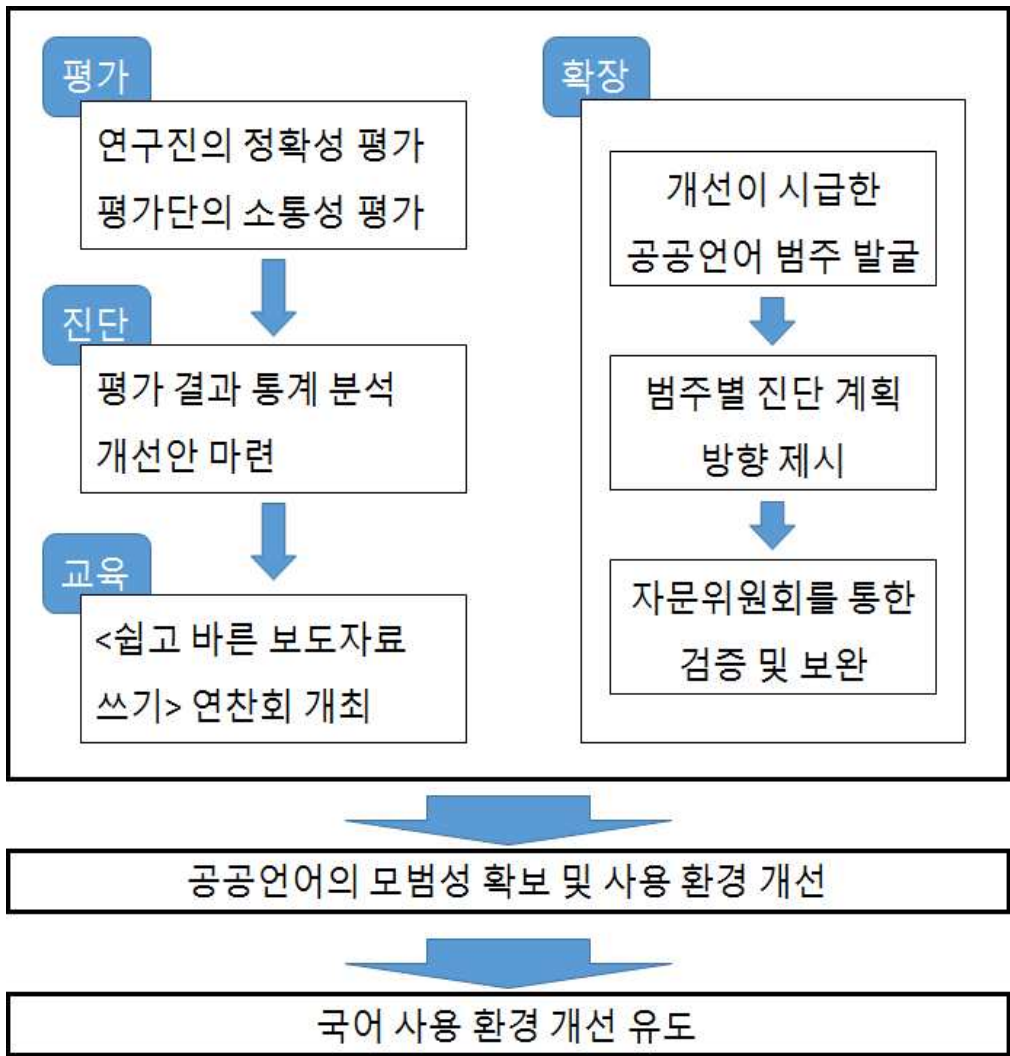
[표 23] 2017년 우수, 미흡 기관

평가와 진단의 단계를 수행하여 마련된 개선 방안을 실제 공공언어의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교육’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 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쉽고 바른 보도 자료 쓰기’를 주제로 하는 연찬회를 개최하여 보도 자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연구진은 이 연찬회에서 보도 자료의 평가와 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문

제점과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언어의 실무자 및 관련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연찬회 자료집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확장’ 단계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공공언어 진단을 다른 범주로 확대한 것이다. 2011년부터 축적된 공공기관 보도 자료의 평가와 진단 자료를 토대로, 보도 자료 외에도 개선이 요구되는 공공언어의 범주를 발굴하고 진단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7년 공공언어 진단 사업은 ‘평가’, ‘진단’, ‘교육’, ‘확장’의 단계적인 진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공언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상의 2017년 공공언어 진단 연구의 과정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2017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연구의 과정

2.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개요

2018년 공공언어 진단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되어 온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도 자료의 진단을 수행하였다. 2018년 사업의 주요 과업을 개념화하면 ‘지속’, ‘개선’, ‘확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속’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보도 자료에 대한 평가, 진단, 교육을 지속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보도 자료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진단의 결과는 공공언어의 작성자인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보도 자료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속’에서의 평가는 5월, 7월, 9월, 11월에 걸쳐 4단계로 진행하였다. 추진 일정의 주요 사항은 [표 21]과 같다.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로 제출된 보도 자료 종합(2건씩) ■ 연구진의 기관별 보도 자료 수집(2건씩) ※ 평가 대상 보도 자료 총 180건 수합 	평가 월 첫째 주 완료
↓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의 정확성 평가(표기, 표현) ■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시민, 전문가) 	평가 월 셋째 주 완료
↓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점수의 통계 처리 	평가 월 넷째 주 완료
↓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기관 및 미흡 기관 선정 ■ 최우수 문서 및 미흡 문서 선정 	평가 월 넷째 주 완료

[표 21] 2018년 추진 일정 주요 사항

2018년 연구에서는 [표 22]의 45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도 자료 평가를 진행하였다.

모듬	해당 기관	개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
나군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세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15
다군	고용노동부, 교육부, 관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특허청	15

[표 22] 2018년 진단 대상 중앙행정기관

정확성 평가의 비중은 20%, 시민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는 30%, 전문가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는 50%를 반영하여 보도 자료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보도 자료의 평가는 총 4차례 이루어졌다. 진단 시기와 보도 자료 선정 기준은 [표 23]과 같다. 각 평가 시기마다 평가 대상이 될 보도 자료의 수합, 소통성 및 정확성 평가 결과 수합, 통계 처리 및 결과 산출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군별 우수 기관 및 미흡 기관, 우수 문서 및 미흡 문서를 선정하고 최미흡 기관의 보도 자료 개선안을 작성하여 각 기관으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평가를 마무리하였다.

5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4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보도 자료 2건 제출 + 임의 추출 2건
7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6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보도 자료 2건 제출 + 임의 추출 2건
9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8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보도 자료 2건 제출 + 임의 추출 2건
11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10월 생산 보도 자료 기관별 보도 자료 2건 제출 + 임의 추출 2건

[표 23] 2018년 진단 시기 및 진단 대상 보도 자료 문서

평가와 진단의 단계를 수행하여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 자료를 구성하여 ‘쉽고 바른 보도 자료 쓰기’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속’ 단계의 교육에 해당한다. 실무자와 관련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시에서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정확성, 소통성 평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실제적인 보도 자료의 질적 개선을 꾀하였다. 연수회 진행 순서는 본 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개선’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보도 자료 평가 및 진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년간의 평가 및 진단을 통해 평가의 체계가 안정화되었고, 실제로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왔지만, 소통성 평가의 타당성,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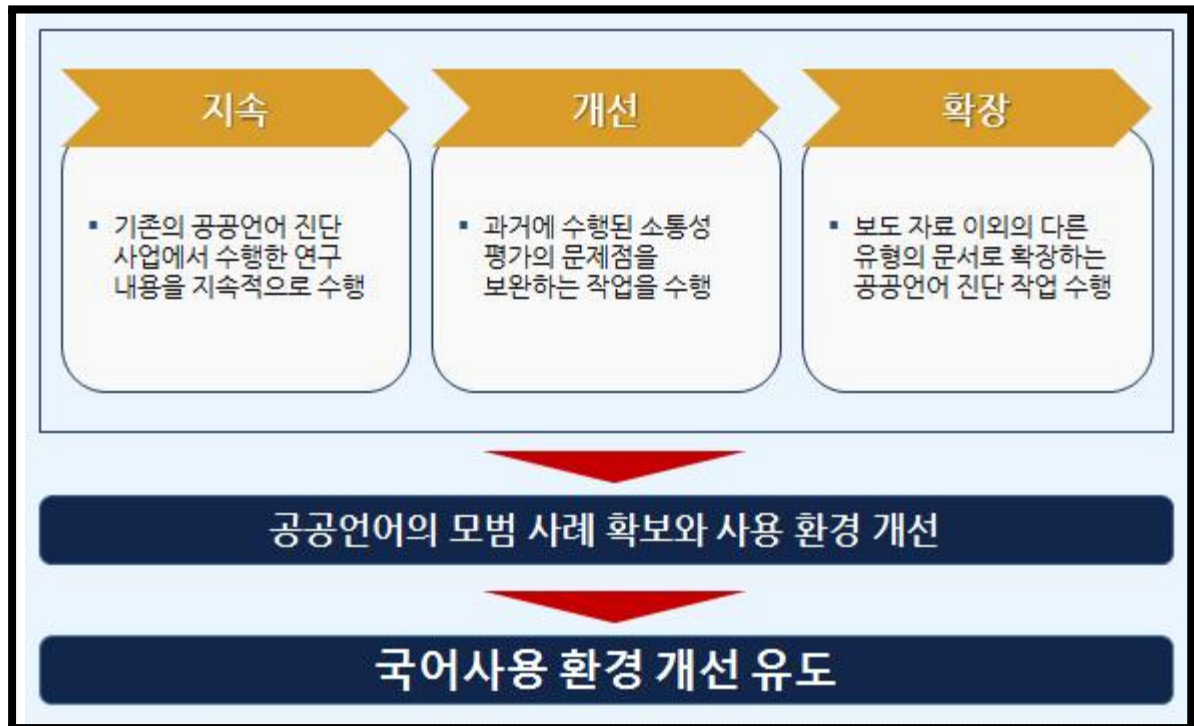
본 연구진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인 ‘서베이몽키(surveymonkey)’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정성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소통성 평가에 정량적 평가 방식을 제안하여 평가자 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베이몽키는 진단 자료의 암호화를 통해 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개별 응답자에게 비밀번호가 부여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안전한 진단 수행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림 2] 온라인 진단 체제의 전문가 진단 화면 예시

‘확장’이라는 개념은 개선이 요구되는 또 다른 공공언어의 범주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연구에서 공공언어 진단의 새로운 범주를 발굴하고 해당 범주를 진단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기관 누리집 첫 화면 진단이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 추가되었다. 그간 보도 자료에 한정되었던 공공언어 진단의 범주가 확장됨으로써 새로운 진단 체계가 필요하여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기관 누리집 첫 화면의 특성에 따른 진단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2018년 공공언어 진단 연구의 과정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연구의 과정

II. 세부 진단 방법 및 절차

1. 진단 대상 보도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45곳의 보도 자료 진단을 실시한 것이다.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45개 부, 처, 청 및 위원회이다. 전체 평가 기관은 전문 용어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군 분류는 2016년 이전부터 적용된 방식을 따랐다. 2017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일부 수정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는 변화를 주지 않고 관례를 따랐다. 보도 자료 진단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모듬	해당 기관	개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
나군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세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15
다군	고용노동부, 교육부, 관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특허청	15

[표 24] 2018년 보도 자료 진단 대상 중앙행정부서

본 과업에서는 5월부터 격월간으로 중앙행정부서의 보도 자료를 평가하였다. 평가 계획은 5월, 7월, 9월, 11월 총 4회이다. 각 평가는 각 평가 월 이전까지 생산된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작업 기간은 해당 평가 월을 기점으로 두 달의 기간을 두었다. 평가 일정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구분	평가 대상	평가 기간	진행 상황
5월 평가	1~4월 보도 자료	5~6월	완료
7월 평가	5~6월 보도 자료	7~8월	완료
9월 평가	7~8월 보도 자료	9~10월	완료
11월 평가	9~10월 보도 자료	11~12월	완료

[표 25]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평가 일정

매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보도 자료 2건은 ‘제출 자료’로 분류하여 다루고, 본 연구진에서 선별한 보도 자료 2건은 ‘선별 자료’로 분류하여 총 720건의 보도 자료 진단을 실시하였다. 부서에 따라 보도 자료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진에서 선별한 자료의 수를 늘려 각 부서별 4건의 평가 대상 보도 자료를 확정하였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고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5개의 중앙행정기관을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진단하였다. 진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 ① 진단의 대상이 되는 보도 자료의 생산 시기는 평가 월의 전월 생산 문서로 한정한다.
- ② 4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평가 주기에 맞추어 2개의 문서를 제출하고, 본 연구진은 2개의 문서를 선별한다.
- ③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만을 선정한다. 기관 공동 자료는 제외한다. 단, 산하의 과 단위와 공동으로 생산한 자료는 상관없다.
- ④ 보도 자료의 내용은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정책 안내의 성격을 띠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때, 지나친 기관 홍보나 기관 해명(입장 표명)의 목적을 지닌 보도 자료는 가능한 한 배제한다.
- ⑤ 다른 조건이 비슷할 경우, 조회 수가 높은 보도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보도 자료 선정의 우선순위는 내용이나 형식이 유사할 경우, ‘분량’, ‘조회 수’, ‘시기(최근)’의 순에 따른다.
- ⑥ 해당 행정기관의 누리집에 대국민용으로 공개된 것들만을 수집한다.
- ⑦ 보도 자료의 분량은 첨부 파일을 제외한 본 내용이 A4 1매 이상 3매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단, 게시된 보도 자료가 적을 경우에는 3매 이상의 보도 자료도 허용한다.
- ⑧ 첨부 파일로 제시된 PDF 형태의 보도 자료는 한글 파일(.hwp)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PDF 파일 그대로를 수집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수집한 720개의 보도 자료를 가군(15개 기관), 나군(15개 기관), 다군(15개 기관)의 순서로 목록화하되,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 ① 가군, 나군, 다군의 보도 자료는 중앙행정기관명의 한글 자모순에 따라 연번을 부여하며, 생산 시기가 빠른 보도 자료를 먼저 제시한다.
- ② 각 보도 자료에 제시된 연번은 해당 보도 자료 고유의 번호로, 이후에 진단 결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
- ③ 격월로 생산되고 진단된 문서의 연번은 군별로 1~60으로 목록화한다.⁹⁾
- ④ 개별 보도 자료의 분량이 달라서 생기는 진단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절 수를 함께 제시하고, 실제 진단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점한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진단 대상 문서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 5월 평가 대상 보도 자료 목록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¹⁰⁾	음절 수
국가인권위원회	선별	1101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교수 중징계 권고	1307
		1102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1335
	선별	1103	수용자 외부 호송 시 수갑 등 노출은 인격권 침해	1340
		1104	인권위,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권고	1279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1105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2559
		1106	점자블록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요	1788
	선별	1107	소방 건설 등 생활밀접 분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패 행위 신고하세요	1142
		1108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원천 차단 추진	1761
기상청	제출	1109	기상레이더 관측 정보 서비스 빨라진다	735
		1110	올여름 외출 전, ‘더위·자외선 지수’ 확인하세요	1409
	선별	1111	기상청, 우리나라 지하 지진단층 조사연구 본격 추진	1064
		111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 첫걸음	1012
농촌진흥청	제출	1113	식물에도 ‘궁합’이 있다 … 함께 심으면 좋은 ‘동반식물’	1295
		1114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 재배 발작물 관리 요령	1061
	선별	1115	농업인 눈높이 맞게 비료 공정규격 개정	949
		1116	농촌진흥청,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체 해독 착수	1559
문화재청	제출	1117	소중한 문화재, 재난대응훈련으로 사전에 지킨다	1217
		1118	항일독립유산 자료를 찾습니다	1514
	선별	1119	문화재청, 국보·보물 120건 정밀실측으로 원형기록 추진	1063
		1120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실태 점검	1142

9) 보도 자료 연번의 맨 앞자리 숫자는 평가 회차를 나타내고, 두 번째 숫자는 군을 의미하며, 마지막 두 자리는 군별 번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101번의 보도 자료는 첫 번째 평가인 5월, 첫 번째 군인 가군의 첫 번째 평가 자료라는 뜻이다.

10) 보도 자료 제목은 어문 규정상 오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제시한다.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¹⁰⁾	음절 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1121	손에 잡히는 인문 서비스 ‘인문360도’ 누리집 개편	2057
		1122	한복 입고, 사고, 만들고... 오감만족 한복문화의 장	1788
	선별	1123	문체부 문화기술연구개발 신규 정책지정과제 본격 추진	1656
		1124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고시 제정	1660
법제처	제출	1125	복지·여성·노동 분야 법령 전수조사...‘약자 차별조항’없앤다	3166
		1126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841
	선별	1127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도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해	915
		1128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710
병무청	제출	1129	병무청,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956
		1130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종합대책 마련	1137
	선별	1131	병무청, 2019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접수	646
		1132	병무청, 병무행정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626
산림청	제출	1133	산림청, ‘공립 산림복지지구’ 3개소 지정	1108
		1134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1145개 만든다	921
	선별	1135	산림청, ‘무궁화’ 보급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991
		1136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관광 활성화 정책 본격 추진	1396
새만금개발청	제출	1137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발주’ 십자형도로 구축 가속화	1024
		1138	새만금개발청,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확대 운영	755
	선별	1139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 사업」 기본 구상 수립 추진	937
		1140	「새만금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는다	1604
소방청	제출	1141	소방청, 정책실명제로 정책의 투명성·책임성 높인다 !	644
		1142	제천화재 이후 전국 찜질방 점검했더니, 비상구는 여전히 폐쇄!	1076
	선별	1143	국감지적,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선된다.	964
		1144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1150
여성가족부	제출	1145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3201
		1146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받아내	2312
	선별	1147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이 달라집니다!	1685
		1148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 낸다.	1533
통일부	제출	1149	부산 지역, ‘통일에 눈 뜨다’	677
		1150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 부지 확보 쉬워진다	851
	선별	1151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협약 체결	1316
		1152	생활 밀착형 지원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원 정비	983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¹⁰⁾	음절 수
해양경찰청	제출	1153	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에 도전하세요!	901
		1154	선박 출·입항서류 온라인 발급으로 간편하게!	779
	선별	1155	‘선저폐수 자동수거 원스톱 시스템’ 시범운영 등 오염물질 관리 강화	888
		1156	해양경찰, 새 통합정보기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844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제출	1157	행복도시 다정동 입주 민·관 합동점검 실시	680
		1158	찾아가는 상담(컨설팅)으로 안전·품질관리 획기적 향상	661
	선별	1159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	974
		1160	행복청, 광역도로건설사업 안전관리 강화 나서다	1005
경찰청	제출	1201	경찰,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발대식 개최	2974
		1202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1920
	선별	1203	신학기 새내기 대상 폭행이나 강요, ‘이제는 끊어야 할 악습’입니다.	1558
		1204	경찰청, 허위·악성(성희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721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1205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해도 “내상조 그대로”	1218
		1206	산모·신생아 입원 치료 때문에 산후조리원 입실 못하면 계약금 돌려받는다!	1214
	선별	1207	공정위, 175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 317억 원 지급 조치	886
		1208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제도적 기반 전면 개편	1403
국가보훈처	제출	1209	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5일 첫 지급	646
		1210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4월 11일로 바로잡는다.	745
	선별	1211	보훈처, ‘국민참여 중심으로 보훈혁신 본격 추진’	986
		1212	보훈처, 제대군인 일자리 국제화 추진	1817
국방부	제출	1213	국방예산 대토론회 국민참여단 및 국민제안 모집	1449
		1214	국방부 혁신동아리, 혁신의 길을 묻다!	3746
	선별	1215	군사상자의 신속한 심사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	634
		1216	장병 무한상상무대 국방스타트업(START-UP) 챌린지 개최	3784
국세청	제출	1217	국세청,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개시	1277
		1218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2904
	선별	1219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3636
		1220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2642
대검찰청	제출	1221	벌과금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1308
		1222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제8차 권고안 발표	1169
	선별	1223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하는 '암체패스'행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712
		1224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 권고	858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¹⁰⁾	음절 수
방위사업청	제출	1225	‘중·소형 함정’ 전자전 장비 탑재, 적 유도탄·항공기 위협에 효과적 대응 가능해져	1907
		1226	업체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된다	821
	선별	1227	수평적 파트너십 강화로 동반성장 선언	709
		1228	“수출경쟁력 향상 위해, 방산물자 수출입 업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한다.”	685
법무부	제출	1229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	1024
		1230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폭 확대	1798
	선별	1231	법무부, 손안의 인공지능(AI) 법률비서 2세대 버비 서비스 시작	1504
		1232	해외우수인재·관광객 유치.. ‘전자비자센터’가 이끌겠습니다.	1203
보건복지부	제출	1233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1102
		1234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1473
	선별	1235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본격 추진	1677
		1236	저소득층이 운영하는 ‘내일스토어’의 새로운 출발	1707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출	1237	“마스크 살 때 특히 조심하세요.”	1132
		1238	“국민이 원하면 검사한다.”	931
	선별	1239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이끌어갈 중고생 모여라~!	1471
		1240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2553
인사혁신처	제출	1241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3150
		1242	국민이 추천한 쪽방촌 돌보미 등 공무원 80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영예	1228
	선별	1243	2018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실시	1716
		1244	퇴직공무원 노하우,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	2636
조달청	제출	1245	조달청,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과 청년 고용 및 정규직 전환 기업 우대	949
		1246	대·중소 건설기업간 상생협력 ‘동반성장 시스템’ 마련	1027
	선별	1247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새롭게 선보인다	999
		1248	하도급, 계약부터 지급까지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게	1013
해양수산부	제출	1249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귀신고래’를 소개합니다	1604
		1250	주꾸미 금어기 신설... “이제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	1191
	선별	1251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본격 착수	648
		1252	소통의 마법 펼칠 ‘해(海)리포터’, 너야 너!	1263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¹⁰⁾	음절 수
행정안전부	제출	1253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혜택 한눈에 본다	1584
		1254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2832
	선별	1255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이용률 본격 높인다	1816
		1256	골든타임 확보, 병역면탈 예방 등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공공 빅데이터"	3142
환경부	제출	1257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2238
		1258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1832
	선별	1259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257
		1260	포장재 생산 업체 19곳, 페트병 무색만 만든다	1503
고용노동부	제출	130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본격 시행	1388
		1302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	1275
	선별	1303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1506
		1304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내:일을 그리다	1478
교육부	제출	1305	5명만 모여도 문해교육 지원 받을 수 있다	1849
		1306	소외지역 중학생 위한 진로캠프, 2년 만에 참여 학생 2배 ↑	1821
	선별	1307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1인당 월128만원으로 인상	1791
		1308	미래교육의 첫발,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1823
관세청	제출	1309	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	1042
		1310	설 연휴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특별지원대책 시행	856
	선별	1311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1113
		1312	관세청,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운영	1036
국토교통부	제출	1313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1716
		1314	집주인 임대주택 용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2058
	선별	1315	"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하세요"	1131
		1316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314
금융위원회	제출	1317	금융회사 방문없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06
		1318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	1962
	선별	13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65
		1320	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2883
기획재정부	제출	1321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	1203
		132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강화	735
	선별	1323	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 등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지원	1101
		1324	지역주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재부	918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¹⁰⁾	음절 수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325	경기 김포시 구제역(A형) 발생 확산에 따른 긴급조치	1908
		1326	정부, 농협·지자체와 농번기 영농인력지원 확대 총력 기울여	2496
	선별	1327	“농식품부, 청년농업인과 파트너십 구축 추진”	1376
		1328	농식품부, 농촌여행 브랜드 ‘자연스來’로 농촌여행을 전 세계에 알린다	1260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출	1329	과기정통부, 이공계 미취업 청년 2,100명 이공계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	1393
		1330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1252
	선별	1331	서랍 속 연구데이터 함께 쓰는 빅데이터로 새롭게 거듭난다	1430
		1332	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1317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1333	방통위, 음성 전화스팸 차단율 한층 더 강화한다	717
		1334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의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 명칭 개선	969
	선별	1335	통신사 상담사 규칙적인 점심시간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	1184
		1336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우리가 만들고 지킬게요!	1006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1337	봄철 미세먼지 기간,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1379
		1338	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마리 토끼 동시에	1410
	선별	1339	아시아 최대 규모 「2018 드론쇼 코리아」 개최	2697
		1340	프랜차이즈 서비스산업 해외진출로 성장 돌파구 찾는다	1671
원자력안전 위원회	제출	1341	방사능 테러 대비 훈련으로 안전 올림픽 이끈다	1164
		1342	원안위, 월성 4호기 및 신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1156
	선별	1343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	2027
		1344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657
외교부	제출	1345	외교부 홈페이지 새 단장	606
		1346	“여행 전에 꼭 확인해요, 국가별 여행경보”	1215
	선별	1347	외교부,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맞춤형 수입규제 대응 강화	1464
		1348	외교부, 20년만에 경제제재 풀린 수단과 경제·통상관계 강화 방안 논의	1459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1349	중기부,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추진한다	2207
		1350	「중소기업 중심 경제,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본격 추진	3892
	선별	1351	중소기업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로드맵 발표	971
		1352	중기부, 라벨같이 근절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열어	803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¹⁰⁾	음절 수
통계청	제출	1353	국가통계승인마크 변경 및 활용 확대	928
		1354	「KOSTAT 통계플러스」발간	606
	선별	1355	고용통계 시계열 보정 계획	1440
		1356	통계청-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MOU 체결 및 개소	721
특허청	제출	1357	UAE,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시대 개막	1104
		1358	상표출원에 부는 청정 공기 바람	1078
	선별	1359	캠핑 열풍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가 튼다	1437
		1360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식재산(IP) 서비스, 특허바우처로 부담은 줄이고 이용은 편리하게	1509

□ 7월 평가 대상 보도 자료 목록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가인권위원회	선별	2101	“법적 근거 없는 관행적 출국정지 중단해야”	1012
		2102	인권위, 지방선거 토론 방송 등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권고	838
	선별	2103	경찰 채용서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이자 차별	1328
		2104	공기업 경영철학, 인권중심으로 전환 기대	1192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2105	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1252
		2106	내 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청렴지도’ 나왔다	1121
	선별	2107	제각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하나로만든다	1091
		2108	“군 복무환경과 훈련특성 등 고려해 ‘공무중부상’여부결정해야”	1152
기상청	제출	2109	호우특보 기준 개선해 비 피해 줄인다	1284
		2110	올여름은 폭염영향정보로 더 안전하게!	716
	선별	2111	지진 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알린다	1344
		2112	기상청, 항공기상서비스 국회 공청회 개최	870
농촌진흥청	제출	2113	목장 앞 탁 트인 초원에서 동물 친구들과 뒹굴~!	1085
		2114	“앱에서 대화 나누고 배와 감 방제 정보도 얻어요”	927
	선별	2115	농촌진흥청, 국민 주도로 혁신 정책 만든다!	993
		2116	부모·자녀, 함께 식물 기르면 스트레스와 우울감 줄어	1193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문화재청	제출	2117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시 신고하세요	995
		2118	어려운 문화재 안내판 개선 추진	1832
	선별	21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	1055
		2120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보존·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틀 마련	1441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2121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추진	1627
		2122	6월 29일 첫 ‘심야 책방의 날’ 전국 77개 서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639
	선별	2123	방한 중국인 유치정책, 질적 성장에 힘쓴다	1310
		2124	한국 관광의 고품질화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1464
법제처	제출	2125	‘행선지→목적지’ ‘계리→회계처리’ 등 법령 속 일본어 표현 9개 일괄 개정	936
		2126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1495
	선별	2127	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1256
		2128	사용자 중심으로, 법제처 홈페이지 개편	721
병무청	제출	2129	병무청,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등 안내	794
		2130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 마련	1728
	선별	2131	인사 청문 대상 모든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	523
		2132	병무청, 전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608
산림청	제출	2133	민간 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국유림 737만㎡ 제공	1090
		2134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산사태 경보체계 시동 건다	925
	선별	2135	끝나지 않는 산불... 5월에도 각별한 주의 필요	962
		2136	올해 국유림 활용 마을기업·사회적기업 18개소 육성	1036
새만금개발청	제출	2137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슬로건 공모	1094
		2138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1707
	선별	2139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 새만금청도 함께 된다.	756
		2140	새만금 최초로 ‘바이오·의료 제조시설’ 들어선다.	1163
소방청	제출	2141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공개모집	1142
		2142	강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이렇게 피해 줄인다.	1131
	선별	2143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실천 ‘소방차 길 터주기’	847
		2144	소방청, 여름철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체제 돌입	1252
여성가족부	제출	2145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시 기억할 5가지!”	2432
		2146	미혼모·부에 대한 ‘일상 속 차별과 편견’을 접수받습니다.	1640
	선별	2147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현장구호 및 지원	1164
		2148	‘데이트폭력 사건처리기준’ 마련 및 피해자 지원·보호조치 강화	1425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통일부	제출	2149	「관문점 선언」이후 첫 민간인 기부	836
		2150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유니콘도 함께합니다!”	890
	선별	2151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평화의 싹을 틔우다	1453
		2152	남북 도로 연결·현대화를 위한 남북공동연구조사 등 합의	1106
해양경찰청	제출	2153	해양경찰, 퇴직 공무원과 깨끗한 바다 만든다	1250
		2154	해양안전과 해양오염 관리 위해 드론이 뜬다!	700
	선별	2155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949
		2156	해양경찰청, 선박 위성조난신호기(EPIRB) 합동점검	1075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제출	2157	행복청, 「공동캠퍼스 자문위원회」 구성	789
		2158	행복청, 화재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647
	선별	2159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 추진	834
		2160	행복청,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확보 총력	810
경찰청	제출	2201	경찰박물관 ‘오늘은 나도 어린이경찰관!’행사 개최	921
		2202	경찰 ‘여성불안환경 집중진단’, 생활주변의 불안요인 해소 주력	1496
	선별	2203	경찰개혁위, 정보활동 개혁으로 신뢰받는 정보경찰로 거듭나라	1660
		2204	경찰,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추진	2386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2205	“다른 방송 출연 안된다?”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부당한 계약	3357
		2206	상품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등 위메프, 쿠팡, 티몬의 불공정 행위 제재	2379
	선별	2207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1831
		220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1958
국가보훈처	제출	2209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722
		2210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자 3명, ‘국가유공자’로 결정	1148
	선별	2211	국민과 함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2018년 호국보훈의 달 추진	1341
		2212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1615
국방부	제출	2213	「국민 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개최	1286
		2214	선배 전우님들의 명예를 찾아드립니다	1274
	선별	2215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부! 혁신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795
		2216	군 수사절차 인권보장 강화 시행	880
국세청	선별	2217	국세청, 영세납세자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세정지원 더욱 강화	2905
		2218	국세청,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모집	3140
	선별	2219	국세청,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	2747
		2220	국세정보 공개 확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3026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대검찰청	제출	2221	대검찰청 양성평등담당관실 현판식 개최	1049
		2222	제7회 지방선거 사건 엄정 수사, 신속 처리 지시	2534
	선별	2223	2018년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개최	1685
		2224	발달장애인, 전국의 전담검사가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3989
방위사업청	제출	2225	방위사업청, 일·가정 양립 실천서약식 실시	727
		2226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정	1076
	선별	2227	“방위사업 원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75
		2228	방사청, 절충교역 37년만에 전면 개편, 산업협력으로	1922
법무부	제출	2229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24
		2230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1138
	선별	2231	“어려운 교도소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1005
		2232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비자신청 관련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	1432
보건복지부	제출	2233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입	1414
		2234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2257
	선별	2235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1013
		2236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마련	1097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출	2237	식약처,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검사하겠습니다.”	1192
		2238	한낮은 이미 여름, 식중독 주의	1240
	선별	2239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737
		2240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1027
인사혁신처	제출	2241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후 예우한다	1038
		2242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524
	선별	2243	공무원 성 비위 엄벌, 적극행정은 징계 면제	1434
		2244	공무상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	2950
조달청	제출	2245	공공조달 첫 관문, 조달청 상품정보 관리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893
		2246	군납용 라면, 군장병 입맛에 따라 공급	814
	선별	2247	조달청,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추가 개정	2096
		2248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탄력적으로 적용	1049
해양수산부	제출	2249	해양안전교육, 이제는 가상현실(VR)에서 즐기면서 배운다	1304
		2250	올해 3만 명의 어린이·청소년에게 생존수영 가르친다	1430
	선별	2251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143
		2222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위판장 위생환경 개선기준 마련한다	1014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행정안전부	제출	2253	안전수칙 지켜 놀이시설 사고 예방하세요!	979
		2254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1087
	선별	2255	행안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한다.	1102
		2256	싸구려 불량 승강기 제품 제조·수입 근절한다!	2393
환경부	제출	2257	기업·공공기관 1,500곳, 2016년 환경정보 분석 공개	2243
		2258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종 개정판 발간, 267종 총정리	1434
	선별	2259	석면해체작업 관리 '간깐하게'...개정된 석면법 시행	1421
		2260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1142
고용노동부	제출	2301	워라밸을 위한 근무혁신, 경영계가 앞장선다	1569
		2302	모두가 평등한 일터, 존중으로 더하는 행복한 일터!	1432
	선별	2303	고용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에 발 벗고 나서	1172
		2304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1059
교육부	제출	2305	찾아가는 컨설팅과 수업콘서트로 자유학년 수업을 지원한다	1429
		2306	초·중·고생, 언제 어디서나 창업체험교육 문 활짝 열린다	2096
	선별	2307	우리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 올해 첫 사업	1509
		2308	체육중점 고교 400명, 진로진학상담 받는다	1305
관세청	제출	2309	관세청, 자진신고자 등 벌금 감경 확대	780
		2310	관세환급 소요량, 관세청이 쉽게 도와드립니다.	907
	선별	2311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861
		2312	관세청,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	1264
국토교통부	제출	2313	부천·시흥·안산 출근길 빨라진다...소사동→원시동 33분 주파	1038
		2314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1947
	선별	2315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5월부터 인증	1664
		2316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월 출범...해외수주 전방위 지원	1373
금융위원회	제출	2317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시행	1365
		2318	은행 해외 진출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1103
	선별	2319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1111
		23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66
기획재정부	제출	2321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한다.	996
		2322	'내 삶이 바뀌는 소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국민 이야기 공모전 실기	879
	선별	2323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700
		2324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워크숍 주요내용	900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325	초등돌봄교실로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간식 배달 시작!	4201
		2326	농촌지역 취약계층 320가구에 ‘집고쳐주기’ 사업추진	1930
	선별	2327	식품산업도 이젠 스마트팩토리 시대!	1694
		2328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귀농 컨퍼런스” 참가 안내	1263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출	2329	과기정통부, 명의도용 피해구제 빈틈 막는다!	1151
		2330	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 연 4천 8백여 만 건 보관 폐지	1085
	선별	2331	노플러그인(No Plugin)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 확산	1990
		2332	중소기업 기술고민,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가 도와드립니다	1468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2333	방통위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1042
		2334	방통위,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취약계층 확대 시행	963
	선별	2335	“20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 무료 서비스 제공	759
		2336	「2018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개최	833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2337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1231
		2338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1379
	선별	2339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최고기술을 찾습니다.	1428
		2340	“클릭 한번으로 에너지 신서비스가 거래 된다”	2143
원자력안전 위원회	제출	2341	원안위, 하나로 안전성 확인점검 후 재가동 승인	732
		2342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642
	선별	2343	라돈 검출 대진침대, 1달내 수거 완료한다	1730
		2344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759
외교부	제출	2345	‘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692
		2346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365일 가동 해외체류 국민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1482
	선별	2347	‘지구청년’이 대학축제에 찾아갑니다!	691
		2348	「제3차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 개최	1180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2349	중소기업 재직청년에게 3천만원 목돈마련 기회를 드립니다.	1350
		2350	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 ‘백년가게’로 육성	1715
	선별	2351	중기부, 현장목소리 등을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	1730
		2352	중기부,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 개최	1124
통계청	제출	2353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 실시	903
		2354	삶이 질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1116
	선별	2355	통계청 「제8차 통계혁신방법론 국제워크숍」 개최	1031
		2356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	1497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특허청	제출	2357	특허청, 폐친들이 뽑은 세계 10대 발명품 발표	1220
		2358	미세먼지 바람속에 디자인 경쟁 '춘추전국시대'	1133
	선별	2359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이용에 장벽없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903
		2360	"특허증, 내 핸드폰에 저장"	1006

□ 9월 평가 대상 보도 자료 목록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가인권위원회	선별	3101	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 침해	1018
		3102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914
	선별	3103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856
		3104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 권고	1314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3105	합기도 등 어린이 탑승차량,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안전관리 강화된다	2736
		3106	교통범칙금 납부 감박해 50% 가산금까지..."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	1271
	선별	3107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1674
		3108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이동신문고' 열려	822
기상청	제출	3109	한반도 지진·화산재해 예방을 위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다	805
		3110	지진 바로 알기, 반짝이는 아이디어 모여라!	769
	선별	3111	아찔한 여름폭염 물, 그늘, 휴식으로 예방해요!	769
		3112	기상청, 미래 기상분야 인재 위해 '대학생 하계 연수과정' 신설 및 운영	585
농촌진흥청	제출	3113	지금은 찰옥수수가 제일 맛있는 제철	1106
		3114	복숭아, 국산 품종으로 여름 과일 시장 '시선몰이'	1278
	선별	3115	농작물·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한 현장 지원 강화	1780
		3116	잔류농약 시험 개선으로 농약 등록 효율 높인다	828
문화재청	제출	3117	강원도 정선에서 후기 구석기 그물추 확인	1419
		3118	백범 김구 친필회호 <광명정대(光明正大)>, 고국 품으로	1083
	선별	3119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만나요	1258
		3120	독립유공자 묘역 문화재, 정부가 지원합니다	1193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3121	8월 31일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막	1665
		3122	9월 독서의 달, ‘함께 읽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	1941
	선별	3123	호텔 위생과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984
		3124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1985
법제처	제출	3125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1306
		3126	적극행정이 혁신행정이다!	1746
	선별	3127	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775
		3128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1061
병무청	제출	3129	군 운전경력확인! 이제 병무청에서도 가능	1557
		3130	모든 용도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836
	선별	3131	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911
		3132	병무청,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 완화	609
산림청	제출	3133	산림청,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1017
		3134	미세먼지, 도시숲으로 해결합니다	1222
	선별	3135	산림청, 풀베기 등 산림사업장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687
		3136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38
새만금개발청	제출	3137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첫 중국 기업 유치	1147
		3138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사업시행자 지정	1147
	선별	3139	「2018 새만금 드론 영상제」 작품 공모 시작	1111
		3140	활기찬 새만금’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1012
소방청	제출	3141	안전 백년대계,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1148
		3142	고속도로에서 모세의 기적을 기대한다!	1014
	선별	3143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	1004
		3144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993
여성가족부	제출	3145	여성 성상품화하는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광고 퇴출한다.	1203
		3146	“취업 면접을 갔는데 ‘아이를 혼자 어떻게 키울 거냐’ 물어요!”	1922
	선별	314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하반기부터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1746
		3148	청소년수련시설, 이제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설치 가능	684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통일부	제출	3149	남북 접경 지역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 협력 추진 합의 7월 4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	824
		3150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발간	773
	선별	3151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설 개보수단 금강산 파견 (7월 9일)	452
		315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	1213
해양경찰청	제출	3153	해양경찰, 제4회 연안안전의 날 맞아 해양안전 문화 확산	987
		3154	해양경찰, 지방청 중심 긴급신고전화체계 구축	832
	선별	3155	“선박 출·입항서류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737
		3156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사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다!	96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제출	3157	행복청, 폭염에도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	713
		3158	행복도시 세종의 소확행, 사진으로 함께 해요	1054
	선별	3159	행복도시,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박차	956
		3160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 조기 사용재개, 교통편의 개선	784
경찰청	제출	3201	치매노인이 안전한 사회, 민관이 함께 만든다	1240
		3202	“수사권 가진 경찰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으로 해결 한다”	901
	선별	3203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국으로 확대, 경찰의 금융·회계 분석 수사 전문성 제고	1614
		3204	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필요 최소한으로> 등 운영 개선	1555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3205	“못 받은 하도급 대금 받아드립니다!”	1247
		3206	한국어교육원,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 불가?	2168
	선별	3207	3개 실시간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사업자의 담합 행위 제재	1813
		3208	한국미니스톱(주)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 제재	1387
국가보훈처	제출	3209	보훈처, ‘보훈복지 사각지대’ 종합 실태조사 및 지원 실시	1332
		3210	보훈처, ‘미주 지역 최대 독립운동 명문가’에 훈장 전수	1416
	선별	3211	국가유공자·유가족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	927
		3212	보훈처, 폭염 대비 취약 <보훈가족> 현장 점검 실시	794
국방부	제출	3213	국방부, 쉽고 바른 용어 사용으로 국민과 원활히 소통한다.	1619
		3214	국방부, 국민 의견 미리 점검하여 정책에 반영	1418
	선별	3215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1797
		3216	인권존중의 군 문화 조성	1404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세청	제출	3217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2692
		3218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착수	4002
	선별	3219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3796
		3220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2086
대검찰청	제출	3221	데이트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1931
		3222	청소년 몸캠,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하세요	1687
	선별	3223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출범	798
		3224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 권고	1839
방위사업청	제출	3225	방산 체계업체의 과도한 계약책임 줄인다.	1271
		3226	방산기술보호, 업체중심으로 역량 강화한다.	891
	선별	3227	무기개발, 기술력과 정령이 우선되어야...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개정	1317
		3228	신규 고용창출 기업, 방위사업 참여 쉬워진다	1164
법무부	제출	3229	법무부, 북방경제협력 3개국 및 몽골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확대 시행	1002
		3230	법무부 1363 교정민원콜센터 도입 후 응답률 획기적 향상	1368
	선별	3231	법무부,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개최	927
		3232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위해 심리치료에 적극 나서”	1344
보건복지부	제출	3233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805
		3234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연말까지 도입	2015
	선별	3235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1407
		3236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1151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출	3237	“닭요리 할 때, 캄필로박터 식중독 조심하세요.”	979
		3238	“대마 성분 의약품도 쓸 수 있게 된다.”	1265
	선별	3239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확대	1000
		3240	의료기기, 판매가격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매 하세요	992
인사혁신처	제출	3241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 보직관리는 아직 미흡	2128
		3242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등 1차 시험과목 개편	1021
	선별	3243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사전컨설팅 감사’도입	924
		3244	공직 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수립	2673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조달청	제출	3245	일본인 명의 귀속 · 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1350
		3246	“ 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 공급 못 한다 ”	1030
	선별	3247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834
		3248	조달청, 공공공사 현장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1629
해양수산부	제출	3249	우리가 지켜야 할 해양생물, 기념우표로 만나보세요!	1386
		3250	중국 영화관(CGV)에서 우리 수산물‘어묵’세트 맛본다	1270
	선별	3251	한·중·일, 새로운 협력 과제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도약	1684
		3252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835
행정안전부	제출	3253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	1134
		3254	우리 학교 대피계획의 시작,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1662
	선별	3255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1415
		3256	교통분야 핵심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혁신 추진한다.	1405
환경부	제출	3257	제과업계, 단계적으로 비닐쇼핑백 퇴출한다	1493
		3258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높인다	1486
	선별	3259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2401
		3260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오염 관리 강화	1267
고용노동부	제출	3301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481
		3302	19년도 신중년 지역일자리 대폭 확충된다	1955
	선별	3303	고용노동부, 화재발생 위험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908
		3304	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이는 작업 못한다	1086
교육부	제출	3305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1317
		3306	어린이통학버스 실시간 위치알림으로 안전사고 예방	1377
	선별	3307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한다	1920
		3308	교육부, 학회와 함께 연구부정 유형별 기준 구체화 추진	1258
관세청	제출	3309	‘현장인도’ 악용 우려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어려워진다	530
		3310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원산지증명 대폭 쉬워졌다	1029
	선별	3311	관세청,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1365
		3312	국민에게는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의 동반자로 관세청이 다가갑니다.	2289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토교통부	제출	3313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2518
		3314	‘핸드레일’·‘촉지도’등 어려운 철도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1065
	선별	3315	철도 시설물 “안전·성능 중심” 관리 강화된다	1529
		3316	국민체감 대중교통 서비스…국민이 직접 평가	1381
금융위원회	제출	3317	은행권, 「무더위 쉼터」 전국 점포로 확대	1257
		3318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도 금융위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용	1602
	선별	3319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2562
		3320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 개최	1420
기획재정부	제출	3321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435
		3322	2019년 국민참여예산 총 39개 사업, 835억원 반영	1467
	선별	3323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평가 방안 개선	917
		332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24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3325	전통인삼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1364
		3326	춘파? 멸칭? 어려운 농업용어 쉽고 바르게 사용해요!	921
	선별	3327	“이제 거점 소독시설 찾기가 쉬워집니다”	916
		3328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간다!	105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출	3329	서랍 속 연구데이터, 인공지능·빅데이터로 날개단다!	1563
		3330	연구자 중심으로 국가 R&D 연구관리기능 통합·정비한다	2062
	선별	3331	과기정통부, 4,000명 이공계 청년 일자리 지원 나선다.	2360
		33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시 발전(發電) 시범프로젝트』추진 검토	2497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3333	사이버폭력! 우리가 바로 고민해결사!	1023
		3334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연내 15,000대 보급	737
	선별	3335	방통위, 국민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	910
		3336	방통위,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게도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업무의 적극적 이행 촉구	654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3337	“지방투자보조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한다”	1024
		3338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도입이 쉬워진다.	1308
	선별	3339	산업부, 3분기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무역보험·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	1389
		3340	산업부,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연내 수립 착수	1231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원자력안전 위원회	제출	3341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보고서 초안 공개	647
		3342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2호기 재가동 승인	916
	선별	3343	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1041
		3344	원안위, 한울4호기 정기검사(임계 후 일부검사) 미완료에 따른 수동정지 후 조사 예정	835
외교부	제출	3345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 출범	1311
		3346	동아시아와 중남미 36개국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FEALAC 지역 간 협력	1175
	선별	3347	외교부-세계한인법률가회 업무협력약정 체결	989
		3348	정부,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50만불의 인도적 지원 결정	646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3349	스마트공장 공동 구매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다!	1774
		3350	소상공인의 롤모델, 백년가게 선정	1252
	선별	3351	중소협력사의 청년 채용, 대기업이 힘 보탠다!!	1221
		3352	기업 현장목소리 반영, 창업지원사업 편리해진다	1374
통계청	제출	3353	「제20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1251
		3354	PC기반 통계조사 자료수집 및 처리시스템(NARA-PC) 무료 제공!	729
	선별	3355	생각을 키워주는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	634
		3356	제16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583
특허청	제출	3357	친환경차 관심 높아지며 수소전기차 특허출원 활기	1194
		3358	아이디어·기술 탈취, 특허청에 신고하세요	1027
	선별	3359	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	1182
		3360	특허청, 외국법인의 특허관련 위임장 규제 확 푼다	1049

□ 11월 평가 대상 보도 자료 목록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가인권위원회	선별	4101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1059
		4102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정책개선 권고	1531
	선별	4103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 수정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1405
		4104	인권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 권고	1110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4105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1211
		4106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972
	선별	4107	국민권익위, 카타르와 반부패 분야 협력 강화한다	1197
		4108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738
기상청	제출	4109	오늘(27일) 설악산 첫 단풍 시작	883
		4110	제48차 IPCC 총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다!	2064
	선별	4111	기상레이더 정보의 가치 협업과 공감으로 만들어갑니다	936
		4112	미래 기상기술 발전을 위해 한-미 기상청장이 만나다	837
농촌진흥청	제출	4113	국산 종균 이용해 팔로로 메주 쏜다	898
		4114	세계 최초 알레르기 저감 밀 오피리 개발	1345
	선별	4115	가금농장 ‘손·신발 소독’ 철저히 하세요	933
		4116	‘혁신도시 시즌2’ 발맞춰 우수 육종자원 발굴	792
문화재청	제출	4117	달빛 아래 창덕궁 거닐며 나누는 꿈과 희망	1085
		4118	안동 임청각, 일제강점기 이전 옛 모습으로 복원정비	1610
	선별	4119	초중고 교원들에게 가야 유적지의 숨은 매력 알린다	984
		4120	조선 시대 궁중 생활상으로 본 창경궁	1120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4121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가 달린다	1251
		4122	생각을 실천으로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 진행	1434
	선별	4123	문체부, 콘텐츠·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925
		4124	책과 독서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국제포럼	1256
법제처	제출	4125	아직도 이런 법이…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895
		4126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2133
	선별	4127	법제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MoU 체결	842
		4128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899
병무청	제출	4129	병역명문가 올해 10월부터 매월 선정	1104
		4130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	1099
	선별	4131	병무청, 특수학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폭력행위여부 전수 실태조사 실시	596
		4132	고의로 체중을 늘려 집단으로 병역을 면탈한 성악가 12명 적발	841
산림청	제출	4133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984
		4134	산림청, 모로코와 사막화방지 국제협력 강화	1281
	선별	4135	산림청, 10월까지 도로변·산림 덩굴류 집중 제거	699
		4136	산림청, “장애인·노약자도 편리하게 산림복지시설 이용하세요”	856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새만금개발청	제출	4137	새만금청,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점검	580
		4138	새만금 타운홀 미팅에 함께 해 주세요	1061
	선별	4139	새만금개발청, 중국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추진	1226
		4140	새만금개발공사 중장기 부대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006
소방청	제출	4141	중앙119구조본부 최초 과장급 여성소방공무원 탄생	779
		4142	송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79
	선별	4143	추석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1058
		4144	해외에서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도 119	787
여성가족부	제출	4145	“교과서 속의 성차별, 이렇게 바꿔주세요!”	2151
		4146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지원해 드립니다	1886
	선별	4147	보호관찰 청소년’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1397
		414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1576
통일부	제출	4149	소통과 협력의 장, 「인천 통일+센터」	1056
		4150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추진 등 산림협력 합의	981
	선별	415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한국고용정보원 업무 협약 체결	826
		415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주)시호비전 업무 협약 연장 체결	708
해양경찰청	제출	4153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개정 추진	715
		4154	해양경찰청, 선박 매연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 단속 강화	841
	선별	4155	해경청, 지방청 중심 긴급신고 접수체계 전면 시행	933
		4156	해양경찰청, 하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870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제출	4157	행복청, 박물관단지 지원시설(운영센터, 수장고) 건립한다	1078
		4158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착수	750
	선별	4159	찾아가는 서비스로,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 강화	751
		4160	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다	763
경찰청	제출	4201	경찰,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엄중단속	1120
		4202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시범운영 예정	1213
	선별	4203	경찰청,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행, 자율과 책임 아래 집회 자유 보장에 앞장 설 것	813
		4204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931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4205	“일반인 후기라고 믿었는데…” 알고보니 광고였다!	2016
		4206	“188개 업체, 밀린 하도급 대금 총 260억 원 지급받았다!”	1356
	선별	4207	대형유통업체, 부당 감액·부당 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진다	1755
		4208	공정위, 조직 개편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1437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가보훈처	제출	4209	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로 결정	1129
		4210	<미스터 션샤인>의 후손을 찾습니다	1375
	선별	4211	보훈처, 4.19혁명 유공자 <추가> 포상 신청 접수	711
		4212	보훈처,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강화	1599
국방부	제출	4213	특별 사진전시회‘대한민국 국군, 닦음을 담다’	1312
		4214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 친구 손잡고 유해발굴 현장체험	1092
	선별	4215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848
		4216	육군 제36사단 만종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개장	1090
국세청	제출	4217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1829
		4218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3070
	선별	4219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	1894
		4220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1791
대검찰청	선별	4221	검찰개혁위원회_검찰개혁위원회 제12, 13, 14차 권고 발표	1224
		4222	중대·조직적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2143
	선별	4223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개관 10주년 기념식 개최	1958
		4224	변론 투명화·공정화를 위한 변론기일제 시행	1478
방위사업청	제출	4225	“방산 수출입절차, 어렵지 않아요” 생산현장에서 맞춤형 상담한다.	940
		4226	로켓발사기 장착 특수정밀 선회링 등 3종 부품 국산화 완료	913
	선별	4227	미래 기동전력의 핵심, ‘차륜형장갑차’ 야전운용시험으로 군 운용성 입증	1089
		4228	방위사업청, 추석 앞두고 방산업체 결제 대금 조기 지급	571
법무부	제출	4229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위한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737
		4230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을 걷어낸다.”	1502
	선별	4231	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 및 우수인재에게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856
		4232	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1320
보건복지부	제출	4233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1277
		4234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1264
	선별	4235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2198
		4236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배포	1137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출	4237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번엔‘다이어트 음료’검사한다	1490
		4238	‘클렌즈주스’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능·효과 없다	1696
	선별	4239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1305
		4240	세균발육 양성, ‘혼합프레스햄’제품 회수 조치	658
인사혁신처	제출	4241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원칙 엄격하게 적용	1297
		4242	장관님 비서는 어떻게 일 하나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916
	선별	4243	인사혁신처,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875
		4244	지역외교·외교전문분야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방법 변경	137
조달청	제출	4245	4차산업 신기술(인공지능)활용 물품관리제도 개선	1043
		4246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공물자 할인행사 개최	841
	선별	4247	조달청, 시설공사대금‘추석 명절’전 조기지급	899
		4248	조달청 ‘e-발주시스템’, 수요기관 직접 평가에도 이용가능	681
해양수산부	제출	4249	추석 물가 잡는다…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 방출	1303
		4250	한국 해기사 면허, 이제 핀란드에서도 통한다	1175
	선별	4251	해수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기 나서	1275
		4252	해양생명자원, 10월부터 온라인으로 편하게 분양 받으세요	1225
행정안전부	제출	4253	관공서 서류 제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1651
		4254	소하천 유량 자동계측으로 홍수에 대비 한다	1221
	선별	4255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976
		4256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없앤다!	1162
환경부	제출	4257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 현장 특별점검	1762
		4258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27년까지 25종 복원	2650
	선별	4259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하세요	953
		4260	추석 연휴 발생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	1108
고용노동부	제출	4301	직업소개업 영업규제가 10.18일부터 완화됩니다.	1330
		4302	직무능력에 기초한 채용이 쉬워진다	1129
	선별	4303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2115
		4304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1188
교육부	제출	4305	교육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748
		430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배포	1555
	선별	4307	‘처음학교로’시행 대비, 교육부-교육청 공동 점검 회의 개최	2286
		4308	교육부, '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	1848
관세청	제출	4309	세관 신고서, 내국인은 여권번호 기재 안한다	604
		4310	“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1042
	선별	4311	세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문서제출	693
		4312	관세청, “원산지세탁 꼼짝마” 끝까지 추적 감시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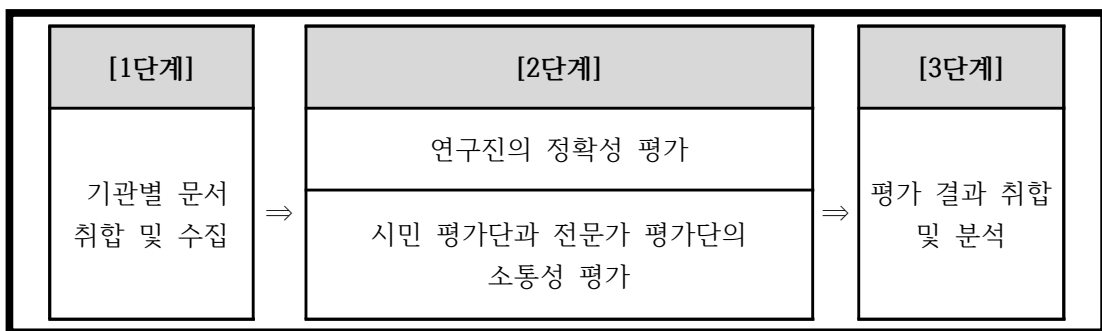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토교통부	제출	4313	철도 개통 전‘안전성’검증 강화…내년부터 적용	2084
		4314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1226
	선별	4315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1074
		4316	29일부터 전국 512개 건설현장 동절기‘안전’합동점검	1237
금융위원회	제출	4317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1553
		43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09
	선별	43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	1815
		4320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2054
기획재정부	제출	4321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방문	1440
		4322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장애인시설 생활체육 봉사 참여	919
	선별	4323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정조달 강화 추진	1183
		4324	녹색기후기금(GCF), 19개 사업에 총 10.4억불 지원	1307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4325	추석 명절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948
		4326	정확한 쌀 등급표시(미검사 표시 금지)로 품질 고급화 촉진	1162
	선별	4327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 일자리를 만듭니다.	1022
		4328	자조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 자조금 거출율 향상 등 기대	90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출	4329	“알뜰폰 전파사용료 2019년말까지 면제 연장”	860
		4330	마을 방송용 간이무선국, 지자체 재난예방 업무에 활용	859
	선별	4331	ICT 분야‘규제 샌드박스’본격 도입	1798
		4332	특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본격 추진	1420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4333	SNS 내정보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1088
		4334	방통위, 이동통신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1802
	선별	4335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879
		4336	방통위, 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901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4337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1380
		4338	무역위원회,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1015
	선별	4339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적극 육성	1439
		4340	“정부, 조선기자재 활력제고 나선다”	1506
원자력안전 위원회	제출	434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 ’ 개최	881
		4342	원안위,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1410
	선별	4343	원안위, 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승인	826
		4344	원안위, ‘2018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실시	1171

생산기관 (군별/가나다순)	수집 유형	연번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외교부	제출	4345	2019년도 재외국민보호 사업 예산안 전년 대비 5.2% 증가	1282
		4346	강경화 장관,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참석	998
	선별	4347	제26호 태풍 위투 사이판 강타 관련, 우리 교민 및 관광객 지원 긴급 대책회의 개최	812
		4348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전 세계 인도적 위기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다	1308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4349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신보)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시행	1290
		4350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500억원 투자한다!	1537
	선별	4351	중기부.삼성전자.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을 통한 상생협력 다짐!	1881
		4352	라벨같이 근절 민관협의회, 라벨같이 레드카드 뽑는다!	1560
통계청	제출	4353	KOSIS,「해석남녀」서비스 실시	835
		4354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실시	609
	선별	4355	통계가 재미없다고요? 하지만 중요해요.	808
		4356	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디자인, 국민이 평가	1689
특허청	제출	4357	제3회 아름다운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결과 발표	864
		4358	의료 영역에 도전하는 인공지능(AI) 의사	1134
	선별	4359	특허심사관 증원이 특허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1426
		4360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확대	841

2. 보도 자료 진단 절차

‘보도 자료 평가 및 진단’에서는 체계적 작업 과정을 통해 연구진이 정확성을 평가하고, 시민 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이 소통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따라 정확성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소통성 지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본 연구의 보도 자료 평가 절차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기관별 문서를 수집 및 취합하며,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2건의 보도 자료와 연구진에서 선별한 2건의 보도 자료를 평가 대상으로 확정한다. 2단계에서는 정확성과 소통성을 평가하고 3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취합, 분석하여 진단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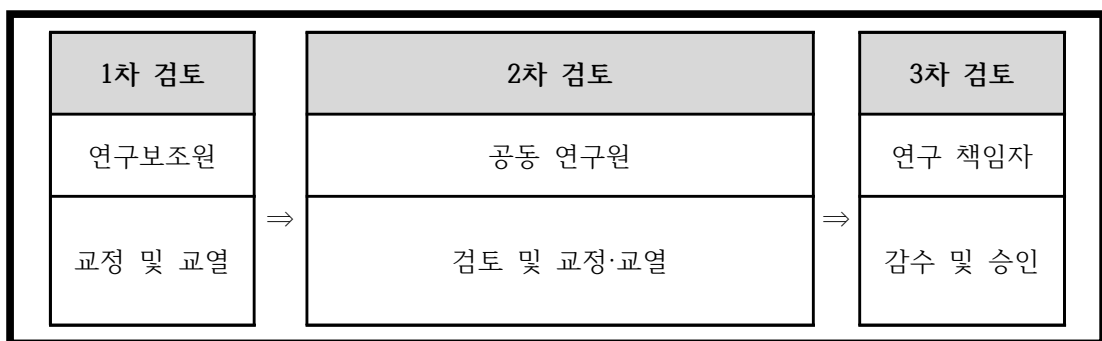


[그림 4] 보도 자료 평가 절차

1) 정확성 진단

정확성 평가는 공동 연구원 1인과 연구보조원 1인이 한 조로, 총 3개의 조를 운영하였다. 신뢰도 높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연구진 모두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진행하였으며,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는 연구원 간의 상시적인 회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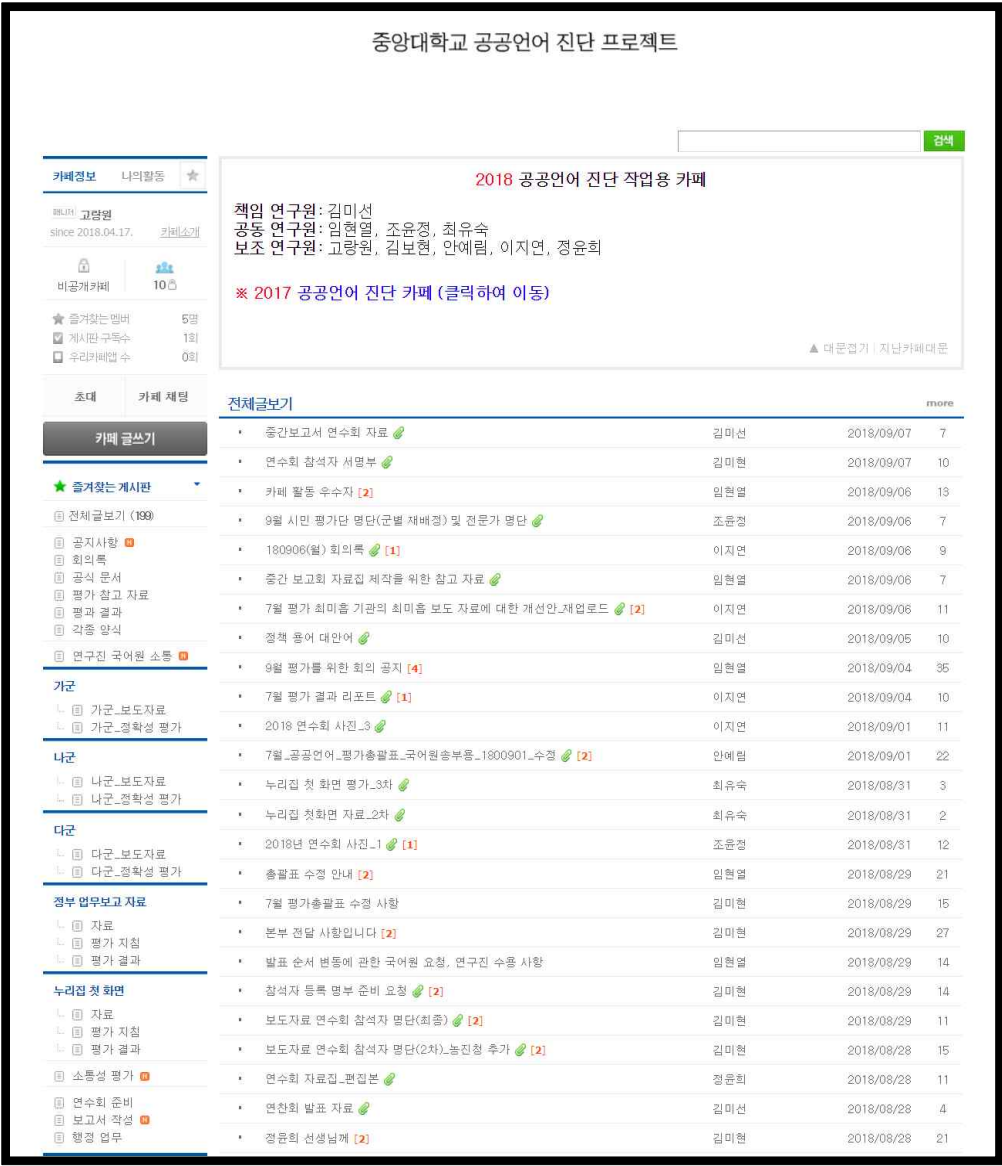
평가에서는 보도 자료 한 건당 3차에 걸쳐 교정이 수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숙련된 연구보조원이 보도 자료에 포함된 정확성 오류를 추출하여 교정 및 교열하고, 2단계에서는 공동 연구원이 이를 검토한 후 추가 교정·교열을 진행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감수하였다.



[그림 5] 정확성 평가의 3단계

정확성 평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포털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여 작업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다. 이 카페에는 연구진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 담당자도 가입하여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작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네이버 카페가 작업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일종의 자료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 구조를 세분화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2018년 4월 17일에 개설하여 현재까지 작업에 활용하고 있는 카페의 첫 화면(<https://cafe.naver.com/caukorean2018>)이다. 연구진 9인과 국립국어원 담당자 등 총 10인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23개 게시판에 해당 게시 글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6] 평가 진행을 위한 네이버 카페 첫 화면

본 연구진은 2017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평가 항목을 더욱 구체화·체계화한 바 있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그 효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평가 항목은 크게 표기의 정확성과 표현의 정확성의 두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소통성

에서 평가하는 영역은 정확성에서는 제외하였다. 표기의 정확성은 1,000어절당 오류 1개에 0.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고, 표현의 정확성은 1,000어절당 오류 1개당 1점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한 자료에서 동일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1회분 점수를 감점하였다. 또한 오류의 횟수만으로 단순 계산하면 공정하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총음절 수를 1,000음절로 환산하여 환산 점수를 부여하였다. 정확성 평가 점수는 전체 평가에 20%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더불어, 점수 계산에만 그치지 않고, 세부 항목별 오류 양상을 통계 처리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안 제시에 활용하였다. 정확성 평가 요소와 세부 기준은 [표 26]과 같다.

1. 표기의 정확성	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2.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2. 표현의 정확성	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표 26] 정확성 평가 요소와 세부 기준

2017년 사업에서는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되, 이와 관련된 항목은 감점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사업에서는 사업 시작 시 이 항목에 대한 진단 자체를 중단하고 대신 보도 자료에 사용된 불필요한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어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8년 사업에서는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수년간의 진단으로 띄어쓰기는 상당히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극히 저빈도로 나타나는 띄어쓰기 오류가 보도 자료를 읽는 데 크게 문제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린 조치이다. 정확성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이 평가 항목은 표기 형태에 관한 오류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문서 작성자가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장 부호의 오류 역시 이 항목에서 지적한다.

① 한글 맞춤법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음법칙을 잘못 사용한 경우 지적한다. (예: 회계년도 → 회계연도, 열력학 → 열역학) - 사이시옷을 잘못 표기한 경우 지적한다. (예: 죄값 → 죄갚, 인삿말 → 인사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준말의 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적한다. (예: 되야 → 돼야, 뵈도록 → 뵈도록) - 숫자 표기나 영문 표기 뒤 조사의 이형태를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적한다. (예: 10km을 → 10km를, 전담팀(TF)를 → 전담팀(TF)을) - 직접 인용문을 사용할 때 ‘라고’, ‘라며’, ‘라면서’를 사용하지 않고 ‘고’, ‘며’, ‘면서’를 쓰면 지적한다. (예: “이번 행사를 축하한다.”고 → “이번 행사를 축하한다.”라고)
② 표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의 내용상 비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지적하지 않는다.

(나) 1.2.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를 지켰는가?

이 항목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진단 기준으로 설정한 항목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 어휘로 정착한 말을 표기하는 규범이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 어휘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규범으로 상호 간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관해서는 외래어, 외국어 어휘 표현이 정확한지, 인명이나 지명 표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련해서는 2002년에 수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점검 전		점검 후
메세지	→	메시지
프리젠테이션	→	프레젠테이션
캐비닛	→	캐비닛
호치민	→	호찌민
사천성	→	쓰촨성
싱가폴	→	싱가포르
알러지	→	알레르기
알콜	→	알코올
컨테이너	→	컨테이너
솔루션	→	설루션
타겟	→	타깃

(다) 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이 항목은 의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의미가 중복된 경우의 세 부류로 분류한다. 이는 공공언어에 쓰인 어휘가 의미에 맞게 선택되었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즉, 사용된 어휘의 의미가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것인가,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된 것인가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 항목은 (가)에서 다룬 ‘한글 맞춤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철자가 유사하여 생긴 오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잘못된 철자 표기에 대해서는 표기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로 다룬다.

그러나 철자가 유사하여 생긴 오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모두 등재된 ‘헛갈리는’ 단어 사이에서 일어난 단어 선택의 문제는 이 항목의 어휘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나가다/나아가다’, ‘치하/위로’, ‘게재/게시’, ‘반증/방증’, ‘증대/증진’과 같은 예가 있다. 또한 의미는 통하지만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한 경우도 이 항목에서 진단한다. 예를 들어, ‘이슈를 발굴해 → 이슈를 찾아내’가 있다.

점검 전		점검 후
출입을 일체 금하다.	→	출입을 일절 금하다.
각국별 정상들이 회의를 가졌다.	→	각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가졌다.
조직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다	→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다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였다.	→	수출을 활성화하였다.
현역병 모집 인원은 군에서 매월별 필요한 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	역병 모집 인원은 군에서 매월 필요한 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라) 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이 항목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장 성분 간의 관계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성분의 호응, 성분의 중복, 과도한 생략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 요소들을 다음 5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①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연스러운 문장 접속 • 과도한 문장 접속 • 접속 오류(대등 접속에서 앞뒤 성분이 다른 경우) • 문장 접속 오류(연결어미로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의 접속이 잘못된 경우도 이 항목에서 진단)
------	---

② 호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오류 • 주어와 서술어 호응 오류 • 기타 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
③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순 오류 • 부적절한 조사 사용, 잘못된 조사 사용 • 부적절한 연결어미 사용
④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성분 삽입 • 동일 표현 반복 • 동일한 조사의 반복 사용
⑤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필수 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필수 부사어) 생략 • 필요한 조사 생략 • 서술어 어간 생략

- 문장 성분 간 호응이 되고 있지 않을 시 지적한다.

예) 태풍의 발생 빈도와 세기가 커지고 있다. → 태풍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세기가 커지고 있다.

가정이나 공장에서는 많은 불편과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 가정이나 공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 중의적 표현으로 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에 지적한다.

예) A사 대표가 이 총재와 골프 회동을 해명하기로 했다. → A사 대표가 이 총재와의 골프 회동을 해명하기로 했다.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업소가 폐업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조사를 과도하게 생략하여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적한다.

예) 대체 인력 사전 확보 후 필요 시 충원. → 대체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후에 필요 시 충원한다.

- 조사 사용의 문법적, 의미적 오류가 있을 시 지적한다.

예) 수형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준다.

→ 수형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준다.

미취업자과정은 온라인 수강생(연간300명)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생의 선수학습으로써, 재직자과정은 온라인 수간(연간300명)과 오프라인 이수생의 보수교육으로써 운영된다.

→ 미취업자과정은 온라인 수강생(연간300명)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생의 선수학습으로써, 재직자과정은 온라인 수간(연간300명)과 오프라인 이수생의 보수교육으로써 운영된다.

-
- 간결성이 중요한 보도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장이 주어 없이 명사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서술어 생략’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목과 부제는 예외로 하여 지적하지 않는다.
 - ‘-하다’가 붙어 용언으로 쓰이는 어휘가 ‘-하다’ 없이 사용되는 경우는 문법상 오류이지만, 이는 보도 자료의 특성으로 인정하여 지적하지 않는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침표를 사용해야 한다.
예) 이와 관련,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
그중 J물산 대표 이 모씨를 ‘12.09.25.구속,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서도 ~
 - 보도 자료의 특성상 문장이 길더라도, 글머리를 달리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는 과도한 문장 접속으로 다루지 않는다.
-

2) 소통성 진단

연구진이 수행하는 정확성 평가와 더불어 시민과 전문가가 주체가 되는 소통성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다. ‘소통성’은 ‘언중이 공공언어에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고 장르의 생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한 얼마나 효과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그 세부 기준은 [표 27]과 같다.

소통성 평가 요소	소통성 평가의 세부 기준
1. 공공성	1.1.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였다.
2. 정보성	2.1. 핵심 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2.2.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 되었다.
3. 용이성	3.1. 각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다.
	3.2.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다.
	3.3. 글씨체와 크기, 여백이 적절하여 보기에 편리하다.

[표 27] 소통성 평가의 세부 기준

2016년 사업을 비롯한 과거의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는 시민 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에게 서로 다른 질문을 제시했으나,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시민과 전문가가 동일한 질문으로 보도 자료의 소통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소통성 진단의 기준은 2016년에 6개, 2017년에는 7개였으나, 2018년 진단에서는 [표 28]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요소별 세부 항목의 내용은 [표 28]과 같다.

번호	세부 항목 내용
1	핵심 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2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 되었다.
3	각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다.
4	글씨체와 크기, 여백이 적절하여 보기에 편리하다.
5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였다.
6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다.

[표 28] 소통성 진단 요소의 세부 항목

2016년에는 고압적, 권위적, 차별적 표현의 유무와 시각적 구성 요인이 보도 자료의 소통성 진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4번 기준과 5번 기준이 추가되었다. 또한 1~3번 기준은 2015년에서 제시된 진단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이다. 2017년에는 2016년의 기준 가운데 5번 항목의 내용에 고압적이라는 표현을 빼고, 공공성 내용을 추가하였다. 2018년에는 타당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입력 방식을 활용하였다.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준은 리커트 척도로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5번의 경우는 ‘권위적·차별적 표현’이 있는 경우 직접 단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6번의 경우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가 있는 경우 단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에는 총평의 문항을 설정하여 장단점을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온라인상의 소통성 평가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2018공공언어 진단] 7월 평가 예시1

기관명:

보도자료제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본격 시행 (PDF 파일 클릭)

* 1. 1점(미흡) ~ 5점(우수) 가운데 선택해 주세요.

→ 지침 2~6쪽 참조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가 항목 1. 핵심 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평가 항목 2.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 되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평가 항목 3. 각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평가 항목 4. 글씨체와 크기, 여백이 적절하여 보기에 편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평가 항목 5.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였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평가 항목 5'에 해당하는 권위적이거나 차별적인 표현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지침 6쪽 참조

* 2.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가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보시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슬리는 외래어, 한자어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 3. 총평

장점

단점

→ 지침 7쪽 참조

[그림 7] 소통성 온라인 평가 화면

소통성 평가의 점수는 1-5번 문항 응답값의 합산으로, 시민 평가단의 경우 30점 만점으로, 전문가 평가단의 경우 50점 만점으로 변환하였다. 평가자 참여 현황은 [표 29]와 같다.

	가군		나군		다군	
	시민	전문가	시민	전문가	시민	전문가
5월 평가	6	3	6	3	6	3
7월 평가	6	3	6	3	6	3
9월 평가	6	3	6	3	6	3
11월 평가	6	3	6	3	4	3

[표 29] 소통성 평가단 참여 현황

소통성 평가는 시민 평가단 18인과 전문가 평가단 9인에 의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단의 모집과 관리는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하되,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한 시민 평가단 선정은 연구진에서 담당하였다. 실제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평가 주소를 송부하고, 평가 결과를 수합하는 과정 역시 연구진에서 담당하였다.

소통성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섭외한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 평가단에게 평가 자료가 올라가 있는 온라인 설문 시스템 주소를 발송하고 설문 결과를 수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의뢰 후 보름 이내에 평가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가 평가단은 학계, 언론계, 홍보업계의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군별로 학계 연구자, 언론 종사자, 홍보업계 종사자가 1인씩 포함되도록 하여 총 3인의 전문가가 한 군을 평가하였다. 시민 평가단은 3개 군으로, 6인이 한 군을 이루어 3개 군을 순환하며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11월 진단에서는 다군 시민단 2명이 개인 일정상의 이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과거 2013년, 2014년에는 10점 척도 방식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점 척도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최근의 방식을 준용하여 5점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소통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소통성 세부 문항의 항목별 가중치는 2011년에는 적용하였으나 2012년부터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공공언어 진단에서도 이에 대해 따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정확성과 소통성 점수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평가 결과 점수는 정확성 평가 20%, 시민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 30%, 전문가 평가단의 소통성 평가 50%를 각각 반영하여 기관별 최종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소통성 평가의 결과는 5점 척도로 측정된 5문항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의 개수를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하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의 점수는 한 보도 자료 내에서 2명 이상의 평가자가 중복 지적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의 개수를 감점하여 산출하였다. 지적 표현이 0개인 경우 0점 감점, 1~2개인 경우 1점 감점, 3개 이상일 경우 2점 감점하였다. 이 값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진단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기관별 정확성과 소통성 정도의 판단을 위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다. 소통성 평가는 군에 따라 평가단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순위는 각 군 내에서 지정하였다. 또한 군별 정확성과 소통성 평가 점수 비교를 위하여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확성 평가의 전체 오류 항목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관별 정확성 평가 항목에 따른 오류 빈도를 제시하였다.

넷째, 소통성 평가 결과 분석을 위하여 기관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의 출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진이 검토한 표현 목록과 평가단이 선정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또 전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지적된 단어목록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Ⅲ. 진단 결과

1. 정확성 평가 요약

정확성 평가는 20점 만점으로 진단하였다. 5월, 7월, 9월, 11월 총 4번에 걸쳐 각 기관별 4개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 정확성 평가 점수의 평균값과 군별 순위는 아래와 같다. 전체 45개 기관의 정확성 평가 평균은 18.06점이며, 표준편차는 0.76이었다. 군별 평균은 가군 17.96, 나군 17.93, 다군 18.29이고, 군별 표준편차는 가군 0.60, 나군 0.92, 다군 0.71로 군별 정확성 평가 점수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16.60	17.84	16.28	16.31	16.76	15
	국민권익위원회	16.57	18.37	18.46	17.90	17.82	8
	기상청	16.25	17.48	18.13	18.28	17.54	11
	농촌진흥청	18.11	18.41	16.61	17.91	17.76	9
	문화재청	17.69	19.17	18.32	17.99	18.29	6
	문화체육관광부	18.18	19.73	19.32	18.78	19.00	1
	법제처	17.08	18.21	18.87	17.77	17.98	7
	병무청	17.20	18.81	15.95	18.04	17.50	12
	산림청	16.82	18.76	18.64	19.19	18.35	5
	새만금개발청	17.87	19.01	18.61	18.15	18.41	4
	소방청	17.03	17.62	17.13	18.14	17.48	13
	여성가족부	17.67	19.20	18.82	18.38	18.52	3
	통일부	18.15	19.30	18.39	19.25	18.77	2
	해양경찰청	17.11	17.96	17.57	17.07	17.43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7.39	18.38	17.80	17.42	17.75	10
나군	경찰청	15.68	16.65	17.62	16.94	16.72	14
	공정거래위원회	17.25	17.82	19.15	17.85	18.02	8
	국가보훈처	13.37	16.02	16.03	16.58	15.50	15
	국방부	17.01	17.44	17.93	16.60	17.25	13
	국세청	17.84	18.76	19.38	18.87	18.72	3
	대검찰청	19.12	18.94	19.27	19.22	19.14	1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방위사업청	16.63	17.14	18.90	18.37	17.76	11
	보건복지부	17.57	17.83	18.74	17.70	17.96	9
	식품의약품안전처	17.65	17.52	18.79	17.46	17.85	10
	인사혁신처	16.95	17.91	18.87	19.08	18.20	6
	조달청	17.00	18.30	18.08	17.45	17.71	12
	해양수산부	18.67	18.55	19.03	19.50	18.93	2
	행정안전부	18.07	18.11	18.70	17.19	18.02	7
	환경부	18.12	18.99	19.36	18.00	18.62	4
다군	고용노동부	17.01	15.65	16.58	18.49	16.93	15
	교육부	17.67	18.77	18.59	19.43	18.61	6
	관세청	18.23	16.30	19.48	17.98	18.00	10
	국토교통부	18.36	18.47	18.64	19.30	18.69	5
	금융위원회	19.46	18.85	19.27	19.69	19.32	2
	기획재정부	18.62	17.88	19.01	19.61	18.78	4
	농림축산식품부	18.46	15.34	16.79	18.57	17.29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20	18.43	17.84	19.23	17.93	11
	방송통신위원회	16.29	16.01	19.51	19.15	17.74	12
	산업통상자원부	18.06	17.20	19.02	19.65	18.48	7
	원자력안전위원회	18.92	18.93	18.86	19.50	19.05	3
	외교부	19.30	18.75	19.50	19.81	19.34	1
	중소벤처기업부	17.06	18.28	17.64	19.41	18.10	9
	통계청	18.82	16.64	19.11	19.07	18.41	8
	특허청	16.30	17.42	18.01	19.13	17.71	13

2. 소통성 평가 요약

소통성 평가는 80점 만점으로 진단하였다. 5월, 7월, 9월, 11월 총 4번에 걸쳐 각 기관별 4개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배점은 시민 평가단 30점, 전문가 평가단 50점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45개 기관의 소통성 평가 평균은 67.38점이며, 표준편차는 2.32이었다. 군별 평균은 가군 68.43, 나군 69.03, 다군 64.68이고, 군별 표준편차는 가군 1.28, 나군 1.30, 다군 1.32로 나군의 소통성 평가 점수가 가장 높고 다군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64.39	64.69	62.96	69.64	65.42	15
	국민권익위원회	64.01	69.71	67.89	71.32	68.23	10
	기상청	70.01	72.11	68.17	67.94	69.56	2
	농촌진흥청	66.58	69.01	66.61	71.74	68.49	9
	문화재청	68.76	65.71	64.43	67.08	66.50	14
	문화체육관광부	68.10	67.97	64.18	71.26	67.88	12
	법제처	67.76	70.74	61.64	69.15	67.32	13
	병무청	70.99	69.29	65.88	71.83	69.50	4
	산림청	70.86	71.94	65.18	73.25	70.31	1
	새만금개발청	68.71	70.58	67.93	70.14	69.34	5
	소방청	66.67	69.94	63.93	72.00	68.14	11
	여성가족부	68.33	71.03	67.15	71.49	69.50	3
	통일부	68.40	70.67	63.97	71.25	68.57	8
	해양경찰청	69.01	70.79	65.13	69.60	68.63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8.69	70.24	65.25	71.86	69.01	6
나군	경찰청	63.89	63.83	69.33	68.65	66.43	15
	공정거래위원회	67.04	70.38	72.32	68.50	69.56	8
	국가보훈처	66.67	69.03	71.11	69.61	69.10	9
	국방부	65.46	65.60	71.86	73.29	69.05	10
	국세청	67.64	62.33	70.10	65.99	66.51	14
	대검찰청	67.51	65.17	71.71	67.78	68.04	12
	방위사업청	70.22	62.68	69.64	69.32	67.97	13
	법무부	68.71	71.54	69.63	69.06	69.73	5
	보건복지부	70.33	65.22	72.47	70.72	69.69	6
	식품의약품안전처	71.10	67.29	73.49	70.38	70.56	2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인사혁신처	69.75	64.97	72.31	71.38	69.60	7
	조달청	65.49	67.60	72.01	69.54	68.66	11
	해양수산부	68.31	68.04	71.88	71.47	69.92	4
	행정안전부	69.06	67.14	72.63	71.32	70.03	3
	환경부	73.67	67.63	70.60	70.49	70.59	1
다군	고용노동부	62.49	62.65	61.10	61.56	61.95	15
	교육부	62.49	64.43	65.44	61.78	63.54	13
	관세청	65.58	63.28	63.35	65.64	64.46	9
	국토교통부	68.22	65.63	65.19	65.26	66.07	4
	금융위원회	61.67	66.64	63.10	59.97	62.84	14
	기획재정부	62.83	64.39	65.93	63.35	64.13	11
	농림축산식품부	61.67	64.82	67.42	65.16	64.77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4.21	67.26	65.31	64.65	65.36	5
	방송통신위원회	66.88	68.36	65.14	64.22	66.15	3
	산업통상자원부	63.67	68.60	66.78	66.37	66.35	2
	원자력안전위원회	66.03	64.67	65.39	64.40	65.12	6
	외교부	63.31	65.28	65.58	62.53	64.18	10
	중소벤처기업부	62.64	65.19	62.78	64.90	63.88	12
	통계청	64.47	63.18	66.43	65.16	64.81	7
	특허청	65.64	67.63	66.72	66.20	66.55	1

3. 정확성 · 소통성 평가 합산

연구진의 정확성 평가 20점, 시민 소통성 평가 30점, 전문가 소통성 평가 5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4차례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와 그 평균값은 아래와 같다. 전체 45개 기관의 정확성과 소통성 평가 합산 평균은 85.44점이며, 표준편차는 2.36이었다. 군별 평균은 가군 86.38, 나군 86.96, 다군 82.97로 나타났으며, 군별 표준편차는 가군 1.56, 나군 1.71, 다군 1.49였다.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80.99	82.54	79.24	85.95	82.18	15
	국민권익위원회	80.59	88.08	86.34	89.22	86.06	11
	기상청	86.27	89.60	86.30	86.22	87.10	5
	농촌진흥청	84.69	87.42	83.22	89.65	86.25	9
	문화재청	86.46	84.87	82.76	85.07	84.79	14
	문화체육관광부	86.27	87.71	83.50	90.05	86.88	7
	법제처	84.84	88.94	80.51	86.92	85.30	13
	병무청	88.18	88.11	81.83	89.88	87.00	6
	산림청	87.68	90.70	83.82	92.44	88.66	1
	새만금개발청	86.58	89.60	86.54	88.29	87.75	3
	소방청	83.69	87.56	81.06	90.14	85.61	12
	여성가족부	86.00	90.23	85.97	89.87	88.02	2
	통일부	86.56	89.97	82.36	90.50	87.35	4
	해양경찰청	86.12	88.75	82.69	86.67	86.06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6.08	88.62	83.05	89.28	86.76	8
나군	경찰청	79.57	80.48	86.95	85.59	83.15	15
	공정거래위원회	84.29	88.20	91.46	86.35	87.58	8
	국가보훈처	80.04	85.05	87.14	86.19	84.60	14
	국방부	82.47	83.04	89.80	89.89	86.30	11
	국세청	85.48	81.09	89.48	84.86	85.23	13
	대검찰청	86.63	84.10	90.98	87.00	87.18	9
	방위사업청	86.86	79.82	88.54	87.69	85.73	12
	법무부	86.21	90.87	87.83	88.18	88.27	4
	보건복지부	87.90	83.05	91.21	88.42	87.65	7
	식품의약품안전처	88.75	84.81	92.28	87.83	88.42	3

모듬	기관명	5월 평가	7월 평가	9월 평가	11월 평가	평균	순위
	인사혁신처	86.70	82.88	91.17	90.46	87.80	6
	조달청	82.48	85.90	90.09	86.99	86.37	10
	해양수산부	86.97	86.59	90.90	90.97	88.86	2
	행정안전부	87.13	85.25	91.32	88.51	88.05	5
	환경부	91.79	86.61	89.96	88.49	89.21	1
다군	고용노동부	79.49	78.30	77.68	80.05	78.88	15
	교육부	80.16	83.20	84.03	81.22	82.15	12
	관세청	83.81	79.58	82.83	83.62	82.46	10
	국토교통부	86.58	84.09	83.84	84.55	84.77	2
	금융위원회	81.13	85.49	82.37	79.66	82.16	11
	기획재정부	81.45	82.27	84.94	82.96	82.91	9
	농림축산식품부	80.13	80.16	84.21	83.73	82.06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0.41	85.70	83.15	83.88	83.28	7
	방송통신위원회	83.16	84.37	84.65	83.37	83.89	5
	산업통상자원부	81.72	85.79	85.80	86.01	84.83	1
	원자력안전위원회	84.94	83.60	84.24	83.90	84.17	4
	외교부	82.60	84.03	85.08	82.34	83.52	6
	중소벤처기업부	79.70	83.47	80.42	84.31	81.97	14
	통계청	83.29	79.82	85.54	84.23	83.22	8
	특허청	81.94	85.04	84.73	85.33	84.26	3

4. 군별 평가 결과 비교

군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 나, 다군의 정확성 평가와 소통성 평가 점수를 비교하였다. 하나의 군에 속하는 기관 수가 15개이므로 세 집단 이상의 집단분포를 비교하는 비모수 검정인 쿠르스칼-윌리스(Kruskal-Wallis) 검정¹¹⁾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확성 평가의 경우 검정 통계량인 카이제곱(χ^2)이 2.041이고 이에 대한 유의 확률(p값)이 .360으로 가, 나, 다군의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성 평가에서는 카이제곱(χ^2)이 28.948이고 이에 대한 유의 확률(p값)이 .000으로 세 집단의 소통성 평가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군의 점수가 69.03으로 가장 높았고, 다군이 64.68로 낮게 나타났다.

평가 항목	군	N	평균	표준편차	Kruskal-Wallis 검정	
					카이제곱(χ^2)	유의확률
정확성	가	15	17.96	0.60	2.041	.360
	나	15	17.93	0.92		
	다	15	18.29	0.71		
소통성	가	15	68.43	1.28	28.948	.000
	나	15	69.03	1.30		
	다	15	64.68	1.32		
전체	가	15	86.38	1.56	24.821	.000
	나	15	86.96	1.71		
	다	15	82.97	1.49		

[표 30] 군별 정확성과 소통성 평가 점수 비교

11) 여러 평균치의 차(差)의 검증인 일원변량분석의 F검증에 대응하는 비모수적 통계방법. 이 방법은 두 개 이상의 독립표집의 비교에 적합하다. 이것은 서열변인으로 연속적 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나 분포의 정상성이나 동변량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대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5. 정확성 평가 결과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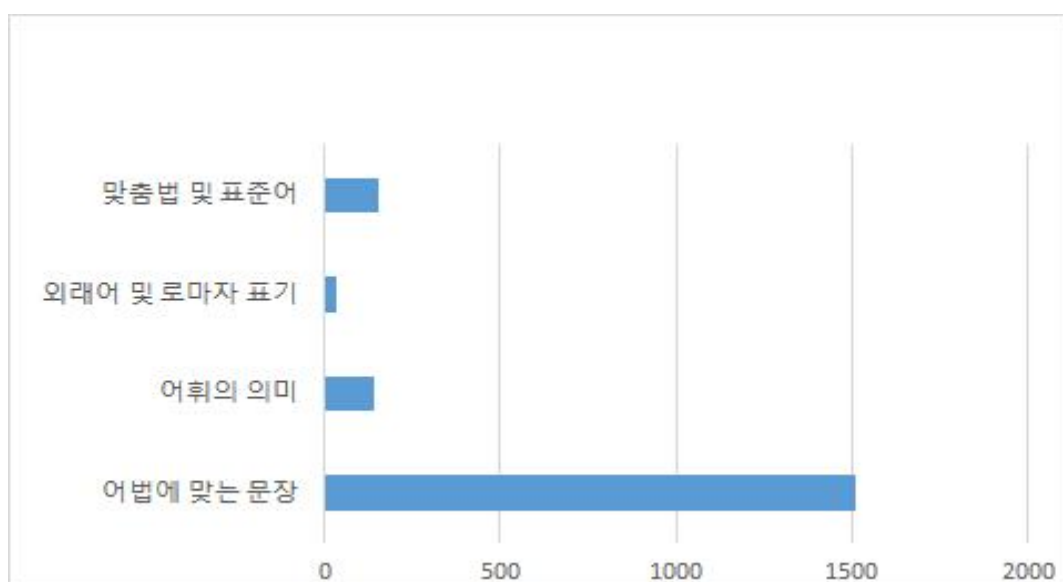
1) 정확성 평가의 항목별 분석 결과

정확성 평가는 ‘맞춤법 및 표준어’,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어휘의 의미’, ‘어법에 맞는 문장’의 4개의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평가를 수행한 보도 자료에서 평가 항목별로 집계된 오류의 총합은 아래와 같다. 5, 7, 9, 11월 평가의 보도 자료 720건에서 ‘어법에 맞는 문장’ 항목이 1,507번의 빈도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 데 비해,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항목은 오류의 빈도가 35번으로 가장 낮았다.

최솟값과 최댓값은 하나의 보도 자료 내에서 집계된 평가 항목별 오류의 수이다. 최댓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보도 자료 내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견된 항목은 최대 14번의 오류가 발견된 ‘어법에 맞는 문장’이었다. 그다음으로 ‘맞춤법 및 표준어’와 ‘어휘의 의미’ 항목에서 각각 최대 5번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항목의 최댓값은 3번으로 가장 적었다.

평가 항목	보도 자료 수	최솟값	최댓값	합계
맞춤법 및 표준어	720	0	5	15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720	0	3	35
어휘의 의미	720	0	5	140
어법에 맞는 문장	720	0	14	1,507

[표 31] 정확성 평가 항목의 전체 빈도



[그림 8] 정확성 평가 항목의 오류 개수

기관별 정확성 평가 하위 항목의 오류 개수는 아래와 같다.

모듬	기관명	맞춤법 및 표준어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어휘의 의미	어법에 맞는 문장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0	0	4	57
	국민권익위원회	4	0	2	45
	기상청	5	0	4	33
	농촌진흥청	5	2	3	36
	문화재청	1	0	2	32
	문화체육관광부	1	2	4	19
	법제처	5	1	0	32
	병무청	4	0	2	29
	산림청	5	0	2	22
	새만금개발청	1	0	2	24
	소방청	6	0	2	35
	여성가족부	2	0	3	36
	통일부	2	0	4	13
	해양경찰청	2	0	2	3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1	1	26
나군	경찰청	5	0	3	62
	공정거래위원회	1	1	5	56
	국가보훈처	5	1	4	74
	국방부	1	1	10	45
	국세청	3	1	2	49
	대검찰청	1	1	2	17
	방위사업청	3	0	1	33
	법무부	0	0	2	26
	보건복지부	5	0	1	46
	식품의약품안전처	5	1	3	32
	인사혁신처	5	0	3	42
	조달청	1	2	0	37
	해양수산부	3	0	3	16
	행정안전부	7	0	5	36
	환경부	4	1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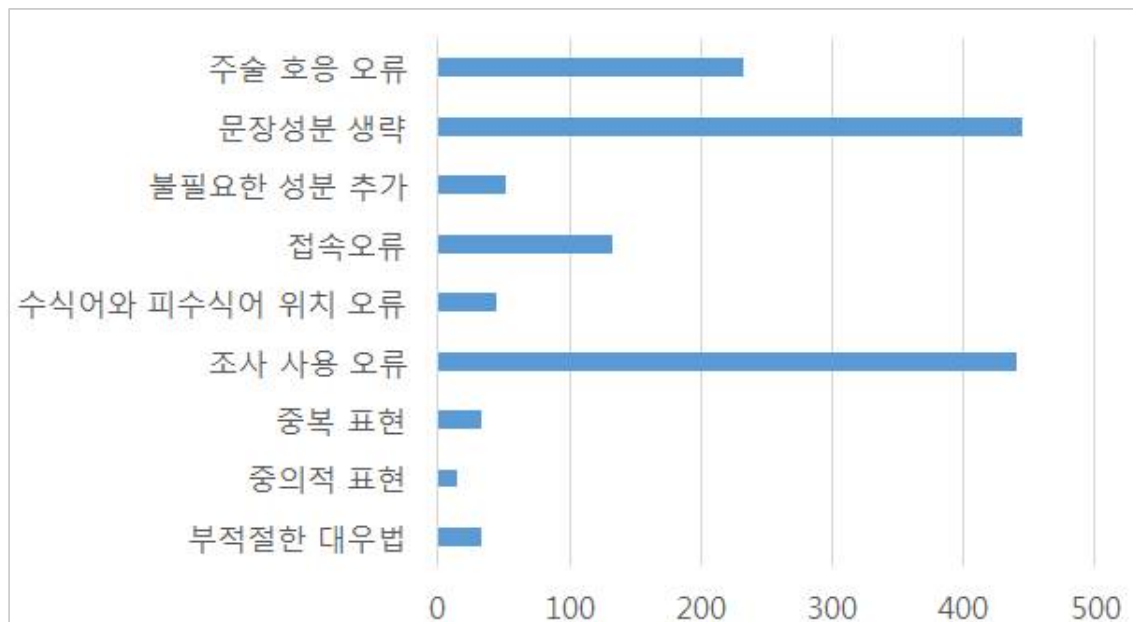
모듬	기관명	맞춤법 및 표준어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어휘의 의미	어법에 맞는 문장
다군	고용노동부	3	0	1	57
	교육부	1	1	14	38
	관세청	1	1	5	25
	국토교통부	5	1	3	31
	금융위원회	4	1	1	27
	기획재정부	5	1	1	12
	농림축산식품부	2	0	3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5	7	50
	방송통신위원회	1	0	4	30
	산업통상자원부	3	3	5	28
	원자력안전위원회	7	1	3	6
	외교부	1	1	0	16
	중소벤처기업부	8	2	8	38
	통계청	3	1	2	22
	특허청	4	2	1	39

2)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유형의 분석 결과

정확성 평가 항목 가운데 4번째 항목인 ‘어법에 맞는 문장’의 분석 결과로 제시된 오류를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어법에 맞는 문장’ 항목 평가에서 나타난 오류를 범주화하여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제시한 것이다.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의 하위 오류 항목별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전체 9개 오류 항목 중 ‘문장 성분 생략’ 항목이 총 4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의적 표현’ 항목이 총 14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평가 항목	보도 자료 수	최솟값	최댓값	합계
문장 성분 호응 오류	720	0	5	233
문장 성분 생략	720	0	5	444
불필요한 성분 추가	720	0	3	51
접속 오류	720	0	4	132
수식어와 피수식어 위치 오류	720	0	2	44
조사 사용 오류	720	0	5	441
중복 표현	720	0	1	33
중의적 표현	720	0	2	14
부적절한 대우법 ¹²⁾	720	0	5	33

[표 32]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하위 항목의 빈도



[그림 9]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하위 항목의 오류 개수

12) 국립국어원 간행물에서는 통칭 경어법에 해당하는 용어로 ‘높임’ 또는 ‘높임법’ 등을 사용해 왔으나 보도 자료의 문장이 언제나 ‘높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대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기관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유형의 오류 개수는 아래와 같다.

모듬	기관명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유형								
		(1)	(2)	(3)	(4)	(5)	(6)	(7)	(8)	(9)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5	27	3	7	0	12	0	0	0
	국민권익위원회	5	13	0	6	2	15	2	0	0
	기상청	7	14	1	0	0	5	1	0	1
	농촌진흥청	10	7	1	5	1	7	1	0	0
	문화재청	13	9	4	0	2	3	0	0	0
	문화체육관광부	3	7	3	0	1	1	2	0	0
	법제처	3	10	1	2	0	15	1	0	0
	병무청	7	12	0	2	0	3	1	0	0
	산림청	3	9	1	3	2	1	2	0	0
	새만금개발청	6	9	1	5	0	2	0	0	0
	소방청	6	9	1	4	1	13	1	0	0
	여성가족부	4	15	2	2	0	8	1	0	1
	통일부	2	5	1	3	0	2	0	0	0
	해양경찰청	3	5	1	1	2	20	1	0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4	1	2	0	16	0	0	0
나군	경찰청	8	28	1	7	1	14	0	0	0
	공정거래위원회	15	14	2	3	4	8	1	0	1
	국가보훈처	9	21	4	5	1	14	0	0	15
	국방부	6	11	1	3	3	15	0	0	2
	국세청	7	13	4	5	0	8	2	0	8
	대검찰청	1	4	0	3	1	5	0	0	0
	방위사업청	3	12	1	4	2	6	1	0	0
	법무부	4	3	0	4	0	12	1	0	0
	보건복지부	5	14	3	2	0	20	1	0	1
	식품의약품안전처	11	4	1	6	0	6	2	0	1
	인사혁신처	8	10	0	4	1	18	0	0	0
	조달청	8	9	1	1	2	15	0	0	0
	해양수산부	3	4	1	0	1	5	0	0	0
	행정안전부	7	14	0	6	1	4	0	0	1

모듬	기관명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유형								
		(1)	(2)	(3)	(4)	(5)	(6)	(7)	(8)	(9)
	환경부	8	14	0	1	1	5	0	0	0
	고용노동부	12	21	0	2	2	19	2	0	0
	교육부	1	13	3	2	2	13	0	2	0
	관세청	5	6	0	5	1	4	1	2	0
	국토교통부	0	13	0	3	2	7	3	2	0
	금융위원회	5	5	1	1	0	11	0	0	1
	기획재정부	2	3	0	0	1	3	1	2	0
	농림축산식품부	2	3	0	4	0	4	1	0	0
다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14	1	6	1	14	2	3	0
	방송통신위원회	4	3	0	3	2	14	1	2	0
	산업통상자원부	8	6	0	2	1	11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0	4	0	0	0	2	0	0	0
	외교부	1	3	0	3	1	7	0	0	0
	중소벤처기업부	1	8	2	1	1	22	1	1	1
	통계청	2	6	0	4	0	10	0	0	0
	특허청	2	6	4	0	1	22	0	0	0

* (1) 문장 성분 호응 오류, (2) 문장 성분 생략, (3) 불필요한 성분 추가, (4) 접속 오류, (5) 수식어와 피수식어 위치 오류, (6) 조사 사용 오류, (7) 중복 표현, (8) 중의적 표현, (9) 부적절한 대우법

6. 소통성 평가 결과의 분석

1) 기관별 소통성 평가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출현율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의 소통성 평가는 5점 척도로 이루어진 5문항과 보도 자료 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자유롭게 적는 개방형 응답형식의 1문항으로 평가되었다. 개방형 응답을 받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항목은 평가자 2인 이상이 지정한 단어(표현)의 개수를 점수로 변환하여 소통성 평가 총점을 산출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보도 자료 내 소통성을 저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의 출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도 자료에서 쓰인 모든 한자어, 외래어 및 로마자 중 평가단에서 지정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의 출현율을 분석하였다. 보도 자료 내 모든 한자어, 외래어 및 로마자 표현은 연구진에 의해 검토되었다. 가군의 문화체육관광부가 2.17%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의 출현율이 가장 낮았으며, 다군 농림축산식품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출현율이 37.31%로 가장 높았다.

모듬	기관명	평가단 선정 표현 (개수)	연구진 검토 표현 (개수)	출현 비율(%)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14	46	30.43
	국민권익위원회	15	63	23.81
	기상청	9	66	13.64
	농촌진흥청	15	101	14.85
	문화재청	12	36	33.33
	문화체육관광부	3	138	2.17
	법제처	11	50	22.00
	병무청	4	60	6.67
	산림청	15	72	20.83
	새만금개발청	5	81	6.17
	소방청	4	52	7.69
	여성가족부	3	91	3.30
	통일부	9	26	34.62
	해양경찰청	5	56	8.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44	11.36
나군	경찰청	25	83	30.12
	공정거래위원회	16	92	17.39
	국가보훈처	18	63	28.57

모듬	기관명	평가단 선정 표현 (개수)	연구진 검토 표현 (개수)	출현 비율(%)
	국방부	17	82	20.73
	국세청	20	163	12.27
	대검찰청	11	95	11.58
	방위사업청	16	58	27.59
	법무부	15	71	21.13
	보건복지부	11	63	17.46
	식품의약품안전처	6	97	6.19
	인사혁신처	16	67	23.88
	조달청	12	83	14.46
	해양수산부	9	76	11.84
	행정안전부	11	92	11.96
	환경부	4	122	3.28
다군	고용노동부	19	113	16.81
	교육부	26	181	14.36
	관세청	17	95	17.89
	국토교통부	22	140	15.71
	금융위원회	13	93	13.98
	기획재정부	29	107	27.10
	농림축산식품부	25	67	3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28	20.31
	방송통신위원회	8	129	6.20
	산업통상자원부	17	143	11.89
	원자력안전위원회	16	123	13.01
	외교부	18	101	17.82
	중소벤처기업부	33	221	14.93
	통계청	18	149	12.08
	특허청	7	126	5.56

2) 소통성 평가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항목 분석

5, 7, 9, 11월 평가 대상인 720개의 보도 자료에서 평가단에 의해 지적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의 개수는 총 628개로 나타났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지적된 단어의 빈도 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선정된 단어 중 보도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는 TF로 총 9건의 보도 자료에서 출현하였다.

소통성 평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로마자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보도 자료의 독자를 언론계 종사자로 한정된 데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대중도 공공기관의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여 보도 자료를 열람하는 등 보도 자료의 독자 폭이 넓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화된 독자를 고려한다면 해당 분야의 제한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순서	출현 빈도 (건)	단어 개수	한자어	외래어	로마자
1	9	1			TF
2	6	2	제고	플랫폼	
3	5	1		컨설팅	
4	4	5	애로사항, 하도급	모니터링	ICT, R&D
5	3	11	개소, 물납, 유희, 즉심,	멘토링, 블록체인, 세션, 스타트업, 인프라, 컨트롤타워	O2O
6	2	40	계도, 계호업무지침, 교부, 모성보호, 반대급부, 부정당업자, 성비위, 수혜, 시달, 시보, 애로, 양묘장, 이행, 임계, 재가복지, 저감, 적시성, 준공, 추심, 피복,	드론, 등록센서스, 로드맵, 매뉴얼, 밀리시버트, 벤치마킹, 빅데이터, 샌드박스, 솔루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인센티브, 컨퍼런스, 클러스터, 패러다임, 팜투어, 풀(Pool), 핀테크	BI, PG
7	1	469	가명 조서, 가사사건, 가산금, 가설교량, 간이과세자, 간이하게, 갈음, 감리, 감치요건, 甲질, 개문출발방지장치, 개발행위허가, 개보수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진되다, 개호비, 거점, 거출금, 거출율, 건설품질, 격납건물, 결구채소, 경감, 경과실, 경기민감업종, 경상관리, 계고장, 계기수업, 계도기간,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갈라파고스규제, 거버넌스, 골든타임, 광재(스래그), 규제샌드박스, 그루매니저, 그룹홈, 글루타치온, 백옥주사 쇼크, 네거티브 리스트, 네거티브화,	%p, ARS, As is - To be, bottom-up, C4, CMA-MMW, Core Working Time, D2스타트업 팩토리, DB, E1~E7, FEALAC Youth, GCC, GMO식품, GPS, Ground GPS,

순서	출현 빈도 (건)	단어 개수	한자어	외래어	로마자
			계호, 고부가화, 고취시키다, 공소 유지, 공여기간, 공익법인, 공정익 무인기, 공정조달, 공조체계, 공한 지, 과료, 교두보, 교란, 교차오염, 구류, 구태, 국가송무수행, 국기, 국세물납, 국지적, 권리회복성년후 견개시심판, 궤도사업, 귀속, 극렬 저항자, 근무연수평정, 금년, 금번, 금속분진, 금어기, 기성대금, 기술유용, 기탁등록보존기관, 깎깎이, 남획, 납세담보, 내방하다, 내상조, 내용연수, 노무, 노물리시험, 농약직권등록사업, 다면진단제도, 다산다사, 다중이용업, 단백분, 당면하다, 대물손해, 대민, 도과, 도급계약, 도급공사, 도로점용료, 도출, 동 사업, 동바리, 동산,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두부, 뎀석기, 만전, 면탈, 모돈, 모두말씀, 모수추정, 몰수보전, 묘역, 묘화분석, 무결성 및 관리연속성, 문안(文案), 문해교육, 미반영, 미산입, 미소지진, 미전수, 민투, 박락, 발발, 발주, 방사성탄소연대, 방산물자, 방산육성, 방염설비, 방지조치, 벌금상당액, 범부처, 법령 준수, 법위반 빈발, 별무, 병역면탈, 보정, 보훈혁신, 부설기관화, 부여, 분임, 불꽃비산, 불허, 비계, 비금융주력자, 비상급수계통, 비상상고, 비송능력, 비식별화, 비위, 사금고화, 사로, 사방사업, 사적부양, 사찰, 산세도유강판, 산지위판장, 상계관세, 상명하복, 상이자, 상이하다, 색신이상자, 서책형교과서, 석력지, 선 면 단위, 선금지급, 선도 신산업, 선량한도, 선양, 선저폐수, 선적, 선형, 성인지력, 세정지원, 세정환경, 소산, 소요결정, 소요군, 소요최저연수, 소집적체, 소확행, 수검율, 수권 규정, 수대부자, 수변, 수어, 수의계약, 수출신고필증, 수취, 수치제어식선반, 숙려기간, 습해, 시계열, 시행	네트워크, 노년플래너, 노마드, 댐퍼, 드론실증, 디지털포렌식, 답메디, 라벨갈이, 레이더 테스트 베드, 레티널, 로잉머신, 로트, 롤모델, 리플렛, 매칭, 매칭지원, 멀티콥터, 모나자이트, 모멘텀, 모태펀드, 무선인프라, 미스매치, 바이오, 반덤핑, 반응형웹기술, 벤사, 밸런스보드, 베이커리, 벤처생태계, 보톡스, 붐, 브랜드, 브릭스, 비즈니스모델, 사전컨설팅, 서포터즈, 선회랑, 셰이프가드, 셉테드, 섯다운, 수업콘서트, 스네그골프스크린, 스마트,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크럼방식, 스택, 스탬프트어, 스텝어드십 코드, 슬러지경화, 슬로건, 실감형콘텐츠, 심포지엄, 씨네라마, 알고리즘, 앱투앱, 어젠다, 엠바고, 오프셋잉크, 오픈사이언스, 옴부즈맨, 워크아웃, 워킹그룹, 워킹맘, 웨어러블기기, 위키피디아 방식 지식 공유화, 유로-6, 이미징, 인큐베이팅, 인터페이스사양, 인히비터, 자바 하이브리드 앱, 주니어보드, 챗봇, 체크리스트, 카달로그, 카라반, 캐리커처, 콜옵션, 크라우드 펀딩, 클라우드웍	HRD-Net, IB부서, KCI, KINS, KISA, KOSTAT, M&A, NFC, OECD, One-stop, PEFGP, PQ, RDC, RP대상채권, SDG지표, Standstil, Summit, SW교육, VAN, VC, VC투자, YES FTA, 무선AP, 미시자료(MICRODATA), 사물인터넷(IoT), 진도IV

순서	출현 빈도 (건)	단어 개수	한자어	외래어	로마자
			<p>법령, 시현, 신설, 신인도, 암거배수시설, 애호의식, 약도, 양수도, 엄수되다, 업권, 여신금융기관, 여전사, 역류, 역학조사, 연가, 연료전지, 연소자, 연안안전, 엽경채류, 영사조력, 영세율, 영예성, 영위, 예대율, 예보현업, 예찰, 예타, 완화한다, 외항상선, 용단, 우제류, 우회수출, 원가계산서, 원가자료, 원격근무, 위수탁, 위촉, 위해우려, 위해우려자, 유도할방침, 유류예금, 유묘기, 유예, 유희부지, 유희시설, 육종자원, 의견개진, 의국, 의제매입세액, 이유자돈, 이중편파, 이첩, 인도조건, 임산물양여, 임의성확보, 자가사용물품, 자법인, 자조금, 자진시정, 잠정, 장구, 재개, 재정누수, 재정조기집행, 저리용자, 저축연가제도, 적과, 적극행정면책제도, 전부개정법률안, 전수, 전용공역, 전진기지, 절차보조인, 절충교역, 접견교통권, 정례화, 정비의견, 정수, 정합성, 제경비, 제선과정, 제적원부, 조력권, 조림지, 조사회피, 주거주, 주산단지, 준용, 중간예납세액, 중과실, 중앙전공사상, 중추절, 증여의제이익, 증원, 지상진화율, 지재권, 지진동, 지체상금률, 지표변위, 직능단체간담회, 집적, 차륜형, 차실, 철저를 기해, 체계업체, 체신관서, 초도배치, 촉탁의사, 추계인구, 추동력, 추서, 추후별건, 춘절, 출자, 타업종, 통고처분, 통관애로, 특수관계법인, 틀內에서, 편취, 폐수처리오니, 피탄, 필요최소화, 하자담보책임, 향타기, 항행안전, 해사노동적합증서, 현장안착지원, 현장인도, 호선, 혹서기, 환국, 환형유치처분, 훈령</p>	<p>스, 크로스 미팅, 특쇼, 트렌드, 특허바우처, 파트너십, 팜연수, 패스포트, 퍼포먼스, 페이스페인팅, 페친, 포럼, 포렌식, 포커스그룹, 프랜차이즈, 프로테제, 플레이어, 피지컬케어, 피칭, 핵심키워드, 홈페이지</p>	

[표 33]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목록

Ⅳ. 진단 결과 요약 및 기관별 개선안 사례

1. 진단 결과 요약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은 전체 45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올해 평가에서는 정확성 평가 20%, 소통성 평가 80%(시민 평가단 30%, 전문가 평가단 50%)로 보도 자료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격월 평가 점수를 근거로 군별 상위 3개, 하위 3개 기관 중 우수 기관 및 미흡 기관, 우수 문서 및 미흡 문서를 선정하였다.

2017년 진행된 평가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에 대해 총 4차례(5, 7, 9, 11월)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대상은 각 평가 시기에 생산된 보도 자료로, 해당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구진에 의해 선별된 자료였다. 평가 과정은 보도 자료의 수합, 연구진의 정확성 평가,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소통성 평가, 결과 수합 및 통계 처리, 결과 산출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결과를 연구진에서 제공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최우수 기관과 올해의 보도 자료를 선정하였다.

올해 실시한 보도 자료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기	구분	가군	나군	다군
5월 (1차)	우수	병무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보건복지부	관세청
	미흡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7월 (2차)	우수	산림청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경찰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국세청	통계청
9월 (3차)	우수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외교부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11월 (4차)	우수	산림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인사혁신처	특허청
		소방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미흡	문화재청	문화재청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기상청	기상청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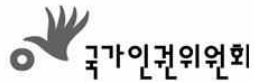
2. 기관별 개선안 사례

다음은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의 결과로 제시하는 기관별 보도 자료에 대한 개선안이다. 각 기관별 보도 자료 16건 가운데 정확성 평가에서 지적 사항이 가장 많은 보도 자료 1편과 소통성 평가에서 지적 사항이 가장 많은 보도 자료 1편씩을 선정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관별 보도 자료 개선안은 문서 정보 제시, 문서 원본 제시, 평가 지적 사항 제시(정확성, 소통성 각각 별도로 제시) 순으로 구성하였다.

문서 정보는 보도 자료 생산 기관명, 작성 부서명,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정보를 표로 제시하였다. 문서 원본은 별첨이나 참고자료로 제시된 부분은 제외하고 보도 자료의 본문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정확성 평가 지적 사항은 평가 항목별로 수정 전 자료와 수정 후 자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수정이 필요한 이유를 비고란에 적어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소통성 평가 지적 사항은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한 평가 지적 사항을 범주별로 묶어 항목화하고, 각 항목에 대한 평가단의 지적 사항을 인용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부서의 보도 자료 작성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국가인권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가인권위원회 (가군)	침해조사 과	인권위,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교수 중징계 권고	'18.03.13.	1736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18. 3. 13. | 보도일시 : 2018. 3. 13. | 02-2125-9870/9873 | 홍보협력과장 김은미
담당부서 : 조사국 침해조사과장 김용국 (02-2125-9920) | 담당자 : 조사관 차승렬 (02-2125-9930)

인권위,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교수 중징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 전공의 인권보호 법규 개정 등 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과 관련, 학교 측에 폭행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전공의 인권보호 및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지난 해 10월 부산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폭행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서, 인권위는 추가 피해자 및 피해 정도 조사 등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개월 간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 인권위 조사결과, 부산대학교병원 해당과 전공의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실과 의국 사무실 등 병원 내부 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얼차려 자세로 폭행을 당했으며, 수술도구로 손등 부위를 때리거나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당하거나 뺨과 두부를 맞는 등 위계 집단 내 폭행 행사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교육의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다.
- 또한 해당과 진료과장은 2015년 발생한 폭행피해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교수회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미흡한 조치만 시행, 폭행의 악습을 끊지 않아 추가 피해를 발

생시켰다. 병원장은 지난 해 노동조합 등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제보 받고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부 조사만 진행해 병원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심각한 폭력 행위가 부산대학교병원 내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인권위는 부산대학교병원장에게 아직 과면 조치되지 않은 가해자 3명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부산대학교총장에게 사건 축소 및 은폐 책임을 물어 해당과 진료과장 등 경고조치 및 병원장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 또한 의료인의 폭언·폭행이 주로 지도전문의에게서 나타나고, 수련과정을 이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 및 위계적 조직 문화 특성 상 형사 처벌 요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항목 신설 △지도전문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 교수가 우월적인 신분을 악용해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무거운 반성과 깊은 자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인권위는 향후 병원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과정을 이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 및 위계적 조직 문화 특성 상 형사처벌 요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 수련과정에서 이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 및 위계적 조직 문화 특성 상 형사처벌 요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수련과정'이 이수 평가가 벌어지는 처소이므로 '수련과정에서'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무거운 반성과 깊은 자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 이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무거운 반성과 깊은 자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노력을 다하다'가 이미 쓰였으므로 '최선의 노력'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측에 폭행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 학교 측에 폭행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고 피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속 오류] '중징계'는 권고가 아니라 요청해야 할 사항이므로 각각 '중징계를 요청하고 분리조치를 권고하다'로 나누어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도구로 손등 부위를 때리거나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당하거나 	→ 수술도구로 손등 부위를 맞거나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당하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속 오류] 학생들이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피동 표현 '손등 부위를 맞거나'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행위가 부산대학교병원 내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폭력 행위가 부산대학교병원 내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주어 '폭력 행위가 만연하게 된 배경'의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관행이 있다'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병원 교수가 우월적인 신분을 악용해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 대학병원 교수가 우월적인 신분을 악용해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속 오류] '충격'은 받은 것이고 '실망감'은 나타내는 것이므로 나누어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국민권익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민권익위원회 (가군)	민원정보 분석과	점자블록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요	'18.04.19.	1788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 7073, 7078

(F) 044-200-7911

· 2018. 4. 19(목) · 총 6쪽(붙임 3쪽 포함)

· 엠바고 없음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주무관 최상권 ☎ 044-200-7285

“점자블록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요!”

국민권익위, ‘장애인의 날’ 맞아 최근 3년간 점자블록
민원 분석...61%가 ‘파손·훼손’

- ◇ “점자블록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요”
- ◇ “점자블록이 차도로 이어져 있어 위험합니다”
- ◇ “지하철 출구 앞 계단에 점자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분이 계단을 인지 못하고 굴러 떨어져서 다치셨네요”
- ◇ “점자블록 위에 버스정류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 ◇ “점자블록을 점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672건(‘15년 4월~’18년 3월)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함

- ☐ 최근 3년간 점자블록 관련 민원의 월 평균 추이는 ‘15년 58.7건에서 ‘17년 39건으로 감소하다가 ‘18년 4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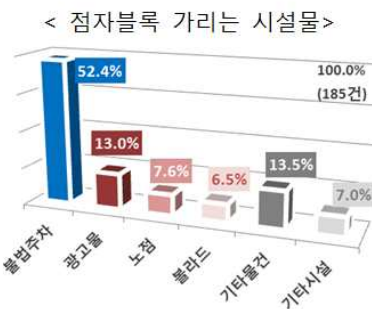
민원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0%(1,02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록을 가리는 것에 대한 신고’(11.1%, 185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8.7%, 146건), ‘미설치 지역 설치 요구’(7.8%, 130건), ‘각종 질의·건의 등 기타’(11.4%, 191건) 등이었다.

민원대상이 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횡단보도’가 85.5%(777건)로 가장 많고, ‘지하철 역사’(3.2%, 29건), ‘버스정류장’(3.0%, 27건), ‘공공시설’(2.0%,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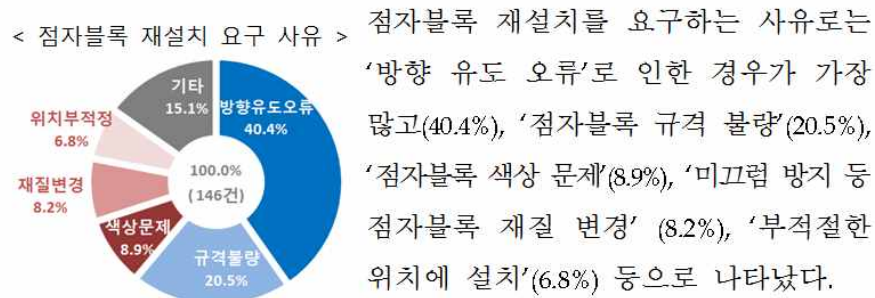


- 각 민원유형별로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점자블록 파손 등 신고’ 민원은, ‘점자블록 파손’이 50.5%(515건)로 가장 많았고, ‘점자블록 침하 등’(15.9%, 162건), ‘점자블록 이탈’(4.4%, 45건), ‘점자블록 들뜸’(3.4%, 35건) 등의 순이었다.

점자블록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52.4%, 97건)가 가장 많았고, ‘광고물 등’(13.0%, 24건), ‘노점’(7.6%, 14건), ‘블라드’(6.5%, 12건), 그 외 기타 물건(13.5%) 및 시설(7.0%) 등의 순이었다. 또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에는 버스정류장, 소화전, 시민공간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130건(7.3%)으로, 위치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장소가 언급됐다.



민원 신청인은 20대(35.7%)와 40대(31.2%)가 많고, 신청지역은 서울(44.6%), 경기(15.2%)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다른 시설물에 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자블록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민의 소리’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급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갑자기 증가하여 갈등·피해 우려가 있거나,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예보’를 발령하여 소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130건(7.3%)으로, 위치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장소가 언급됐다. 	→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130건(7.3%)으로, <u>설치</u> 위치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장소가 언급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민원에서 요구한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설치 위치'가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자기 증가하여 갈등·피해 우려가 있거나, 매년 <u>주기적으로</u> 반복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 갑자기 증가하여 갈등·피해 우려가 있거나, 매년 <u>주기적으로</u>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표현] 이미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반복해'를 삭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u>고</u> 말했다. 	→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u>라고</u> 말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u>고</u> 말했다.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u>라고</u> 말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동일 항목은 진단만 하고, 감점은 1회만 하였음)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기상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기상청 (가군)	기상서비스정책과	기상청, 항공기상서비스 국회 공청회 개최	'18.06.27.	870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8. 6. 27.(수) 16:00 (총 3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과장 심재면 사무관 김병준	전화번호 02-2181-0842 02-2181-0857

기상청, 항공기상서비스 국회 공청회 개최

- 더 안전한 항공 운행을 위한 기상서비스 방안 논의 -

-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6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신창현 국회의원 주최로 '항행 안전을 위한 항공기상 서비스 발전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의 주요 의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항공 산업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한 기상지원 방향이다.
 - 공청회 참석자는 기상청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 협회, 항공사, 학계 및 소비자 시민 모임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기상청은 그동안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을 주제로 항공사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 이번 공청회는 국회차원에서 열려 더욱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석함으로써 항공업계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개정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시행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소통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주제 발표는 이재원 항공기상청장의 ‘항공기상서비스 발전 방향’을 시작으로, 양창생 국토교통부 팀장이 ‘차세대 항행안전 서비스 정책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제한다.

○ 이외에도 한서대학교 김영철 교수 주재로 기상청 김금란 국장 등 각계 전문가 7인*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항공업계와 소통 강화를 통한 항공 기상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 토론자 : 김금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박세필 국토부 항행시설과장, 박순진 항공교통본부 과장,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대표, 변순철 항공대 교수, 김광옥 항공협회 실장

□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항공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통해 항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상서비스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공 현장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항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상서비스 발전 방향」 공청회 세부 일정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업계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u>발굴</u>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항공업계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u>창출</u>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발굴하다'는 '찾아서 파내다'라는 의미이므로, 새로 만들어낸다는 '창출하다'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발표는 이재원 항공기상청자의 '항공기상서비스 발전 방향'을 시작으로, 양창생 국토교통부 팀장이 '차세대 항행안전 서비스 정책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제한다. 	→ 주제 발표는 이재원 항공기상청자의 '항공기상서비스 발전 방향'이며, 양창생 국토교통부 팀장이 '차세대 항행안전 서비스 정책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발표 주제에 대해서 서술하므로 서술어 '이며'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청회 참석자</u>는 기상청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협회, 항공사, 학계 및 소비자 시민 모임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u>공청회에는</u> 기상청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협회, 항공사, 학계 및 소비자 시민 모임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서술어가 '참석한다'이므로 주어는 '공청회에는'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공청회는 국회차원에서 열려 더욱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석함으로써 항공업계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공청회는 국회차원에서 열려 더욱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석함으로써 항공업계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주어 '관계자들이'로 써야 서술어 '참석함'과 호응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공청회에서 항공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통해 항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상서비스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 항공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통해 이번 공청회가 항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상서비스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오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공청회이므로 '공청회가'로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농촌진흥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농촌진흥청 (가군)	재해대응 과	농작물·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한 현장 지원 강화	'18.07.23.	1780

	보 도 자 료		작성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즉시보도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장 정준용 농촌지도사 고창호
			연락처	063-238-1044
			제공일	2018. 7. 23.(총 6매)

보도나온 농촌진흥청

농작물·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한 현장 지원 강화 - 분야별 전문가 기술 지원… 작물별·축종별 대응 요령 안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장기화하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 대응 재해 대책 상황실’로 운영하고, 현장 기술 지원단(8개반/84명)을 편성해 주요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현장 기술 지원단은 △채소 분야, 3개반, 8명(강원도 고랭지 무·배추 재배지역 중심) △축산 분야, 5개반, 7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농업 현장 지도와 상황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는 농작물과 가축 관리, 농작업 안전에 관한 농업 재해 대응 문자를 8차례에 걸쳐 31만 8,000명에게 발송했다(올해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집계).
 - 아울러, 폭염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별 대응 요령과 기술 대책을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과 농업인 단체·작목별 연구회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이달 말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현장 기술지원단은 농작물의 햇볕 데임·수정 장애, 가축 폐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축산 분야= 한우와 돼지, 닭, 오리 등 축종별로 가축 사양 관리

종합 기술 지원단을 구성해 △ 축사 내 온도 상승을 막는 방법
△ 가축별 영양제 보충 요령 △ 가축 위생 관리 등을 지원한다.

- 채소 분야=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고랭지 무와 배추의 수급 불안을 대비
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평창 등 주산단지
6개 시·군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 기타= 현재까지 피해 발생이 없는 벼나
밭작물 등은 각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기술 지원단을
꾸려 정보 수집(모니터링)과 대응책을 지도하고 있다. 폭염이 예
보보다 장기화하면 중앙기술지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 농업인들도 가축이나 벼, 밭작물, 과수에 예상되는 폭염피해에 대
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가축= 30℃ ~35℃ 의 고온이 12일간 지속되면 하루 동안 늘어나
는 몸무게(일당증체량)가 소는 73%가량, 돼지는 60%가량 줄 것
으로 예상된다. 젖소는 우유생산량(산유량)이 32% 줄고, 닭은
알을 낳는 비율이 16% 줄어든다.

- 관리 요령= 축사 내 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사 지붕에
단열재를 붙이거나 차광막·그늘막을 설치한다. 단백질, 비타민 등
광물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여 영양분을 보충한다. 밀집된 시
설은 질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적정 사육 마릿수를 따르고, 농장의
안팎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벼= 개화기·수정기에 35℃ 이상, 감수분열기에 38℃ 이상으로 지
속되면 수정 불량과 알이 여무는 비율(등숙률)이 줄어드는 피해가
우려된다.

- 관리 요령= 논물을 깊게 대고, 증발산량(증발량과 증산량을 합한 것)에

따른 식물체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물 흘려대기를 해준다. 높은 온도에서 식물체가 잘 자라도록 돕는 규산과 칼륨 비료를 준다.

- 콩과 고구마= 콩은 35℃ 이상이 되면 꼬투리가 잘 형성되지 않고, 알맹이가 잘 차지 않는다. 고구마는 땅 위로 나온 부분만 자라고, 덩이뿌리가 잘 자라지 않기도 한다.

- 관리 요령=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같은 장비를 활용해 흙에 적절한 물기가 유지되게 해 땅의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한다.

- 고추, 배추, 수박= 고추 등 열매채소는 물이 부족해 칼슘 결핍과 호흡 과다로 식물체가 약하게 자라거나 시든다. 배추는 속들이(결구)가 좋지 않고, 수박은 씨앗 주변의 과육이 짙고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 피수박(육질악변과) 현상이 나타난다.

- 관리 요령= 적절한 수분 유지를 위해 비닐덮기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신문지나 짚으로 열매를 가려 피수박을 예방한다.

- 과수= 햇빛 데임과 당도 저하, 열매가 지나치게 크게 자라거나 색이 고르게 들지 않는 피해가 우려된다.

- 관리 요령= 과수원 밖이 31℃를 넘거나 강한 빛이 들면 탄산칼슘이나 카울린을 뿌리고, 미세 물뿌리개로 온도를 낮춰준다.

- 농촌진흥청 정준용 재해대응과장은 “가축과 농작물이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환기와 물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밖에서 농작업을 할 때도 햇빛이 강한 정오부터 5시 사이는 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고창호 농촌지도사(☎063-238-10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대응 재해 대책 상황실'로 운영하고 	→ '폭염 대응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재해 대책 상황실'이 행위의 대상이므로 목적적 조사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이 예보보다 장기화하면 	→ 폭염이 예보보다 장기화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무생물 주어진 '폭염'이 외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이므로 피동을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된 시설은 질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 밀집된 시설에서는 질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질병이 생기기 쉬운 장소가 '밀집된 시설'이므로 '시설에서는'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화기·수정기에 35℃ 이상, 감수분열기에 38℃ 이상으로 지속되면 	→ 개화기·수정기에 기온이 35℃ 이상, 감수분열기에 38℃ 이상으로 지속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 생략] 35℃의 주체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주어 '기온이'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현장 지도와 상황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 농업 현장 지도와 상황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 오류] 추후 대책에 대한 내용이므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불량과 알이 여우는 비율(등숙률)이 줄어드는 피해가 우려된다. 	→ 수정이 불량하고 알이 여우는 비율(등숙률)이 줄어드는 피해가 우려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 오류]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내용이므로 '수정이 불량한 피해, 등숙률이 줄어드는 피해'로 나누어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문화재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문화재청 (가군)	발굴제도 과	강원도 정선에서 후기 구석기 그물추 확인	'18.08.07.	1419

역사의 숨결을 지키고 미래의 가치를 더합니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8. 8. 7.]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조미순 연구관(042-481-4957), 변영환 연구사(042-481-4953)

강원도 정선에서 후기 구석기 그물추 확인

- 정선 매둔 동굴유적에서 구석기 시대의 어로활동 보여주는 유물 등 출토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연세대학교박물관(관장 한창균)이 지난 6월부터 약 40일에 걸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 자리한 석회암 동굴을 조사한 결과 1층부터 4층까지 형성된 구석기 시대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 발굴 현장: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 14-2

2017년에 이어 진행된 올해 발굴조사는 동굴 안쪽의 구석기 문화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석기 시대 퇴적층에서는 사슴, 노루, 사향노루, 산양, 곰 등의 대형 동물 화석과 갈발쥐, 비단털쥐, 박쥐 등의 소형 동물 화석이 발견되었다. 또한, 참마자, 피라미 등으로 보이는 작은 물고기 등뼈와 새 뼈 등 자연유물 화석도 출토되었다.

인공유물로는 주로 석회암 또는 규암을 이용하여 만든 뿔석기를 비롯하여 여러 점의 그물추(어망추)가 발견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작은 자갈돌을 이용하여 만든 그물추다. 그물추는 1층에서 3점, 2층에서 1점, 3층에서 10점 등 총 14점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은 석회암으로 된 작은 자갈돌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현재 까지 발견된 그물추는 공통으로 모루망치때기(양극타법)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3층의 경우 부릿날 석기와 격지(剝片) 등이 함께 나왔다.

* 모루망치때기: 모루돌에 작은 자갈돌을 올려놓고 그 자갈돌 윗부분을 망치로 때려내는 수법

* 부릿날 석기: 새의 주둥이처럼 끝을 뾰족하게 만든 석기

조사단은 3층 하부에서 수습한 나무숯 조각의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약 2만 9천 년 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러한 연대값이 사실일 경우 매둔 동굴 유적에서 발견된 후기 구석기 시대의 그물추는 인류의 물고기잡이 역사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유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그물로는 핀란드와 러시아의 접경지대에서 발견된 버드나무 속 껍질로 만든 중석기시대의 안트레아 그물(Antrea Net)(약 9천여 년 전)과 일본 후쿠이현의 토리하마 조개더미(폐총)에서 발견된 약 1만 년 전의 그물추 그리고 청주 사천동 제너머들 유적에서 출토된 약 1만 년 전의 그물추 등이 있다

또한, 그물을 이용한 어로 활동이 후기 구석기 시대에 존재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구석기 시대 생계 수단과 먹거리를 복원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460-28,550 cal BP

한편, 구석기 시대 1층의 상부에서는 사람의 손가락뼈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뼈는 둘째 또는 셋째 손가락의 3번째 끝마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기관인 연세대학교박물관은 앞으로 더 많은 연대측정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인류사에서 그물을 이용한 물고기잡이가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주변으로 확산되었는지 밝히기 위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박물관(한창균 관장, ☎02-2123-3335, ☎02-2123-23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진 자료.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함께 지키는 문화재
함께 나누는 일자리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발견된 그물추는 <u>공통으로</u> 모루망치떼기(양극타법)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 현재까지 발견된 그물추는 전 분 모루망치떼기(양극타법) 방 법으로 제작되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현재까지 발견된 그물추'인 만큼 '전부'나 '모두'로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물추는 1층에서 3점, 2층에서 1점, 3층에서 10점 등 총 14점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은 석회암으로 된 작은 자갈돌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 그물추는 1층에서 3점, 2층에서 1점, 3층에서 10점 등 총 14점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은 석회암으로 된 작은 자갈돌을 이용하여 <u>제작되었다</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무생물 주어인 그물추가 외부에 의해 제작된 것이므로 피동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로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물을 이용한 어로 활동이 후기 구석기 시대에 존재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구석기 시대 생계 수단과 먹거리를 복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물을 이용한 어로 활동이 후기 구석기 시대에 존재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u>이러한 발견이</u> 앞으로 구석기 시대 생계 수단과 먹거리를 복원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 생략] 역사 복원에 이바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주어 '이러한 발견이'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만 9천 년 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 <u>이 유물이</u> 약 2만 9천 년 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 생략]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을 얻었는지 그 주체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주어 '이 유물이'를 추가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문화체육관광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문화체육관광부 (가군)	시각예술 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절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고시 제정	'18.01.18.	1660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6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 18.(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당자	서기관 조현나(044-203-2749)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절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고시 제정 - 용역대가 산정 기준,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전문인력 기준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1월 18일(목),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16. 8. 4. 시행)에서 공공디자인 품질 보장 등을 위하여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17년 실태조사 결과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초안에 대한 학회·협회·지자체 의견 수렴(‘17년 2~3월), 토론회(‘17. 8. 31) 및 공청회(‘17. 11. 10),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조희(‘17년 11월), 행정예고(‘17. 11. 14.~12. 3.)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보장을 위한 ‘용역대가 산정’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를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책임 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금액은 학술 용역 인건비를 준용하여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하면 된다.

특히 이번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창작료’를 도입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별도의 용역대가 기준이 없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을 준용해 대가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디자이너와 업체들은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는 사업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공모에서 탈락했으나 우수한 공공디자인 기획안을 위한 '제안서 보상'

또한 문체부는 국가기관 등의 공공디자인 용역 사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2인 이내)가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고시를 마련했다.

국가기관 등은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에게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가 2인일 경우에는 2.5%씩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에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인력의 경력 관리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이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유사 분야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력에 따른 경력 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3개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될 것
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표준 품셈 연구’ 등 기초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담아 관련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
2.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고시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고시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서기관 조현나(☎ 044-203-2749), 주무관 김나리(☎ 044-203-27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u>공공디자인 관련 실무경력을 1년 이상</u> 쌓거나,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실무 경력의 연수 제한이므로 문장 성분 위치를 바꾸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이번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창작료'를 도입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u>공공부문에서</u>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특히 이번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창작료'를 도입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u>공공기관에서</u>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공공부문'으로 표현하면 지급의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바꾸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u>산정액</u> 이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무엇이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산정액'이라는 정보를 밝혀서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법제처)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법제처 (가군)	기획재정 담당관	복지·여성·노동 분야 법령 전수조사...‘약자 차별조항’없앤다	'18.01.26.	3166




법제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2018년 1월 26일(금) 11: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배포일시	2017. 1. 26.(금)/ 총 5장 (※ 인포그래픽 별첨)
담당자	담당관 방극봉 서기관 류준모 (044) 200-6543		

복지·여성·노동 분야 법령 전수조사... ‘약자 차별조항’ 없앤다

- 2018년 법제처 업무계획... 국가·지자체 간 보고·협의·승인 법령 집중정비도 추진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 ◇ 분야별 차별법령 정비 로드맵(2017년~2019년)에 따른 체계적 정비
- ◇ 2018년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차별법령 집중 정비

《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

- ◇ 부처협약안 전수검토로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차단, 현행 법령용어는 분야별 정비
- ◇ 국민참여심사제, 국민법제관 입법의견제시 등 입법절차에 국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

- ◇ 국가·지자체 간 보고·협의·승인에 관한 법령 집중정비, 수평적·협조적 관계 마련
- ◇ 각 지자체·지방 4대협의체와 협의하고 지방공무원 입법의견 적극 반영

《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

- ◇ 청탁금지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 국회 제출 및 국회 통과 지원
- ◇ 신산업 진출 등 규제혁신 관련 법령 발굴·정비, 입안 지원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5일 개최된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 김외숙 처장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등을 2018년 주요업무로 제시했습니다.

1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찾아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 (분야별 로드맵 마련) 이를 위해 분야별 3개년 로드맵(2017년 ~ 2019년)을 마련해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 2017년에는 취업과정에서 독학사·학점은행을 통한 학위를 차별하는 자격요건 90건을 정비하고,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60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분야 정비) 올해에는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법령을 집중적으로 전수조사합니다.
 - 전수조사를 통해 서민생활 공감형 차별법령을 발굴·정비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19년에는 환경, 문화, 안전 분야 법령 전수조사 및 정비

서민생활 공감형 차별법령 사례

- **직장 어린이집 지원기준 개선**
 - (문제) 파견근로자 등의 자녀는 고용보험법령상 지원기준에 고려되지 않아, 파견근로자 등의 자녀를 직장 어린이집에 입소시키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개선)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 산정 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등의 자녀도 포함되도록 개선(「고용보험법 시행규칙」개정 예정)
- ⇒ 파견근로자* 등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 이용 가능
- * 간접고용 형태의 근로자 90만명 초과(3,407개 고용형태공시 결과, 고용노동부, 2017.7.2.)

2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령용어 알기 쉽게 쓰기)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법령에서 어려운 용어(예: 제세동기)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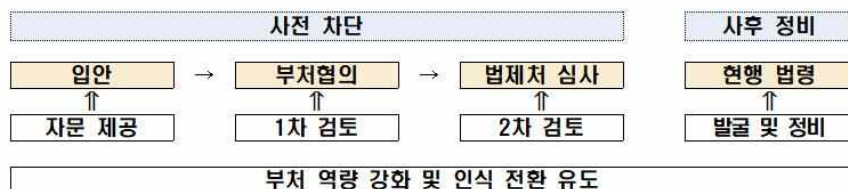
* 제세동기 → 심장충격기

**일반국민 82.5%가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2017. 6.)

- 올해에는 모든 부처협의를 검토해 어려운 용어가 법제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미 법제화된 용어에 대해서는 정비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 법령용어 알기 쉽게 쓰기 추진 방식 >



○ (입법절차 국민참여 확대) 입법절차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해 정부·전문가 중심의 법제를 국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 국민참여심사제*를 확대하고, 국민법제관**을 통해 제시된 입법건의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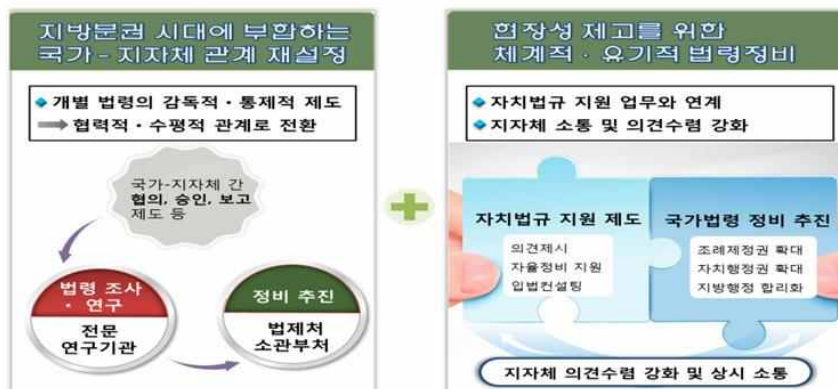
* 국민참여심사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2016년부터 도입·운영)

**국민법제관: 법제처 주요 업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 경험과 실무 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2011년부터 도입·운영)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 법제처는 지방분권시대의 합리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 설정을 위해 법령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통제하는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 (국가법령 정비) 올해에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보고, 협의 및 승인제도에 관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정비합니다.
 - 종전의 수직적·감독적 법률관계를 수평적·협조적 법률관계로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2018년도 지방분권 강화 법령정비 추진 체계 >



- (지자체 의견 반영) 각 지자체와 지방 4대협의체*를 통해 정비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공무원 개인도 자유롭게 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운영합니다.
- * 지방 4대협의체: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이를 통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 올해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이 90% 이상 (총 644건 중 586건)* 완료되어 사실상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 * 2018년까지 국정과제 이행 법률 총 467건 중 427건(91%) 국회제출, 하위 법령 총 177건 중 159건(90%) 정비 완료 계획
 - 또한, 청탁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핵심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국정과제 입법계획 관리) 국정과제 입법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도록 입법계획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법령안 부처협의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입법을 지원하고, 국회 심의상황 파악, 통일된 정부의견 제시를 통해 법령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8년 주요 국정과제 법령 >

국정목표	법령명(주요 내용)
국민이 주인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공익 인 관리 강화)
더불어 잘사는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규제완화 등 특례 부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적용대상 확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탈(脫) 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근거 마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 사전협의 제도화, 주민조례폐해청구 요건 완화)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규정 정비)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국방 R&D의 체계적 수행, 방산중소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신기술 규제법령 정비)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을 위해 독일, 일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정비대상 법령을 발굴·정비하겠습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장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처장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u>이런 사회</u> 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어 생략] 무엇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목적어 ‘이런 사회를’을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에는 취업과정에서 독학사·학점은행을 <u>통한</u> 학위를 차별하는 자격요건 90건을 정비하고, 	→ 2017년에는 취업과정에서 독학사·학점은행을 <u>통해</u> 학위를 차별하는 자격요건 90건을 정비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연결어미] 학위를 차별하는 수단이 학점 은행을 통해서 진행된 것이므로 부사어 ‘통해’로 바뀌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과도하게</u>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60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직업 선택의 자유를 <u>과도하게</u> 제한하는 결격사유 60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어와 피수식어 위치 오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순서상 ‘과도하게 제한하는’으로 바뀌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병무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병무청 (가군)	병역공개 과	모든 용도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18.08.02.	836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병무청

보도자료

대변인실
전화 02 - 820 - 4577
팩스 02 - 820 - 4583

www.mma.go.kr

2018. 8. 2.(목) 총 21쪽입니다.



담당자

병무청 병역공개과 사무관 김비옥 ☎ 042) 481 - 2776

모든 용도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도 정부(민원)24 발급 가능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일부터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병무청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 2017년도 병적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건)

총 현황	영문	공직자	보훈·경력확인 등 일반
664,890	14,885	10,992	639,013

- 병무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은 대부분 해외 거주자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국내거주 친인척 또는 재외공관(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 재외 동포들의 병적증명서 발급 용도가 거주 국가 취업과 영주권 갱신을 위한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재외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서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동안 취업, 경력확인, 보훈등록용 병적증명서 등은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이 가능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모든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병무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병적증명서 영문 양식 1부.


2. 병적증명서 영문 용어 표기 1부. <끝>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부터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3일부터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u>제도를</u> 개선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어생략] 개선한 대상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목적어 '제도를'을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무청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 병무청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u>있었기 때문이다</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문맥상 병무청이 제도를 개선한 이유가 나타나야 하므로 서술어를 '있었기 때문이다'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u>규정이 있었기 때문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어 생략] 그동안 이미 있었던 규정에 대한 설명이므로 서술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u>발급받아야 하는</u> 불편이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어 생략] 목적에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위 표현 '발급받아야 하는'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문 병적증명서 <u>신청은</u> 대부분 해외 거주자로 	→ 영문 병적증명서 <u>신청인은</u> 대부분 해외 거주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해외 거주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신청인'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 <u>선</u>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재외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서 <u>의</u>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뒷말 '거주'를 수식할 수 있도록 관형어 '국가에서의'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산림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산림청 (가군)	국유림 경영과	올해 국유림 활용 마을기업·사회적기업 18개소 육성	'18.06.08.	1.036

 산림청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8. 6. 8.(금)	담당부서	국유림경영과	
담당과장	박영환(042-481-4090)	담당자	박승규 사무관(042-481-4091)	

올해 국유림 활용 마을기업·사회적기업 18개소 육성 - 산림청, 2022년까지 212개소 육성 목표 -

- ☐ 산림청이 국유림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산림사업,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통한 임산물 양여 등 국유림을 활용한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유림 활용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올해 18개소, 2022년까지 212개소를 육성하고 산림 일자리도 올해 275개 창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 신청 마을에서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정부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체를 구성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최종 행정안전부(마을기업)나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의 지정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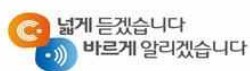
- 산림관광, 약초재배 등 국유림을 활용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마을기업 후보군의 경우 지자체, 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 산림청은 현재 국유림을 활용하고 있는 수대부자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등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창업에 관심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산림청 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 등 창업지원기관에서도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 산림청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지식 배양과 이해도를 높여 이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산림교육원에서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사회적 경제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개요
첨부파일 : 관련 사진.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마을에서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정부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체를 구성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최종 행정안전부(마을기업)나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의 지정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마을에서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정부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체를 구성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최종 행정안전부(마을기업)나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의 지정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표현] '신청 마을에서'와 '지자체에 신청하면'의 '신청'이 중복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신청'은 삭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u>전문지식</u> 배양과 이해도를 높여 이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산림교육원에서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 산림청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u>전문지식</u> 을 배양하고 이해도를 높여 이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산림교육원에서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 오류] '전문지식 배양'은 구절이고 '이해도를 높여'는 문장이므로 접속 단위가 다름. 구절과 구절 접속이나 문장과 문장 접속으로 바꾸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은 현재 국유림을 활용하고 있는 수대부자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등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u>안내하고 찾아가는</u>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현재 국유림을 활용하고 있는 수대부자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등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u>찾아가서 안내하는</u>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주 없음(문장 성분 위치 오류)]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계획인 만큼 '안내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안내하는 것'임.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새만금개발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새만금개발청 (가군)	복합도시 조성과	「2018 새만금 드론 영상제」 작품 공모 시작	'18.07.04.	1111

 새만금개발청 http://www.saemangeum.go.kr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8. 7. 4.(수)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복합도시조성과	담당 자	• 과장 김세용, 사무관 성기만, 주무관 이호열 • ☎ (044) 415-1192, 1187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2018 새만금 드론 영상제」 작품 공모 시작

- 8월 31일까지 '강, 바다 그리고 새만금' 주제로 작품 접수 -

-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2018 새만금 드론 영상제」 작품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드론 영상제는 기존의 '새만금 드론 항공 촬영 공모전'을 발전시켜 축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 ☐ 공모전의 주제는 '강, 바다 그리고 새만금'이며, 새만금 지역을 비롯해 만경강·동진강 일대, 고군산군도 등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는다.
 - * (영상) 영상제의 특성을 알려 70%는 드론으로 촬영해야 함
 - ** (사진) 사진은 색상 보정은 가능하나 형태 수정이나 이미지 합성은 제한
- 참가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온라인 (kdrone1st@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saemangeumdron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접수된 작품은 제출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의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작품을 선정한 후, 9월 15일 새만금 아리올예술창고에서 개최하는 「2018 새만금 드론 영상제」에서 수상작 평가와 시상을 진행한다.

○ 수상작 평가와 선정은 사전 일반인 대상의 온라인 평가와 함께 드론 영상제 당일 작품 감상 후 일반 방청객과 전문가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드론 영상제에는 새만금 상설공연인 '해적 2'의 간이공연과 드론 비행·제작·교육 등 다양한 드론 체험 및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 수상자에게는 국토부장관상, 새만금개발청장상, 군산대학교총장상 등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새만금 사업을 홍보하는 데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드론 영상물은 쉽게 보기 어려운 비경이나 장소들을 담고 있는 만큼 완성도 있게 제작해 잠재투자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이철우 청장은 “광활한 땅과 바다, 강, 호수를 모두 품고 있는 새만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 명소이자 드론 등 항공레저 활동을 위한 최적지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아름다운 새만금의 모습을 담은 웅장하고 역동적인 항공 영상을 통해 새만금의 명소적 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18 새만금 드론영상제 작품 공모전 계획안 및 포스터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성기만 사무관(☎ 044-415-11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만금 지역을 비롯해 만경강.동진강 일대, 고군산군도 등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는다. 	→ 새만금 지역을 비롯해 만경강.동진강 일대, 고군산군도 등을 <u>촬영한 작품</u> 을 영상*과 사진**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영상 작품과 사진 작품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므로 '촬영한 작품'이라는 내용을 넣어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31일까지 온라인(kdrone1st@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8월 31일까지 온라인(kdrone1st@naver.com)을 통해 <u>작품</u> 을 제출하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어 생략]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없으므로 목적어 '작품'을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작 평가와 선정은 사전 일반인 대상의 온라인 평가와 함께 드론 영상제 당일 작품 감상 후 일반 방청객과 전문가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u>보식이다</u>. 	→ 수상작 평가와 선정은 사전 일반인 대상의 온라인 평가와 함께 드론 영상제 당일 작품 감상 후 일반 방청객과 전문가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u>방식으로 진행</u>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평가와 선정 진행 방식에 대한 내용이므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술어를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소방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소방청 (가군)	소방산업 과	국감지적,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선된다.	'18.04.26.	964

보도자료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Fire
 4.25.~4.28. KICC (대구)

배포일시	2018. 4. 26. (목) 08:00	보도시점	2018. 4. 27. (금)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4.26. (금) 12:00부터]
담당과장	소방산업과장 정병도	연락처	044-205-7500/010-6583-6119
담당	공업사무관 박동순	연락처	044-205-7510/010-4156-2726
쪽수/붙임	2쪽 /있음	대변인실	044-205-7025/010-4585-9710

국감지적,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선된다.

- 제연덤편 무전기반응시험 및 소방용품 리콜제 시행 -

- 소방청(청장 조중목)은 “2017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제연덤편¹⁾과 소방용품 부정기시험²⁾을 개선하기 위한 제연덤편 무전기반응시험 도입 및 소방용품 리콜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 시 제연덤편이 무전기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오작동하거나, 차압수치의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대책을 요구하였다.
-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 시 부정기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그동안 소방청에서는 제연덤편 오동작 원인분석 결과 회로기관 및 차압센서 등에서 발생된 전자파의 영향임을 밝혀냈고, 회로기관 재설계 및 시험세척 개정(17.12.1)을 통해 오동작 문제를 선 조치하였다.
- 그리고 제연덤편 기술기준에 무전기 출력반응시험·개폐작동 성능 시험을 추가하고, 소방설계·시공 시 제연팬 용량에 맞는 덤편을

1)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연기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덤편

2) 제품검사 항목 중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항목에 대하여 10~30로트(제품검사 신청단위) 당 1회 비율로 실시하는 시험

선정할 수 있도록 제품표시 사항에 최대사용풍압을 표기토록 하였다.

- ☐ 또한, 소방용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기시험 로트에 대하여는 시험합격 후 제품출시를 기본으로 하고, 다만 제조업체가 자율리콜 약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것으로 소방용품 품질관리 업무세칙 및 시험세칙(65품목)을 개정('18.4.16.)하였다.
- ☐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용품 품질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여 화재예방과 국민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산업과 기술계장(☎ 044-205-75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연댐퍼가 무전기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오작동하거나, 차압수치의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대책을 요구하였다. 	→ 제연댐퍼가 무전기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오작동하거나, 차압수치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대책을 요구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연결어미] 제연댐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므로 능동 표현 '발생하고'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제연댐퍼와 소방용품 부정기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제연댐퍼 무전기반응시험 도입 및 소방용품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7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제연댐퍼와 소방용품 부정기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연댐퍼 무전기반응시험 도입 및 소방용품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어 생략] 시험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목적어 '부정기시험의 문제점을'로 명확히 밝혀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제연댐퍼와 소방용품 부정기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제연댐퍼 무전기반응시험 도입 및 소방용품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7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제연댐퍼와 소방용품 부정기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제연댐퍼 무전기반응시험 도입 및 소방용품 리콜제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소방청에서는 제연댐퍼 오동작 원인분석 결과 회로기판 및 차압센서 등에서 발생된 전자파의 영향임을 밝혀냈고, 	→ 그동안 소방청에서는 제연댐퍼 오동작 원인분석 결과 그 원인이 회로기판 및 차압센서 등에서 발생된 전자파의 영향임을 밝혀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 생략] 원인분석 결과 후 밝혀진 주체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주어 '그 원인'을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여 화재예방과 국민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여 화재예방과 국민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동일 항목은 진단만 하고, 감점은 1회만 하였음.)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여성가족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여성가족부 (가군)	소방산업 과	국감지적,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선된다.	'18.04.26.	964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일시	2018. 4. 5.(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2018. 4. 4.(수) 12:00 이후		총 4쪽 (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4. 4.(수)	담당부서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담당과장	이남훈(02-2100-6381)	담당자	이정현 사무관(02-2100-6385)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 낸다.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발생한 부산 지역의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최근 몇 년 새 스톱킹과 데이트폭력이 여성안전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강화 및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 여성가족부는 종합대책 발표(2.22) 이후 기관별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처벌 강화 ▲현장대응력 제고 및 신변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주요 추진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처벌 강화 관련해,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으며, 4월 중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피의자 엄정 처벌, 맞춤형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재강조 지시



- 피해자 지원 체계 관련,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 한편,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교육에 스톱킹·데이트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향후 온라인 홍보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계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추진 전략	주요 과제	담당 기관
①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톱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스톱킹 죄목·처벌조항 신설, 용급조치 및 잠정조치 규정 마련 등 · 데이트폭력 처벌 사건처리기준 등 마련 	법무부
②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신변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의 사건 대응능력 강화 * 112 시스템 상 ‘스토킹 코드’ 별도 부여, 스톱킹 사건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 마련, 핫라인 구축 및 직무교육 실시 등 · 초동조치 및 신변보호 강화 * 가·피해자 분리 후 진술, 서면경고장·권리고지서 배부, 맞춤형 신변보호 등 	경찰청
③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 마련 * 1366 등을 통한 초기상담, 현장상담, 전문상담, 일시보호 등 실시 · 법률상담, 심리치료 및 치료회복 서비스 제공 ·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여가부
④ 예방 및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강화 · 홍보 강화 및 캠페인 실시 등 	공통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래, 삶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 “향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여성과 그 밖의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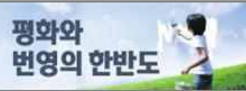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해자 	→ 가해자·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주 없음(어휘 사용 오류)] 가해자, 피해자는 각각 별개의 단어이므로 끊어서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벌 강화 관련해,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 처벌 강화와 관련해,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조사 생략)] 앞선 명사와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조사 '와'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지원 체계 <u>관련</u>,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 피해자 지원 체계와 <u>관련하여</u> ,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연결어미] 피해자 지원 체계 내용과 관련되어 뒷내용이 이어지므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지원 체계와 관련하여'로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를 <u>지원하며</u> ,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연결어미]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나열하는 내용이므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술형으로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지난 2월 스톱킹·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래, 삶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u>덜어드리고</u>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 "정부는 지난 2월 스톱킹·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래, 삶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u>덜고</u> ,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대우법] 언어 사용의 적절성에 따라 대우법을 사용하지 않음.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통일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통일부 (가군)	교류협력 기획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	'18.07.18.	1213

 통일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18 10:3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18. 7. 18.(수)		담당부서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담당과장	김영일 (02-2100-5810)		담당자	김민지 (02-2100-5811)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

- o 정부는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 함.)를 개최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총 2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최일시: 2018. 7. 11. ~ 16., 서면심의
- 심의안건: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지원(안)
② 2018년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

< 참석위원 >

-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 * 【민간위원】 김병연(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 o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두 건의 안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남북은 「판문점선언」(2018. 4. 27.) 및 「남북고위급 회담」(2018. 6. 1.)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개보수 관련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금액은 추후 별건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동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통해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해지고,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② 2018년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32억 2,500만 원 이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남북은 「관문점선언」(2018. 4. 27.) 및 「남북적십자 회담」(2018. 6. 22.)을 통해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시설점검단이 방북(6. 27.~29.)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7월 9일부터 상봉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동 행사는 오는 8월 20일~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사 준비와 시설 개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o 향후에도 통일부는 「관문점선언」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끝.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통해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이 <u>가능해지고</u>,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동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통해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이 <u>가능해진만큼</u> ,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연결어미]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큼'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철저</u>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u>만전</u> 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선택] 형용사 어근 '철저'를 목적어로 쓰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므로 '만전을 기하다'로 대체하여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 결과에 따라 7월 9일부터 상봉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점검 결과에 따라 7월 9일부터 상봉시설 개보수 <u>작업</u>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무엇을 진행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목적어에 '작업'을 추가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해양경찰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해양경찰청 (가군)	수색구조 과	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에 도전하세요!	'18.03.23.	901

 해양경찰청		보 도 자 료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2쪽(붙임 : 있음)
배포일시	2018. 3. 23. (금)	담당부서	수색구조*+과	
담당과장	총경 김인창 (044-205-2046 / 010-4872-8433)	담 당 자	경정 김영철 (044-205-2146 / 010-4655-9692)	

“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에 도전하세요!”
- ‘2018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시험’ 25일 전국서 실시 -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오는 25일 치러진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국민 편익과 공정한 시험 집행을 위해 휴일인 25일 인천 박태환수영장 등 전국 7개 시험장¹⁾에서 ‘2018년도 제 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²⁾),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울산

2) 고개를 든 상태로 시선은 익수자를 주시하며, 자유형 팔짓기와 평형 발차기 동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익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영법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 임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시험을 통해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민 여가활동 안전 확보와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시자격,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시험에는 현재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한 22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앞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자 증가를 위해 시험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경정 김영철(☎ 044-205-21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관계자는 “이번 시험에는 현재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한 22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해경 관계자는 “이번 시험에는 현재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한 22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시간 안에 <u>익수자</u>에 접근할 수 있는 영법 	→ 빠른 시간 안에 <u>익수자에게</u> 접근할 수 있는 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문맥상 익수자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므로 ‘익수자에게’로 바뀌어야 함. 무정명사에는 조사 ‘에’, 유정 명사에는 조사 ‘에게’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을 통해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민 여가활동 <u>안전 확보</u>와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험을 통해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민 여가활동 안전이 <u>확보될 뿐만 아니라</u>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연결어미] ‘안전 확보’와 ‘구조 활동 활성화’를 별개로 나누어 서술해야 문장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므로, ‘확보될 뿐만 아니라’로 고쳐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표현] 뒤에 목적격조사 ‘을’이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앞서 제시된 조사를 생략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군)	광역도로과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 조기 사용재개, 교통편의 개선	'18.08.17.	784

 <div> <div>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행정중심복합도시</div> <div>보도자료</div> <div>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div> <div>보다 나은 정부</div> </div> <div>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div>			
보도일시	18-138호 (8월 18일(토) 조건부터 보도) ※ 통신, 방송, 인터넷은 8월 17일(금)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담당부서	기반시설국 광역도로과	부서장	권진섭 과 장 (044-200-3220)
		담당자	경찬호 사무관 (044-200-3238)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 조기 사용재개, 교통편의 개선

▶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 2019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 정상추진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통 통제를 시행했던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를 8월 말 사용재개 한다고 밝혔다.
- ☐ 궁평고가도로는 오송읍(오송역)과 강내면(미호천교)을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위해 신호 없이 궁평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나,
 -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의 지하 차도 공사로 2017년 3월부터 폐쇄하고 이용자들은 신호교차로와 연계된 임시도로를 이용해 왔다.
- ☐ 행복청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완공 예정인 지하 차도의 일부 구간을 우선시공하여 8월 말 '궁평고가도로'의 사용 재개를 앞당길 예정이다.
- ☐ 권진섭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궁평고가도로 사용 재개를 통해 오송읍과 강내면을 이동하는 주민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향후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면 행복도시와 오송 산업단지,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는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행복도시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설 중이며,
-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41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4.72km의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광역도로과 경찬호 사무관(☎ 044-200-3238)에게 연락 바랍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u>었</u>으나 	→ 시설이 <u>있</u> 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자, 오기] '궁평고가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이<u>었</u>으나'의 오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청은 주민들의 <u>교통편</u>의 제공을 위해 2019년 완공 예정인 지하 차도의 일부 구간을 우선시공하여 8월 말 '궁평고가도로'의 사용 재개를 앞당길 예정이다. 	→ 행복청은 주민들의 <u>교통편의</u> 를 위해 2019년 완공 예정인 지하 차도의 일부 구간을 우선시공하여 8월 말 '궁평고가도로'의 사용 재개를 앞당길 예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성분 추가] 행복청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하여 공사를 앞당긴다는 내용이므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위해'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평고가도로 사용 재개를 통해 오송읍과 강내면을 이동하는 주민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 “궁평고가도로 사용 재개를 통해 오송읍과 강내면을 이동하는 주민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u>라</u> 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면서'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면 행복도시와 오송산업단지,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향후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면 행복도시와 오송산업단지,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u>라</u> 고 말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동일 항목은 진단만 하고, 감점은 1회만 하였음)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경찰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경찰청 (나군)	범죄예방 정책과	경찰청, 허위.악성(성희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18.04.02.	2553

보도일자: 2018. 4. 2.(월) 조간(누리망·방송은 4. 1.(일) 09:00시 이후 보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경찰청 브리핑 www.police.go.kr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범죄예방정책과장 총경 우철문 일반 02-3150-2046, 경비 2046	담당 경정 정 덕 진 일반 02-3150-2643, 경비 2643	2018년 3월 30일

경찰청, 허위·악성(성희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 세브란스 병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자, 구속수사 중 -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는

-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에 허위·악성(성희롱 등) 신고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 앞으로도 112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의 비상벨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 허위신고 처벌현황 및 주요사례

- (처벌현황) '13년 1,837건 → '14년 1,913건 → '15년 2,734건 → '16년 3,556건 → '17년 4,192건으로, 매년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오고 있음

구분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죄처벌(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13년	1,837	188	7	181	1,649	1,571	52	26
'14년	1,913	478	30	448	1,435	1,384	42	9
'15년	2,734	759	22	737	1,975	1,946	22	7
'16년	3,556	947	24	923	2,609	2,580	12	17
'17년	4,192	1,059	21	1,038	3,133	3,094	26	13

○ 주요 사례

연 번	관할	일시	사건 개요		비고
1	경기남부 군포	'17. 4. 1. 21:46 (치기)	범죄사실	○○○(45세, 남)은 은행 365코너에서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 데다 경비업체를 불렀는데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치기를 당했다며 신고	
			검거경위	인상착의 등 피해사실 진술치 못하고 상기 이유로 화가 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자백 ※ 순찰차 2대, 형기차 1대 등 9명 출동	
			조치결과	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2	대전 중부	'17. 4. 23. 09:38 (납치)	범죄사실	○○○(36세, 남)은 여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했다며 신고	
			검거경위	요구조자 직접 대면, 피해사실 없음을 확인 ※ 순찰차 1대, 형기차 1대 등 4명 출동	
			조치결과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3	경북 포항북부	'17. 6. 19. 00:09 (화재)	범죄사실	○○○(42세, 남)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이 났다며 신고	
			검거경위	현장 확인, 화재 발생사실 없음을 확인 ※ 순찰차 3대 등 6명 출동	
			조치결과	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4	전북 익산	'17. 8. 3. 03:07 (비상벨)	범죄사실	○○○(48세, 남)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며 비상벨 신고 ※ '16. 12월, 공중화장실 내 긴급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	
			검거경위	현장 확인, 피해사실 없음을 확인	
			조치결과	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심청구	
5	서울 동대문	'17. 8. 29. 00:43 (폭발물)	범죄사실	○○○(14세, 남)은 외대역에 시한폭탄을 설치, 출동치 않으면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신고(공중전화)	녹취동영상 제공가능
			검거경위	시시티브이 확인 및 탐문 수색 중 발견되어 검거 ※ 순찰차 4대, 형기차 3대 등 14명 출동	
			조치결과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6	서울 마포	'18. 3. 19. 20:45 (폭발물)	범죄사실	○○○(36세, 남)은 신촌세브란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후에 터진다고 신고(공중전화)	시시티브이 자료 제공가능
			검거경위	시시티브이 확인 및 탐문 수색 중 발견되어 검거 ※ 순찰차 14대, 형기차 6대 등 130명 출동	
			조치결과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구속)	

- 아울러, 최근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 들어
평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치이며, 작년의 경우 12건 처벌하였고
이 중 11건은 형사입건 또는 즉심청구하고 나머지 1건은 훈방처리함
※ 4. 1. 허위신고: '13년 31건 → '14년 6건 → '15년 5건 → '16년 9건 → '17년 12건

□ 향후 계획

1. 허위·악성(성희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허위신고)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강력범죄·폭발물설치 등)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
- 또한,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처벌할 예정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 1000만 원 ↓ 벌금)
▶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거짓신고(60만 원 ↓, 벌금·구류·과료)

- (성희롱)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2년 ↓, 500만 원 ↓ 벌금)

2.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 계도조치 후 지속 시 처벌

-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으로 반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받을 수 있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을 지속할 경우 적극 처벌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욕설·폭언 반복(1년 ↓, 1000만 원 ↓)
▶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장난전화(10만 원 ↓ 벌금·구류·과료)

-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폭언, 범죄신고와 무관한 반복 신고 전화 등의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 전담반’으로 응대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요원의 업무 집중도와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임

3. 민원전담반 운영

- 서울청 112는 반복 신고 또는 장시간 소요 접수 건에 전담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담반을 시범운영(17. 4월, 팀당 2명 총 8명)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6개청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임

※ 민원전담반 추가운영 지방청: 경기남부·광주·대전·전북·전남·경남청

- 민원전담반에서는 폭언·장난성 반복 전화 대응뿐만 아니라, 신고처리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을 충분히 청취·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총경 우철문)은

-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경찰 출동 요청은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함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정 정덕진(☎ 02-3150-26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는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사용] 소괄호 뒤에 조사를 쓰는 경우 괄호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 이형태를 결정함. 소괄호 앞에 있는 '경찰청'은 받침이 있는 단어이므로 조사 '은'을 사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불만사항을 충분히 <u>청취·해결방안을 제시하는</u> 등 	→ 불편·불만사항을 충분히 <u>청취</u> <u>하고</u> <u>해결방안을 제시하는</u>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접속 오류)] '불편과 불만 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내용이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다'와의 연결을 고려하여 '청취하고'로 서술어를 명시하는 것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요원의 업무 집중도와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더욱 더 <u>높여</u> 나갈 계획임 	→ 접수요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더욱 더 <u>강화</u> 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대응체계를 높이다'라는 표현에서의 서술어 어휘가 적절하지 않음. '대응체계를'이라는 목적어의 서술어로는 '강화하다'가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접수요원에게는</u>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폭언, 범죄신고와 무관한 반복 신고 전화 등의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 전담반'으로 응대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요원의 업무 집중도와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더욱 더 <u>높여</u> 나갈 계획임 	→ <u>접수요원과 관련하여서는</u>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폭언, 범죄신고와 무관한 반복 신고 전화 등의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 전담반'으로 응대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요원의 업무 집중도와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더욱 더 <u>높여</u> 나갈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사용] '응대전환 제도'를 '접수요원에게' 도입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접수요원과 관련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접수요원과 관련하여서는'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전담반을 시범운영('17. 4월, 팀당 2명 총 8명)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u>6개청</u>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임 	→ 민원 전담반을 시범운영('17. 4월, 팀당 2명 총 8명)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u>6개 청</u> 에서 추가로 운영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사용] '민원 전담반'은 경찰청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6개 청에서'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u>되므로</u> 	→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u>하므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장난 전화,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이라는 주어에 대한 서술어는 '~받지 못하게 되므로'가 될 수 없음.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가 서술어가 되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공정거래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공정거래위원회 (나군)	유통거래 과	상품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등 위메프, 쿠팡, 티몬의 불공정 행위 제재	'18.05.24.	237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5월 24일(목)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담당과장: 문재호(044-200-4616)

2018년 5월 25일(금) 오전부터 보도가능

담당: 최원철 사무관(044-200-4622)

방송 · 인터넷 매체는 5월 24일(목) 낮 12시

박재생 사무관(044-200-4623)

김동훈 조사관(044-200-4620)

상품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등 위메프, 쿠팡, 티몬의 불공정 행위 제재

- 공동 할인 구매 사업재소설커머스의 불공정 행위 첫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판촉 비용도 떠넘긴 공동 할인 구매 사업자(소설커머스) 위메프, 쿠팡, 티몬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조치 내역>

업체명	조치 내용
(주)위메프	과징금(9,300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쿠팡(주)	과징금(2,100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경고
(주)티몬	과징금(1,600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경고

※ 관련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공동 할인 구매 사업자들이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준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이다.

-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1 법 위반 내용

1. (주)위메프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 (주)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은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를 주었고, 23건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3,254개)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38억 3,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 다만, 2016년 9월 30일 (주)위메프는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음.

□ 아울러, 초특가 할인 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 원을 부담시켰다.

○ 할인 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계약서를 약정하지 않았다.

□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는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시작 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다만, 해당 계약 규정이 실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 과징금 9,300만 원 부과 ·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 품목 ·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힌 계약서(서면)를 납품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 상품 판매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이자도 주어야 한다.
-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못하도록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쿠팡(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 ☐ 쿠팡(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거래했다.**
- ☐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 가격 총 약 2,0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 ☐ 과징금 2,100만 원 부과 ·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3. (주)티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 ☐ (주)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제공했다.**
- ☐ 또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약 8,500만 원)를 주지 않았다.***
 - * 다만, (주)티몬은 2017년 2월 15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함.
- ☐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 ☐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 품목 ·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힌 계약서(서면)를 납품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 직매입한 상품 전부 ·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해서는 안 된다.
- 상품 판매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이자도 주어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는 판매 장려금의 비율,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2 제재 내용

□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총 1억 3,000만 원 (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했고 경영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 (주)위메프, 쿠팡(주), (주)티몬: 원전자본잠식,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

3 의의 ·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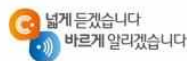
□ 이번 조치는 공동 할인 구매 사업자들의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물, 공동 할인 구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판촉 비용 떠넘기기 · 부당 반품 등의 행위도 점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1. 소셜커머스 3개 사(쿠팡, 위메프, 티몬)의 일반 현황
2. 관련 대규모 유통업법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서(서면)을 	→ 계약서(서면)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사용] 소괄호 뒤에 조사를 쓰는 경우 괄호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 이형태를 결정함. 소괄호 앞에 있는 '계약서'는 받침이 있는 단어이므로 조사 '는'을 사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는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시작 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는 해당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시작 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선택]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회사이므로 '자신'보다는 '해당 업체'가 적절한 어휘 선택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는 판매 장려금의 비율,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 기간 중에는 판매 장려금의 비율,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u>정당한 사유 없이</u> 변경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식어와 피수식어 위치 오류]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를 수식하는 절이므로 수식어가 수식하는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판촉 비용 떠넘기기 · 부당 반품 등의 행위도 점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제공, 판촉 비용 떠넘기기, 부당 반품 등의 행위도 점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접속 오류)]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라는 절과 '판촉 비용 떠넘기기·부당 반품 등의 행위'라는 명사구는 같은 명사구 단위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연결사 전후에는 절과 절, 구와 구 등으로 대등한 단위가 와야 자연스러움.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국가보훈처)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가보훈처 (나군)	기념사업 과	「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18.05.16.	1615

 국가보훈처	보도 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 쪽
배포 일시	2018. 5. 16.(수)	담당 부서	기념사업과
담당 과장	김석기	담당 자	배태미(8044-202-5534)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

「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 ▶ 5. 18.(금)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
- ▶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5·18정신을 되새기고 알리는 계기
- ▶ 실제사연을 영화와 공연을 접목한 씨네라마(CINERAMA) 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깊은 울림을 전달
- ▶ 기념식 종료 후 묘역 참배, 숭고하게 희생된 고귀한 넋을 기려

-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금) 오전 10시에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각계대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주관으로 거행된다.
- 이번 기념식은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추진되며, 광주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평화의 역사,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길 계획이다.

기념식은 추모공연과 헌화분향,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순으로 구성하여 50분간 진행된다.

- 추모공연에는 5·18 당시 시민참여 독려를 위해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씨(본명 전춘심)가 실제 출연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현장감을 더해줄 예정이다.

- 올해 기념식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창현군(당시 8세)과 38년간 아들을 찾아다닌 아버지의 사연을 씨네라마* 형식으로 전달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재조명한다.

또한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 이창현군의 부(父) 이귀복님이 실제 출연하여 깊은 울림을 전달할 예정이다.

* 씨네라마(영화 택시운전사, 화려한휴가 + 공연)

고(故) 이창현 군

- ▷ 광주지역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국민학교 1학년이던 이창현은 80년 5월 19일 집에서 나가 귀가하지 않음,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94년도에 5.18행방불명자로 등록

기념공연(출연진)

- ① 기념공연 : 뮤지컬 배우 남경음, 민우혁 / 피아니스트 유소선
- ② 사회자 : 영화배우 김꽃비, 김채희
- ③ 교향악단 : 광주시립교향악단 / 합창단 : 광주시립합창단

- 이번 기념식에는 의미있는 외국인 참석자들도 많이 참여한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5·18의 진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고(故) 찰스 베츠 헨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헨틀리, 고(故)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과, 2018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난다나 마나통가** 신부 등이다.

특히 **마사 헌틀리** 여사는 기념식에 출연하여 남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해외참석자 관련

- ▷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 독일 제1공영방송 기자, 민주화운동 현장을 영상에 담은 5·18을 전세계에 알림
- ▷ **고(故) 찰스 베츠 헌틀리** : 5·18당시 광주기독병원 원목이자 의사, ‘광주에 가고 싶다. 광주에 묻히고 싶다’라는 말을 남긴 고인의 말에 따라 광주 양림선교동산 묘원에 일부유골 안장(’18.5.17.)
- ▷ **고(故) 아놀드 피터슨** :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활동, 역사학 교수이기도 했던 그는 학자의 시각으로 5·18을 기록해 학살현장과 헬기사격을 증언
- ▷ **난다나 마나통가** : 2018광주인권상 수상, 스리랑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편에서 투쟁

□ 또한 ‘택시운전사’의 실제주인공 **고(故)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도 참석하여,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 기념식 전에는 유영봉안소를, 기념식이 종료된 후에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묘역참배에 첫 번째 희생자인 **고(故) 김경철**님의 모친 **임근단**님,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부친 **윤석동**님,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장기간 단식투쟁하다 사망한 **고(故) 박관현** 열사의 누나 **박행순**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붙임2: 묘역참배 대상)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현장을 영상에 담에 5·18을 전세계에 알림 	→ 민주화운동 현장을 영상에 <u>담</u> 아 5·18을 전세계에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타] '담에'를 '담아'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네라마(CINERAMA) 	→ 시네라마(CINER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s]는 'ㅅ'으로 적어야 하므로 '시네라마'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공연에는 5·18 당시 시민참여 독려를 위해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씨(본명 전춘심)가 실제 출연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현장감'을 더해줄 예정이다. 	→ 추모공연에는 5·18 당시 시민참여 독려를 위해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씨(본명 전춘심)가 실제 출연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할 예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현장감'은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어휘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마사 헨틀리 여사는 기념식에 출연하여 남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u>메시지</u>도 전할 예정이다. 	→ 특히 마사 헨틀리 여사는 기념식에 출연하여 남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u>메시지</u> 를 전할 예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사용] '메시지' 외에 다른 것을 추가로 전하지 않으므로 더함을 뜻하는 조사 '도'는 부적절함. 목적격 조사 '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묘역참배</u>에 첫 번째 희생자인 고(故) 김경철님의 모친 임근단님,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부친 윤석동님,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장기간 단식투쟁하다 사망한 고(故) 박관현 열사의 누나 박행순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u>묘역참배</u> 에는 첫 번째 희생자인 고(故) 김경철님의 모친 임근단님,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부친 윤석동님,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장기간 단식투쟁하다 사망한 고(故) 박관현 열사의 누나 박행순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단순한 부사어라면 '묘역참배에 참여할 예정이다'와 같이 '묘역참배'가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그러나 '묘역 참배'가 해당 문장의 주제가 되므로 조사 '는'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기념식은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라는 <u>주제로 추진되며</u>, 광주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평화의 역사,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길 계획이다. 	→ 이번 기념식은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를 <u>주제로</u> , 광주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평화의 역사,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길 계획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성분 추가] '추진되다'는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가 아니므로 생략하는 것이 적절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국방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방부 (나군)	계획예산 총괄과	국방예산 대토론회 국민참여단 및 국민제안 모집	'18.03.29.	1604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이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 포 일 자	2018. 3. 29. (목)		답 당 부 서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과	
담당 국 장	계획예산관 유균혜(02-748-5300)		담당 과 장	서기관 김신숙(02-748-5310)	

국방예산 대토론회 국민참여단 및 국민제안 모집

- 100여명 내외 '국민참여단'선발 예정, 30일부터 신청접수 -
-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추진 -

- ☐ 국방부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 까지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5. 11. / 국방컨벤션)에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하고, 토론회에서 논의할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국민제안은 참여단 모집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예산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
-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는 「국민참여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하며,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사업 관련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 금번 토론회 및 국민제안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국민참여단은 우리 국민 대상으로 10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인원은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등과 함께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국민참여단은 국방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선발된 참여단은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교육을 1회 이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교육	5. 2. (수) 18:30 ~ 20:00	삼일아카데미 (용산역 인근)
토 론 회	5. 11. (금) 18:30 ~ 21:00	국방컨벤션 (삼각지역 인근)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의 국민참여단으로 직접 활동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얼마든지 국방예산에 대한 사업제안과 의견제안이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사업 제안과 의견은 토론회시 토론 주제로 활용된다.

□ 국방부는 3. 30. (금) 부터 4. 15. (일) 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을 분석하여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분야를 7~8개 이내로 선정한다. 국민 참여단·장병·전문가는 5. 11. (금) 토론회시 토의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접수된 국민 제안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논의한다.

- 토의가 종결된 뒤에는 국민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투표하고 투표 결과를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여 5월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 한편, 국방예산 국민제안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 민간전문가의 심사 및 국민 선호도 조사 등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여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다.

□ 아울러 사전교육과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에게는 소정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우수 토론자 2명과 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참여수당은 사전교육 이수시 문화상품권 5만원, 토론회 참가시 문화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교통비 포함)

○ 장관 표창은 총 3명에게 지급되며, 토론회에서 적극 참석한 토론자 2명 (일반국민, 장병) 을 현장에서 선발하고, 우선순위 투표결과 1순위로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 1명에게 지급한다.

□ 국방예산 국민 참여단에 지원하거나 국방예산 관련 국민제안을 신청하려는 국민은 국방부 누리집 (<https://www.mnd.go.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4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누리집(<https://www.mybudget.go.kr>)에서도 국민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방부는 지원자 중 성별, 연령,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단을 선발하고, 4월 18일 즈음 국방부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끝>

붙임 1 : 국민 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개요

붙임 2 : 국방예산 대토론회 국민 참여단 및 국민제안 모집 포스터. 끝.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회에서 적극 참석한 토론자 2명(일반국민, 장병)을 현장에서 선발하고 	→ 토론회에서 적극 참여한 토론자 2명(일반국민, 장병)을 현장에서 선발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어휘 사용] 토론회에 단순 '참석'한 토론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활발히 '참여'한 토론자를 선발하는 것이므로 '참여'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예산 국민 참여단 지원하거나 국방예산 관련 국민제안을 신청하려는 국민은 	→ 국방예산 국민 참여단에 지원하거나 국방예산 관련 국민제안에 응모하려는 국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어휘 사용] '신청하다'는 '청구하거나 행위를 요구하다'라는 뜻이므로 '국민 제안을 신청하다'라는 표현은 어색함. '모집에 응하거나 지원하다'라는 '응모하다'가 적절한 어휘 선택이므로 '국민제안에 응모하려는 국민은'으로 고쳐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제안에 응모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어휘 사용] 앞서 서술하였듯이 국민제안에 '신청하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응모하다'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관 표창은 총 3명에게 지급되며, 토론회에서 적극 참석한 토론자 2명(일반국민, 장병)을 현장에서 선발하고, 우선순위 투표결과 1순위로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 1명에게 지급한다. 	→ 장관 표창은 총 3명에게 수여되며, 토론회에서 적극 참석한 토론자 2명(일반국민, 장병)을 현장에서 선발하고, 우선순위 투표결과 1순위로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 1명에게 수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어휘 사용] '지급하다'는 주로 돈이나 물건, 상품 따위와 결합하므로 '표창을 지급하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훈장, 상, 표창 따위를 지급하다'라는 뜻의 '수여하다'가 적절한 어휘 선택이므로 '수여한다'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제안은 참여단 모집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예산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 	→ 국민제안 공모는 참여단 모집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예산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국민제안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므로 '국민제안 공모'라고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는 '국민참여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하며,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는 '국민참여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되며,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는 개최하거나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라 개최되고 추진되는 대상이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따라서 '개최되며'와 '추진될'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수당은 사전교육 이수 시 문화상품권 5만원, 토론회 참가 시 문화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 참여수당은 사전교육 이수 시 문화상품권 5만원, 토론회 참가 시 문화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사용] '문화상품권 5만 원, 문화상품권 10만 원'은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혹은 수단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이 아닌 방식 및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로 고쳐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관 표창은 총 3명에게 지급되며, 토론회에서 적극 참석한 토론자 2명(일반국민, 장병)을 현장에서 선발하고, 우선순위 투표결과 1순위로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 1명에게 지급한다. 	→ 장관 표창은 총 3명에게 지급하는데, 토론회에서 적극 참석한 토론자 2명(일반국민, 장병)을 현장에서 선발하여 수여하고, 우선순위 투표결과 1순위로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 1명에게 지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토론회에 적극 참여한 토론자 2명을 단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술어가 추가되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국세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세청 (나군)	장려세제 신청과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18.04.30.	314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보도일시	2018. 4. 30.(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배포 일자: 2018년 4월 30일

발 표 자	한 재 연	소 득 지 원 국 장
담당 과장	강상식	과 장
담 당 자	고병재	사무관
		(044)204-3841
		(044)204-3852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

-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 ☐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페이지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 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 ☐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 「보이는 ARS」와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음.
 - * 정기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1 307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대상자

○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 개정*의 영향으로 작년(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증가함.

* 단독가구 기준 연령 확대(40세→80세),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 폐지 등

<2018년 신청 안내 유형별 현황> (만 가구)

총 안내가구	①근로장려금	②자녀장려금	③근로·자녀장려금
307	200	64	43

□ 신청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청(일반신청)이 편리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

□ 신청요건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안내문 및 안내문자 발송

-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도 보낼 예정임.
- 안내 대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 고령자와 기수급자에게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안내하고,
 - 30대 단독가구 등 신규 수급자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함.
-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확인경로)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 >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 지급시기: 9월 중 지급 예정

-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이용자 that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확대

□ ARS 신청시스템 대폭 개선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 안내와 더불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이는 ARS」를 처음 도입함.
 - 이용자는 「보이는 ARS」와 「음성 ARS」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안내 진행 중 원하는 항목을 바로 선택할 수 있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작년까지 별도 운영되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ARS 전화번호를 1544-9944로 통합하였음.
 - 한 번의 전화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마칠 수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이 향상됨.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계속 제공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이용자 스스로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제공함.(작년부터 서비스 시작)
 - ※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필요
- 본인이 실제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산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함.

□ 「사전예약 서비스」 처음 도입

- 안내대상자가 정기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사전예약 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하여,
 -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27일 현재 약 4만 명이 사전예약을 신청하였음.

3 신청 시 유의할 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

-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람.

☐ 장려금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

-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 감액 및 충당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 지급됨.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 불필요

-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 기간인 4. 23.~4. 30.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음.
-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안내문이 일괄로 발송될 수 있으나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람.

☐ 금융사기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람.

4 장려금 상담은 126번으로

☐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장려금 신청 등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함.
-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전문상담원 25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26 ⇨ 2 ⇨ 4
장려금 홈택스 이용방법 및 관련 법령 상담

☐ 홈택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

- 정기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요건이나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함.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 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성분 추가] '-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장려금 신청자가 주제임을 나타냈으므로 조사 '는'의 사용은 불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 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어 생략] 지급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장려금을'이라는 목적어가 추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완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간편신청은'의 서술어로 '신청완료'는 적절하지 않음. '완료됨'으로 써야 주어와 호응을 이루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근로장려금'은 마지막 서술어인 '미만이어야 함'의 주체가 아니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서술어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음'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송되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송되었는지의 여부 / 발송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발송되었는지'는 명사 '여부'를 수식하는 요소이므로 조사 '의'가 필요함. 또는 명사+명사의 구조로 '발송 여부'로 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에 대하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성분 추가] '-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신청자가 주제임을 나타냈으므로 조사 '는'의 사용은 불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기 바람/기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대우법] 보도 자료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대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재해야 함' 등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안내문이 일괄로 발송될 수 있으나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안내문이 일괄로 발송될 수 있으나 내용만 참고하기 바람/참고하는 것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대우법] 보도 자료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대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 안내와 더불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를 처음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 안내를 듣고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를 처음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음성 안내'는 이에 대한 서술어 '보면서'의 주체가 아니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따라서 '음성 안내'에 대한 서술어 '듣다'가 추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및 중단된 후 지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된 후 지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연결어미] '및'은 '그리고, 또, 그밖에'를 의미하는 부

		<p>사이므로 해당 맥락에서는 선택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 ‘-거나’로 바꿔 써야 함.</p>
--	--	--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대검찰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대검찰청 (나군)	대변인실	대검찰청 양성평등담당관실 현판식 개최	'18.05.29.	1049

이 보도자료는 2018. 5. 29.(화)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18. 5. 29.(화)

자료문의 : 양성평등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480-2908
주최일자 : 양성평등담당관 유현정

제 목 **대검찰청 「양성평등담당관실」 현판식 개최**

- 대검찰청은 2018. 5. 29. 16:00 「양성평등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 '양성평등담당관(고검검사급 검사)' 외에도, 전담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등 상설 인력이 관련 업무를 전담
- 대검찰청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신속 대응하여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검찰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진정한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I 현판식 개요

- 일시 · 장소 : 2018. 5. 29.(화) 16:00, 대검 양성평등담당관실 613호
- 주요 참석자
 - 검찰총장, 차장검사, 형사부장 등 부·국장 9인, 형사1·2과장, 양성평등담당관 등

Ⅱ 「양성평등담당관」 신설 배경

- 검찰 구성원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을 전담할 상설기구가 필요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을 권고하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음(4. 23.)
-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신속 대응하여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장기적·종합적 대책을 전담할 수 있는 상설부서 신설

Ⅲ 「양성평등담당관」 역할과 기능

①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초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성 관련 피해를 당한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의 걱정 없이 피해 사실 신고, 상담 및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고충전담창구 역할
- 진상조사단 업무를 인계받아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충실히 고려한 종국적 해결 도모

②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양성평등 문화 기반 조성

- 검찰 구성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 성인지 교육 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 강화 및 성 비위 사건 예방 효과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현행 지침을 재정비

③ 검찰 내 양성평등 중심기구로서의 정책수립 및 조직문화 개선

- 양성평등에 기초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보직·전담별 성차별 해소방안 등 인사·조직 관련 정책 건의, 제도개선 추진
- 법무부 대책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요청, 권고 사항 등에 적시 대응하고, 적극 협력
- 일·가정 양립 문화, 근무시스템 정비하고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IV 향후 계획

- 대검찰청은 양성평등담당관 신설을 계기로, 성 관련 피해 등 고충에 대해 부담없이 신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현하여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장기적·종합적 대책을 <u>전담</u>할 수 있는 상설부서 신설 	→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장기적·종합적 대책을 <u>전담하여</u> 실행할 수 있는 상설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의미 불충분)] '대책을 전담'할 뿐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것이므로 의미가 불충분하게 제시되어 의미의 상세화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피해자에 대한</u>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 실질적인 <u>보호·지원</u>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등 현행 지침을 재정비 	→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 실질적인 <u>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u> 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등 현행 지침을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식어 피수식어 위치 오류] '피해자(에 대한)'가 '보호·지원'을 수식하므로 수식어 '피해자(에 대한)'가 피수식어 '보호·지원' 앞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방위사업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방위사업청 (나군)	방산일자리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정	'18.06.05.	1076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보다 나은 방위사업청

대변인실

☎ 02-2079-6021
www.dapa.go.kr

배포일시 : 2018. 6. 5.(화) 08:00

총 2 쪽

담당부서 : 방산일자리과장(과장 서기관 김형진/☎ 2079-6440)

보도일시 : 본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정

- 부품국산화개발 활성화를 위해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로 통합 -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2018. 6. 5.(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통합 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국산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부품국산화개발은 무기체계 제작 시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외국의 수출통제나 단종,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왔다.

○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에 국산화사업별로 별도 운영되던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등 3개 행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하여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기존 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제V편 제5장 국산화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지침

➔

통합 제정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 1 -

○ 이번에 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 국산화율 산정 방식 등 기존에 개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고
- 일반부품국산화개발 시 중간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부실하게 개발되는 품목은 개발 승인을 취소하고 타 업체에 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강화했다.
- 또한 ‘부품성능개량개발’ 규정을 신설해 기존에 수입 부품을 대체하는 개발만을 국산화로 인정하던 것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새로이 장착하거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모든 국내 부품 개발로 국산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특히 이번 통합 규정 제정은 부품국산화개발의 수행 주체인 중소기업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방위사업청 김일동(고위공무원) 방산진흥국장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는 원활한 부품조달을 통해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고, 더불어 예산 절감,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함으로써 부품국산화개발을 더욱 활성화시켜 방위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 제정된 규정의 상세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이번 통합 규정 제정은 부품국산화개발의 수행 주체인 중소기업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 참여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 특히 이번 통합 규정 제정은 부품국산화개발의 수행 주체인 중소기업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u>중소기업의</u> 개발사업 참여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개발사업 참여'의 주체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의'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부품성능개량개발' 규정을 신설해 기존에 수입 부품을 대체하는 개발만을 국산화로 인정하던 것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새로이 장착하거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u>모든 국내 부품 개발로</u> 국산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p>→ 또한 '부품성능개량개발' 규정을 신설해 기존에 수입 부품을 대체하는 개발만을 국산화로 인정하던 것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새로이 장착하거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u>모든 국내 부품 개발도 국산화로 인정하는 등</u> 국산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국산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에 대한 서술어가 없으므로 '모든 국내 부품 개발도 국산화로 인정하는 등'과 같이 서술어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도 현장의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함으로써 부품국산화개발을 더욱 활성화시켜 방위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p>→ "앞으로도 현장의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함으로써 부품국산화개발을 더욱 활성화시켜 방위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키겠다."<u>라고</u> 밝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 조사 오류]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인용절이므로 직접 인용조사 '라고'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법무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법무부 (나군)	인권구조 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폭 확대	'17.03.22.	1448

		보 도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8. 3. 22.(목)	담당부서	인권국 인권구조과	
주책임자	인권구조과장 안희준 02) 2110-3263	담당자	윤지원 사무관 02) 2110-3642	
사 진	사진 있음	대변인실	02) 2110-3717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폭 확대

- 이에 맞춰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가정 및 스마일센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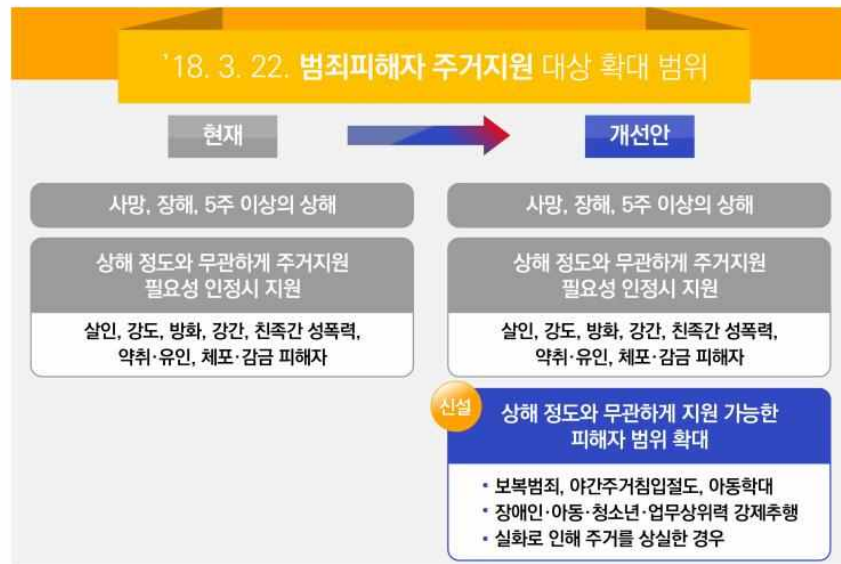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상 확대

- 법무부는 '18. 3. 22.(목)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개요 [붙임1 참조]

- (법적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공주택특별법
(사업개요) 범죄피해자에게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10. 8. 시행)
- '10. 8.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범죄피해자를 포함
 - 사망, 장애, 중상해(8주 이상) 범죄피해자
 - '15. 8. 지원대상 확대
 - ① 8주 이상의 상해 피해에서 5주 이상의 상해 피해로 확대
 - ②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범죄피해자는 상해와 무관하게 지원

-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대상 범위를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피해자에서 보복범죄 피해자,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피해자 등까지 확대합니다.



- 또한 주거지원 신청기간*의 예외를 인정해 가해자 소제발견 또는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해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사건의 경우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있는 날부터 10년” 적용

- 이에 따라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밝혀진 사건의 경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신변보호는 물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연간 약 4,600여명의 피해자가 새로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가정 방문 및 스마일센터 현장 점검

○ 법무부 장관은 '18. 3. 22. 주거지원 확대 시행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 주거지원을 받은 범죄피해자*의 빌라를 찾아가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와 건의 사항을 듣고,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6년 세칭 '산악회 업종 사건'으로 보도된 범죄피해자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및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을 받음

○ 이어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서울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해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상황과 임시주거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 이곳에서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면서, 법무부도 스마일센터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스마일센터 [붙임2 참조]

(스마일센터 개요) 스마일센터는 전문적인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임시주거 서비스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심리치유기관으로서, 전국에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청주와 울산에 2개소 추가 설치 예정
(서울스마일센터) 2016. 12. 28. 서울 마포구에 개소하여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 2018년부터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 업무·시설 표준화 등 전국 스마일센터의 기획·연구를 총괄하는 역할도 담당

붙임 1.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붙임 2. 스마일센터 설명자료

붙임 3. 행사 사진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u>있는</u> 날부터 10년” 적용 	→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u>범죄피해가</u> 있는 날부터 10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 생략] 서술어 ‘있다’에 대한 주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주어인 ‘범죄피해가’가 추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u>있는</u> 날부터 10년” 적용 	→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u>발생한</u> 날부터 10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있는’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발생한’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밝혀진 사건의 경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밝혀진 사건 <u>피해자의</u> 경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사건’에게 주거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피해자’에게 가능한 것이므로 ‘피해자’라는 성분이 추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 범죄피해자에 <u>대한</u> 주거지원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사용] ‘범죄피해자’가 주거지원의 주체가 아니므로 조사 ‘의’는 부적절함. ‘범죄피해자에 대한’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신변보호는 물론 신속한 일상 복귀를 <u>도모하고</u>, 연간 약 4,600여명의 피해자가 새로 주거지원 대상에 <u>포함됩니다</u>. 	→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신변보호는 물론 신속한 일상 복귀를 <u>도모하게 되었고</u> , 연간 약 4,600여명의 피해자를 새로 주거지원 대상에 <u>포함하게 되었습니다</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선행절의 ‘범죄피해자의 주거 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와 후행절의 서술어 ‘도모하고’, ‘포함됩니다’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할 수 있게 되다’를 추가하여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u>면서</u> 	→ “범죄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 <u>라면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인용절이므로 직접 인용조사 ‘라면서’를 사용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보건복지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보건복지부 (나군)	보험정책과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18.02.27.	2722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2월 27일(화) 국무회의 시작(10:00) 후 보도	
배 포 일	2018. 2. 26. / (총 5 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과 장	정 경 실	전 화	044-202-2710
담당자	강 슬 기		044-202-2702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 상위 2~3% 고소득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맞추어 보험료 추가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16.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1 -



□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

- *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 *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2)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 *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3)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시)

(4)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된다.

-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년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8년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 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 *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 15배 수준

< 보험료 상한액 >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487만4000원 (본인부담 월 243만7000원)	월 619만4000원 (본인부담 월 309만7000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월 243만7000원	월 309만700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232만4000원	월 309만7000원

-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 * 직장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8~8.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
지역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6~6.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

< 보험료 하한액 >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1만7460원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3,660원	월 1만3100원 * 기존 보험료 1만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5)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 기존 평가소득 납부 대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연장여부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6) 소득 파악을 개선하여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파악을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을 등을 고려하여, '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의 <u>사례와</u> 같은 사건을 방지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방지하다'의 대상은 사례가 아닌 '사건'이 되어야 하므로 '사례와 같은 사건'과 같이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만 원 이상인 <u>고가차</u>는 제외 	→ 4,000만 원 이상인 <u>고가의 차</u> 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고가'가 '차'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조사 '의'를 사용하여 '고가의 차'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 조사 오류]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인용절이므로 직접 인용조사 '라고'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u>줄여드리는</u> 한편 	→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u>줄이는</u> 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대우법] 보도 자료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대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나군)	의료기기 안전평가 과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18.04.19.	916

 보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배 포	2018.4.19.(목)
	담당 과	의료기기안전국·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1)
	과 장	유희상 (☎043-719-5001)
	연구 관	양원선 (☎043-719-5004)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발간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를 오는 5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18.5.1)
 - ※ 이상사례 :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결과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 그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 의료기기 취급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체
-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입니다.
- ☐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내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u>시점</u>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이내입니다. 	→ 보고 <u>시한</u> 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이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보고해야 하는 날의 범위(15일, 30일 이내 등)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시한'으로 바뀌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u>이를 통해</u>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주어인 '이번 조치는'는 마지막 서술어 '강화됩니다'의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의 역할이므로 '이를 통해'를 추가해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u>보고를 의무화</u>하였습니다. 	→ 그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u>의무적으로 보고해</u> 왔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은 '보고를 의무화한' 주체가 아니라 '보고한' 주체이므로 '보고해 왔습니다'로 바뀌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 이번 보고 <u>의무화</u> 대상은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어 피수식어 위치 오류] '보고 대상 의무화'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보고가 의무화된 대상'에 대한 나열이므로 '보고 의무화 대상'으로 바뀌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u>품목</u>의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 이번 보고 의무화의 대상은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u>품목에서</u>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품목'은 '발생하다'의 주체가 아니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따라서 '품목에서'로 바뀌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고 방법</u>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u>이상사례 보고</u> 는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보고 방법'은 서술어 '제출하면 됩니다'의 주체가 아니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따라서 '이상사례 보고는'으로 바뀌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인사혁신처)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인사혁신처 (나군)	인사혁신 기획과	국민이 추천한 쪽방촌 돌보미 등 공무원 80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영예	'18.04.14.	2698

 인사혁신처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과 장 김성훈(044-201-8310) 서기관 김창주(044-201-8324) 사무관 김종일(044-201-8309)
보도일시	2018년 4월 14일(토) 조간 (4.13. 오후 3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추천한 쪽방촌 돌보미 등 공무원 80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영예

-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우수 현장 공무원 80명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 ☐ 13일 열린 시상식에는 수상자뿐만 아니라 수상자 가족을 함께 초청하여 오찬을 하는 등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 ☐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대민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상하여 왔다.
- 올해는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개선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5개 분야에 대해 지난 해 11월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국민추천 절차를 거쳐 국가·지자체 60개 기관에서 엄선한 후보자 202명을 추천받았다.
- 추천자를 대상으로 학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공개검증 및 현지실사 등 3단계의 심사와, 후보자 공적에 대한 국민의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수상자 8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 특히, 올해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민추천 창구를 마련하고 이메일·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는 등 수상자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그 결과, 쪽방촌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김종복 주무관(서울 용산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김준일 주무관(경북 칠곡군) 등 대민접점 실무공무원들이 국민추천을 거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또한, 한국인의 대표적 먹을거리인 고구마의 품종 국산화에 성공해 신품종을 개발한 남상식 농업연구관(국립식량과학원), 최첨단 감정기법을 개발하여 미제 사건을 해결한 김남이 농업연구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 수상자 주요 공적 〉

- ◆ 김종복 주무관(서울 용산구), 찾아가는 현장 복지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쪽방촌을 인정 넘치고 신바람 나는 복지공동체로 변화시키다 !
 - 김종복 주무관(서울 용산구 사회복지직)는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희망나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맞춤형 급여대상자가 용산구의 23%를 차지할 만큼 생활이나 근무여건이 힘든 동자동 쪽방지역을 인간적인 삶을 회복하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켰다. 현장 복지민원실 운영, 쪽방 문패 및 배치도 달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한마당 개최, 수납시설 설치 등으로 쪽방지역에 활기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 ◆ 김준일 주무관(경북 칠곡군),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다!
 - 김준일 주무관(경북 칠곡군 가산면)은 칠곡군 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신규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일자리부문 전반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에 문화공간과 치유·체험시설을 완비하여 지역주민에게는 문화공연의 기회를, 타 지역 주민에게는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단합과 수익향상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다.
- ◆ 남상식 농업연구관, 신품종 고구마 개발·보급으로 고구마 품종 국산화에 앞장서다 !
 - 남상식 농업연구관(국립식량과학원)은 우리나라 고구마 품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고구마 개발·보급에 몰두한 끝에 신품종(풍원미, 호감미, 진율미, 단자미) 개발·보급에 성공하였다 .
특히, 풍원미 품종은 최근 호박고구마의 대세로 떠올랐다. 기존 품종보다 생산성이

높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당도가 높아 맛이 좋고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¹⁾ 함량이 높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 **김남이 공업연구원,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로 한국의 CSI 토대를 만든다 !**

- 김남이 공업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첨단 감정 기법인 '동위원소 분석기법²⁾'을 활용하여 문지마 살인범죄 사건의 범인을 확정, 사건을 해결하였다.
또한, 유해가스 감정기법³⁾, 질병관련 대사체 감정기법⁴⁾ 등 최첨단 수사기술을 개발해 미제로 남겨진 원인 불명으로 피해자에게 뉘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을 해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

-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승진,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 1개 이상의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다.
- 김판석 처장은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후보자 접수, 심사·선정 등 선발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 절차를 강화하고, 5급 이하 실무자 및 현장공무원 위주로 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하여 성과를 거둔 우수 현장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 자연계에 존재하는 500여 종류의 카로티노이드(carotenoid 색소군) 중의 하나로 체내에서 레티놀(retinol, 순수 비타민)로 변하며 비타민 A의 활성을 갖음.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일정량을 유지해야 유해산소로 인한 암, 동맥경화증, 관절염, 백내장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음
- 2)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문지마 범죄(청송 마을회관 농약 소주사건, 2016.3.~2016.5.)에서 범인을 확정하여 해결하는데 활용됨. 약물분석법으로는 동일한 성분들로 구성된 농약의 개체 식별이 불가능하나 최첨단 분석법인 동위원소 분석법을 적용하여 범인을 입증한 첫 번째 사례였음. 두 달여 동안 시골 마을의 인심이 매우 흉흉하여 서로를 불신하며 의심하는 등 주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속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신 감정기법으로 각종 증거물을 감정하여 범인을 입증하여 비록 자살하긴 하였으나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음. ※동위원소: 서로 화학적으로 거의 구별할 수 없으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이 서로 다른 원소를 말함
- 3) 공정중에 질소가스 누출(2015.1.)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현장 감정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사건을 해결하였고, 사업장에서 작업 중 안전준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하였음
- 4) 당뇨 및 만성 알코올 중독 같은 질병의 경우 대사 이상에 기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대사체(代謝體, metabolome)인 케톤체류의 새로운 지표물질의 개발 및 분석법 개발로 사망 원인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하여 사망원인 규명에 활용하고 있음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 수상식이 더욱 의미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선택] '의미를 더하다'라는 표현은 어색함. '더욱 의미 있도록 하다'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급여대상자가 용산구의 23%를 차지할 만큼 생활이나 근무여건이 힘든 동자동 쪽방지역 	→ 용산구 맞춤형 급여대상자의 23%가 거주할 만큼 생활이나 근무여건이 힘든 동자동 쪽방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선택] '용산구 맞춤형 급여대상자 중 23%가 동자동 쪽방지역에 산다'라는 내용이므로 '거주하다'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마의 품종 국산화에 성공해 신품종을 개발한 남상식 농업연구관 	→ 신품종을 개발하여 고구마의 품종 국산화에 성공한 남상식 농업연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어순 오류)] '신품종을 개발하여 고구마 품종 국산화에 성공하다'라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므로 어순을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급여대상자가 용산구의 23%를 차지할 만큼 생활이나 근무여건이 힘든 동자동 쪽방지역 	→ 용산구 맞춤형 급여대상자의 23%를 차지할 만큼 생활이나 근무여건이 힘든 동자동 쪽방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식어 피수식어 위치 오류] 의미상 '용산구의 맞춤형 급여대상자'이므로 수식어인 '용산구'가 피수식어인 '맞춤형 급여대상자'의 앞에 위치하도록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한 마당 개최, 수납시설 설치 등으로 쪽방지역에 활기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업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한 마당 개최, 수납시설 설치 등으로 쪽방지역에 활기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쪽방지역에 활기찬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다양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설명이므로 '사업 운영' 등이 추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후보자 접수, 심사·선정 등 선발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 절차를 강화하고 	→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후보자 접수, 심사·선정 등 선발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 절차를 강화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사용] '선발 과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조사 '에서'가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후보자 접수, 심사·선정 등 선발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 절차를 강화하고, 5급 이하 실무자 및 현장공무원 위주로 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하여 성과를 거둔 우수 현장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후보자 접수, 심사·선정 등 선발 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 절차를 강화하고, 5급 이하 실무자 및 현장공무원 위주로 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하여 성과를 거둔 우수 현장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조사 오류]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인용절이므로 직접 인용조사인 '라면서', '라고'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 	→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하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인사혁신처는'는 서술어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의 주체가 아니

<p>행하여 성과를 거둔 우수 현장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건설에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p>과를 거둔 우수 현장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건설에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p>	<p>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따라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로 바꿔 써야 함.</p>
--	--	---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조달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조달청 (나군)	서비스계약과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새롭게 선보인다	'18.02.13.	1291

<div>2018 행정안전부 국정과제 및 동계대응업무계획</div> <div>하나 된 열정</div> <div>하나 된 대한민국</div> <div></div>	<div>보도자료</div> <div>www.pps.go.kr</div>	부 서	서비스계약과
		과 장	유 순 재
<div></div> <div>조달청</div>	총 6 매	서기관	김 연 일
	배포일 2018. 2. 13.(화)		070-4056-7292
배포즉시 보도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새롭게 선보인다

조달청, 학교가 원하는 수학여행서비스 제공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

- ☐ 학교에서 원하는 전국 각 지역의 수학여행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수학여행'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된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서비스물-여행체험서비스-맞춤형 수학여행

-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 지역의 대표적인 여행코스를 카탈로그에 담아 계약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방식¹⁾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2월13일 밝혔다.

1) 카탈로그 구매 : 통상적인 쇼핑몰 구매는 가격과 규격이 먼저 확정되어 있어 수요기관은 업체가 제시한 상품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반면, 카탈로그 구매는 대표적인 상품만을 카탈로그로 계약하고, 만일 수요기관이 다른 원하는 상품(여행)을 제안할 것을 업체들에게 요청하면 경쟁을 통해 요구수준에 가장 잘 충족시키는 여행상품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

- 학교에서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여행업체들의 맞춤형 수학여행 카탈로그를 참고하여 소요비용, 인원수, 일정, 코스 등을 정한 후 이에 적합한 여행상품을 제안할 것을 여행업체에 요청을 하면
- 여행업체들이 여행상품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학교에서는 평가를 통해 최종 여행상품을 선정할 수 있다.
- 이러한 '맞춤형 수학여행'은 현재 4개 업체의 총 61개 카탈로그 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었다.

□ 한편, 수학여행 업체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 여행경비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개사 이상이 경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단일 제안 또는 복수 제안 모두 가능
- 수학여행업체 선정기준도 수요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품질과 안전·서비스 중심으로 하였다.
- 여행프로그램 구성수준, 숙식제공 만족도, 운송수단의 안전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가격은 평가요소에서 제외하였다.

□ 이번 '맞춤형 수학여행'서비스 개시로

- 제주도에 국한²⁾되었던 수학여행서비스가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 2015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 지역여행 상품(현재 43개 등록)과 맞춤형 수학여행간 연계·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맞춤형 수학여행상품 코스에 지역여행상품을 포함하도록 촉진할 예정

□ 박춘섭 조달청장은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로 학교는 금년 신학기부터 다양한 수학여행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편리하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면서,

- “다양한 수학여행 수요가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조달청은 2012년부터 3개 지역(제주도 '수학여행패키지서비스', 경주·속초 '숙박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공급

－ 수학여행 관련서비스 계약현황('18년 현재)

구 분	제주(패키지)	속초(숙박)	경주(숙박)	계
계약업체수	9개사	3개사	14개사	26개사

－ 연도별 수학여행 관련서비스 납품현황(3개 지역)

· ('12)27억원 → ('13)86억원 → ('14)27억원→('15)37억원→('16)54억원→('17)45억원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탈로그/카다로그/카달로그 혼용 	→ 카탈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카달로그'가 맞는 표기이므로 통일하여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일 수요기관이 다른 원하는 상품(여행)을 제안할 것을 업체들에게 요청하면 경쟁을 통해 요구수준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여행상품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 	→ 수요기관이 다른 원하는 상품(여행)을 제안할 것을 업체들에게 요청하면 경쟁을 통해 요구수준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여행상품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성분 추가] 내용상 '만일'이라는 말을 필요 없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한 '맞춤형 수학여행'은 현재 4개 업체의 총 61개 카달로그 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었다. 	→ 이러한 '맞춤형 수학여행' 상품의 경우, 현재 4개 업체의 총 61개 카달로그 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사용] 서술어 '등록되어 있다'의 주어는 '총 61개의 카달로그 상품'이므로 '맞춤형 수학여행 상품의 경우'로 바꿔 쓰는 것이 더욱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여행 업체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 수학여행 업체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사용] 서술어 '기하다'는 조사 '에'를 취하므로 '업체선정에'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수학여행 수요가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양한 수학여행 수요가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조사 오류]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인용절이므로 직접 인용조사인 '라고'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해양수산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해양수산부 (나군)	홍보담당관	소통의 마법 펼칠 '해리포터', 너야 너!	'18.03.09.	1145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18. 3. 9.(금)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홍보담당관	담 당 자	· 과장 오행록, 서기관 이상철, 주무관 박은영 · ☎ (044)200-5013, 6053, 6054	
보 도 일 시		2018년 3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소통의 마법 펼칠 '해(海)리포터' , 너야 너!

- 3.12~25 해수부 대학생 기자단 해(海)리포터 6기 모집... 4월부터 본격 활동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앞으로 1년간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줄 '해(海)리포터 대학생 기자단 6기'를 3월 12일(월)부터 25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해리포터 대학생 기자단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쉽고 참신한 시각으로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해 왔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만큼 누리소통망(SNS)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환영하며,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자단에게는 각종 해양수산 행사 참가기회와 원고료·취재비가 지원되며, 1년 간 성실히 활동할 경우 연말에 수료증이 발급된다. 매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기자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연간 활동 실적이 특히 뛰어난 기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리포터 기자단 중 해양수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기자가 자격을 갖추어 지원하는 경우 최대 2명까지 우선 선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선발된 대학생에게 8개월간의 뉴질랜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리포터 대학생 기자단에 참여하기 원하는 대학생은 해양수산부 블로그(<http://blog.naver.com/koreamof>)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3월 25일 까지 해리포터 운영사무국(koreamof@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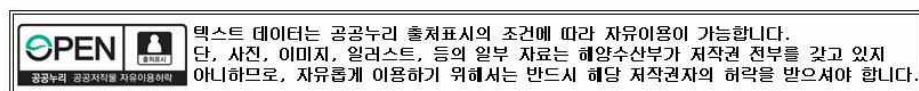
* 자기소개서, 취재하고 싶은 기사 기획안 등을 제출

** 문의처 : 070-5067-5476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4월 3일 최종합격자 20명을 발표한다. 기자단은 4월 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국 정책현장을 누비며 해양수산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 (서류합격자 발표) 3월 26일(월) / (면접) 3월 29일(목)

박준영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줄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부터는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리포터 기자단 중 해양수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기자가 자격을 갖추어 지원하는 경우 최대 2명까지 우선 선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p>→ 작년부터는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u>시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연수 사업'에</u> 해리포터 기자단 중 해양수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기자가 자격을 갖추어 지원하는 경우 최대 2명까지 우선 선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해리포터 기자단이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사업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시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연수 사업에'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4월 3일 최종합격자 20명을 발표한다. 	<p>→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4월 3일 최종합격자 20명이 <u>발표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최종합격자 20명을 발표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따라서 '최종합격자 20명이 발표된다'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행정안전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행정안전부 (나군)	승강기안전 전과	싸구려 불량 승강기 제품 제조·수입 근절한다!	'18.05.08.	2393

	보 도 자 료	작성과	승강기안전과
	2018년 5월 8일(화) 조간 (5. 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박종현 사무관 남송희
		연락처	044-205-4290 044-205-4294

싸구려 불량 승강기 제품 제조·수입 근절한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 00건설사는 00아파트에 새로 설치한 승강기에서 432건의 고장이 발생하는 동안,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생활안전에 위협이 되자 외국계 기업 00엘리베이터(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 ▶ 법원은 해당 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15.6.8)하였다.
- ▶ 이처럼 불량 승강기 제품의 유통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입법예고 : 2018.5.8. ~ 6.18.(40일간), 관보, 누리집,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19.3.28. 시행 예정)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강화 】

-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하여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승강기부품의 중요도 및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현행은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 시행
 -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②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한다.
 -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강화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설 】

- ③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하여 저가 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제조·수입을 차단한다.
 -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은 총 19종으로 현행 14종*에 승강기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 승강기부품 5종**이 추가된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 6종 및 안전확인신고대상 승강기부품 8종
 - ** 개문출발방지장치, 출입문 조립체,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이동케이블,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이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④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신설하여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한다.

-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함이 발견된 승강기에 대하여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승강기 유지관리 강화 】

⑤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제를 강화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 포함)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하였다.

* 현재,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 승강기 대수의 75% 이상이 공동도급계약임

-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는 지역구분 없이 월간 100대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 있는 승강기가 포함된 경우 월간 90대까지만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⑥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및 고층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하는 직무가,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입주자 등을 신속히 피난시키도록 하는 직무가 신설된다.
- 이에, 해당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승강기 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

- ⑦ 정부는 승강기 안전기술 개발 및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을 육성한다.
 - 또한,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 ⑧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업무상 책임한계,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기술·정보의 교환 및 인력·기술 개발 지원 등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고시로 규정된다.
 - 대기업이 인력이나 기술 등의 지원을 이유로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 생활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생활안전에 위협이 되자 외국계 기업 00엘리베이터(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p>	<p>→ →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생활안전에 위협을 느끼자 외국계 기업 00엘리베이터(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주민들이'이 서술어 '위협이 되다'의 주체가 아니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따라서 '위협을 느끼다'로 바꿔 써야 함.</p>
<p>■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15.6.8)하였다.</p>	<p>→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15.6.8)하였다.</p>	<p>■ [인용조사 오류]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인용절이므로 직접 인용조사인 '라고'로 바꿔 써야 함.</p>
<p>■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p>	<p>→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p>	<p>■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뒤 절의 '처하게 된다'와 접속 호응하기 위해 '등록취소'에 대한 서술어가 필요하므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과 같이 바꿔 써야 함.</p>
<p>■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및 고층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된다.</p>	<p>→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및 고층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u>규정이</u> 신설된다.</p>	<p>■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내용상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므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함.</p>
<p>■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다</p>	<p>→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하려는 것이다</p>	<p>■ [주술 호응 오류] 주어인 '전부개정안'은 서술어 '뒷받침할 계획이다'의 주체가 아니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따라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로 바꿔 써야 함.</p>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환경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환경부 (나군)	자원재활 용과	포장재 생산 업체 19곳, 페트병 무색만 만든다	'18.04.25.	1503

 환경부 <small>2018년 4월 27일</small>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년 4월 27일 석간 (4. 27.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최민지 과장 / 송혜영 사무관 044-201-7380 / 7381
	배포일시	2018. 4. 25. / 총 11매	

포장재 생산 업체 19곳, 페트병 무색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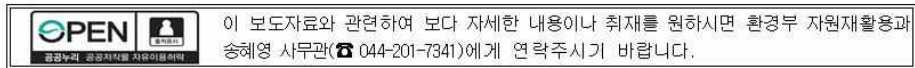
- ◇ 환경부, 포장재 상위 19곳 생산자와 4월 27일 자발적 협약 체결
- ◇ 협약 생산자 2019년까지 페트병 생산 시 무색만 사용
- ◇ 각종 포장재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제조되도록 개선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포장재 사용 생산업체 19곳과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생산업체 19곳은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 속한 기업이며 2016년 기준 페트병 출고량 26만 톤 중에서 55%를 생산하고 있다.
 - ※ 재활용 의무 생산자: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으로 '자원재활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의 생산자
 - 협약 참여 업체 19곳은 광동제약,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아제약,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서울우유,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하이트진로, 해태에이치티비,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등이다.
- ☐ 이들 생산업체들은 자율적으로 2019년까지 생수, 음료 등의 페트병을 무색만 사용하도록 품목별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 다만, 맥주와 같이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갈색, 녹색을 사용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이 이행될 경우, 음료와 생수병의 무색 페트병 사용 비율은 2016년 63.5%에서 2019년에는 85.1%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의 생산을 제품 지침(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이번 협약이 재활용 용이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색상 이외에도 페트병 생산 시 재활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종이라벨 사용, 몸체에 직접 인쇄 등도 제한된다.
 - 또한, 2020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등의 재질을 재활용이 쉬운 페트(PET) 등의 재질로 대체된다.
 - * PVC: 알약 포장재,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
 - 페트병 이외의 요구르트병, 샴푸 등의 용기류* 생산 시 알루미늄 재질의 뚜껑과 같이 몸체와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부분이 동일한 재질로 변경된다.
 - * 요구르트병, 샴푸, 알약 포장재 등 페트병 이외 단일재질의 합성수지 용기류
 - 협약 참여 업체 19곳은 이외에도 품목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협약 참여 업체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약사항의 이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참여 업체들은 올해 6월부터 목표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협의하여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이 설계되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아울러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개선 등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재활용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재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붙임 1. 사용이 제한되는 제품 예시.
2. 질의응답.
3.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계획.
4. 자발적 협약서 문안.
5.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 명단. 끝.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병 무색만 만든다. 	→ 무색 페트병만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어 피수식어 위치 오류] '무색인 페트병'을 의미하므로 수식어 '무색'이 피수식어 '페트병' 앞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 상위 19곳 	→ 포장재 <u>사용</u> 생산업체 상위 19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내용상 '19곳'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업체'를 나타내므로 '사용 생산업체'가 추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까지 생수, 음료 등의 페트병을 무색만 사용하도록 품목별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 2019년까지 생수, 음료 등의 페트병을 <u>무색으로만</u> 사용하도록 품목별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사용] '페트병을 사용하다'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므로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와 같이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갈색, 녹색을 사용하기로 했다. 	→ 맥주와 같이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갈색, 녹색 <u>페트병</u> 을 사용하기로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맥주'와 같은 제품에는 '갈색, 녹색 페트병'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므로 '페트병'을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이외에도 페트병 생산 시 재활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종이라벨 사용, <u>몸체에</u> 직접 인쇄 등도 제한된다. 	→ 색상 이외에도 페트병 생산 시 재활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종이라벨 사용, (페트병) <u>몸체에 대한</u> 직접 인쇄 등도 제한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사용] '직접 인쇄'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몸체에 대한'으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균-고용노동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고용노동부 (다균)	고용문화 개선정책 과	위라벨을 위한 근무혁신, 경영계가 앞장선다	'18.05.24.	156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 중심의 고용노동부



☞ 보도일시: 2018. 5. 24(목) 석간,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인터넷 2018. 5. 24(목) 10:00 이후> 과 장 여성철 (044-202-7496)
☞ 총 18쪽 (붙임 자료 포함) 사무관 천민정 (044-202-749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위라벨을 위한 근무혁신, 경영계가 앞장선다

- 고용노동부·경영계, 『근무혁신 실천협약식』 개최 -

-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정시 퇴근, 유연근무제 확대 등 중점 추진

- 고용노동부-경제단체-기업 12개소가 우리나라의 일하는 문화와 방식 개선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 고용노동부는 5월 24일(목) 10:00, AW컨벤션(서울 종로구)에서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근무혁신 실천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5.24(목) 10:00, AW컨벤션(서울 종로구)
- 참석자: (정부)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현대백화점, CJ오쇼핑, KTH, 유한킴벌리, GS칼텍스 LG전자, 한국에자이, 미래나노텍, 우아한형제들, 메디포스트, 지비스타일, 데브구루
- 핵심메시지: 정시퇴근,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근무제 확대, 휴가활성화 등

- 이번 협약식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정시퇴근, 유연근무제 확대 등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자들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관행과 근로문화가 일과 생활의 불균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인식 하에 근무혁신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협약식에는 이성기 노동부차관, 경영계를 대표하여 대한상의(신박제 부회장), 중기중앙회(정명화 부회장), 경총(이동웅 전무)와 근무혁신을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 12개소가 참여하였다.
- 각 단체와 기업은 근무혁신을 통한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 협약식에서 사례발표를 진행한 유한킴벌리와 한국에자이는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직무 몰입도 증가, 이직율 감소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유한킴벌리, 한국에자이 근무혁신 사례

- (유한킴벌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SMART WORK(변동좌석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모바일 오피스 구축 등), 재충전 데이 운영 → 직무몰입도 약 14% 증가, 사내소통지수 약 30% 증가 등
- (한국에자이) 안식휴가, 연가소진100%캠페인, Core Working Time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 → 이직율 10% 미만('16 8% → '17 7.8%), '16~'17년 연차휴가 사용률 100%

- 이날 「근무혁신 실천협약식」의 핵심 메시지는 정시퇴근, 유연한 근무제 확대, 휴가활성화 등 근무혁신 실천으로,
 - 참여단체(기업)는 ①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②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③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업 스스로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탈피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 “이를 위해서는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기업 최고책임자의 열린 생각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혁신을 통해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천민정 사무관(☎044-202-749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시퇴근, 유연근무제 확대 등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시퇴근, 유연근무제 확대 등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일·생활 균형 분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따라서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기업 분위기'라는 설명을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관행과 근로문화가 일과 생활의 불균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인식 	→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관행과 근로문화가 일과 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어 생략] '불균형'은 명사이므로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술어 '초래함'을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단체와 기업은 근무혁신을 통한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 각 단체와 기업은 근무혁신을 통한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각 단체와 기업'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므로 '수행해야 한다는 데'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한킴벌리와 한국에자이는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직무 몰입도 증가, 이직율 감소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유한킴벌리와 한국에자이는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직무 몰입도를 증가시키고, 이직율을 감소시키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명사형으로 종결되어 주어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를 위해서는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기업 최고책임자의 열린 생각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를 위해서는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기업 최고책임자의 열린 생각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 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날 『근무 혁신 실천협약식』의 핵심 메시지는 정시퇴근, 유연한 근무제 확대, 휴가활성화 등 근무 혁신 실천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단체(기업)는 ①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②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③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날 『근무 혁신 실천협약식』의 핵심 메시지는 정시퇴근, 유연한 근무제 확대, 휴가활성화 등과 같은 근무 혁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단체(기업)는 ①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②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③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주어 '핵심 메시지'의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군)	인터넷제도혁신과	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18.02.14.	1317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의 큰길로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보도일시	2018. 2. 14.(수) 조간(온라인 2. 13. 14: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2. 13.(화) 09:00	담당부서	인터넷제도혁신과
담당과장	양청삼(02-2110-2830)	담당자	박보경 사무관(02-2110-2895)

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 유명민 장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명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미션으로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
- 이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quickpass.or.kr)를 운영하여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유영민 장관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2월 13일(화)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레터널, 클라우드웍스, 답메디 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레터널	가까운 거리에서도 뚜렷한 가상사물 이미지를 보여주는 AR 스마트 글래스 개발('16.10 설립)
클라우드웍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 솔루션 개발('17.4 설립)
답메디	스마트폰 카메라로 손가락을 촬영하여 혈압 측정하는 솔루션 개발('17.4 설립)



- 간담회에는 포털사를 비롯하여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기업·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하여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2. D2 스타트업 팩토리 현황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보경 사무관(☎ 02-211028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래스 	→ 글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상 '글라스'로 표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하여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하여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문맥상 '먹거리'는 어색하므로 '미래 일자리'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u>발굴</u>·개선한다. 	→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u>찾고</u> 개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규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혀낸다.'는 뜻의 '발굴'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찾고'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u>발굴해나갈</u> 예정이다. 	→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u>찾아나갈</u> 예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규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혀낸다.'는 뜻의 '발굴'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규제를 찾아나갈'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u>적극</u>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u>개선을 적극</u>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어와 피수식어 위치 오류] '적극'이 수식하는 내용은 '개선'이 아니라 '추진하다'이므로 서술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에 위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u>혁파해</u> 나가겠다.” <u>면서</u> 	→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u>혁파해</u> 나가겠다.” <u>라면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하여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하여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u>라고</u> 밝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관세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관세청 (다군)	정보개발 팀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18.05.13.	861

			
보도일자	5.13.(일) 12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자	2018. 5. 11.(금)	담당부서	관세청 정보개발팀
담당과장	김기동 042-481-3250	담당자	김종렬 사무관 042-481-7751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참여기업 공모 -

□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및 e-C/O(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워킹그룹 업체들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수출입공급망* 기업(5개 내외 워킹그룹, 50개사) 및 대 베트남·싱가포르 수출자와 현지 수입자 위주(5개 내외 워킹그룹, 10개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 수출국 제조자에서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관련된 공급 주체
(수출입자, 항공사·선사, 은행, 보험, 물류창고,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 관세청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여 제공하면 참여기업은 자사시스템에 연계하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여 통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선정된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수출 물류의 모든 단계와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교환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고,
 - *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이를 통해 신고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무역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성 높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등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본 시범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선사, 물류업체,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 필요성, 참여업체 역할 등에 대한 설명회를 5.15.(화)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본 시범사업 참여기업 공모 및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런 시범사업에서는 수출 물류의 모든 단계와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교환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를 통해 신고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무역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성 높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등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p>→ 이런 시범사업에서는 수출 물류의 모든 단계와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교환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고,</p> <p>○ 이를 통해 신고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무역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성 높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등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u>개편하고자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표현] 문장의 주어 '이번 사업'이 문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중복되어 하나를 삭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를 통해 신고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무역거래의 <u>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성 높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u>로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등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p>→ 이를 통해 신고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무역거래의 <u>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u>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등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연결어미] 서류제출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술형으로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성 높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u>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등</u>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p>→ 신뢰성 높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u>서류제출 절차를 원천적으로 생략하는 등</u>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서류제출의 절차를 생략하는 주체가 '시범사업'이므로 피동 표현은 불필요하여 '서류제출 절차를 원천적으로 생략하는'으로 바뀌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교육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교육부 (다군)	평생학습 정책과	5명만 모여도 문해교육 지원 받을 수 있다	'18.03.15.	184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교육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3. 15.(목) 조간 (인터넷·온라인 : 3. 14.(수) 11:3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3. 14.(수)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담당과장	권성연 (044-203-6345)
		담당자	사무관 조영석 (044-203-6248)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5명만 모여도 문해교육 지원 받을 수 있다

- 20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마련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15일(목)에 소규모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 부응, 개인학습 지원, 생활문해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먼저,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문해교육기관 지원 기준을 완화(기관 당 최소 학습자 수 30명 → 10명, 프로그램 당 10명 → 5명)하고 소규모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2018년 신청 프로그램 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

프로그램 당 학습자 수	기관 당 최소 학습자 수	지원 금액	비고
10명 이상	최소 30명 이상	최대 1,000만 원	'06~'17년 동일 요건
5명 이상	최소 10명 이상	최대 300만 원	신규

※ 희망하는 기관(민간단체 포함)이 관할 시·군·구로 문의해 신청하면 국가문해교육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개인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6~'17년 초등과정 프로그램 방송*에 이어 '18년에는 생활 어휘 중심의 영어 방송('18.3.4부터, 26편, EBS

2TV)을 추진하고, 전화(1600-6759)나 온라인(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받아 문해교과서**를 무상 보급하며,

* EBS 2TV에서 재방송 또는 온라인(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 유튜브 등) 보급('18. 3월~)

- ** 초등과정 15권, 중학과정 15권, 생활문해 3권(금융·교통·정보) 등 총 33권
- 문해능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여 개인별 문해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18. 11월부터 시범운영).

* 성인문해능력조사에 활용한 측정도구를 PC 및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진단결과에 맞춘 문해수준별 정보 제공

- 또한, 기대수명 연장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생활문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문해교육과정 개편, 건강문해 교과서와 정보문해능력 측정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 이번 계획에는 국가-지역 간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16~'17년에 설치된 3개 지역*의 시·도문해교육센터**에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하 '문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미설치 지역에는 조속한 설치를 위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 경기('16.12.), 충남('17.5.), 대전('17.6.)

** 「평생교육법」 개정('16년)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상담·지원,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역할

- 그리고,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위하여 '12년부터 추진된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 선포식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이 계속 개최된다.

- 한편,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비문해 인구가 311만 명*으로 추정되어,

* 2017년 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7.2%에 해당하는 311만 명이 일생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비문해 인구로 추정되고 그 중 11%인 34만 명이 문해교육 참가 희망

※ 〈지역별 비문해 인구 분포〉 농산어촌 16.2% > 중소도시 7.2% > 서울 및 광역시 5.7%

※ 〈연령별 비문해 인구 분포〉 80대 이상 67.7% > 70대 28.7% > 60대 14.2%

※ 〈무학력자의 한글 학습경로〉 독학 또는 가족으로부터 학습 39.3% > 기관 6.9%

- 교육부는 앞서 발표(2.23.)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2018~2022) 기본계획’에서 ‘22년까지 성인문해교육 누적 수혜자 64만 명**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 '06~'17년까지 누적 수혜자 30만 명, '18~'22년까지 34만 명 추가 지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 현장(경남 마산 완월초)을 방문하여 어르신 학습자를 격려했고,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조영석 사무관(☎ 044-208-62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비문해 인구 	→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비문해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자, 오키] '일생생활'은 없는 단어이므로 '일상생활'의 오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는 한글로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7년에 설치된 3개 지역*의 시·도문해교육센터**에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하 '문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미설치 지역에는 조속한 설치를 위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 '16~'17년에 설치된 3개 지역*의 시·도문해교육센터**에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하 '문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미설치 지역에는 조속한 설치를 위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나 권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권한'으로 바뀌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개정('16년)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상담·지원,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역할 	→ 「평생교육법」개정('16년)으로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상담·지원,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목적어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는 앞서 발표(2.23.)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2018~2022) 기본계획'에서 '22년까지 성인문해교육 누적 수혜자 64만 명**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 교육부는 앞서 발표(2.23.)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2018~2022) 기본계획'에서 '22년까지 성인문해교육 누적 수혜자 64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누적 수혜자 64만 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달성을 목표로'로 바뀌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7년에 설치된 3개 지역*의 시·도문해교육센터**에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하 '문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미설치 지역에는 조속한 설치를 위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 교육부는 '16~'17년에 설치된 3개 지역*의 시·도문해교육센터**에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하 '문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미설치 지역에는 조속한 설치를 위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 생략]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주어 '교육부'를 추가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국토교통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토교통부 (다군)	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5월부터 인증	'18.05.01.	1664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5. 1.(화) / 총 6매(본문3)
담당 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 과장 이정희, 사무관 지봉현, 주무관 김학희 • ☎ (044) 201-3737, 4846
보 도 일 시		2018년 5월 2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5월부터 인증 비효율·중복투자 막고 지자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5월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법·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의 방법·방재·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기반 소프트웨어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지자체 당 6억 원 지원)

□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법,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13. 6.)하여 '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민간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마련 건의('17. 2)

-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쟁을 통하여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하여 공통기술,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연동성 확보가 이슈로 대두되어 금년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을 구성한 바 있다.

*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 국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0개 기관 참여

- 이러한 시점에 국내 통합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플랫폼을 표준화 한 첫 사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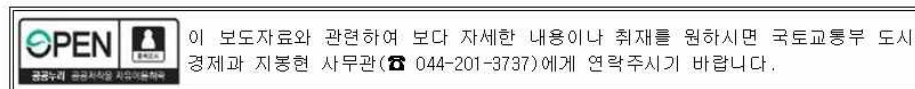
- ☐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시험 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 및 정보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숙현 책임(031-780-9118, iot@tta.or.kr)

- ☐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동을 촉진하고 탑재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물론, 나아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 붙임: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험인증 절차 1부,
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요 1부.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설루션'으로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법,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u>운영 중이나</u>,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법,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u>운영 중이었으나</u>,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 오류] 그동안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운영 중이었으나'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금융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금융위원회 (다군)	중소금융 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18.05.31.	1111

 금융위원회	보 도 참 고 자 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8.5.31.(목)	
책 임 자	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기 한(02-2100-2990)		담 당 자	양 병 권 사무관 (02-2100-2992)	

제 목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 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
 - TF에서는 現 제도 보완방안 및 근본적 체계 개편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금년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9.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 이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예 :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뱅크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

□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한 →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 도입

□ 이에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 (팀장 : 금융위 사무처장)을 통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

*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

①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 예 : 조달·대손·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등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 및 정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등

② 또한,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여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

③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	--	-----------------------------	---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TF 	→ 태스크포스(T/F) 전담팀, 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마자 표기] 로마자자는 한글로 쓰거나 순화어로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 TF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TF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므로 '논의'와 관련된 내용은 서술어에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여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 	→ 또한 이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여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표현] '논의'가 중복되고 있으므로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에 앞서'로 대체하여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기획재정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기획재정부 (다군)	재정현안 협업팀	지역주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재부	'18.04.26.	9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26.(목) 15시	배포일시	2018. 4. 26(목) 10: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현안협업팀 고정삼(044-215-5470)	담당자	차승원 사무관 (044-215-5473) klassen@korea.kr

지역주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재부 - 4월 26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컨설팅” 개최 -

□ (3차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기획재정부는 4.26.(목) 광주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오규택 재정관리국장 주제)’를 실시한다.

○ 광주광역시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광주·전남·전북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재정업무 담당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3차 컨설팅 일정 및 참석자 >

- ▶ 일시·장소 : '18. 4.26.(목) 15:30~18:00,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 ▶ 기재부 :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심의관, 재정관리총괄과장, 타당성심사과장, 협업팀장, 예타·민투·보조금·집행관리 담당 등
- ▶ 호남권 : 광주시 경제부지사, 시·군부단체장 및 재정업무 담당자 약 200여 명

□ (열린 컨설팅) 특히 이번 컨설팅은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열린 컨설팅을 구현한다.

○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소셜(social)기자단이 해당지역의 재정 현안을 주민의 눈으로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컨설팅 현장에 참여할 계획이다.

※ 광주시 소셜기자단(100명) :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주요 이슈 등을 취재, 블로그 및 SNS를 통해 공유하는 역할

- 이들은 지역주민 대표로서 컨설팅단과 만나 청년일자리 및 지역현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 (하반기 현장컨설팅 계획)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 '권역별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17개 시·도별로 재정사업 현장컨설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 하반기 컨설팅은 상반기 각 시·도에서 제기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현장컨설팅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도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 의견을 제도개선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이번 컨설팅은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열린 컨설팅을 구현한다. 	→ 특히 이번 컨설팅은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열린 <u>컨설팅으로</u>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선택] 컨설팅의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으로 진행한다'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시 소셜기자단(100명) :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주요 이슈 등을 취재, 블로그 및 SNS를 통해 공유하는 역할 	→ 광주시 소셜기자단(100명) :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주요 이슈 등을 취재, 블로그 및 SNS를 통해 공유하는 역할을 <u>수행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어 생략] 광주시 소셜기자단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술어를 추가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컨설팅은 상반기 각 시.도에서 제기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방식으로 <u>진행한다</u>. 	→ 하반기 컨설팅은 상반기 각 시.도에서 제기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방식으로 <u>진행된다</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하반기 컨설팅이 진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진행된다'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농림축산식품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농림축산식품부 (다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농촌지역 취약계층 320가구에 '집고쳐주기' 사업추진	'18.05.31.	193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3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박경희 과장(044-201-1541), 김기성 사무관(1542) / 제공일: 5월 30일(총 5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촌지역 취약계층 320가구에 '집고쳐주기' 사업추진 - 농식품부, 민관합동으로 노후·불량주택 정비, 수리·수선 -

《 주 요 내 용 》

- ◆ 농식품부, 2018년 6월부터 전국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320호에 대해 대학교봉사단, 일반단체(직능·사회봉사단체)와 함께 '농촌집고쳐주기' 사업 추진
 -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형태로 대학·일반단체 등은 재능과 인력을, 정부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등을 지원
 - * 도배·장판·창호교체,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화장실 개보수, 부엌정비, 담장 수리 등 경·중보수에 해당하는 집수리
- ◆ 2018년도에는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봉사단체 참여 확산 및 수혜가구 만족도 제고에 역점 추진
 - 재료비 지원단가 상향(340만원 → 450), 수혜가구 선정기준 완화(본인 소유주택 → 본인소유 주택+임차주택), 자부담 비율 폐지(기관·기업체 자부담 50%, 수혜가구 5%), 사업대상 확대(자가주택 → 자가주택+마을회관·경노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등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6월부터 전국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대학교봉사단, 일반단체(직능·사회봉사단체 등)와 함께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은 대학·일반 단체는 재능과 인력을, 정부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해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수선해 주는 집수리* 사업이다.

* 도배·장판·창호교체,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수리, 화장실 개보수, 부엌정비, 담장보수, 전기안전 등 경·중보수에 해당하는 집수리

□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은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의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지원계획’(‘07.7)을 수립 후, 주거환경개선 목적의 비영리법인단체인 ‘다솜동지복지재단’을 설립·허가(‘07.11)와 함께 본격화 됐으며,

○ ‘08년 38가구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총 3,100여 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해 농촌지역 고령자 및 독거가구, 장애인, 조손, 다문화가정 등에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안전)에 기여 했다.

* 추진 실적 : (‘08년) 38가구 → (‘14) 470 → (‘15) 359 → (‘16) 372 → (‘17) 371 (누적 3,036)

○ 특히 지난해에는 지진 피해(11월 4일)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원 33가구를 대상으로 무너진 담장세우기, 균열벽체 보강·단열, 도배·장판 교체공사 등을 추진해 도움이 절실한 곳에 따뜻한 희망을 안겨줬다.

- 올해 다솜등지복지재단과 함께 320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에 참여할 31개 봉사단체가 모집·선정(대학봉사단 17개, 직능·사회봉사단체 14, 4월말)되어 오는 6월부터 '농촌집고쳐주기' 자원봉사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자원봉사 활동에 수혜를 입는 가구는 지자체 및 봉사단체의 추천 가구 중 장애, 고령, 독거가구 순으로 선정하였다.
- 특히, 금년에는 봉사단체 참여확산 및 수혜가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현장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지침을 개정하였다.
- 우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지원액을 가구당 34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봉사단체 및 수혜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폐지했다.
- * 자부담 비율 : 기관·기업체 자부담 50%, 수혜가구 5%(현물, 현금, 노동력)
- 또한, 집수리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인소유의 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무상 임차주택(단, 직계존비속 소유의 무상임차 주택에 한함)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 시설까지 확대했다.
-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주거여건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농촌공동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낡고 허름한 집에서 지내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 '농촌집고쳐주기'는 특히 소외되고 거동이 불편한 농촌 어르신들에게 튼튼한 지붕과

담장,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방을 안겨주는 큰 선물이며, 이웃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 향후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정책(사업)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농촌집고쳐주기 등 농촌재능나눔에 개인 및 기업체·단체가 보다 많이 참여해 도시민은 농촌에 대한 이해와 보람을 찾고, 농촌 주민은 공동체 활력과 삶의 질 제고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사업참여 문의처 : (재)다솜동지복지재단(031-299-7898)/ www.dasomhouse.kr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 민·관 합동	→ 민관 합동	■ [표준어 규정] 민관은 한 단어이므로 가운뎃점을 쓰지 않음.
■ 개보수	→ 개·보수	■ [표준어 규정] '개보수'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해야 함.
■ 경노당	→ 경로당	■ [표준어 규정] 한자 '로'가 단어 첫마디에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음.
■ 2018년도에는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봉사단체 참여 확산 및 수혜가구 만족도 제고에 <u>역점 추진</u>	→ 2018년도에는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봉사단체 참여 확산 및 수혜가구 만족도 제고에 <u>역점을 두고 추진</u>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를 추가해야 함.
■ 도배·장판·창호교체,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수리, 화장실 개보수, 부엌정비, 담장보수, 전기안전 등 경·중보수에 해당하는 집수리	→ 도배·장판·창호교체,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수리, 화장실 개보수, 부엌정비, 담장보수, <u>전기안전 점검</u> 등 경·중보수에 해당하는 집수리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전기안전은 명사이므로 보수 행위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점검'을 추가해야 함.
■ 비영리법인단체인 '다솜동지복지재단'을 설립·허가('07.11)와 함께 본격화 됐으며, '08년 38가구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총 3,100여 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해 농촌지역 고령자 및 독거가구, 장애인, 조손, 다문화가정 등에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안전)에 기여 했다.	→ 비영리법인단체인 '다솜동지복지재단'의 설립·허가('07.11)와 함께 본격화 됐으며, '08년 38가구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총 3,100여 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해 농촌지역 고령자 및 독거가구, 장애인, 조손, 다문화가정 등에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안전)에 기여 했다.	■ [부적절한 조사] 서술어가 없으므로 명사구를 만들기 위해 조사 '의'를 써야 함.
■ 농촌지역 고령자 및 독거가구, 장애인, 조손, 다문화가정 등에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안전)에 기여 했다.	→ 농촌지역 고령자 및 독거가구, 장애인, 조손, 다문화가정 등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안전)에 기여했다.	■ [부적절한 조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에 대한 설명이므로 조사 '의'로 바꿔 써야 함.
■ 개인소유의 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무상 임차주택(단, 직계존비속 소유의 무상임차 주택에 한함)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 개인소유의 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무상 임차주택(단, 직계존비속 소유의 무상임차 주택에 한함)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u>지원 가능 대상</u> 을 확대했다.	■ [목적어 생략] 무엇을 확대하였는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목적어 '지원 가능 대상'을 추가해야 함.
■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정책(사업)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	→ 농촌지역의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정책(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	■ [부적절한 조사] 뒤에 오는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 조사 '의'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방송통신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방송통신위원회 (다군)	통신시장 조사과	통신사 상담사 규칙적인 점심시간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	'18.02.12.	1184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8 행정·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2018년 2월 12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공 일: 2018.2.12.(월) 문 의 :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고낙준 과 장(☎2110-1530) 정복덕 서기관(☎2110-1531)

통신사 상담사 규칙적인 점심시간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

- 4.1부터 고객센터 점심시간에 긴급·전문 상담 중심으로 운영 -

그동안 불규칙적인 점심식사 주기로 소화장애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약 16,000여명)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점심시간이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에 따르면, 통신4사(KT, SKT, SKB, LGU+)는 점심시간에도 이용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센터 상담사의 점심시간을 최대 6교대제(11시 30분~15시 30분)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나, 오는 4월 1일부터 상담사의 규칙적인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심시간(12~1시)에는 요금문의, 각종 신청·변경 등 일반 상담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분실·서비스 장애 등 긴급·전문 상담은 기존과 같이 점심시간에도 운영하되, 상담사들의 점심시간은 2교대(11시30분~1시30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개 선 前 >		< 개 선 後 >	
상담업무		일반상담	긴급·전문상담
3~6교대(11:30~15:30)		상담사의 71.2%	상담사의 28.8%
		상담중단 (12시~13시)	2교대 (11:30~13:30)

또한, 통신4사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서·ARS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점심시간에 일반 상담이 중단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한편, 점심시간 통화발신 이력관리 및 콜백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상담사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 점심시간 통화발신 이력을 관리하여 상담전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상담사가 전화

아울러, 점심시간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식당 및 휴게 공간도 확충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장이 고객센터(SKT)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기되어 추진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자인 상담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마련 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의 구체적인 이용자 불편 방지 대책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상담사들의 점심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용자들께서는 점심시간에 상담을 하지 못해 다소 불편해질 수 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바로 상담이 가능한 만큼 상담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타 업종으로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끝.

< 각 사별 담당 문의처 >


소 속	직 급	성 명	전 화 번 호
KT	대리	김상원	031-727-0114
SKT	매니저	조현진	02-6100-6412
SKB	매니저	김경호	02-6266-2932
LGU+	책임	권명진	070-4080-6125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 <u>통화발신</u> 이력을 관리하여 상담전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상담사가 전화 	→ 점심시간 <u>통화수신</u> 이력을 관리하여 상담전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상담사가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회사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신'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용자들께서는 점심시간에 상담을 하지 못해 다소 불편해질 수 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바로 상담이 가능한 만큼 상담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타 업종으로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용자들께서는 점심시간에 상담을 하지 못해 다소 불편해질 수 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바로 상담이 가능한 만큼 상담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타 업종으로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불규칙적인 점심식사 주기로 소화장애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약 16,000여명)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u>규칙적인 점심시간이 보장된다.</u> 	→ 그동안 불규칙적인 점심식사 주기로 소화장애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약 16,000여명)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u>규칙적인 점심시간을 보장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술 호응 오류] 상담사를 위한 정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을 보장한다'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수요, ▲미래기술, ▲드론활용 등 3개 세션에서 드론을 <u>활용 방안과 미래상이 논의한다.</u> 	→ 약 1,0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수요, ▲미래기술, ▲드론활용 등 3개 세션에서 드론을 <u>활용하는 방안과 미래상이 논의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어 생략] '드론을 활용 방안'에서 '드론을'에 해당하는 동사가 필요하므로 '활용하는'으로 고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수요, ▲미래기술, ▲드론활용 등 3개 세션에서 드론을 <u>활용 방안과 미래상이 논의한다.</u> 	→ 약 1,0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수요, ▲미래기술, ▲드론활용 등 3개 세션에서 드론을 <u>활용하는 방안과 미래상이 논의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논의하다'는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미래상이'를 '미래상을 논의한다'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산업통상자원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산업통상자원부 (다군)	산업기술 정책과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18.06.22.	1231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6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21(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6. 20(수)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담당과장	김대자 과장(044-203-4510)	담당자 송이랑 주무관(044-203-4517)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시,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 감면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정부 출연금의 중소 10%, 중견 20%)
- ☐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 완료('18.4월)
-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년도 하반기 내 시스템 구축완료 예정

-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18년도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산업부의 연구개발(R&D)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시스템(www.genie.ketep.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 절차 >



【참고】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송이량 주무관(☎ 044-203-45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선택] 기술료에 대한 설명이므로 '금액'으로 바뀌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 호응 오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로 바뀌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기업은 신청의 주체이므로 '기업이'로 바뀌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시행으로 '18년도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이다. 	→ 제도 시행으로 '18년도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술호응 오류] 일자리가 '창출'의 주체가 아니므로 '창출될 것이다'로 바뀌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산업부의 연구개발(R&D)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 이 제도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산업부의 연구개발(R&D)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 생략]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제도가'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하는 계기 	→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시키는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주 없음](목적어 서술어 호응 오류) 직접 정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동 표현 '정착시키는'으로 바뀌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조사] 목적격 조사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나를 삭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 '에'를 추가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외교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외교부 (다군)	재외국민 보호과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365일 가동 해외체류 국민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18.05.30.	1482

 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98
배포일시	2018. 5. 30. (수)	담당부서	재외국민보호과/해외안전지킴센터
담당자	해외안전관리기획관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365일 가동
해외체류 국민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사건·사고 초기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적시 영사조력 제공-

- 외교부는 5.30(수) 15:00-15:30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을 담당할 목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
센터’의 현판식 및 개소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 금번 개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경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
 -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
-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과제를
적극 이행해 왔다. 금번 개소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에게 적시의 효과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급증
하는 영사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및 상황
전파,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

- 특히,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하여 영사콜센터를 통한 기존 사건·사고 접수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관계 구축
 - ※ ‘해외안전지킴센터’, 2018.3.30. 외교부 직제 개정 시 재외동포영사실-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산하 조직으로 반영
 - ※ (2017년 통계 기준) 해외여행객 2,640만명, 재외국민 250만명 시대, 우리국민 관여 해외 사건사고 건수(우리국민 피해, 가해, 강제추방 등 기타 포함) 18,410건(일평균 약 50여건) 발생
 - 또한, 해외 사건·사고 대응 관련 정부 유관 부처 소속 직원의 파견 근무를 통해 전문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도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와 범죄, 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또한, 강 장관은 본부와 공관 사이의 즉각적이고 시차 없는 소통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
- 김경협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앞으로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향후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을 비롯한 재외국민 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영사분야 인력 확충 및 예산 증액에도 힘써나가고 있다.

○ △ “재외동포영사국” 을 “재외동포영사실” 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 확충,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등을
추진 중

□ 연간 해외출국자수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위험이 고조
되는 현 상황에서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가동을 통해 우리국민
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해외안전지킴센터 개요 1부. 끝.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사고 	→ 사건,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규정] 한 단어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15:30<u>간</u> 	→ 15:00-15:30 15:00 <u>부터</u> 15:30 <u>까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선택]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부터'와 '까지'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 	→ 직원들에게 노력을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노력을 당부하는 대상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조사 '에게'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강 장관은 본부와 공관 사이의 즉각적이고 시차 없는 소통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 	→ 또한, 강 장관은 본부와 공관 사이의 즉각적이고 시차 없는 소통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u>이에</u>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사건사고를 대응'이라는 표현은 어색하므로 '이에'를 추가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원자력안전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원자력안전위원회 (다군)	방사선안전과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8.03.22.	1657

 원자력안전위원회 http://www.nssc.go.kr		보도자료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규제
보도일시	2018.3.22.(목) <15:00부터>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3.22.(목)	담당부서	방사선안전과	
담당과장	신종한 (02-397-7330)	담당자	조성은사무관(02-397-7337)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원전 주변 주민 대상, '18~'19년 이행체계 마련 후 '20년부터 5년 단위 조사
- 방사선작업종사자, 올해부터 연구 실시 및 5년 주기로 추적관리
- 4월부터 전국 방사선 노출현황 조사 착수, '22년까지 환경방사선 통합 DB 구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2일 제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우선, 원안위는 원전 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한다.
- (배경)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91~'11)와 그 후속연구**('13~'15)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원전 방사선과 주변 주민 암 발병 위험도 간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음
 - **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추가 연구 필요
 -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중
 - (대상) 과거 역학조사 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민감 연령층(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하여 조사한다.

- (방법) 원전 지역별 코호트* 구축 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 조건,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특성 반영,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 코호트 연구 :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로, 개별 대상자의 피폭과 질병을 추적 조사, 피폭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

- (일정)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조사기관 지정 등 이행체계를 마련한다.

- ' 19년 조사방법 설계를 거쳐 '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암 등 질환 발생에 장기간의 잠복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

-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기반을 구축(조사대상 모집 등) 중이며, 다가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5년 주기로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 향후에는 과거 퇴직자와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그 밖에 원안위는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방사선 통합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평균 환경방사선량과 평균 건강 정보를 비교하는 등 원전 주변 주민 건강 영향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는 환경방사선 통합 DB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다음달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 강정민 위원장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원전 주변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한편, 원안위는 이 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KINS 원장의 임명권자를 원안위 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KINS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KINS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목적 업무 겸직금지 조항과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KINS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첨 : 제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 (의결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
- (보고 제1호)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91~'11)와 그 후속연구**('13~'15)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p>→ (배경)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라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91~'11)와 그 후속연구**('13~'15)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연결어미] 방사선을 수식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전 운영에 따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정민 위원장은“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원전 주변 주민과 방사선작업 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 강정민 위원장은“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원전 주변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중소벤처기업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중소벤처기업부 (다군)	정책총괄 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 본격 추진	'18.03.14.	3892

2018년 3월 1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월 13일(화) 14:30 이후 보도 가능

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 문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박종찬 과장(042-481-4537),
김정주 서기관 (4540), 김민수 사무관 (4543)

「중소기업 중심 경제,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 본격 추진

- 홍종학 장관 취임 후 100일간 정책정비 마무리 -

◇ '17.11.21일 취임 이후, 홍종학 장관은 세가지 축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정부 후원, 일자리 중심, 상생으로의 혁신'의 방향성 하에서 정책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왔음

* 세가지 축 성장전략 : ① 혁신성장, ②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③ 공정경제

◇ 업무혁신 차원에서도 아무말대잔치 등을 도입하여 조직 내 소통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개방형 인사 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

◇ 이러한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 정비와 업무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현,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 (open innovation), 상생으로 혁신을 본격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겠다.”고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3.13일(화) 출입기자단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 '17.11.21일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여 '18.2.28일 취임 100일을 맞음

- 취임 후 100일 간의 정책정비 내용, 현장중심 행정, 업무혁신 등의 추진실적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
- 홍종학 장관은 신설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인 혁신성장,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 정책개편과 업무혁신을 노력을 지속한 만큼,
 - 이제는 정비된 정책과 업무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현과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 (open innovation)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마음가짐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힘

취임 후 주요 추진실적

- 홍종학 장관은 '17. 11. 21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 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11.30일)에서
 - ①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②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③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대국민께 약속
 - 지난 100일동안 약속 실천하기 위해 정책을 정비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중기부의 업무혁신 노력을 꾸준히 추진

1. 주요 정책정비 추진실적

- 3가지 방향성 하에서 정책정비를 추진
 - 첫째, 민간-시장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시장기능을 최대한 존중)

* (정책개편 예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 민간.시장상인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정책 등

○ 둘째,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

* (정책개편 예시) 5.8조원 규모, 37개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사상 최초방식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등

○ 셋째, 대기업 - 중소기업 합심하여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상생으로의 혁신**을 유도 (넛지 방식)

* (정책개편 예시) 대기업 최초로 현대차그룹이 2.3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중기부-현대차간 MOU 체결)

< 중소기업 정책 정비의 방향성 >

구 분	기 준	개 편
새 정부 경제전략	대기업 중심 성장	⇒ 세 가지 축 성장 전략 (①일자리,소득 성장, ②혁신성장, ③공정경제)
정책정비 방향성	정부 주도 (Top-down 지원)	민간 주도 (Bottom-up 지원)
	신설 사업의 관행적 지속	⇒ 성과분석 통한 일자리 중심 개편
	폐쇄형 혁신에 안주	상생으로의 혁신에 방점

□ 정책정비 실적 :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방안 등 16건

- 5.8조원 규모, 37개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 영세기업의 부담완화 추진
- 민간투자 후원 방식의 모태펀드 운용, 투자규제 네거티브화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 · 벤처생태계 개편
- 공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탈취 근절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율적 상생 혁신 모델을 확산

< 그간 주요 정책개편 실적 >

구 분	주요 정책개편 실적
(약속 1) 중소기업의 튼튼한 동반자	①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개편 ②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범사례 확산 ③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④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⑤ 정부·은행권 공동의 금융지원 강화 ⑥ 데이터 기반·일관지원체계 적용으로 정책효율화 추진
(약속 2)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⑦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⑧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방안 ⑨ 투자 중심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추진 ⑩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 ⑪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방안 마련
(약속 3)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⑫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보완대책 ⑬ 민간이 주도하는 전통시장 육성 정책 ⑭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업사업 개편 ⑮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라벨갈이) 근절 추진 ⑯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설 명절 지원대책

□ 지난 100일 동안 짧은 국회 등의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총 8건
및 시행령 총 1건을 개정

○ (상생협력법)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3차 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

○ (창업지원법) 창업기업에 대한 12개 부담금 면제 시한을 5년 연장
→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효과 기대

* (기타 개정법률) 판로지원법, 장애인기업촉진법, 벤처법, 산업기술단지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통시장육성법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규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을 3 → 7년으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M&A활성화 유도

2. 현장소통 추진실적 : 총 38회 (3일에 1번)

☐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장관이 전국 어디든 간다'

(홍 is Everywhere)는 원칙 하에 현장과 소통을 강화

- 취임 후 100일 동안 38회의 현장행보 수행하여 3일에 1번씩 수요자와 고객의 뜻을 파악하고 정책개편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행정 구현

- 건의과제는 시스템 등재관리, 매월말 진행상황 점검, 조치통보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환류를 실시

* 건의사항 85건 중 79건(93%) 수용 : 개선완료 46건, 제도개선 검토 중 33건

- 특히, 현장행보 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주력 (총 38회 중 25회)' 하고, 현장소통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1.18, 2.6)

- 그 결과 등으로 일안자금 신청은 3.6일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안착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발족 (1.11일)

- 정책기획단은 발굴과제(10건)에 대한 중간발표(3.21 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정책개선을 추진

☐ 강연 및 포럼은 기업인(3회)·언론인(1회)을 대상으로 "상생혁신", 민간주도·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설명

- 특히, 대기업 최초로 현대차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2·3차 협력사 지원 방침을 밝히는 등 민간 자발적 상생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전파

3. 업무협신 추진 : 익명 게시판인 '아무말 대잔치', 모범 혁신사례로 평가

☐ 조직 내 소통과 혁신을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누구나 참여하는 수평적 소통 채널인 '아무말 대잔치' 게시판 운영
 - 시행 이후(12.5일~2.28일) 86일간 411건*(일평균 약 5건)의 혁신의견이 제안되는 등 이후 침묵하던 다수 구성원의 공론의 장으로 정착
 - * 제안 댓글 2,300건, 일평균 약 27건
- 스크럼방식의 의사결정으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면서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주니어보드*, '원클릭 줄이기 보고서**'를 도입하여 조직의 뿌리부터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유도
- * 조직문화, 인사제도, 정책어젠다 등 조직혁신을 논의하는 실무자 혁신제안 조직
- ** 외형 치장 등 형식보다 정책내용에 집중토록 표준 양식 도입

☐ 업무성과 중심의 개방형 인사를 위해 주요 직위의 보직 희망자를 공모하는 정책공유회 운영, 다면평가 확대, 신설 직위의 50%이상의 외부공모 등을 실시

☐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인별 연가일수 100% 소진 의무화, 근무시간 자율선택 권장 등을 추진

향후 계획

- ☐ 지난 100일의 정책정비와 혁신역량을 토대로 중소기업 중심 개방형 혁신국가(open innovation) 건설을 위한 가시적 성과창출을 추진
 - (정책혁신) 개방형 혁신, 상생으로 혁신, 클러스터·협업형 창업을 통한 성과 창출에 주력
 - 이를 통해, 개방형 혁신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추동력 확보

* (그간 사례) ① 민간투자자가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TIPS방식 확산 ②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 ③ 대기업의 사내벤처 활성화 및 M&A 촉진 ④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 원칙에 따라 개편하여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으로 활용 등

○ (업무혁신) 중기부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처럼 매일매일 혁신하는 학습조직으로 탈바꿈하고,

- 혁신센터, TP 등 주요 기관장의 공개채용 원칙, 마케팅 전문가를 핵심 보직인 판로정책과장에 개방하는 등 외부전문가 영입에 지속 노력

< 주요 정책추진 계획 (안) >

구 분	주요 정책추진 계획
혁신성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방안 • 7전8기 제도전 활성화 대책 • 중소기업의 협업 활성화 방안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부처 합동) •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정책 혁신방안 • 근로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부처 합동)
공정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혁신성장 상생생태계 구축방안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구축 방안 마련 • 납품단가 제값 받기 대책 마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수 사무관(4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조원 	→ 5조 8천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법 규정]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대기업 최초로 <u>현대차</u>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2.3차 협력사 지원 방침을 밝히는 등 민간 자발적 상생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전파 	→ 특히, 대기업 최초로 <u>현대차</u> 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2.3차 협력사 지원 방침을 밝히는 등 민간 자발적 상생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자, 오키] 최저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조사 '의'의 오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u>업무협신</u> 추진 	→ 3. <u>업무혁신</u>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자, 오키] '업무협신'은 없는 단어이므로 '업무혁신'의 오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혁신 차원에서 <u>아무말대잔치</u> 등을 도입하여 조직 내 소통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개방형 인사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 	→ 업무혁신 차원에서 <u>'아무말대잔치' 게시판 운영</u> 등을 도입하여 조직 내 소통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개방형 인사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선택] 신조어이므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게시판 운영'을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개편 예시) 5.8조원 규모, 37개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사상 <u>최초방식인</u>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등 	→ (정책개편 예시) 5.8조원 규모, 37개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사상 <u>최대 규모인</u>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선택] 뒤에 오는 3조원 규모와의 호응을 위하여 '최대 규모'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한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 정비와 업무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현,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open innovation), 상생으로 혁신을 본격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겠다."고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혔음 	→ 이러한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 정비와 업무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현,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open innovation), 상생으로 혁신을 본격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종학 장관은 '17.11.21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11.30일)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②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③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u>대국민께 약속</u> 	→ 홍종학 장관은 '17.11.21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11.30일)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②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③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u>대국민에 약속</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대우법] 과도한 대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국민에 약속'으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결과 등으로 일안자금 신청은 3.6일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u>안착하고 있음</u> 	→ 그 결과 등으로 일안자금 신청은 3.6일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u>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 안착하고 있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 생략] 서술어의 주체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주어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u>이후</u>(12.5일~2.28일) 86일간 411건*(일평균 약 5건)의 혁신의견이 제안되는 등 <u>이후</u> 침묵하던 다수 구성원의 공론의 장으로 정착 	→ 시행 <u>이후</u> (12.5일~2.28일) 86일간 411건*(일평균 약 5건)의 혁신의견이 제안되는 등 침묵하던 다수 구성원의 공론의 장으로 정착('이후'의 중복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표현] '이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하나를 삭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성과 중심의 개방형 인사를 위해 주요 직위의 보직 희망자를 공모하는 정책 공유회 운영, 다면평가 확대, 신설 직위의 <u>50%이상</u>의 <u>외부공모</u> 등을 실시 	→ 업무성과 중심의 개방형 인사를 위해 주요 직위의 보직 희망자를 공모하는 정책공유회 운영, 다면평가 확대, 신설 직위의 <u>50%이상을 외부공모</u> 등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조사] 조사 '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50%이상을 외부공모 등으로'로 바꿔 써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통계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통계청 (다군)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 실시	'18.06.27.	90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6. 27.(수) 12:00	 통계청 <small>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지방법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서울특별시건강관리단 서울특별시환경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여성가족위원회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처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특별시경제자유구역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청 서울특별시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특별시경제자유구역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청 서울특별시교통위원회</small>
	배포일시	2018. 6. 27.(수) 09:30	
	담당부서	통계서비스정책관 통계서비스기획과	
	담당자	과 장: 류제정(042-481-2377) 사 무 관: 박운영(042-481-2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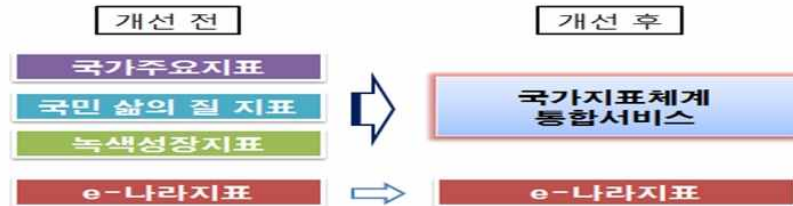
- 국가발전, 국민 삶, 녹색성장 지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 실시

-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6월 27일(수)부터 국가 발전, 국민의 웰빙, 환경 등 다양한 지표체계들을 One-Stop으로 볼 수 있도록 국가지표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국가지표 통합서비스(K · indicator) URL : www.index.go.kr
- ☐ 통계청에서는 국가정책을 모니터링하는 e-나라지표 서비스(2006년)를 시작으로 국가와 개인 발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주요지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지표를 개발하여 각각 서비스하여 왔다.
 - 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여 연간 8백만 명 이상으로 지표 활용이 점차 늘어났지만,
 - 지표체계 별로 각각 서비스하고 있어 지표 이용 시 접근 불편과 지표 간 비교 곤란 등으로 개선이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이용자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표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크게 국가발전, 국민 삶 등의 가치지향적 지표와 국정모니터링의 정책 지표로 구성하여,
 - 가치지향적 지표인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3개를 한 화면에서 검색하고 지표에 대한 설명, 통계표, 그래프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정책지표인 e-나라지표는 정부의 정책의 성과, 현황 등을 각 부처와 영역별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개선내역〉



- 이번 통합서비스에서는 3종의 가치지향적 지표를 한 번에 찾고, 각 영역별로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으며, 지표설명 · 그래프 · 관련 통계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지표를 쉽게 이해하고 지표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

〈개편화면〉



- 한편, 황수경 통계청장은 국민들이 지표 이용과 활용이 편리하도록 새로운 지표 발굴, 지표 품질강화, 맞춤형 서비스 개선 등 통계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자료 1부, 끝.



본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체계 별로 각각 서비스하고 있어 지표 이용 시 접근 불편과 지표 간 비교 곤란 등으로 <u>개선이 제기되어 왔다.</u> 	→ 지표체계 별로 각각 서비스하고 있어 지표 이용 시 접근 불편과 지표 간 비교 곤란 등으로 <u>문제가 제기되어 왔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선택] '제기하다'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라는 뜻이므로 '개선'보다는 '문제'로 바꿔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여 연간 8백만 명 이상으로 <u>지표 활용이</u> 점차 늘어났지만, 	→ 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여 연간 8백만 명 이상으로 <u>지표를 활용하는 국민이</u> 점차 늘어났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지표를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국민이'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체계 별로 각각 서비스하고 있어 지표 이용 시 접근 불편과 <u>지표 간 비교 곤란 등으로</u> 개선이 제기되어 왔다. 	→ 지표체계 별로 각각 서비스하고 있어 지표 이용 시 접근 불편과 <u>지표 간 비교 곤란 등의 문제점으로</u> 개선이 제기되어 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앞서 제시된 내용이 문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문제점으로'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이용자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표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이에, 이용자들이 한 곳에서 <u>여러 지표를</u>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표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어 생략]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목적어 '여러 지표를'을 추가해야 함.

정확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특허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특허청 (다군)	전력기술 심사과	캠핑 열풍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가 뜬다	'18.01.31.	1437


특허청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특허심사 1국 전력기술심사과	과 장 성백문 042-481-5683 사무관 남배인 042-481-8185
	2018년 1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월 30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캠핑 열풍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가 뜬다

- 태양광을 이용한 휴대용 자가발전장치의 특허출원 급증 -


최근 레저·캠핑 열기의 확산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야외에서 휴대용 전원을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휴대용 조명과 핸드폰 등의 장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는 주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정된 용량 때문에 야외에서 곤란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휴대용 장비에 부착하여 이동 중에도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자가 발전기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휴대용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의 특허출원은 총 97건이고, 연도별 출원건수가 '13년 10건에서 '17년 33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참조]
-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태양전지 셀을 조립이 간편한 독립형의 모듈로 구성하거나 이동성 물체의 외장에 부착하여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휴대용 장치에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인터넷(IoT) 센서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므로, 적용분야의 확장성이 커, 4차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적용분야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휴대용 조명 등 캠핑용품 전원에 대한 출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케이스에 부착하여 햇빛이나 전등의 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출원은 19%를 차지해, 캠핑용품과 모바일 기기 충전기의 출원(57%)이 전체 출원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 그 밖에, 자체 콘센트를 내장하여 원하는 기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포터블 독립전원 기술의 출원은 24%에 달했으나, 웨어러블 기기 전원의 출원은 8%에 불과했다. 그러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향후 이 분야 출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붙임 1-③, 2 참조]
- 출원비중이 가장 큰 캠핑용품 전원의 경우, 휴대용 조명기기의 출원이 35%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코펠 등 휴대용 조리기가 14%, 휴대용 정수기/가습기/공기정화기는 14%, 휴대용 냉난방장치와 보온용기가 각 8%의 출원비중을 보였다. [붙임 1-③-1, 2 참조]
- 출원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94%)이 대부분이었으며, 내국인 출원 중 개인(40%)과 중소기업(40%)의 출원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생성하는 태양전지 셀 기술 자체는 성숙단계에 있어, 태양전지 셀을 다양한 휴대용 장비에 접목하는 기술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붙임 1-② 참조]
- 특허청 성백문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IoT)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발달과 여가문화의 확산에 따라, 휴대용 장비에 독립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대용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특허출원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붙임1.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의 최근 특허출원 동향('13- '17)

붙임2.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 관련 주요 특허출원 사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1국 전력기술심사과 사무관 남배인(☎ 042-481-8185)으로 연락 바랍니다.
---	---

① '정확성'에 대한 진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분야별 <u>출원동향</u>을 살펴보면, 휴대용 조명 등 캠핑용품 전원에 대한 출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케이스에 부착하여 햇빛이나 전등의 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출원은 19%를 차지해, 캠핑용품과 모바일 기기 충전기의 출원(57%)이 전체 출원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p>→ 적용분야별 <u>출원 증가 동향</u>을 살펴보면, 휴대용 조명 등 캠핑용품 전원에 대한 출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케이스에 부착하여 햇빛이나 전등의 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출원은 19%를 차지해, 캠핑용품과 모바일 기기 충전기의 출원(57%)이 전체 출원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문장 성분 생략] 특허 출원의 동향이 어떠한지 설명하기 위해 '증가'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청 성백문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IoT)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발달과 여가문화의 확산에 따라, 휴대용 장비에 독립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u>며</u>, 	<p>→ 특허청 성백문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IoT)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발달과 여가문화의 확산에 따라, 휴대용 장비에 독립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u>예상된다</u>”<u>라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며'를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용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특허출원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u>고</u> 밝혔다. 	<p>→ 휴대용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특허출원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u>전망된다</u>.”<u>라고</u> 밝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조사 오류] 직접인용문 뒤에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함.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국가인권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가인권위원회 (가군)	사회인권 과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 권고	'18.08.29.	1314



보도자료 | 배포일자 2018. 8. 29. | 보도일자 2018. 8. 29. | 02-2125-9870/9873 | 홍보협력과장 김은미

담당부서 : 정책교육국 사회인권과장 송오영(02-2125-9835) | 담당 : 사무관 조경재(02-2125-9839)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 권고

- 기업 인권경영은 필수 경쟁력.. 정부 및 지자체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 확대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확대를 권고했다.
-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및 직장 내 괴롭힘, 가슴기 살균제, 라돈 검출 침대, 결함차량 화재 등 기업에 의한 건강권, 생명권 침해 문제가 잇따라 발생,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정부도 지난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며 인권 경영 실행에 대한 공감대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이 없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 및 체계적, 전략적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 요소가 일부 반영됐으나 이에 대한 평가 배점이 낮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공기관장 의지에 따라

인권경영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인권경영 전 단계를 포괄,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됐다.
-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된다. 인권위는 이 매뉴얼이 인권경영 전 과정을 이해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인권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세계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최근 법무부도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인권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향후 인권위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편, 인권위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1층)에서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2일에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한다.

※ 붙임 1. 결정문 1부

2.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부

3. 공공기관 인권경영 설명회 개요 1부. 끝.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단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단 내에서 지나치게 긴 문장들이 많다.
- 구체적인 항목은 구별하여 표기해야 한다.
- 전반적인 내용들이 너무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 한 문단 내의 내용이 너무 길어 자료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도 다른 행사를 덧붙인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 단어와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 어려운 단어들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
- 글 전체적으로 단어의 모호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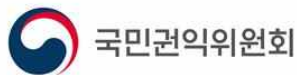
- 평가방법 및 체계 등의 구체적인 설명 분량이 많지 않았다.
- 인권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국민권익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민권익위원회 (가군)	행동강령 과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18.01.09.	2559



보도 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 2018. 1. 9(화) • 총 7쪽(붙임 2쪽 포함)

• 2018. 1. 9(화) 정오 이후 보도

작성	행동강령과 과 장 나성운 ☎ 044-200-7671 서기관 주경희 ☎ 044-200-7672 사무관 박을미 ☎ 044-200-7681
----	--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이해충돌 방지·민간청탁 금지 등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부터 시행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개정사항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 거래 시 신고

- ☐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④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 가족 채용 제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에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소속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법률적인 내용이 섞여 있어서 읽기가 어려웠다.
 - 규정 신설 및 보완된 항목들에 대해 다 설명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긴 듯하다.
- 내용 구성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보도 자료로서의 구성으로는 부적절하다.
 - 개정안을 설명하는 문장이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든다.
 - 여백이 너무 넓어서 산만하다는 느낌을 갖고 읽게 된다.
 - 다른 자료와 달리 행간 여백이 너무 넓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 신설, 개정된 규정을 굳이 보도 자료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기상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기상청 (가군)	인재개발 과	기상청, 미래 기상분야 인재 위해 '대학생 하계 연수과정' 신설 및 운영	'18.08.24	585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8. 8. 24.(금) 11:00 (총 2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인재개발과	담당자	과장 임하권 사무관 김재욱	전화번호 02-2181-0041 02-2181-0042

기상청, 미래 기상분야 인재 위해 '대학생 하계 연수과정' 신설 및 운영

□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학교의 기상 관련학과 대학생 23명을 대상으로 7월 30일(월)부터 8월 24일(금)까지 약 4주 동안 '2018 대학생 하계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 올해 신설된 대학생 하계연수 프로그램은 기상청과 직접 관련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래의 기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업무 협약 체결 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공주대, 부경대, 연세대, 전남대

□ 이번 대학생 하계 연수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은 △기상기후 이론 교육 △기상자료 묘화·분석 △예보현업 근무 실습 등이다.

○ 그밖에도 교육생의 진로 역량 향상을 위해 △진로 특강 △기상 분야 채용상담 △기상 취업지도 및 모의 면접 인터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동반되었다.

○ 교육생들은 △예보 실황 및 유사사례 분석 △예보생산 및 태풍예보 브리핑 참관 △ 예보 시스템의 이해 등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 남재철 기상청장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기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학생 하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식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2018 대학생 하계 연수과정’ 사진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반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 연수과정(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추가되어야 한다.
 - 연수과정 운영내용에 대한 세부자료가 첨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전체 구성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시각적인 고려를 많이 했으나, 다소 지나쳐서 형식적인 느낌을 준다.
 - 대학생 하계 연수과정은 줄글보다 도표로 제시하는 것이 이해하기 좀 더 쉬웠을 것이다.
 - 문장으로 담아야 할 부분, 기호를 사용하여 자료로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농촌진흥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농촌진흥청 (가군)	농자재산업과	농업인 눈높이 맞게 비료 공정규격 개정	'18.04.09.	949

 농촌진흥청	보 도 자 료		작성과	농자재산업과
	2018년 4월 9일(월)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장 김경선 농업사무관 김효경
			연락처	063-238-0830
			제공일	2018. 4. 8.(총 2장)

농업인 눈높이 맞게 비료 공정규격 개정 -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 개정 및 퇴비의 사용 원료 추가 -

-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이 개정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총 함량으로 표시 하도록 하는 등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3)을 3월 30일에 개정했다.
 - 이전에는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이 상대적 표시로 되어 있어서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 방식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른 비료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비료로 사용가능한 원료의 확대 및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려는 지정 신청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산질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체선(製銑)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 광재(스래그)로 제한하고, 유해성분의 최대 허용량을 기존에 “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으로 표기하던 것을 총 함량으로 니켈 100 mg/kg, 크롬 800 mg/kg, 티탄 6,000 mg/kg이하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동

비료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알기 쉬운 절대량으로 표기하고 유해성분 기준을 다른 비료의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 또한, 퇴비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오니의 지정 신청자의 기준을 “비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 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는 “가축의 알 또는 그 껍질”, 상토에는 “톱밥”, 혼합유기질 비료에는 “어분”을 사용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업인들이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비료 사용 원료를 확대함으로써 비료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효경 농업사무관(☎ 063-238-08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과 표현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지나치게 긴 문장이 많다.
 -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문장과 표현이 많다.
-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 어려운 단어는 설명했으면 더 친절한 보도 자료였을 것이다.
- 전체 구성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개정 내용을 전문 첨부해도 좋았을 것이다.
 - '김경선 과장'을 비롯해 불필요하게 진한 글씨로 강조한 곳들이 있다.
 - 유해 성분 허용량은 문장 속에 나열하는 것보다 표로 만들어 제시하는 게 더 나았을 듯하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문화재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문화재청 (가군)	근대문화재과	독립유공자 묘역 문화재, 정부가 지원합니다	'18.07.18.	1193

역사의 숨결을 지키고 미래의 가치를 더합니다



보도자료

[2018. 7. 18.]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배민성 서기관(042-481-4888), 정지원 주무관(042-481-4895)

독립유공자 묘역 문화재, 정부가 지원합니다

- 독립 유공자 묘역 16위, 관리 현장 점검과 추가 등록 등 조치 계획 세워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독립 유공자 묘역 16위에 대한 관리 현장 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 강화와 정비를 위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역의 추가 등록을 추진한다.

* 등록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2001.7.1 시행)

문화재청은 최근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총 16위의 독립유공자 묘역의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묘역은 북한산 국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있는 6위(이준, 손병희, 이시영, 김창숙, 신익희, 여운형)와 도산공원의 1위(안창호), 망우리 공원의 9위(서울시 3위: 서광조, 서동일, 오재영/경기도 6위: 한용운, 오세창, 문일평, 방정환, 오기만, 유상규) 등 총 16위이다.

점검 결과, 손병희·이시영·김창숙·신익희·문일평 묘소 등 6개소는 잡초제거와 봉분의 잔디를 다듬는 등 경상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용운·방정환 묘소는 석축(石築) 정비, 오세창·오기만 묘소는 묘역 진입로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준·한용운 묘소 등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필요한 곳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 문화재 돌봄사업에 독립유공자 묘소를 포함하여 경상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 권역별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설치함으로써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관련 지자체에 석축, 경계석, 계단, 진입로 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18년도 보수정비 대상: 망우리 공원(서울시 중랑구) 내 3위(서광조, 서동일, 오재영 묘소)

문화재청은 앞으로 기존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묘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묘역을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하여 추가로 문화재로 등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독립운동가, 예술가 등 명인들이 묻힌 묘역은 일반 시민들에게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가치와 함께 문화적 잠재력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독립유공자 묘역 점검결과.

2. 사진 자료.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의 호흡이 길어 보기에 불편하다.
 - 문장과 문단의 전개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전체적으로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 보기가 불편하다.
 - 문장의 길이가 다소 길고, 문단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 구성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달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좋겠다.
 - 역사적 인물의 업적에 치우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 묘역관리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 전체 구성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예산편성에 대한 언급도 간략하게나마 있었으면 좋겠다.
 - 현장 점검을 한 기간에 관한 내용은 뒤쪽에 배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 표현 오류, 다소 난해한 구문 등 리드는 더 중요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게 적절할 듯하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문화체육관광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문화체육관광부 (가군)	국제관광 과	방한 중국인 유치정책, 질적 성장에 힘쓴다	'18.05.15.	1310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8. 5. 15.(화)	담당부서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강용민(044-203-2839)	

방한 중국인 유치정책, 질적 성장에 힘쓴다 - 방한 중국시장 회복 지원 및 중국 단체관광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최근 중국이 방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함에 따라 방한 중국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방한 중국시장의 고부가가치를 통해 질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방한 소비 심리 진작과 유통 경로(채널) 재건에 힘쓰고, 중국 단체관광의 고급화와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방한 소비 심리 진작 및 유통 경로(채널) 재건

문체부는 중국에서 방한 관광상품의 홍보와 유통이 장기간(1년 이상) 중단되었던 점을 감안해 방한 소비심리를 높이고 유통 경로(채널)를 재건한다.

중국 현지 온·오프라인 여행사 및 여행포털 등과 협력해 신규 방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중국 주요 거점 지역에서 한국관광 종합 설명회와 소비자 행사 등을 개최한다.

중국 여행사의 방한관광 정보 갱신(업데이트)을 적극 지원하고, 중국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이벤트 개최,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한 연장('17년 말 → '18년 말), 우수 중국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장기간 정체된 방한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

중국 단체관광의 고급화와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문체부는 한중 양국 정부 간의 협약에 따른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중국 단체관광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중국 단체관광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중국 단체관광의 고급화를 위해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춘 여행사가 신규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서 여행상품 기획 및 유치능력 관련 항목*의 배점을 강화(35점 → 50점)했다.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가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여행상품의 이행 실적을 1년 후의 갱신 평가 시에 활용해 우수한 단체관광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방 연계상품, 테마·고부가가치 상품, 가격 합리성, 유관기관 업무 협력 등

저가·저질 단체상품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의 갱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평가 시에도 고부가 상품 유치 실적의 배점을 대폭 강화(10점 → 30점)했다. 쇼핑 위주의 저가·저질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는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지정된 후에라도 상시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상시퇴출제 시행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관광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의 질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책은 방한 중국시장의 고부가화를 통한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의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광누리의 공공서비스 자원이용여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사무관 강홍민(☎ 044-203-28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이 모호하여 내용이 명확하게 와 닿는 느낌이 덜하다.
 - 제목과 리드에서 '방한 중국시장'이란 표현은 어색해 보인다.
 - 문장들의 의미가 독자 입장에서는 낯설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 전반적으로 문장 윤색과 내용 구성이 보도 자료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구성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결론적으로 어떻게 방한 중국인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 전체 구성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제도변화를 이해하기 쉬웠을 듯하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법제처)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법제처 (가군)	대변인실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18.08.30.	1061

 법제처		www.moleg.go.kr	
보도자료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배포일시	2018. 8. 30.(목)/ 총 3장 (※ 붙임 별도)
담당자	대변인 박지은 사무관 정성희 (044) 200-6515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 어린이식생활법 등 9월 총 10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에 총 10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학교 내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이 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개선	9. 14.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 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 통신망에 유포되어 빠르게 전파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처벌 강화	9. 14.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적용 대상 확대	공무원 신분임에도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	9. 21.
「도로교통법」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 (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 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9. 28.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자전거 안전 규제 강화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의료법」	진료기록부 수정본 보존 근거 명확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수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원본 외 수정본도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하나 규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그 수정본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	9. 28.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 도입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 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2018년 9월

법제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월요일
9	10	11	12	13	14 14	15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17	18 월요일	19	20	21 21	22 22
					「공무원 재해보상법」	
23 23	24 24	25	26 26	27	28 28	29
30					「도로교통법」, 「의약품법」	

- 14일** • 학교 내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인 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개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물레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빠르게 전파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식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처벌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 21일**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 공무원 신분임에도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 28일** •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주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 자전거 안전 규제 강화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차별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 진료기록부 수정본 보존 근거 명확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수정 여부나 정정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원본 외 수정본도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하나 규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그 수정본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
-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 도입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의료법」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9월 시행법령 목록(2018. 8. 28. 기준)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의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이 너무 길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 본문의 문장 길이가 대체로 길다. 더 간결하게 다듬어야 했다.
-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보도 자료 안에 내용이 없어 평가를 할 수가 없다.
 - 법령 시행이라 일반 국민들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 제목(표제, 부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제목이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 표제와 부제가 바뀌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 제목의 구성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 전체 구성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도표밖에 없어서 자료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도표와 달력 제시 이외 간단한 해설이 적절히 배치,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표적인 내용만 보도 자료에 기재하고 그 외의 자료는 붙임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 주요 내용에서 '학교 내 고카페인 식품판매 금지'를 따로 표시하기보다, 조항 안에서 굵은 글씨 표시와 밑줄 긋기가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병무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병무청 (가군)	병역공개 과	모든 용도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18.08.02.	836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병무청

보도자료

대변인실
 전화 02 - 820 - 4577
 팩스 02 - 820 - 4583

www.mma.go.kr

2018. 8. 2.(목) 총 21쪽입니다.

담당자 병무청 병역공개과 사무관 김비옥 ☎ 042) 481 - 2776



모든 용도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도 정부(민원)24 발급 가능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일부터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병무청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 2017년도 병적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건)

총 현황	영문	공직자	보훈·경력확인 등 일반
664,890	14,885	10,992	639,013

- 병무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은 대부분 해외 거주자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국내거주 친인척 또는 재외공관(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 재외 동포들의 병적증명서 발급 용도가 거주 국가 취업과 영주권 갱신을 위한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재외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서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동안 취업, 경력확인, 보훈등록용 병적증명서 등은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이 가능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모든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병무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병적증명서 영문 양식 1부.

2. 병적증명서 영문 용어 표기 1부. <끝>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의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의 호흡이 다소 긴 부분이 있다.
 - 문장이 길어 다소 난해하고, 제시한 정보들을 간명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
- 문단의 순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단의 제시 순서가 부적절하며, 체계적이지 못하여 전달력을 떨어뜨린다.
- 중요 문장 강조 표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파란색 글씨 표시가 자료를 읽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 파란색 글씨가 너무 많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다.
 - 다시 검토하여 정말 중요한 부분에만 파란색 글씨 처리를 해야 한다.
 - 중요한 내용을 진하게 처리하려고 한 것은 좋으나 다소 지나쳐 보인다.
 - 정말 핵심이라 생각하는 정보 중심으로 굵은 글씨 표시를 할 때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전체 구성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가 도표로 제시되는 것이 정보성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산림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산림청 (가군)	산림자원 과	산림청, 풀베기 등 산림사업장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18.07.27.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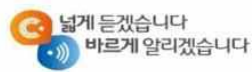
 산림청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7. 27.(금)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담당과장	조준규(042-481-4180)	담당자	정연국 사무관(042-481-4218)	

산림청, 풀베기 등 산림사업장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산림청장 특별지시로 작업시간 단축·산림사업 준공기간 유예 등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16일째 지속됨에 따라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명사고 예방 및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청장 특별 지시로 작업시간 단축, 도급공사 준공기간 유예,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을 즉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풀베기사업장에서 오전 10시~11시까지 작업 후 오후 휴식, △폭염기간 동안 도급공사의 준공기간 유예, △폭염대비 작업장 내 안전관련 준비물 및 물·그늘·휴식시간 반드시 마련, △기상특보에 따른 탄력적 작업장 운영 등이다.
- 또한, 산림사업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등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부서별 폭염대책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의료 등 타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지시했다.
- 김재현 산림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의 예방활동,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폭염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폭염기간 동안 5개 지방산림청장, 27개 국유림관리소장, 226개 시·군·구 산림부서장이 직접 산림사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할 계획이다.



붙임파일 : 폭염발생 영향 및 대비 요령
첨부파일 : 없음.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의 길이와 기사 분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긴 문장이 많아 호흡이 길고 독해에 어려움을 준다.
 - 전반적인 기사 내용이 짧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쉽다.
- 문단의 순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보도 자료 마무리 단계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구성력이 다소 부족하다.
 -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을 좀 더 간결하게 앞부분에 배치했다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 전체 구성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강조표시보다 주요 내용을 구조화해 전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 보도 자료 글씨체의 여백이 좁아서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었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새만금개발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새만금개발청 (가군)	사업관리 총괄과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 사업」 기본 구상 수립 추진	'18.04.12.	937

 새만금개발청 http://www.saemangeum.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새만금개발청
		배포 일시	2018. 4. 12.(목)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사업관리총괄과	담 당 자	•과장 양희관, 사무관 김태운, 주무관 진승섭 ☎ 044)415-1137, 1138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 사업」 기본 구상 수립 추진

-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위해 공사 출범 전 선제적 계획 수립 -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에 앞서 공공주도 선도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말부터 국제협력용지 일부(6.6km²)를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4월 12일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 사업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871백만 원, '18. 4. ~'19. 4.)

□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기본 구상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선도 사업 지역에 대해 「친환경 스마트 수변 도시」를 주제(콘셉트)로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 선도 사업 지역은 인공해변·수상호텔 등 다양한 수변 문화 공간, 단독주택형 수변 주택단지, 인공 수로를 활용한 소호(SOHO) 지구 등 특화된 기능을 도입해 새만금만의 특징을 가진 도시로 조성할 것이다.

○ 또한 선도 사업과 연계된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 등이 새만금 전체 계획과 조화된 미래 혁신성장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새만금개발청은 선도 사업 기본 구상을 토대로 올해 6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만금개발공사와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에 앞서 새만금개발청이 선제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공공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새만금에 베니스,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수변 도시를 만든다면 민간 투자 역시 활성화되리라 생각 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만의 특화된 기능과 문화를 갖춘 명품 도시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 사업 기본 방향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김태운 사무관(☎ 044-415-11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단어와 문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지나치게 같은 단어의 반복이 많다.
 - 의미가 어색하여 윤색이 필요한 문장이 많다.
-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이 막연하다는 느낌이 든다.
 - 공공주도의 선도 계획 수립의 계획적인 부분의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
 - 공공주도 선도 사업의 기본 구상을 수립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보도 자료의 내용이 별로 없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소방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소방청 (가군)	화재예방 과	안전 백년대계,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18.07.06.	1148



보 도 자 료



2018.9.10 ~ 9.17
제13회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The 13th World Firefighters Games Chungju 2018

배포일시	2018.7.6.(금) 17:00	보도시점	2018.7.9.(월)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7.8.(일) 12:00 부터]
담당과장	화재예방과장 이윤근	연 락 처	044-205-7440/010-9178-5335
담 당	소방령 이종충	연 락 처	044-205-7441/010-2043-2935
쪽수/붙임	2쪽 / 있음	대변인실	044-205-7016/010-4857-7985

안전 백년대계,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 9일부터 55만개 건축물 화재안전 특별조사 실시 -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와 화재예방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 청와대가 주관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화재안전대책 특별TF’를 구성하고 중점시책으로 이번 달 9일 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화재위험성이 높고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약 55만개 동에 대하여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 결과를 토대로 건물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안전정책 수립 및 인명구조·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건물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재위험요인을 보수·보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1단계로 2018년도에는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7만 2천개 동에 대해 798개 조사반 2,755명이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4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1단계('18. 7~12월): 17만 2천동 / 2단계('19.1~12월): 38만2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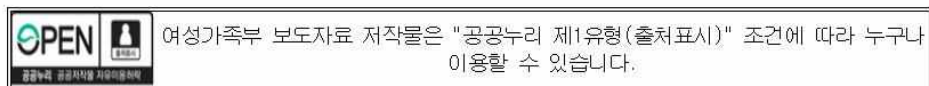
- 이번 조사에는 정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청년 및 신중년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노유자시설, 중소병원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에 대하여 어린이고령자 등 실제 이용자를 참여시킨 시민조사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 안전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인 만큼,
 - 우선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재난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사람 중심으로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 건물의 화재안전과 관계된 전문지식이나 기술적인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단이 무료 안전컨설팅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와준다.
 - 또한,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위해 소방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마이크로페이지(www.nfa.go.kr/fssc)도 개설하여 운영한다.
- 조종묵 소방청장은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국민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의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들이 기본 4줄 이상으로 너무 길다.
 - 이어지는 문장들도 길고 앞뒤 호응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 지나치게 문장과 문단이 길어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한자어 표기가 너무 많아서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 특정 대상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등의 감정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제목과 리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리드가 제목과 다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리드가 다소 장황하여 산만하게 느껴지니 간결하게 정리하면 좋겠다.
 -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고 생략된 내용이 많아서 대략적인 내용이 예상되기 어렵다.
- 강조표시 및 기호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 ○, -' 등의 기호 사용이 체계적이지 않다.
 - 중복되는 내용은 굵은 글씨로 연달아 강조할 필요성이 크게 없다.
 - ○ 표시와 - 표시 사이의 내용이 상·하위 관계로 분절된 것이 아닌 내용들이 있다.

- 여성가족부는 최근 언론에서 국제결혼업체 영상광고가 여성의 성 상품화, 차별·혐오 표현, 여성의 신상 과다 노출 등 여성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이번 일제점검은 후속 조치로써,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위주로 실시된 모니터링을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 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 여성가족부는 점검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온라인 게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므로 점검 및 시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 “향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혼중개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점검 계획
2. 관련 규정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의 길이와 문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 길이가 너무 길고, 문단 구성이 복잡하다.
- 마지막 문장이 7줄이나 되는 등 문장이 너무 길다.
- 문장이 다소 길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
- 문장을 완결하지 않고 단락을 나눴는데 더 불편해 보인다.

■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 리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리드가 친절하지 않다. 무엇을 점검한다는 것인지 알리지 않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통일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통일부 (가군)	이산가족 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설 개보수단 금강산 파견 (7월 9일)	'18.07.06.	452

	통일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
배포일시	2018. 7. 6.(금)	담당부서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담당과장	오미희 (02-2100-5910)	담당자	윤내기 (02-2100-59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설 개보수단 금강산 파견 [7월 9일]

- ☐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8월 20일~26일) 준비를 위한 금강산 시설 개보수를 7월 9일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설 개보수단이 7월 9일부터 방북하게 됩니다.
 - o 시설 개보수는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진 시설 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등 상봉 행사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선발대 파견(8월 15일) 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 ☐ 7월 9일 방북 인원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을 단장으로 적십자사, 현대아산, 협력업체 기술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o 앞으로 개보수 진행 상황에 따라 분야별 기술 인력이 현지 상주 및 단기 출·입경 방식으로 순차 방북하게 됩니다.
- ☐ 정부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상봉 행사 시설 개보수와 상봉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끝.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내용의 구성과 분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 좀 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개략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정보 전달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
- 용어 해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료의 양이 상당히 부족하다.
- 행사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전체적으로 보도 자료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를 살리는 내용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제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제목이 다소 단조롭다.
- 날짜 기재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해양경찰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해양경찰청 (가군)	해양안전 과	해양경찰, 제4회 연안안전의 날 맞아 해양안전 문화 확산	'18.07.17.	987

 해양경찰청		보 도 자 료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보도일시	2018. 7. 18. (수)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는 7. 17. (화) 12:00부터]			총 2쪽	
배포일시	2018. 7. 17. (화) 08:00		담당부서	해양안전과	
담당과장	총경 채광철 (044-205-2048 / 010-3789-1191)		담 당 자	경정 박기정 (044-205-2153 / 010-9105-1492)	

해양경찰 제4회 연안안전의 날 맞아 해양안전 문화 확산 -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8일 제4회 연안안전의 날을 맞아 해양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8일은 '연안안전의 날'로, 7월 셋째 주는 '안전점검 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정부세종2청사 강당에서 '연안안전 포스터·카드뉴스 공모전'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4월23일~6월11일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받은 장세웅(26)씨의 포스터 '오히려 낚일 수도 있습니다' 등 총 17점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된다.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는 이 기간 국민이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해양사고 시 생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한다.


오는 31일 울산해경 강당에서 해양안전 퀴즈대회도 펼쳐진다. 관내 초등학교 100여 명이 참여해 ‘퀴즈(QUIZ)-위즈(WHIZ)’ 해양안전과 해양상식 퀴즈 달인에 도전한다.

이 밖에 해양경찰은 연안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사망사고 지역 등 사고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구명조끼 입기, 기상 확인, 물 때 확인 등 안전수칙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국민에게 배포하는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교통전광판과 지역 게시판 등을 활용해 ‘연안활동 전 기상정보 체크’, ‘갯벌 체험 시 들물 시간 확인’ 등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연안안전의 날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해양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며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경정 박기정 (☎ 044-205-2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내용의 줄 여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줄 여백이 동일하지 않다.
 - 어떤 부분은 두 줄, 어떤 부분은 한 줄이 띄어져 있으니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 강조표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표시 문자가 없어서 불편하다.
 - 위계를 나타내는 기호 등이 없어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 구성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다양한 행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단락을 구성하여 제시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 행사 관련 일정표나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 내용의 구조와 배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구조화, 항목화 등을 통해 독해 용이성을 좀 더 돕는 것이 필요하다.
 - 구조화하고 배열을 논리적으로 한다면 정보 전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군)	도시성장 촉진과	행복청, 「공동캠퍼스 자문위원회」 구성	'18.05.31.	789

 <div> <div>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행정중심복합도시</div> <div>보도자료</div> <div>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div> <div>보다 나은 정부</div> </div> <div>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div>			
보도일시	18-99호 (6월 1일(금) 조건부터 보도) ※ 통신, 방송, 인터넷은 5월 31일(목)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부서장	홍순민 과 장 (044-200-3180)
	도시성장촉진과	담당자	김세영 사무관 (044-200-3182)

행복청, 「공동캠퍼스 자문위원회」 구성

▶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캠퍼스 자문위원회' 본격 운영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조성하는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캠퍼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31일(목) 10:00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성한 '공동캠퍼스 자문위원회'는 교육·건축·산학연협력 등 분야별 10명씩 총 30명으로 운영되며,
 -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사업 전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우선, 공동캠퍼스 입주학과 특성화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거치고, 최대 수용 가능한 총 학생정원 및 학생정원을 반영한 시설별 규모와 설계안 등 건축 분야도 논의할 예정이다.
-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여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부지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 이원재 행복청장은 “공동캠퍼스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래 융합교육을 여는 공동캠퍼스의 설립 취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행복청은 지난 3일(목)에 국내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 18일(금)에는 KAIST와 공동캠퍼스 입주를 확정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공동캠퍼스 홍보와 대학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 김세영사무관(☎ 044-200-3182)에게 연락 바랍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공동캠퍼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공동캠퍼스의 구체적인 의미 전달이 없어 보도문이 난해하다.
- 공동캠퍼스에 어떤 기관이 더 참여하는지 더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 공동캠퍼스라는 개념이 생소한데 보도문에 충분한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 보도문의 내용과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보도문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 자료의 전체적인 구성력이 미흡하여 이해하기가 힘들다.
- 자료 구성에서 문장을 완결하지 않고 단락을 나눈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기호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동그라미 기호로 한글자음 'ㅇ'을 사용하여 어색하다.
- 기호를 위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문단별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부정확하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경찰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경찰청 (나군)	범죄예방 정책과	경찰 '여성불안환경 집중진단', 생활주변의 불안요인 해소 주력	'18.05.04.	1496

보도일자: 2018. 5. 4.(금) 조간(누리망·방송은 5. 3.(목) 12:00시 이후 보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경찰청 브리핑

www.police.go.kr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범죄예방정책과장 총경 우철문

담당 경정 심명섭

2018년 4월 27일

일반 02-3150-2046, 경비 2046

일반 02-3150-2846, 경비 2846

경찰 '여성불안환경 집중진단, 생활주변의 불안요인 해소 주력

- 『여성 귀갓길 범죄취약지점 개선 사업』 등 셉테드 사업도 자체 추진 -

□ 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주(5.4~5.31.)간 여성불안환경을 진단·점검하여, 생활 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여성 귀갓길' 등 여성 일상생활 주변의 범죄불안감이 높은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특히 전국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조도, 조명 간격, 시시티브이(CCTV) 설치여부, 주·야간 통행량 등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하여 여성 불안환경을 면밀히 점검한다.

*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 지역사회의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민간과 협업,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전문요원(2016년 6월~, 총 218명)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

○ 또한, 점검 결과 드러난 취약요인은 각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이를 자치단체의 환경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등, 경찰(진단·분석)과 자치단체(환경개선) 간의 협업을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 현재 국내에서는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즉 셉테드(CPTED)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경찰 추산으로, 2017년 기준 전국 셉테드 사업은 총 1,031개가 추진되었는데, 이는 2016년 추진된 사업(312개) 대비 330% 증가한 수치이다.

○ 특히 2017년 사업 중, 경찰이 범죄취약요인을 발굴한 후 지자체에 제안하여 개선된 사업이 전체 사업의 44.4%(458건)를 차지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에서 경찰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 한편, 경찰은 범죄취약지점 개선을 위해 국가 예산 4억 8천만 원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여성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취약지점을 중점 개선하는 ‘여성 귀갓길 등 범죄취약지점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 경찰은 지역의 범죄발생·112신고, 범죄통계, 주민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관할 내 범죄취약지점을 진단하였고, 최근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선이 시급한 296개소를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선정된 296개소 사업지역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조명, 비상벨, 반사경 등 다양한 범죄예방시설들이 맞춤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해 편성된 예산(4억 8천만 원)을 경찰관서에 배정하였으며, 이를 ‘마중물’로 삼아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유지관리는 물론,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참여를 견인할 방침이다.

○ 아울러, 각 취약지점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범죄발생률 및 체감안전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취약지점 개선사업을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치안에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수”라며, “이번 집중진단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참여가 확산되고, 여성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생활안전국 경정 심명섭(☎ 02-3150-28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
 - 마지막 문장의 문장 구성이 이상하다.
 - 내용은 간단한데 비슷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 정보량과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여 집중력이 떨어진다.
 - 관련 이미지나 도표 등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더욱 빠를 것 같다.
 - 밑줄이나 굵은 글씨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용어와 표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여성 차별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 범죄대상의 성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공정거래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공정거래위원회 (나군)	제조하도 급개선과	“못 받은 하도급 대금 받아드립니다!”	'18.08.03.	1247



보도참고자료

2018년 8월 3일(금) 배포
2018년 8월 3일(금) 10시부터
보도가능

국방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담당과장: 성경제(044-200-4596)
담당: 이용만 사무관(044-200-4603)

“못 받은 하도급 대금 받아드립니다!”

- ‘중소기업 명절 상여금 밀리지 않도록’ ...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2018년 8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47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다.
 -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 * 2017년 추석: 47일 운영, 총 156건 274억 원 지급 조치
- * 2018년 설날: 51일 운영, 총 175건 317억 원 지급 조치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 소^{*}에 설치했다.

*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 <붙임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참조



-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가 신고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접수된 신고는 하도급 대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 할 예정이다.
 -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 ※ <붙임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참조
-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 <붙임3>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예시) 참조
 - ☞ 신고 서식은 누리집(민원 참여/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 참조
-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아울러, 공정위 각 지방 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현황
 2.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3.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예시)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비슷한 말의 반복이 너무 많다.
 - '경제단체에게', '기업에게' 등은 '경제단체에' '기업에'로 써야 우리말 어법에 맞다.
- 자료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불필요한 특수기호 남용으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진다.
 - 서식이 통일되지 않아서 글을 읽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 부제를 가운데 정렬로 하면 가독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 특수기호 등의 주석과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어지러운 느낌도 있다.
 - 여백을 넉넉히 두는 방식으로 수정한다면 읽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얼마나 걸릴지 예상 시간도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신고를 통한 원청업체의 보복행위 즉 재계약 철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국가보훈처)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가보훈처 (나군)	보훈심사 위원회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자 3명, '국가유공자'로 결정	'18.06.06.	1148

	보도 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 일시	2018. 6. 6.(수)	담당 부서	보훈심사위원회
담당 과장	권재량	담당 자	이미숙(044-202-5862)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자 3명, '국가유공자'로 결정

- ▶ 6월5일(화) 오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통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최종 결정
- ▶ 유족 피해 최소화 위해 유공자 심사 접수('18.5.23) 이후 2주만에 신속 심사 마무리
- ▶ 유가족의 새로운 출발 위해 매월 <보훈급여금>지급과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복지> 지원 등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보훈지원책 마련
- ▶ 부상자인 이찬호 예비역 병장도 빠른 심사 통해 안정적인 부상 치료와 다양한 보훈정책으로 제2의 인생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K-9자주포 폭발사고(2017.8.18)'로 희생당한 순직자 3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직자 : 고 정수연(상병), 고 위등민(병장), 고 이태균(상사)

- ☐ 국가보훈처는 유족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심사 접수(18.5.23) 이후 2주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

2018.5.11.순직결정(육군) → 2018.5.23.보훈심사위원회 접수 → 2018.6.5. 순직군경 심사 완료

- ☐ 보훈처는 유가족이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보훈급여금>지급과 함께 <취업>, <교육>, <의료>, <주거,복지> 지원 등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보훈정책'을 지원한다.

- 순직한 고(故)이태균상사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보훈특별고용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어린 자녀도 교육지원(대학까지)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과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부상자 이찬호(병장)는 전역(18.5.24)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18.5.28)을 하였고,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안정적인 치료와 다양한 보훈정책 지원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예정이다.

-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현재 받고 있는 ‘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부상치료 이후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취업>, <교육>, <주거복지>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번 K-9 자주포 희생자 분들의 경우처럼 가급적 빨리 국가유공자 심사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띄어쓰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다.
 - 마침표 생략 등 문장부호 오류가 있다.
- 정보량과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리드에 날짜 등 핵심 정보가 빠져있다.
 - 밑줄이나 굵은 글씨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내용 중복만 없으면 한 페이지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며 용어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자주포 폭발사고 경위가 간략하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 국가유공자 및 해당 가족에 대한 지나친 동정 및 연민의 시선이 있다.
 - 고 정수연(상병), 고 위동민(병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없어 다소 아쉽다.
 - '보훈급여금' 등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정책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국방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방부 (나군)	병영정책 TF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18.07.19.	1797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보 도 일 시	이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4쪽	
배 포 일 시	2018. 7. 19. (목요일)	담당 부서	병영정책TF		
담당 국 장	병영문화혁신TF장 허욱구 (02-748-5070)		담당 과 장	병영정책TF과장 이태인 (02-748-5560)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병영 패러다임의 혁신,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병영환경 조성

- 국방부는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마련하고, 정보검색, 동영상 강의 시청 등 군 복무 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을 검토 중이며,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전반기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 시범운영 부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복지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국방부는 7.5.(목) ~ 7.13.(금) 까지 시범부대 장병 596명을 대상으로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병 휴대폰 사용 허용에 대한 찬반여부’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병영생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 시범운영 전 선호도 조사 : ’18. 3. 2.(금) ~ ’18. 3. 9.(금), 총 667명(간부 186명, 병 481명)

* 시범운영 후 만족도 조사 : ’18. 7. 5.(목) ~ ’18. 7. 13.(금), 총 596명(간부 166명, 병 430명)

- ‘병 휴대폰 사용 허용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 시범운영 이전 ‘찬성 한다’는 의견(75.4 %)에 비해 14.2 % 상향된 89.6%의 인원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특히,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간부들의 경우 시범운영 이전 설문에는 38.7%의 인원만이 찬성하였으나 시범운영 이후 34.2%가 상향 된 72.9%의 인원들이 찬성의견을 보이는 등 휴대폰 사용에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 병 휴대폰 사용 허용 찬반여부 설문결과

구 분	총 관		간 부		병	
	시범운영 이전	시범운영 이후	시범운영 이전	시범운영 이후	시범운영 이 전	시범운영 이 후
인 원	667명	596명	186명	166명	481명	430명
찬 성	503 (75.4%)	534 (89.6%)	72 (38.7%)	121 (72.9%)	431 (89.6%)	413 (96%)
반 대	164 (24.6%)	62 (10.4%)	114 (61.3%)	45 (27.1%)	50 (10.4%)	17 (4%)

- 또한 휴대폰 사용에 따른 긍정적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부모·친구와의 연락 등 사회와의 소통 확대(47%), 자기개발(20%), 정보검색(18%), 기타(15%) 순으로 손꼽았다.

* 병 휴대폰 사용에 따른 병영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설문인원 총 596명)

구 분	부모/친구 소통확대	자기개발	정보검색	상황발생시 연락수단	구직활동 여건보장	미응답
계	279 (47%)	118 (20%)	107 (18%)	49 (8%)	34 (6%)	9 (1%)
간 부	105 (63%)	17 (10%)	22 (13%)	13 (8%)	2 (1%)	7 (4%)
병 사	174 (41%)	101 (23%)	85 (20%)	36 (8%)	32 (7%)	2 (1%)

- 한편,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활동 중인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정부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전문가와 함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시범운영 4개 부대를 현장방문 하여 실태확인 및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시범운영 부대 모(某) 병사는 “일과이후 개인 휴대폰 사용으로 고립감 해소는 물론 기존 공중전화와 영상전화 사용보다 통신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정보검색을 위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률이 줄어들어 동영상 강의 시청 등 자기개발을 위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여건이 향상되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서울대 박찬구 교수는 “병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해 정서안정 등 효과로 부대관리 측면에서 병사들 간의 마찰이 줄어 병영악습과 부대사고 감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병 휴대폰 사용 허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 국방부는 국직부대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후반기 각 군별 부대 특성을 고려한 시범부대를 선정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간 보안대책 마련 등 문제점을 식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각군·국직 시범운영 : 8월 ~ 9월, 시행여부 최종 결정 : 12월

붙임 :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지침. <끝>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다.
- 낱짜 등 표기의 통일성이 없다.
- 띄어쓰기 오류가 있어서 읽는 데 방해가 된다.

■ 정보량과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리드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 내용의 질에 비해 양이 너무 많은 느낌이다.
- 원이나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
- 밑줄이나 굵은 글씨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보도 자료의 첫머리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핵심 정보를 더 자세히 담아내면 좋겠다.

■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부정적인 의견도 소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보안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이나 대책이 빠져있어 아쉽다.
- 장단점,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등이 추가되어 보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국세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세청 (나군)	상속증여 세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18.07.12.	2692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7. 1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유병철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8년 7월 12일	담 당 자	황정길 서기관	044) 204-3442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 -

- ☐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500명과 수혜법인 (약 1,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신고·납부기한: 2018. 7. 31.(화)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특히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임.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2. 1. 1. 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증여세 과세 제도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2015. 12. 15. 신설)

<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2 신고·납부 의무 및 안내문 발송

-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7. 31.(화)*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통상 신고기한은 6. 30.이나,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 2.인 관계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

-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일감 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주주 약 2,50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600개에 신고안내를 하였고,
- 특히, 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였음.

○ 올해 두 번째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 2017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약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3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음.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람.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4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

- ☐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증여세를 신고기한(2018. 7.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 × 미납부한 일수

- ☐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예정임.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주요 탈세 사례(참고 6)
- ☐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이 너무 길다.
 - 낱자 표기에 통일성이 없다.
 - 띄어쓰기 오류가 너무 많다.
 - 불완전한 문장으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가 다수 있다.
- 정보량과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분량이 너무 많다.
 - 전체적으로 보기에 불편함이 있다.
 - 볼드체 처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산만하다.
- 용어와 표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어투가 성의 없이 느껴진다.
 -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다.
 - 한자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대검찰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대검찰청 (나군)	강력부	데이트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18.07.02.	1931

이 자료는 2018. 7. 1.(일) 09:00(7. 2.자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small>PROSECUTION SERVICE</small>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 3480 2100 팩스 02 3480 2704	보도자료 2018. 7. 2.(월) 자료문의 : 대검찰청 강력부(조직범죄과) 전화번호 : 02-3480-2280 주청일자 : 조직범죄과장 김태권
--	---	--

제 목 **데이트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 삼진아웃 구속기준, 사건처리기준 전반적 강화 -

- 대검찰청 강력부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2018. 7. 2.부터 시행토록 하였음
- 통계, 중요사건 등 분석을 실시, 「前·現 '여자친구' 상대 단기간 반복적 범행, 살인 등 중대범죄로 진화 가능성」 등 특성을 추출하고 그에 맞추어 폭력삼진아웃제와 구형기준 등을 강화하는 취지임
- 앞으로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데이트폭력범죄에 엄정 대처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1 사건처리기준 강화 취지

-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 증대

※ 여자친구 구타 후 트럭으로 돌진한 신당동 사건('17. 7.), 여자친구 주거지 복도에서 여자친구를 끌고 다니며 구타한 부산 사건('18. 3.) 등

<데이트폭력 지속적 증가(경찰청 자료)>

연도	2014	2015	2016	2017
명	6,675	7,692	8,367	10,303

- 정부는 '18. 2.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특성에 맞추어 사건 처리기준을 정비·강화

정부 종합대책 주요 내용

- **데이트폭력 처벌 사건처리기준 등 마련**
- 현장 대응력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2 사건처리기준 강화 구체적 내용

- 통계, 중요사건 등 분석을 토대로 다른 폭력범죄에 비해 데이트 폭력범죄의 두드러진 특성 추출

- 피해자는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대다수(91.7%가 여성 또는 쌍방)
- 前·現 여자친구인 '동일 피해자'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
-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 → 상해나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진화 가능
-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방안, 반복적 범행을 엄단하여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 등 필요

<데이트폭력 죄명별 발생통계('17. 경찰청 자료)>

죄명	살인(미수포함)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주거침입	기타(경범죄 등)
명(%)	67(0.7)	7,552(73.3)	1,189(11.5)	481(4.7)	1,014(9.8)

- '폭력삼진아웃제' 강화

- 동일 피해자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범행, 가해자·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 등 범죄특성과 필요조치를 고려, 동일 피해자 대상으로 한 공소권없음(처벌불원)도 포함시켜 삼진 대상 '전력'을 확대
- 동일 피해자 상대 데이트폭력 별건을 수사 중이거나, 1개 사건에서 데이트폭력 반복 범행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삼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

강화된 삼진아웃제 주요 내용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 2회 이상인 사람이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1개 사건 데이트폭력 범죄 사실 3회 이상인 사람은 정식기소(구공판) 원칙,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
- 2회째 범행이라도 1회보다 중한 범행으로 이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으나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런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기소를 하는데 고려

● '데이트폭력 구형기준' 강화

- 위와 같이 강화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취지를 구형에도 반영하도록 기준 강화
- 강화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공소권없음, 다른 사건 수사 중 등)을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
-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인자를 발굴하여 구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신규기준 정립
- 예를 들어,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데이트폭력사범은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3 피해자지원에도 만전

● 단계별 맞춤형 피해자지원

- 초기부터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연인 또는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심신이 피폐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
-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 적극 지원

● 보복범죄 차단 및 중한 범죄 방지

- 데이트폭력이 이별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성 증대
-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비상호출기), 보호시설, 이전비, 법정동행 등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에 만전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띄어쓰기 오류가 있다. '피해자 지원', '정식기소를 하는 데'로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문장이 모두 명사로 끝나는 방식이어서 합쇼체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다소 권위적으로 느껴진다.
-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리드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 너무 뻑뻑한 편집으로 답답한 느낌이 든다.
 - 색깔,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너무 다양하게 사용되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 용어와 표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어려운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데이트 폭력 지속적 증가 자료의 성별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 '여성'이 아니라 연인관계의 '약자'인 피해자로 작성하여 차별적 표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
 - 글에서 명시한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므로 남성일 경우에도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방위사업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방위사업청 (나군)	절충교역 과	방사청, 절충교역 37년만에 전면 개편, 산업협력으로	'18.06.26.	1922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8. 6. 26.(화) 08:00

총 3 쪽

담당부서 : 절충교역과(과장 부이사관 최진용 / ☎02-2079-6340)

대변인실

☎ 02-2079-6021~4
www.dapa.go.kr

보도일시 : 본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 절충교역 37년만에 전면 개편, 산업협력으로 - 부품 수출 비중 80%까지 확대, 중소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선진형 제도로 -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1982년 도입 이후 지난 37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절충교역 제도를 **부품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방산 육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절충교역은 우리 방위산업·항공산업 육성 및 방산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 그러나 최근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 업체·정부의 수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방산 핵심기술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방산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절충교역의 중점을 **부품수출 확대**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무상 개념**’의 절충교역으로는 첨단기술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계속되는 절충교역의 유·무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이런 상황을 고려한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4가지이다.
 - 첫째, 절충교역의 개념을 전환한다. 유·무상 논란을 방지하고 국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절충교역 무상원칙을 폐기**하고 사업별로 **산업과급 효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충교역 추진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 둘째, 정책중점은 방산기술 획득에서 **방산육성 및 방산부품 수출로 전환**하고 절충교역이라는 명칭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산업협력¹⁾(Industrial

1) 국내 방위“산업”과 외국 방위“산업”간의 중장기적인 대규모 “협력”이라는 의미

Cooperation)'으로 바꾼다.

- 셋째,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가치추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충분한 협력기간을 갖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핵심부품을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외기업 간 장기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전 가치추적을 한 **국외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 사전가치추적이란 외국기업이 **기본사업²⁾과 관계없이 국내기업과 협력한 실적을 추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것임.

- 넷째,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도입 되는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는 **산업협력 쿼터(Quota)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업체가 자연스럽게 기술을 획득하는 동시에 우리 군은 해당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산육성과 고용 창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국내외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산업협력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절충교역(향후 산업협력) 내용³⁾ 중 약 30% 수준인 **부품 제작·수출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개년 간 **약 2.7억불을 추가로 수출**하고 **3,700여 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⁴⁾이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부품수입)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가치승수)를 강화**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확대는 물론, **외국업체의 협력선(Global Value Chain)**에도 보다 용이하게 편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2) 기본사업(main contract)란 절충교역 의무를 발생시키는 방위력개선사업 등을 의미

3) 기술이전·부품제작·수출·군수지원 등

4) '20년~'24년 기간 중 국외구매로 예상되는 방위력개선사업 중 절충교역 대상사업인 대형사업의 사업금액에 경쟁(예상) 여부에 따른 절충교역 비율을 곱한 액수에 부품 제작·수출 비율을 곱하고 관련 수출유발효과계수와 고용유발효과계수를 적용한 수치임.

- 이번 혁신방안은 6월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방위사업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37년 만에 절충교역을 새로운 개념의 산업협력 제도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상생(win-win)하면서, 국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방산수출을 선진국형의 수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국방 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절충교역 혁신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부품국산화 지원을 확대하고, '17년 말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의 지체상금률을 반으로 축소했다” 면서 “앞으로도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끝//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반적으로 문장이 길다.
 - 주어와 서술어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장도 있다.
-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리드에 날짜 등 핵심 정보가 빠져있다.
 - 세부 항목을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구분했으면 좋겠다.
 - 강조하려는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여 요약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 소제목 등을 활용하여 구성상의 위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용어와 표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내부 보고 문서와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이 있다.
 -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가군-법무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법무부 (가군)	체류관리 과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비자신청 관련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	'18.06.27.	1432

 보도자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2018. 6. 27.(수) 조간부터 보도	총 3쪽(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덕룡 02) 2110-4064	담당자	이승현 사무관 02) 2110-4067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비자신청 관련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

- 전문인력(C4, E1-E7 비자 초청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 기대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첨단과학기술 분야, 문화체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해외 우수인재(전문인력)* 초청과 관련된 비자신청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8. 7. 2.(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자고용추천제를 시행합니다.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단기취업(C-4) 자격, 교수(E-1) 자격부터 특정활동(E-7) 자격이 해당
- 고용추천제는 해외 우수인재의 취업비자 심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추천대상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C4, E1~E7 체류자격 중 80여개 직종이며, 추천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청이 해당합니다.
- '18. 5월 기준 국내체류 전문인력은 46,966명으로,
- 체류자격별로는 단기취업(C-4) 2,171명, 교수(E-1) 2,447명, 회화지도(E-2) 13,846명, 연구(E-3) 3,207명, 기술지도(E-4) 174명, 전문직업(E-5) 608명, 예술홍행(E-6) 3,643명, 특정활동(E-7) 20,870명이며
 - 국적별로는 중국 12,550명, 미국 9,579명, 필리핀 3,114명, 베트남 2,494명, 인도 2,478명, 캐나다 2,332명, 영국 2,134명, 기타국 12,285명입니다.
- 그 동안 해외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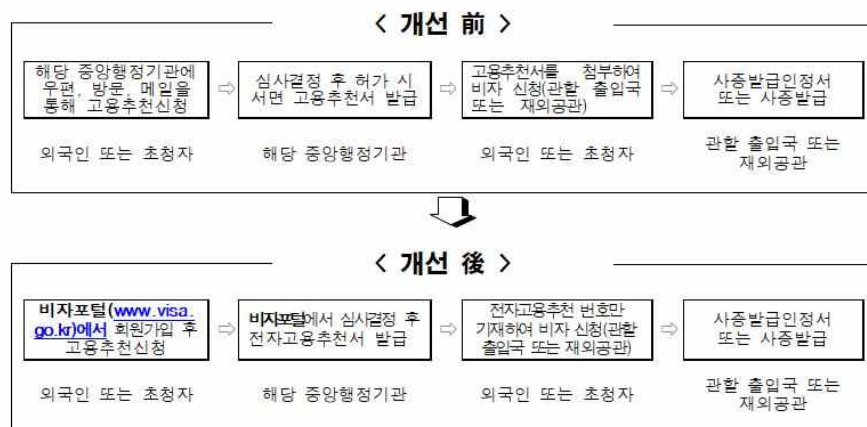
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할지 몰라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등 비자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외 우수인재 초청관련 고용추천 신청 및 발급절차를 일원화한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로 개선합니다.

- 다만, 현재 자체적으로 고용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시스템 연계 작업 등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특정활동(E-7) 자격에 대한 추천서 발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와 예술흥행(E-6) 자격 중 호텔·유흥분야 추천서 발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 해외 우수인재 초청관련 고용추천 제도의 개선 전·후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으로 해외 우수인재 초청관련 비자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해소되어 우수인재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전자고용추천시스템 이용절차(민원인용) 1부.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제목과 문장 구성, 표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
 - 완결되지 않은 문장이 있어 보기에 불편하다.
 - 제목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아쉽다.
 - 표 안의 '전, 후'를 굳이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분류 코드가 기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 표 안의 글자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
 - 굵은 글씨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수치 등은 도표나 그래프 등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자료가 읽기 편했을 것 같다.
- 용어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비자의 종류를 제시해 주었다면 이해가 더 잘 되었을 것 같다.
 - 체류번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당 내용의 중요성을 느끼기가 어렵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보건복지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보건복지부 (나군)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18.06.14.	1013

다양한 복지서비스
복지ir 복지로서
한번에

평 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18. 6. 14. / (총 4매)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과 장	성 재 경	전 화	044-202-3340
담당자	오 경 희		044-202-3341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 ◇ 개정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18. 7. 1. 시행)
-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 및 활동지원 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신설 등),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 등
- ◇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시행
 -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 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지원금 지급(30분 당 5,000원, 월 50만원 한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 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1 서비스임.

- 둘째,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 원 한도

- 셋째,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부호 오류가 있다.
- 핵심 요약 부분에 서술형 어미 정비가 필요하다.
- 조사를 수정해야 한다. 직접 인용절에서는 '라고'로 바꿔 쓸 필요가 있다.
- 이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첫째' 등은 불필요해 보인다.

■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 관련 내용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추가 내용을 기술하면 좋겠다.
- 중증장애인 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다.
-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보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한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나군)	고객지원 담당관	식약처,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검사하겠습니다.”	'18.05.15.	1192

 보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배 포	2018.5.15.(화)
	담 당 과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43-719-1002)
	과 장	신 재 식 (☎043-719-1002)
	사 무 관	권 대 근 (☎043-719-1051)

식약처,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검사하겠습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서른세 건에 대한 청원 진행 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진행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특정 식품과 화장품, 위생용품 등을 검사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까지 서른세 건 올라와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 공감 추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식약처에 따르면 5월 14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은 선여섯 건 가운데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것을 제외하고 식품 26건, 화장품 4건, 위생용품 2건, 의약품 1건 등이며, 이에 대한 청원 공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지난달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검사 청원을 받았으며 검사 요청한 내용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은 것부터 해당 제품의 안전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 18,000여 명이 접속해 공감을 표시하거나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생활 속 안전 불안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제도로, 평소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해 일반인으로부터 검사 청원을 받고 청원한 내용에 대해 한 달 동안 많은 공감을 얻은 제품군을 거두어 들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검사 청원 대상 품목 가운데 식품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농축수산물(6건)과 화장품(4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식품을 검사해 달라는 청원은 액상분유, GMO 식품, 즉석조리식품, 달걀, 분말형태 식품, 수산물, 어린이용 혼합 음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화장품 검사에 대한 청원은 어린이용 물휴지, 천연화장품, 여드름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위생용품 검사를 해 달라는 청원에는 어린이용 기저귀, 화장실용 화장지 검사, 의약품 청원은 글루타치온 백옥주사 쇼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 등이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추천을 받은 청원 가운데 다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차 검사대상제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선정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군의 전체 품목을 수거·검사하여, 검사 과정과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단계별로 공개합니다.
-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회수·폐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류영진 식약처장은 “앞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

<붙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현황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과 내용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일부 문장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 마침표를 생략하는 등 문장부호 오류가 있다.
 - 조사 수정이 필요하다. '취지로'는 '취지에서'라고 써야 한다.
 - 숫자 표기가 우리말 표현과 함께 섞여 있어 숫자 표기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 자료 마지막 부분에 '끝'이라는 표기는 적절치 않은 듯하다. 자료 해석에 방해가 되고 보기에 불편하다.
-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리드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 시각자료의 이용이 필요해 보인다.
 - 더 나은 구성방식으로 쓰일 여지가 있는 글이다.
 - 굵은 글씨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문단별로 소제목이 있었으면 글이 더 정리되어 보였을 것이다.
 - 분류기호 중 네모 모양의 분류기호에서는 문장보다는 관련 내용의 소제목을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다.
- 용어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사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일부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 부제에 있는 '33건'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인사혁신처)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인사혁신처 (나군)	균형인사 과	공직 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수립	'18.07.17.	2673

 인사혁신처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담당자	과 장 이은영(044-201-8320) 사무관 최서은(044-201-8377)
보도일시	2018년 7월 17일 석간(오전 8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직 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수립**
- 정부 최초의 중장기 균형인사 비전 제시, 연차보고서로 이행 관리 강화 -

-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향후 5년간 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 법적 근거: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 정책 연구와 여성고위공무원 워크숍, 중증장애인 간담회 등 10여회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거쳐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 의견 수렴>

▷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2.28.), 여성고위공무원 워크숍(3.9.), 중증장애인공무원 간담회(4.16.),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면담(4.30./5.4.), 이공계 관련 단체 의견 수렴(5.28.), 타 부처 의견수렴(5.15.~5.18.) 등

-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기존 균형인사정책이 여성·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로 단발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채용위주의 단기적 성과 달성에 치중한 한계를 극복하고,
- 정부가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균형인사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채용-인사관리-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한편, 균형인사란 공직 내 차별적인 인사관리 요소를 해소하고, 다양성·형평성·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인사정책으로, 이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 된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을 21%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8년 내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 : 50.2%(2017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연도별 목표(>)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고위공무원단	6.8%	7.2%	8.2%	9.6%	10%
본부 과장급 (4급 이상)	15.7%	17.0%	18.4%	19.8%	21%

- '차별없는 임용의 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주요 보직 성별비율 관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 공채시험에서 한쪽 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 20%) 미달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2017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한 추가합격인원 : 남 34명, 여 34명

- 남성 육아휴직 사용 권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의 동일지역 거주 지원을 위한 전보제한 제도 개선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4%(현재)에서 6.8%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하여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직장에서 장애인공무원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지원을 '17년 각각 2%, 3%→'22년 4%, 5%) 하고, 공무원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며,
 -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등으로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 5·7급 공채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5급 2007년, 7급 2015년 도입)를 목표비율 달성 시까지 연장 시행하고, 지역인재 7·9급 수습 직원 선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 고졸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를 위해,
 -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을 2017년 말 기준 21.6%에서 2022년까지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확보하며,
 - 과학기술분야 공직 인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직류 등 미래 대비 직렬·직류 개편을 추진하며,
 - 이공계의 여성 인력 확대로 이공계 분야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 공무원 교육에 최신과학기술 과정을 확대하여 기술기반 사회에 부합하는 행정역량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응시자격 대상자 확대(‘10년 155만명→’18년 약 246만명(추정))에 따라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며,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직채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향후 이들의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공직 내 활용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포용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균형인사 기본계획 이행 절차 >



-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균형인사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매년 말 기준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 평가우수기관은 기관·유공자 포상, 교육훈련 및 고용휴직 인원 조정에 반영하고, 미흡기관은 인사감사 시 「균형인사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미흡원인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판석 처장은 “균형인사는 단순히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에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성 관리의 일환이다”라며,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 정책의 이행력 확보 방안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제목과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제목이 너무 길다.
 - 문장을 자주 완결하지 않고 있다.
 - 제목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지 못한다.
 - 문장이 너무 길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 띄어쓰기 오류가 많아서 읽기가 불편하다.

- 정보량과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 굵은 글씨 처리가 많아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다.
 - 수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표나 그래프를 더 활용하면 좋겠다.
 - 소제목 등을 활용하면 구성상의 위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의 양이 많으나 단락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단락 서열의 구분이 없어 다소 복잡해 보인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조달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조달청 (나군)	쇼핑몰단 가계약과	군납용 라면, 군장병 입맛에 따라 공급	'18.06.18.	814

	보도자료 www.pps.go.kr	부 서	쇼핑몰단가계약과
		과 장	여 인 욱
	총 3매	사무관	임 영 훈
	배포일 2018. 6. 18.(월)		042-724-7214
배포 즉시 보도			

군납용 라면, 군장병 입맛에 따라 공급

조달청, 구매방법 개선으로 군장병에게 라면 선택권 부여

- ☐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 가능

- ☐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1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된 업체의 특정 종류의 제품만 공급

- 지난해 말 국방부는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군과 조달청이 협업하여 추진한 것이다.
-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 된다.

□ 이번 계약에는 (주)농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 (주)농심, (주)오뚜기, 삼양식품(주), (주)팔도

** (기존) 단일 업체, 10개 라면 → (개선) 4개사, 50개 라면(프리미엄 라면,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대다수 시중 라면 선택 가능)

-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정보량과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굵은 글씨가 지나치게 많다.
- 붉은색 글자는 읽기에 불편하다.
- 리드에 낱짜 등 핵심 정보가 빠져있다.
- 군 장병 기호에 맞는 라면 공급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 관련 내용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추가 내용을 기술하면 좋을 것이다.
- 제도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군 장병의 의견 등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 군납용 기호품에 대한 품목별 현황, 구매방식 등이 첨부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해양수산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해양수산부 (나군)	유통정책과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위판장 위생환경 개선기준 마련한다	'18.06.21.	1014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18. 6. 21.(목) 총 8매(본문 2, 참고 6)		
담당 부서	유통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정도현, 사무관 양정규, 주무관 최수경 ▪ ☎ (044)200-5443, 5444		
보 도 일 시		2018년 6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위판장 위생환경 개선기준 마련한다

- 6.4~6.25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18.6.4~6.25) 중임을 밝혔다.

< 전국 수산물 위판장 지정현황('17년) >

(단위 : 개소)

계	경인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0	10	11	3	27	24	5	54	22	54	10
100%	4.5	5.0	1.4	12.3	10.9	2.3	24.5	10.0	24.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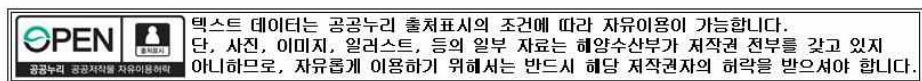
지난 2017년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이 개정되어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법령바다/행정예고 게시판 참고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열을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정보량과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내용을 이해하기에 기사가 다소 짧다.
 - 밑줄이나 굵은 글씨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의 내용이 본문에는 없어서 무엇과 관련되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
-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체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 관련 내용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추가 내용을 기술하면 좋을 것이다.
 - 앞부분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추가되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위반 시 제재 사항 등도 명기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행정안전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행정안전부 (나군)	안전기획 과	안전수칙 지켜 놀이시설 사고 예방하세요!	'18.05.02.	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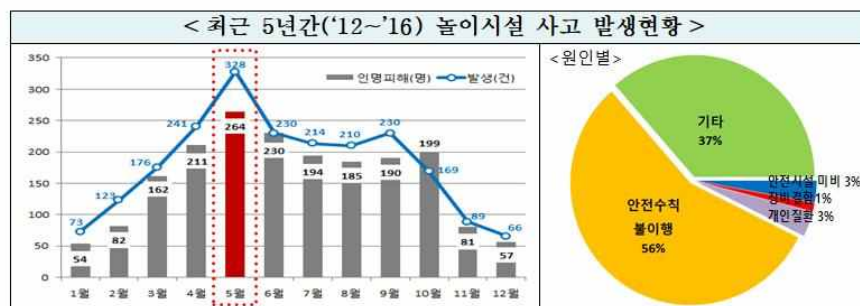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작성과	안 전 기 획 과
	2018년 5월 3일(목) 조간 (5. 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정운한 주무관 오영남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110 044-205-4121 010-3033-5709

안전수칙 지켜 놀이시설 사고 예방하세요!

- 주간(5.6. ~ 5.12.) 안전사고 예보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놀이공원과 행사·축제장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2~'16)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는 총 2,149건이며, 1,909명의 인명피해(사망 34, 부상 1,875)가 발생하였다.
 -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과 유원지 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출처: 재난연감)
- 5월에는 놀이시설 사고(발생건수 328건, 15%)와 인명피해(264명, 14%)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특히, 놀이공원 등으로의 가족나들이와 각종 행사·축제장*에서의 놀이시설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

* 대한민국 어린이 축제 2018(서울 광진구 5.3.~5.5.),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 책 잔치(5.5.~5.7.) 등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 이상(56%)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였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행사축제장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 또한 어린이는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고,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하니, 혼잡한 곳일수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나들이 갈 때, 아이를 예쁘게 입히기 보다는 활동하기 쉽고 안전하게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끈 달린 옷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 등에 걸려 위험하니 피한다.
- 놀이기구에 탈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용하고, 주변 사람을 밀치거나 잡아당기지 않는다.
- 또한, 머리카락 등 신체를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만 6세 이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하고, 놀이기구를 탈 때 아이를 안거나 감싸고 타면 아이가 튕겨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으니 삼간다.
- 아울러, 놀이기구별 탑승 가능한 권장연령과 키 제한을 지킨다.
- 한성원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놀이공원 등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자료의 적합성과 기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특수기호 사용의 통일성이 약한 것 같다.
 - 주간 예보의 특성이 강하므로 정책 소개 자료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자료이다.
 - 최근 5년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를 그래프와 표로 설명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이 2012~2016년이다. 최근이라면 2017년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볼드체를 남용하고 있다.
 - 시각자료 활용이 권장된다.
 - 리드에 낱짜 등 핵심 정보가 빠져있다.
-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관련 내용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추가 내용을 기술하면 좋을 것이다.
 - 대표적인 사례(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들어 일반인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나군-환경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환경부 (나군)	환경사업 경제과	기업·공공기관 1,500곳, 2016년 환경정보 분석 공개	'18.06.14.	2243

보도 자료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보도일시	2018년 6월 14일 석간 (6. 14.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이창흠 과장 / 허균 주무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1 / 67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경영실	이일규 실장 / 이현호 책임연구원 02-2284-1960 / 1961
	배포일시	2018. 6. 12. / 총 15매	

기업·공공기관 1,500곳, 2016년 환경정보 분석 공개

- ◇ 기관 당 에너지·용수 사용량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등 배출량 감소
- ◇ 6월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 기업과 유공자 포상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1,500곳의 주요 기업·기관의 환경정보를 분석한 '2016년 환경정보 공개 보고서'를 6월 14일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 공개했다.
- 이 보고서는 주요 기업·기관 1,500곳(사업장 기준 9,284곳)에서 사용·배출한 용수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정량적인 환경정보 24개 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 2016년도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현황 >

(단위 : 개소)

	합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 기관	국립 대학	지방 공사/공단	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녹색 기업	배출권 거래업체	지방 의료원
본사(대표사업장) (사업장 기준)	1,500 (9,284)	44 (371)	243 (4,709)	234 (1,324)	52 (111)	45/68 (186/526)	255 (379)	23 (28)	526 (1,640)	10 (10)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해당업체

- 2016년도 환경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관 당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등 배출량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 총 용수사용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나, 본사(대표 사업장) 기준 1,500곳의 기관 당 용수 사용량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 사용량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전년대비 117곳(사업장 기준 564곳) 증가되었음에도 총 사용량은 전년대비 3.7% 감소, 기관 당 사용량은 전년대비 11.2% 감소('15년 12.9만 TOE → '16년 11.5만 TOE)한 것으로 나타났다.
 - * TOE(Ton of Oil Equivalent) : 에너지원의 발열량을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1TOE는 석유 1톤의 발열량인 1,000만kcal에 해당됨
- 또한 대기·수질 배출시설 관리 등의 투자 증가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기관 당 배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8.5%, 16.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 환경오염 저감투자 참여 기관수('15년 432곳 → '16년 490곳, 13.4% 증가)
- 폐기물 배출량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 증가에 따라 총 배출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기관 당 배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5.2%, 5.1% 감소하였다.
- 특히, 환경개선에 기여가 큰 녹색기업은 용수, 에너지, 온실가스, 폐기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2015년 대비 2조 9,855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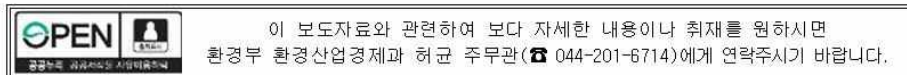
< 2016년도 환경정보공개 주요 현황 >

구 분	용수 사용량 (천톤)	에너지 사용량 (천TOE)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천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천톤)	폐기물 배출량(천톤)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총 사용·배출량 (증가율)	2,064,187 (1.6%)	172,082 (△3.7%)	488 (△0.6%)	130 (△9.5%)	47,869 (2.9%)	2,952 (3.0%)
기관당 사용·배출량 (증가율)	1,376.1 (△6.4%)	114.7 (△11.2%)	0.3 (△8.5%)	0.1 (△16.6%)	31.9 (△5.2%)	1.968 (△5.1%)

- 이번 환경정보공개 보고서는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업종별, 지역별, 연도별로도 비교 분석하여 함께 수록했다.
 -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빅 데이터 분석기관, 평가기관(ESG*) 등에서 기업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기업은 자사 수준 비교·분석, 국민은 지역 내의 환경현황 파악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기업·기관 투자 시 핵심지표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수준을 평가
- 한편, 6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환경정보 등록 실무교육이 열린다.
 - 이날 시상식에서는 환경정보 등록·공개에 성실한 이행과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대상을 받는다.
 - 이외에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우수상을, GS파워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청이 특별상을 각각 받는다.
-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해가 거듭될수록 강조되고 있다”라며,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환경경영 정착을 가속화하고 경영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2. 연도별 환경정보 통계.
 3. 2018년 환경정보공개 대상(大賞) 개요.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 환경정보공개 시상식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6월 14일 오후 4시 예정)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어휘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한자어, 외래어 등이 불필요하게 많아서 순화 작업이 필요하다.
 - 두 번째 □항목의 다섯 번째 ○항목의 '편익'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 영어 약자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나 자료의 분량에 비해 이러한 어휘가 너무 많이 사용되었다.
- 정보량과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
 - 정보들이 너무 붙어 있어 공고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 중요한 사항은 굵은 글씨 등으로 달리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사 정보만으로 환경평가지표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 용어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학술적 단어가 많아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 현황 및 정보 공개 내용만 있고 시사점이나 향후 계획, 즉 에너지 효율성, 오염물질 감축 등에 관한 청사진이 없어 아쉽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고용노동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고용노동부 (다군)	고용문화 개선정책 과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18.02.26.	1506



보도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 보도일시: 2018. 2. 26(월) 석간,
<인터넷 2018. 2. 26(월) 09:00 이후>
☞ 총 6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여성철(044-202-7496)
사무관 장유은(044-202-7467)
사무관 천민정(044-202-749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 출근 시에도 정부 지원
- 모든 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다.
 -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 (현행)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만 지원 → (변경)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15~35시간의 경우에도 지원

○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예시> 1일 8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 i) 정산기간 1주, (월~목) 9:00~18:30, (금) 9:00~16:00 근무, 목요일 1시간 연장근무
(현행) 해당 정산기간(1주)에 대해 지원금 제외 → (변경) 지원금 지급
- ii) 정산기간 2주, 1주차 (월~금) 8:00~19:00, 2주차 (월~수) 8:00~19:00, (목~금) 출근안함, 화요일 1시간 연장근무
(현행) 해당 정산기간(2주)에 대해 지원금 제외 → (변경)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제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인원) 556명('15년) → 2,530명('16년) → 5,487명('17년)

▲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657명('16년) → 3,880명('17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장유은 사무관(☎044-202-7467), 천민정 사무관(☎044-202-7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이 너무 길다.
 - 불필요한 접속사의 사용이 많다.
 - 문장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한 문장을 보는 듯하다.
 - 핵심 정보가 두 가지일 때, □(문단 시작 기호)를 두 개만 제시하고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하위 항목으로 처리하여 구성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 정보량과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불필요한 정보가 있다.
 -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나 도표 제시가 더 많이 제시되면 좋겠다.
 - 정보가 너무 많아 따로 분리하여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복지 제도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기에 이를 도표로 정리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 용어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수월하게 읽히지 않고 내용 이해가 어렵다.
 - 핵심 용어 및 어려운 단어들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 선택근무제, 유연근무제 등 개념이 어렵고 정책 자체를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보도 자료만으로는 잘 모르겠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군)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중소기업 기술고민,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가 도와드립니다	'18.02.12.	1260



보도자료



혁신이 혁신을 낳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보도일시	2018. 6. 27.(수) 조간(온라인 6. 26.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6. 26.(화) 09:00	담당부서	연구성과혁신기획과
담당과장	임요업(02-2110-2470)	담당자	정극주 사무관(02-2110-2472)

중소기업 기술고민,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가 도와드립니다 - 「SOS1379-전문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만)는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하고 기술 애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6월 27일 대전 롯데시티 호텔에서 'SOS1379-전문기관 간 중소기업 기술지원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 ※ SOS1379: SMEs One-stop Service로 전화 1 통화로 3일 이내 친구(79)가 된다는 의미
 - 이번 워크숍에는 과기정통부와 SOS1379 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중소기업지원 부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기업 기술지원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SOS1379-전문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기관 기관장 정례 간담회 개최 및 기업을 지원한 전문기관 연구원 우대방안 등을 논의하며,
 -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9월에 70여개 전문기관과 통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 SOS1379는 기술애로 발생 시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70여개 전문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 연구인력 및 장비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SOS1379 지원체계 >




- 지난 3년간 총 5만 4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중에서 전문 기술상담 실적은 약 1만 1천여 건으로 주로 연구개발자문·기술이전 등 기술지원, 특성평가·시제품제작 등 장비활용 관련 상담을 수행했으며, 상담수요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2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SOS1379 지원실적 >



- 대표적인 사례로 ‘(주)유엔아이솔루션즈(대표 : 임현영)’는 전기철도 운행과정에서 전기의 불안정한 접촉상태를 정밀하게 검측 하는 기술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SOS1379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SOS1379는 해당기술을 보유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기술이전을 시키고 기술사업화 및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 하도록 ‘17~’18년 4회에 걸쳐 후속지원을 하였다.
 - 그 결과, 전기철도의 안전모니터링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여 ‘17년 인도의 텔리메트로에 일부구간 시범사업으로 4억 9천만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전 구간으로 확장 시 약 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SOS1379를 활용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은 연계된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 이므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SOS1379와 전문기관 간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SOS1379가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SOS1379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SOS1379 기업 기술지원 실적
2. SOS1379-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지원 통합 워크숍 개최계획(안)
 3. SOS1379 전문기관 명단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극주 사무관(☎ 02-2110-2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편집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굵은 글씨체가 있다, 없다 하니까 글이 이상하다.
- 문장의 길이와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반적으로 문장이 길어 읽기에 부담스럽다.
 - 한 문장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 표기의 오류가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사례를 몇 개 제시하여 '기술애로'가 어떤 문제인지를 설명하면 좋겠다.
 - 뒤에 사례가 제시됐으나 '기술애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 워크숍을 진행하는 주체에 대한 설명과 그 성과의 정보가 있었으나 정작 워크숍 진행 내용이 빠져 아쉽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균-관세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관세청 (다균)	국제협력 팀	관세청,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	'18.06.08.	1264

			
보도일자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배포일자	2018. 6. 8.(금)	담당부서	관세청 국제협력팀
담당과장	임현철 042-481-7970	담당자	최진욱 사무관 042-481-7979

관세청,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 - 관세협력관 활동으로 한-인도 CEPA 적용문제 등 통관애로 해소 -

- ☐ 관세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CEP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도의 지역세관에서 문제 삼아 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우리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 *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
-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서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 인도 세관은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
 - 해당 수출물품이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가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지난 3월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 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 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하였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외교부(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문제의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혜택은 최소 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 인도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이나,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아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업 입장에선 직접 해외 관세당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올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한 것이며 관세협력관의 활동으로 인도의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은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인도에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외국 관세청(세관)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해외통관문제와 관련한 기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붙임1 참조)로 연락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의 길이와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문장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 했다.
 -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 호흡이 길게 이어진다.
 - 긴 문장 길이, 과도한 접속이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된다.
- 전체 구성과 제시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표제와 부제의 글자 색깔을 다르게 하면 좋겠다.
 - 전체 자료에 강약 구별이 없어 읽고 이해하기에 부담스럽다.
 - '무엇이 문제였나, 어떻게 해결했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로 분류해 항목을 나눠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하다.
- 표기나 문법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부분이 거슬린다.
 - 한글의 어법상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있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교육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교육부 (다군)	이러닝과, 융합교육 팀	미래교육의 첫발,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18.04.02.	182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2.(월) 조간 (인터넷·온라인 : 4. 1.(일) 오전 09: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3. 30.(금)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부서	교육부 이러닝과	과장 김 석, 서기관 서혜숙 (044-203-6475)	
	교육부 융합교육팀	과장 정윤경, 연구사 장원영 (044-203-7032)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미래교육의 첫발,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초 3,4학년과 중1학년 사회·과학·영어 디지털교과서 보급
중학교 1학년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첫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과학·영어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며, 중학교 정보 과목을 1학년에 편성한 1,351개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를 첫 적용하였다.
 - 디지털교과서는 2018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과학·영어 교과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한다. [☞\[붙임 1\] 참조](#)
 - *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 외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관리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외부 교육용 콘텐츠와 연계 사용
 - 디지털교과서는 온라인*으로 보급 중이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까지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 * 디지털교과서는 에듀넷(PC 및 노트북 사용자)과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패드 및 폰 사용자), 앱스토어(iOS 패드 및 폰 사용자)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붙임 2\] 참조](#)
 -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에 무선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 2021까지 인프라 확충규모(7,967교) : 무선인터넷 AP 19,500여대, 스마트패드 385,600여대

- 작년 도서·읍면지역 등 소규모 63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선AP(교당 최대 4대) 설치와 스마트단말기(교당 최대 60대) 보급했으며,
- 올해 1,878개 초등학교를 비롯해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7,967교)에 무선인프라를 확충한다.

□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는 중학교의 경우 2018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 전체 학년에 적용*하고, 초등학교는 2019년에 모든 초등학교(5학년 또는 6학년)에 적용된다. ⇨ [붙임 3] 참조

* ('18) 1,351개교(42%), ('19) 1,326개교(41%), ('20) 535개교(17%)

※ 2015 개정 교육과정(159월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는 '19년부터 5 또는 6학년 '실과'과목에서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교육 필수 실시

-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정보 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1,351개교(42%)이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2015년부터 교사 확보*, 인프라 확충, 교과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해 왔고,

* (~'20.2월) 신규선발, 복수자격연수 등을 통해 600여 명 총원 예정

-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구·선도학교('18 1,641교, 과기부 공동), 교사 연구회('18년 80개, 과기부 공동), 학생 동아리('18 1,891교)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교원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및 SW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 전문 강사교원을 통한 '찾아가는 연수', '집합연수' 등 다양한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 이외에도 교실과 가정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6종)을 제작·배포하고, 콜센터도 운영한다.

※ 콜센터 : 디지털교과서 문의(1544-0079) / 무선AP 및 스마트패드 문의(1588-5509)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 2.(월)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포초·중학교(충남 홍성군)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면서,
- “미래형 첨단 교육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교과서 적용 및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를 위한 현장 안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디지털교과서 적용 및 무선인프라 구축 계획
 2. 디지털교과서 개념 및 활용방법
 3.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준비 현황 및 추진 계획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롭게 활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이리닝과 서혜숙 서기관(☎ 044-203-6475, 디지털 교과서), 융합교육팀 장원영 연구사(☎ 044-203-7032, SW교육)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
 - 보도 자료 본문에 꼭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내용이 많다.
 - 핵심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자료의 전개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학생들이 왜 '소프트웨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 문장 구성과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중간에 조사가 빠지는 등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연결해 글이 늘어진다.
 - '...적용하고 ...적용된다'와 같이 '하다'와 '되다'를 섞어 써서 문장 구성이 좋지 않다.
-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다.
 -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가 무슨 뜻인지 의미가 모호하다.
 - SW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 컴퓨터 관련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독자가 이 글을 접했을 때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 때문에 사전을 한 번 더 찾아보게 될 것 같다.
- 시각적인 효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동된다.
 - 세 번째 □(문단 시작 기호)항목의 ※내용(부가 설명)을 표나 기호로 제시했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균-국토교통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국토교통부 (다균)	대중교통 과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18.06.15.	194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6. 15.(금)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담당자	▪ 과장 김기대, 사무관 정순열, 주무관 정정균 ▪ ☎ (044)201-3826, 3830
보도일시		2018년 6월 18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8.(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25일부터 좌석 예약노선 확대(2개→8개) · 탑승일 일주일 전부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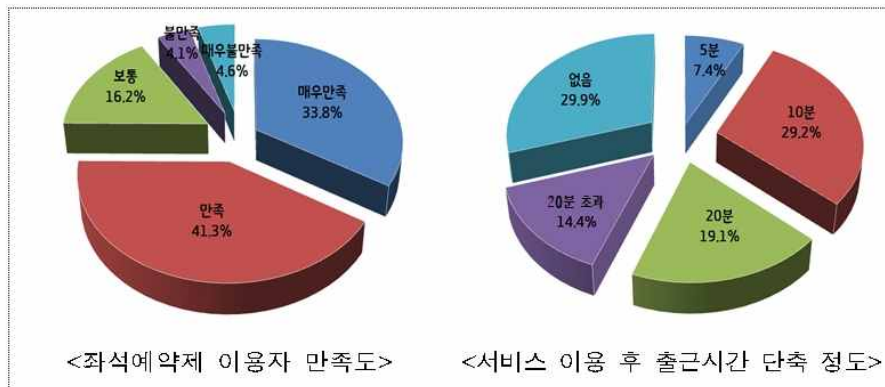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O2O서비스*로,
 - *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서비스
- M버스 만차로 인한 중간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별 대기시간 증가, 기점으로의 역류현상 등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2017년 7월부터 M버스 2개 노선(M6117, M4403) 및 일부 경기도 광역버스(8100, G6000)를 대상으로 좌석예약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시범사업 〉

- (사업대상) 광역버스 4개 노선(M버스 2, 경기도 광역버스 2)에 출근시간대 각 1회씩 시행
 - * M-버스 : M6117(김포 한강신도시~서울역), M4403(동탄 1지구~강남역)
 - 경기도 광역버스 : 8100번(용인 단국대~서울역), G6000(김포 고창마을~서강대)
- (사업기간) '17.7월~(계속)
- * 서비스 개시일 : M4403('17.7.4), 8100번('17.7.6), G6000번('17.7.11), M6117번('17.7.13)
- (이용방법) 모바일 앱 "굿모닝 미리" (Good Morning Miri)에서 사전 예약 → 요금 현장 지불(교통카드)

- 2017년 10월 실시한 좌석예약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70.1%가 5~20분 이상 출근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답변하였고, 75.1%가 사전 예약 서비스에 특히 만족하였으며, 기타 좌석예약제 적용 노선 확대(21%), 예약버스 증차(61%)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좌석예약제 이용객(284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17. 10. 17.~10. 23.



-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018년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대상 노선은 M4101, M2323, M7412, M7106, M5107, M7119(기존 M6117, M4403 포함)이며, 이용수요·운행대수·정류소별 탑승객 비율 등을 고려 후 선정하였으며,
- 6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되, 노선별로 출근시간대(6시30분~7시30분) 각 1회씩 시행할 예정이다.

<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및 서비스 개시일 >

노선번호	M4101	M2323	M7412	M7106	M5107	M7119
지역(기점 측)	용인(수지)	남양주 (평내·호평)	고양(정발산)	고양(대화)	수원(영통)	고양(식사)
서비스개시일	6월 25일	7월 2일	7월 9일	7월 23일	8월 중	9월 중

- 한편, 경기도에서도 광역버스 중 3개 노선(8201, G7426, 8002)에 대해 8201 노선은 6월25일부터, G7426·8002 노선은 2018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좌석예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운행지역 : 8201(용인), 8002(남양주), G7426(파주)

-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 “굿모닝 미리”(Good Morning MiRi)에서 할 수 있으며, 탑승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

* (예시) “6월 29일 차량” 예약은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6월 22일 0시”부터 가능. 다만, 첫 시작일인 6월25일 탑승 차량 좌석예약은 6월20일 0시부터 가능

- 모바일 앱으로 버스 좌석을 예약하는 자세한 방법은 “굿모닝 미리” 앱*의 ‘이용안내’ 또는 홈페이지(<http://miritr.com>)를 확인하거나, (주)위즈돔 1661-1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 iOS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굿모닝 MiRi”를 검색 후 설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M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실시를 통해 버스 탑승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기점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감소하여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들의 탑승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M버스 좌석예약제 확대에 따른 이용 추이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정순열 사무관(☎ 044-201-38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전체 구성과 편집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단의 기호가 너무 많아 같은 문단의 기호를 통일하면 좋겠다.
 - 문장 하나에 글씨 크기나 굵기를 너무 다양하게 사용해서 정신이 없다.
 - 불필요한 정보를 구구절절 기입하지 말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별첨하는 게 나아 보인다.
- 문장의 종결 방식과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을 미완성 상태로 연결해 길어졌다.
 - 띄어쓰기와 문장 길이가 긴 것이 거슬린다.
- 제목과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내용 구성이 중복적으로 되어있다.
 - 만족도 관련된 내용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다.
 - 'M버스'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 제목에 있는 '출퇴근 친구 M버스'라는 표현이 TV프로그램에 어울릴 듯한 '감성적 포장'처럼 느껴진다.
 - 노선별로 출퇴근 시간대에 1회에 한해 예약이 가능한데 반해 제목만으로는 마치 모든 버스를 예약해 탈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금융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금융위원회 (다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18.08.10.	2562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2018. 8. 10(금) 조간부터	배포	2018.8.9.(목)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02-2100-2657)	담 당 자	송 병 관 사무관 (02-2100-2643) 나 혜 영 사무관 (02-2100-2652) 오 형 록 사무관 (02-2100-2937)		

제 목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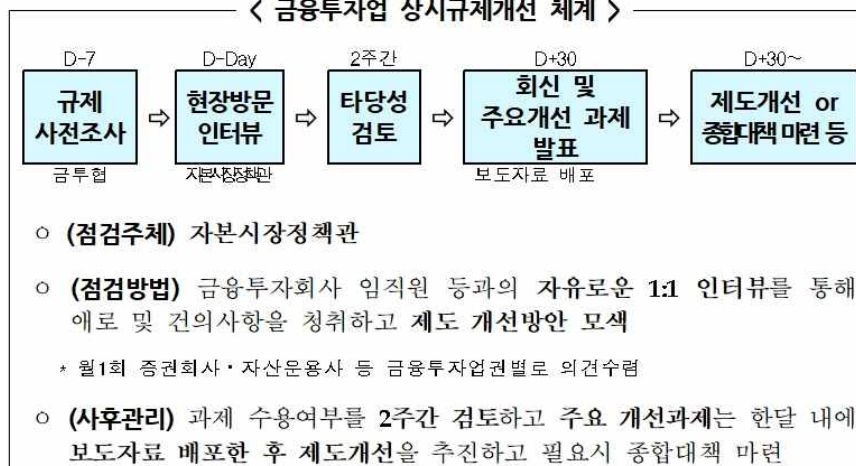
1.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개요

- ☐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 (등록규제) 금융투자업 998건,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18.7월말 기준)

-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을 추진
 - i)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 ii)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



2. 1회차 실적 및 주요 개선과제

□ '18.7월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 실시

- (일시/장소) 7.19일 14:00~18:00, 금융투자협회
- (실적) 12개* 국내 증권회사와 면담하여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대신, 메리츠, 미래, 삼성, 신한, 유안타, 하나, 한국, 키움, DB, KB, SK

<주요 개선과제>

① 증권사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

- (건의) 증권사가 PEF GP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을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대상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

*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업무 불가

* PEF(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 10%이상 확보 필요) GP업무 수행시 PEF보유 지분을 증권사 직접 보유 지분으로 간주(≒ 5% 초과 보유로 간주되어 주관업무 불가)

- (검토)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을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 (인수업무규정 개정)

*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사 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b%)를 감안하여 보유지분율(a×b%)을 산정

■ (기대효과) IPO 주관업무 제약을 일부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유인을 제고

② IPO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 (건의) 정보교류차단 목적으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유 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하는 등 불편 초래

* IB부서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고유재산 처분은 고유 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 **(검토)**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유권해석 추진)

■ **(기대효과)** 증권사 IB부서가 인수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 효율성 제고

③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경영 허용

- **(건의)**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경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

* 예)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PG업체들과 협업은 용이치 않은 상황

- **(검토)** 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경영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수익 제고

④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 **(건의)**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 등이 부족한 측면

- **(검토)**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외국 국채(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에 한정

■ **(기대효과)**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

⑤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 **(건의)** 대기성자금으로 RP와 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명세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에게 혼돈 유발

* 자본법 §73에 따라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

- **(검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 RP(환매조건부 매매), MMW(증권금융 예금) 등의 경우 원본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 **(기대효과)** 증권회사가 통보하는 매매명세에서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여 매매명세통보의 실효성을 제고

⑥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 **(건의)**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통지 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효용성이 낮은 수단만을 인정하고 활용 중

- **(검토)** 최근 IT환경변화에 맞추어 통지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 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지 방식 허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3. 향후 추진 계획

☐ (유권해석 필요사항) 8월 중 유권해석 발급

☐ (법령개정 사항)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

☐ (자산운용사 현장방문) 8.22일 실시 예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	---	--	---	---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보도 자료가 아닌 금융위의 성과 요약본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 문장의 종결 방식과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명사로 문장을 끝내고 있어 해석이 중의적일 수 있고 다소 권위적으로 느껴진다.
 - 전반적인 서술이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나 글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외래어를 보충설명 없이 남발하고 있다.
 - 일반 시민이 읽기엔 전문 용어가 너무 많다.
 -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불친절한 보도 자료이다.
 -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PEE, GP, IPO, IB부서, RP)
 - 영문약어 등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기획재정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기획재정부 (다군)	산업경제 과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18.06.22.	70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8. 6. 22.(금) 17:4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이상윤(044-215-4530)	담당자	오성태 사무관 (044-215-4533)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오늘(6.22일) 오후 2시 벤처기업협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
 -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으로 해소를 위해 10대 기업(6.15일), 중견기업(6.20일)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정기 간담회
 - * (4차) 6.26일(火)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이후 업종별 간담회 예정
- ☐ 이 차관보는 혁신성장 컨트롤타워인 '혁신성장본부' 출범 등 정부의 가속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 기업중심의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 특히, 벤처기업들의 투자와 신규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힘
- ☐ 참석자들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규제완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금융 유연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완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 지원 등에 관한 방안을 건의
- 이 차관보는, 공정위,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며 민간의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투자·고용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해 줄 것을 당부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의 종결 방식과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 길이가 너무 길어 흐름이 끊긴다.
 - 간결한 단어로 종결하는 것도 있었으나 중간에 어미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장 종결 방식이 통일되지 못했다.
- 문법적인 오류가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날짜 표기가 거슬린다. (6.22일, 6.20일, 6.15일 등)
 - 띄어쓰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소하는데 총력' 등)
- 용어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M&A'에 대한 설명이 짤막하게 있으면 좋을 듯하다.
 -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료를 평가하기 힘들다.
 - '노력을 설명', '중요함을 강조', '총력을 다할 것', '적극 강구' 등 주관적이고 막연한 수사적 과장어들이 많아 독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농림축산식품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농림축산식품부 (다군)	농촌산업 과	농식품부, 농촌여행 브랜드 '자연스來'로 농촌여행을 전 세계에 알린다	'18.02.12.	126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2018년 2월 1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산업과 최봉순 과장(044-201-1581), 최준태 사무관(1592) / 제공일 : 2월 12일 (총 10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식품부, 농촌여행 브랜드 '자연스來' 로 농촌여행을 전 세계에 알린다.		

《 주 요 내 용 》

- ◆ (농촌여행 브랜드 개발) 농촌여행 방문객 1,100만 명 달성 등 농촌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농촌여행의 통합적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농촌여행 브랜드 '자연스來' 개발

	푸른 풀잎과 쉽표를 결합하여, 바쁜 도시에서 벗어나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평온하고 맑게 해주는 농촌여행을 표현
---	---

예시1) 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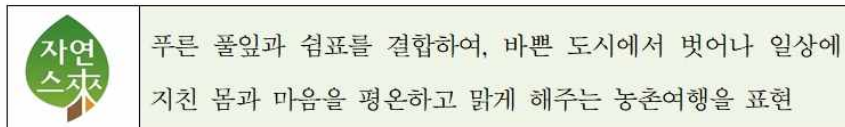
예시2) 응용형



- ◆ (BI 사용 농촌여행 홍보 지속 전개) 브랜드 사용을 통해 농촌여행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 웰촌 홈페이지 내 농촌여행 브랜드 소개 웹페이지 개설
 - 향후 농촌여행 관련 홍보 시 '자연스來'를 적극적으로 활용
- * 홍보 동영상이나 리플릿 등 홍보매체 등에 '자연스來' 노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농촌 여행을 알리고자 농촌여행 브랜드 ‘자연스來’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촌여행의 통합 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여,
- 학계,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자연스來’를 최종 선정 하였다.



- 이번에 개발된 ‘자연스來’는 농촌여행의 최상위 브랜드이지만, 그 동안 농식품부가 추진해 온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농촌愛올래, 팜연수, 스탬프투어, 리조트 연계 농촌여행상품 등의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고려하여 상·하·좌·우 하위 브랜드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 예시) ‘자연스來 농촌愛올래’, ‘자연스來 스탬프투어’ 등



- 또한, 기본브랜드에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주제나 내용에 따라 명함, 현수막, 가로등배너, 리플렛, 배지, 웹/어플, 현판/안내 표지판 등 다양한 표현방식과 응용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촌여행 브랜드 ‘자연스來’ 개발을 계기로, 농촌여행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먼저, 농촌여행 공식포털 사이트인 ‘웰촌’에 농촌여행 브랜드 소개 페이지를 개설하고, 평창올림픽 연계 농촌여행상품, 스탬프 투어,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자연스來’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며,
 - ‘농촌에서 여름휴가보내기 캠페인’, ‘농촌관광자원 국제포럼’, 국·내외 박람회 등 각종 행사 시 홍보할 예정이다.
 - * 홍보 영상,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등에 ‘자연스來’ 표기,
 - *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 농촌여행 브랜드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 농식품부는 이번 농촌여행 브랜드 개발을 통해 농촌여행의 통합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농촌여행이 보다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농촌여행 브랜드 ‘자연스來’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농촌관광 종합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내용이 중복적이다.
 - '농촌여행브랜드'의 의미(푸른 풀잎과 쉼표를 결합하여, 바쁜 도시에서 벗어나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방문객 1100만 명 달성'이란 표현은 이미 달성한 것인지 목표인지 불투명하다. 표현으로만 보면 이미 달성한 것으로 읽히는데, 이 경우 언제 달성한 것인지 기준 연도를 적시해 줘야 한다.
- 문장의 길이와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본문 문장의 호흡이 다소 긴 부분들이 있었다.
 - 문장을 완성하지 않고 이어서 쓴 점이 눈에 거슬린다.
-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외래어에 대한 순화어가 필요하다.
 - 외래어가 많이 사용된 점이 눈에 거슬린다.
 - 'BI'는 전문 용어인 데다 영문 약칭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
 - '팜연수, 스탬프투어' 등 고유명사성 용어를 외래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자연스來, 농촌愛' 등 브랜드화한 용어가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한자를 활용한 이런 식의 조어는 우리말 파괴라는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표현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방송통신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방송통신위원회 (다군)	통신시장 조사과	통신사 상담사 규칙적인 점심시간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	'18.02.12..	1184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8 행정동계행정안전부 및 동계행정안전부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2월 12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8.2.12.(월)

문의 :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고낙준 과 장(☎2110-1530)
 정복덕 서기관(☎2110-1531)

통신사 상담사 규칙적인 점심시간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

- 4.1부터 고객센터 점심시간에 긴급·전문 상담 중심으로 운영 -

그동안 불규칙적인 점심식사 주기로 소화장애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약 16,000여명)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점심시간이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에 따르면, 통신4사(KT, SKT, SKB, LGU+)는 점심시간에도 이용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센터 상담사의 점심시간을 최대 6교대제(11시 30분~15시 30분)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나, 오는 4월 1일부터 상담사의 규칙적인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심시간(12~1시)에는 요금문의, 각종 신청·변경 등 일반 상담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분실·서비스 장애 등 긴급·전문 상담은 기존과 같이 점심시간에도 운영하되, 상담사들의 점심시간은 2교대(11시30분~1시30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개선 前 >		< 개선 後 >	
상담업무		일반상담	긴급·전문상담
3~6교대(11:30~15:30)		상담사의 71.2%	상담사의 28.8%
		상담중단 (12시~13시)	2교대 (11:30~13:30)

또한, 통신4사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서·ARS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점심시간에 일반 상담이 중단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한편, 점심시간 통화발신 이력관리 및 콜백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상담사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 점심시간 통화발신 이력을 관리하여 상담전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상담사가 전화

아울러, 점심시간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식당 및 휴게 공간도 확충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장이 고객센터(SKT)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기되어 추진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자인 상담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마련 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의 구체적인 이용자 불편 방지 대책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상담사들의 점심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용자들께서는 점심시간에 상담을 하지 못해 다소 불편해질 수 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바로 상담이 가능한 만큼 상담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타 업종으로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끝.

< 각 사별 담당 문의처 >


소 속	직 급	성 명	전 화 번 호
KT	대리	김상원	031-727-0114
SKT	매니저	조현진	02-6100-6412
SKB	매니저	김경호	02-6266-2932
LGU+	책임	권명진	070-4080-6125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전체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단순 자료를 지나치게 길게 풀어 쓴 듯한 느낌이 든다.
 -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 문장 안에 요지는 한두 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문장의 구성 방식과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반적으로 문장이 길다.
 - 문단의 길이가 너무 길다.
 - 여러 개의 문장을 너무 많이 연결했다.
 - 문단과 문장이 지나치게 길게 표현된 곳이 많아 재정비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 용어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ARS'는 우리말 풀이가 필요하다.
 - 일부 기업 명칭과 한자어 표현에 대한 순화가 필요하다.
 - 타 업종은 일상적 표현이 아니므로 '다른 업종'과 같이 자연스럽게 쓰는 게 좋을 것이다.
 - 일반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심시간을 방통위에서 관여해 조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어색하게 읽힌다. 정책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산업통상자원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산업통상자원부 (다군)	수출입과	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마리 토끼 동시에	'18.04.26.	1410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4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 25.(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4. 25.(수)		담당부서	수출입과
담당과장	이원희 과장(044-203-4040)		담 당 자	이중엽 서기관(044-203-4043) 한혜원 주무관(044-203-4045)

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마리 토끼 동시에

-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 한도 최대 2배, 수수료 최대 50% 할인
- '22년까지 무역보험 중 10조원 지원, 청년 일자리 3,500개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4. 26.부터 본격 시행한다.

□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청년 : 취업을 원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구체적인 지원 요건으로 먼저,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해당하며,
-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 신설하는 특별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①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하며, ②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천만 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 * (예시) 기존 한도가 4억원인 중소기업 A社가 청년 상시 근로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5억원의 추가 한도를 받아 최대 8.5억원의 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2년까지 최대 3조 9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 1천억 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이를 통해 '22년까지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자료 구성 및 전개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큰따옴표는 대화문 인용 시 쓰는 부호라 헛갈릴 수 있으므로 작은따옴표를 써야 한다.
- 문장의 종결 방식과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이 길며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어렵다.
 - 다소 전문적인 내용인 데다 문장이 전반적으로 길어 읽기에 어려움이 있다.
 - 문장의 길이 다소 길고, 문단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 용어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청년 실업 해소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 '3,500명의 청년 일자리'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를 제시해야 과장적 표현으로 읽히지 않을 것이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외교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외교부 (다군)	양자경제 외교국	외교부,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맞춤형 수입규제 대응 강화	'18.01.12.	1464

 외교부		보도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19
배포일시	2018. 1.12.(금)	담당부서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담당자	김희상 / 양자경제외교국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663)			

외교부,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맞춤형 수입규제 대응 강화

-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강화, 현장 중심 대응 체제 내실화 -

1.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셰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수입규제대책반과 재외공관 소재 현지 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공청회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조사·조치 종결 및 관세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對韓 수입규제조치(조사중 포함) : 142('13) → 158('14) → 177('15) → 184('16) → 189('17)

< 2017년 수입규제대책반 주요 활동 >

- ☐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및 현지 공관 공청회 참석 20회, 조사당국 면담 17회 등
- ☐ 정부답변서 및 입장서 제출 19건, 서한 송부 20건 등
- ☐ 우리 관련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 21회 이상 실시

2. 대표적 사례로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 종결 및 인도 정부의 폴리부타디엔고무(PBR)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결을 들 수 있다.
 - o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장 파견, △정부서한 전달, △고위급 면담시 의견 개진 등을 통해 EU의 PTA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EU가 조사를 종결시키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연 5.3억불의 우리 수출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o 이 외에도 수입규제대책반의 2017년 대표적인 성과는 아래와 같다(상세 별첨).
 - 베트남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율 인하 최종판정

- 중국 설탕 세이프가드 우리기업 규제부담 최소화
- 중국 에피클로로히드린 반덤핑 규제 종료
- 파키스탄 오프셋잉크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태국 산세도유강판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인도 열연·냉연강판 우리기업 규제부담 최소화
- 인도 폴리부타디엔고무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호주 열연코일 반덤핑 규제 종료

3. 한편, 외교부는 국별로 다양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1차 대응 주체인 우리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국, 중국 및 인도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제도 및 대응방안을 상세 수록한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발간하였다.

※ 총 2,200부 배포 / 외교부 홈페이지와 영풍문고,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 o 또한 본부 및 현지(인도, GCC)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법률·회계 전문가로부터 국가별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4. 외교부는 2018년에도 외국의 파상적인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위해 본부 수입규제대책반,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내 법률·회계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o 특히 14개의 재외공관에 소재한 현지대응반의 △우리 진출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방안 설명회·간담회 개최,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주재국 규제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수입규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 공관(14개국) :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EU,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 o 아울러, △ASEAN, 터키 등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품목별(철강, 화학섬유 등)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에 비롯한 우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문장의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이 너무 길다.
 - 전반적으로 문장이 다소 길어 끊어 쓸 필요가 있다.
 - 문장 호흡이 길고 불필요한 접속어가 많아 정책 사실이나 행사 내용을 전달하는 점은 좋으나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는 어렵다.
-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예정이다', '…계획이다'와 같은 구체적 표현을 쓰는 게 좋다.
 - '…것이다'와 같은 표현이 있어 글이 딱딱하고 권위적으로 읽힌다.
-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체적으로 글자의 크기가 작아서 보기가 불편하다.
 - 쪽수가 늘어나도 글자의 크기와 여백을 좀 더 늘려서 보기 편하게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용어 설명들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다.
 - 알기 힘든 외래어를 보충설명 없이 사용하였다.
 - '불'은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다. (5.3억불→5억3000만 달러)
 - 요즘은 한자를 못 읽는 사람이 많아 한글과 함께 쓰면 좋겠다.
 - 'GCC' 같은 영문 약칭도 모르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우리말 풀이를 함께 써야 한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원자력안전위원회)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원자력안전위원회 (다군)	원자력안전과	원안위, 한울4호기 정기검사(임계 후 일부검사) 미완료에 따른 수동정지 후 조사 예정	'18.08.30.	835

 원자력안전위원회 http://www.nssc.go.kr		보도자료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규제
보도일시	2018.8.30.(목) <즉시보도>			총 6쪽(붙임 4쪽)
배 포일시	2018.8.30.(목)	담당부서	원자력안전과	
담당과장	오맹호(02-397-7281)	담당자	권민재 사무관(02-397-7285)	

원안위, 한울4호기 정기검사(임계 후 일부검사) 미완료에 따른 수동정지 후 조사 예정 - 임계 후 11개 검사항목 중 1개 미완료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5.18일부터 정기 검사에 착수하여 '18.7.20일 임계를 허용했던 한울4호기에 대하여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후 검사 1개 항목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동정지하고 조치할 것을 보고받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한울4호기 재가동(임계) 승인 후(7.20) 진행해야하는 11개 후속검사 항목 중 출력상승시험 등 10개는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1개 검사 항목인 주급수 계통 검사가 터빈으로 구동되는 주급수 펌프* 2대 중 1대에 대한 유량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조치를 완료할 것을 한수원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 *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로서, 정기검사 시 펌프의 입/출구 압력, 진동 등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
- 이에 한수원은 유량이 형성되지 않는 원인을 배관에 연결된 밸브 속에 들어있는 디스크의 움직임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하였으나, 기한 내 조치가 어렵다고 보고 8월 30일 원자로 출력감소에 착수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뒤 정비를 수행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 향후 원안위는 유량이 형성되지 않은 정확한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해·정비 과정에서 조사·확인할 계획이며,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가동을 승인하고 주급수 펌프의 성능을 다시 검사할 계획입니다.

○ 한편, 검사 대상인 주급수 펌프는 원자로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정상운전 중 해당 펌프가 고장 날 경우 출력감소를 포함하여 발전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용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위원회 이름을 줄여 표현하였다.
 - 전체적으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편이다. 전문 용어가 아니라면 쉽게 서술하면 좋겠다.
- 문장의 길이와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의 길이가 다소 길다.
 - 보도 자료의 요건 충족이 미흡한 문장 구성이다.
 - 전반적으로 문장이 다소 길다. 짧게 끊어 작성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 전체 구성과 편집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강조점이 없이 밋밋한 구성이다.
 - 핵심어휘나 문장이 강조 표시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중소벤처기업부)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중소벤처기업부 (다군)	기술창업 과	기업 현장목소리 반영, 창업지원사업 편리해진다	'18.08.27.	1374

2018년 8월 2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월 26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www.mss.go.kr

·문의 : 기술창업과 김지현 과장(042-481-4407), 박종선 주무관(4535)

기업 현장목소리 반영, 창업지원사업 편리해진다.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

- ☐ 서류간소화, 성실실패 도입, 사업비 자부담 의무 명시 등 사업 참여 창업기업 부담 완화 및 책임성 강화
- ☐ 기술보호 노력 평가 지표 도입,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한 가점 부여 등 정책 변화 내용 반영

- ☐ 중소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지침 적용 사업 현황(12개)>

사업명	'18년 예산(억원)	사업명	'18년 예산(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1,013	선도벤처연계	76
창업선도대학	895	1인창조기업	100
스마트벤처캠퍼스	124	민관협력창업자육성	536
시니어창업지원	214	사내벤처육성	100
창업도약패키지	800	스마트창업터	90
글로벌엑셀러레이팅	72	제도전성공패키지	150

- 이번 지침 개정에는 중기부에서 청년 창업자와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자 개최한 '청바지(청년이라는 지금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 등이 주로 반영되었다.

* 창업벤처혁신실장 주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6개 지역 개최(6.25~7.27)

□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계획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을 1회로 제한하였으며,
 -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하여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를 도입하였다.
 - 동시에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하였다.
- 기술보호와 여성 창업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정책 변화에 발맞춰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한 가점 부여를 도입하였으며,
 - 창업 사업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비 정산원칙 신설, 사업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절차 등을 개정하였다.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공고번호 제2018-341호)에서 확인 가능

-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들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
-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창업기업에 편리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박종선 주무관 (☎ 042-481-45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전체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여백이 너무 촘촘하다.
 - 개정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 전체 내용을 봐도 문장 앞에 표시하는 다양한 글머리가 어떤 표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문장의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문장이 길다.
 - 백화점식 나열에 그쳐 읽기에 다소 지루하고 눈에 잘 안 들어온다.
- 용어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전체적인 설명을 보아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
 - '창업지원사업', '창업사업화' 같은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 부서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것보다 자료 안에서 한번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기를 바란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군-통계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통계청 (다군)	혁신행정 담당관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	’18.06.21.	1497

보도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6. 21.(목) 12:00
배포일시	2018. 6. 21.(목) 09:30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과 장: 이호석(042-481-2033) 사 무 관: 이상엽(042-481-2309)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

- 현장 일선의 지방청 직원을 포함한 통계혁신 담당자 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ICT·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처리 효율화’ 등 주제로 끝장 토론실시 -

-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6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충주 쉼터 리조트에서 일하는 방식혁신의 세부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해커톤(Hackathon)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일정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행사를 의미
- ☐ 이번 행사에는 본청뿐만 아니라 현장 일선의 지방청 담당직원을 포함한 통계혁신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불필요한 일 버리기’, ‘ICT·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처리 효율화’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이날 행사는 참석자를 5개 분임으로 나누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5why 질문법’,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는 ‘브레인스토밍’, 생각을 지도 그리듯 도식화하는 ‘마인드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 황수경 통계청장은 통계청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이 단순 업무 효율성 향상 등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전체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제목이 너무 길다.
 - 행간 여백이 불규칙하다.
 - 자간을 줄이니 답답해 보인다.
- 문법적 오류가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은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불충분한 표현이다.
 - '단순 업무 효율성 향상'도 '단순 업무'가 아니라 '단순히'로 써야 뒤에 나오는 '...에만 그치지 않고'와 호응한다.
-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행사를 진행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 보도 자료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 제목의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에 해당하는 내용이 본문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소통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 사례 (다균-특허청)


생산기관	작성부처	보도 자료 제목	생산 일자	음절 수
특허청 (다균)	산업정책 과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식재산(IP) 서비스, 특허바우처로 부담은 줄이고 이용은 편리하게	'18.02.29.	1509



특허청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박호형 042-481-5168 주무관 박기현 042-481-5175
	<p>2018년 2월 9일(금) 조건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8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p>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식재산(IP) 서비스, 특허바우처로 부담은 줄이고 이용은 편리하게

- 업체 당 연간 최대 6천만원 발급 -

2014년 구글에 32억불에 인수된 스타트업 'NEST'의 경우 300여건에 이르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고가의 인수 결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반면, 2012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SW를 개발한 국내 벤처 'L'사는 구글로부터 3천만불 투자 유치 직전까지 갔으나, 관련 특허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처럼 특허 등 지식재산(IP)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경쟁자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유치, 업무제휴 및 엑시트(인수합병 및 상장)를 촉진한다.

국내 스타트업들도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IP 서비스 비용은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 특허청(청장 상윤모)은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약 10억원으로 1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신생벤처기업을 지칭
- 특허 바우처를 활용해 앞으로 유망 스타트업은 필요한 IP 서비스*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IP서비스) 국내/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 바우처는 IP 보유 여부, 업력, 규모에 따라 소형과 중형 두 종류가 있으며,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30%, 현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바우처 종류 >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IP가 없는 초기 스타트업 대상
 - ★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
-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성장기·유망 스타트업 대상
 - ★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출원 또는 등록 IP 1건 이상

-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한편, 스타트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우처 재발급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 스타트업은 재발급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잔액의 자기부담금 비율(30%)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 또한, 특허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시 예상되는 IP 분쟁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동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법인,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 등록을 신청하여, 분야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등록될 수 있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업체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지식재산 업계의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의 스타트업 신청서 접수와 IP 서비스 기관 등록은 2.12(월)부터 3.9(금)까지이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st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2018년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개요

② '소통성'에 대한 진단

- 자료 편집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구성이 산만하다.
 - 내용이 너무 다닥다닥 내용이 붙어 있다.
 - 줄을 구별하여 내용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 문단 간 행을 나누거나 소제목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내용적으로 구별하기 쉽게 만들면 좀 더 좋은 자료가 될 듯하다.
-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평가단의 논평을 유사한 것끼리 제시한 것이다.
 - 해당 자료가 전문적인 지식을 없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용어 설명이 없다.
 - 외래어, 한자어 등이 너무 많으며 순화어 정비가 필요하다.
 - 한자어가 남용되고 용어 해설이 적절하게 되어있지 않아 내용 이해가 어렵다.
 - 핵심어인 '특허바우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V. 공공언어 진단의 영역 확장 및 개선 방안

1. 정부 업무보고 자료 진단

1) 정부 업무보고 자료 진단의 필요성과 요소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는 45개 정부 부처의 보도 자료와 더불어 18개 정부 부의 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새로이 평가 범주에 포함하였다.

정부 업무보고 자료는 업무의 진행 사항과 추진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일컫는다. 업무보고 자료는 업무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고, 주요 업무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연간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해 업무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고 새해의 업무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각 부처 누리집에 게시됨으로써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단이 필요하다.

- ① 정부의 업무보고 자료는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기에 공식성과 공공성을 갖는다.
- ② 정부의 업무보고 자료는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 ③ 정부의 업무보고 자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위와 같이 정부 업무보고 자료의 특성과 진단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바, 정부 업무보고 자료는 국민과 정부 기관의 소통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소통성’ 측면에서 우선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본 연구단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소통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단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에 앞서 기존 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시범적으로 살펴본 결과, 자료의 소통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과도하게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였다. 먼저, 한 예시로서 2018년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이기로 한다. 각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영어가 직접 노출된 단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 예: ‘PC(Poly Carbonate) 타입’, ‘글로벌 어젠다’, ‘컨트롤 타워’
- ② 불필요한 한자 사용이 많다. 예: ‘관왕지래(觀往知來)’

분석 결과,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한자어의 사용은 소통성을 해치는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들 항목은 명확하게 정량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2018년 사업에서는 새로운 진단 범주인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첫 진단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준거하여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한자어 사용을 평가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2) 정부 업무보고 자료의 진단 절차

정부 업무보고 자료의 진단을 위하여 18개 정부 부에서 연초에 작성하여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과의 ‘소통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진에서는 정부 업무보고의 진단 방식에 대하여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사용된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를 추출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 본격적인 진단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추출

과도하게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를 진단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각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사용된 모든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목록을 추출하였다.

정부 업무보고 자료는 일반적인 보도 자료와는 달리 1년의 업무계획을 모두 기술하여 보고하는 자료이므로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이 방대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통계 본 연구진에서는 통계 프로그램인 ‘R’을 활용하였다. ‘R’은 통계·데이터 마이닝 및 그래프를 위한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체적인 단어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텍스트(txt) 파일로 변환하여 자료 분석용 파일을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R 프로그램의 한글 자연어 분석 패키지인 ‘KoNLP’ 패키지를 사용하여 형태소 태깅을 실시하였다. ‘KoNLP’ 패키지에서는 KAIST 품사 태그셋을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였다. 그 후 단어 목록 중에서 ‘명사’로 태깅된 어휘들을 추출하고 이들 어휘를 연구보조원이 검토한 후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1차 목록을 작성하였다.¹³⁾

②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작성

13) 여기서 등장하는 ‘패키지(package)’, ‘태깅(tagging)’, ‘태그셋(tag set)’ 등의 표현도 엄격하게 따지는 순화가 필요한 단어에 속한다. 다만, 이 단어들에 대한 적절한 순화어가 보급된 상황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형태소 태깅 및 연구보조원 검토를 통해 작성된 1차 목록에 대하여 연구 책임자가 실제 정보 업무보고 자료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단의 대상이 되는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 목록의 경우, 실제 자료가 아닌 형태소 태깅 자료를 토대로 모든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를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우리말을 병기한 경우,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경우, 그리고 사전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쉬운 어휘인 경우 등 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연구 책임자가 원자료 검토를 통해 이러한 어휘들을 제거하고 누락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를 추가하는 작업을 거쳐 각 부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사용된 어렵거나 불필요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에 대한 최종 목록을 기관별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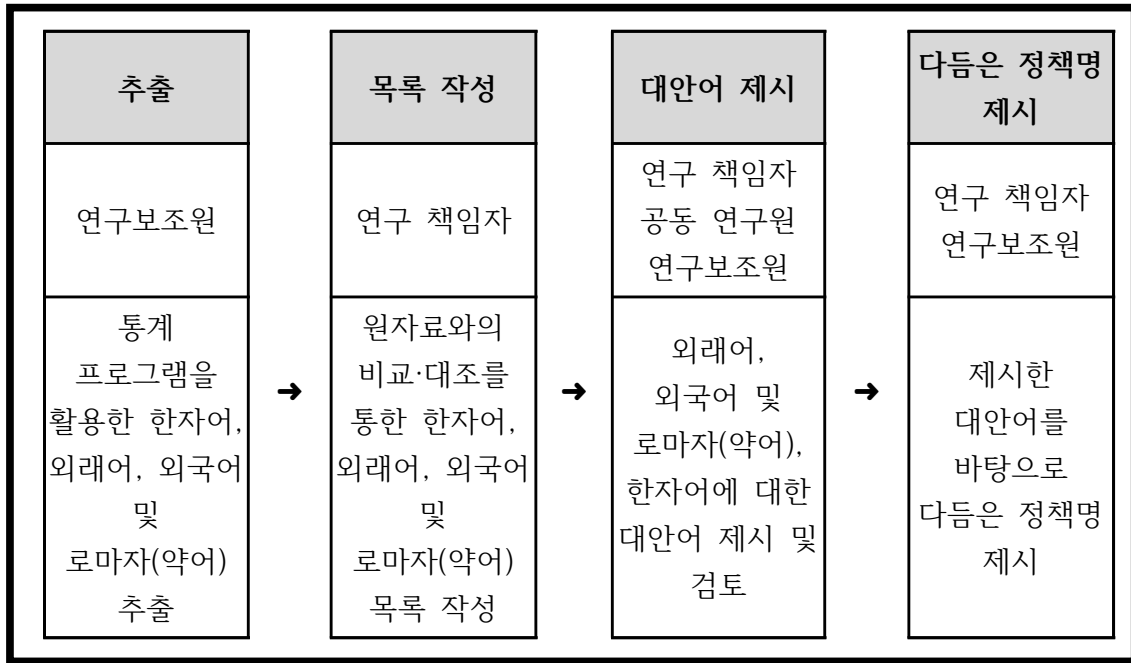
③ 대안어 제시 및 검토

진단 대상이 되는 어렵거나 불필요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이들을 교정하는 과정으로서 각 어휘에 대해 대안어를 제시하였다. 우선 국립국어원에서 해당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에 대한 순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연구보조원이 이들을 검색하여 대안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후, 아직 순화어가 없는 어휘에 대해서는 연구 책임자가 국어사전, 외국어 사전, 신문 기사, 기타 용례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어를 제시하였고 이를 연구진 전체가 검토하였다.

④ 다듬은 정책 용어 제시 및 검토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에 대한 대안어를 제시한 후, 최종적으로 대안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어려운 정책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정책 용어 순화 및 교정은 2018년 공공언어 진단 사업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진에서는 우선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정책 용어를 대상으로 다듬은 정책 용어를 제시하였다.

1차 작업으로서 연구보조원이 사전에 제시한 대안어를 바탕으로 정책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였고 2차 작업으로 연구 책임자가 이를 검토 및 수정하였다. 대안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로 구성된 정책명의 경우, 책임 연구자가 정부 업무보고 자료 원본과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새로운 정책 용어를 제안하였다.



[그림 10] 정부 업무보고 자료 진단 체계

3) 정부 업무보고 자료의 진단 결과

정부 업무보고 자료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외래어 및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면 서 이에 대한 설명이나 고유어 병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필요한 한자어의 경우 한 자료당 평균적으로 5.6개, 외래어와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는 각각 25.1개, 15.5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의 사용 양상은 기관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더불어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를 포함하고 있는 어려운 정책 용어의 남용 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저해하므로 문제가 되며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기관별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사용 양상은 다음 [표 34]와 같다.

연번	기관명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어려운 정책 용어
1	고용노동부	5	19	8	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32	23	4
3	교육부	6	6	5	1
4	국방부	5	11	18	4
5	국토교통부	9	56	50	11
6	기획재정부	3	12	18	6
7	농림축산식품부	13	46	30	6
8	문화체육관광부	7	59	13	13
9	법무부	7	4	1	2
10	보건복지부	4	29	10	4
11	산업통상자원부	4	35	34	5
12	여성가족부	8	29	3	5
13	외교부	8	19	15	0
14	중소벤처기업부	2	68	29	25
15	통일부	1	1	1	0
16	해양수산부	4	7	13	6
17	행정안전부	5	15	6	6
18	환경부	4	4	3	0
총(개)		100	452	280	101
평균(개)		5.6	25.1	15.5	5.6

[표 34] 정부 기관별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 어려운 정책 용어 사용 양상

이에 본 연구진에서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에 대하여 기관별로 대안어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듬은 정책 용어를 제안하였는데, 이 자료는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별도의 심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는 게재하지 않고 국립국어원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연구 기간 내에 국립국어원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확정된 다듬은 정책 용어 목록은 본 보고서에서 붙임 자료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4) 정부 업무보고 자료 진단의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정부 18개 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당 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 정부 정책이나 연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필요한 한자

어, 외국어, 외래어 및 로마자(약어) 등이 남용되어 소통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적인 설명 없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또한 국민과 정부 기관의 소통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진에서 이번 사업에서 해당 용어들에 대한 대안어를 제시하였고, 국립국어원이 이를 최종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안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기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수용도나 정착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대안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급된 대안어에 대해서도 추후 수용도 및 정착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2018년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안된 대안어에 대한 보급과 교육, 수용도 및 정착도 연구를 향후 정부 업무보고 자료의 연구 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

2.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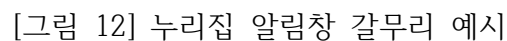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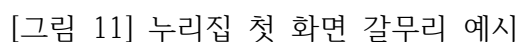
1)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의 필요성과 요소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는 정부 내 18개 부 단위 부서의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함께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 진단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공공기관 누리집은 각 부의 정책과 소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최근에는 누리집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누리집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누리집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이유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은 기관을 안내하는 지도에 해당하므로 누구나 쉽게 누리집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외국어·외래어 등의 남용을 줄임으로써 바람직한 국어사용의 전범을 보일 수 있다.
- ③ 조태린(2006)에서 공공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순화어도 제시한 바 있으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리집 첫 화면은 국민에게 각 기관을 안내하는 소개하는 관문이므로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마찬가지로 ‘소통성’ 측면의 진단이 중요하다. 본 연구단에서는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리집 첫 화면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진단을 위해 수집한 공공기관의 누리집 첫 화면 예시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앞서 누리집 첫 화면을 갈무리하여 살펴본 결과, 자료의 소통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과도하게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였다.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 2018년 4월 8일 갈무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누리집 첫 화면을 검토한 결과를 보이기로 한다. 각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로마자, 한자 등 한글 이외의 문자 표기가 많이 사용된다. 예: R&D, ICT, I-KOREA
- ②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많다. 예: Movies: ‘영화’로 써도 되는 한국어를 영어를 사용하였다.
- ③ 대체 가능한 외래어 사용이 많다. 예: 웹진, 캘린더, 신고센터: 이들 외래어는 각각 ‘누리잡지, 달력, 신고소’ 등의 다듬은 말로 대체가 가능하다.

분석 결과, 누리집 첫 화면에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라 보았다.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용되는 언어 역시 국어기본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 가능한 외래어는 다듬은 말을 씀으로써 국어사용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새롭게 시행된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 진단에서는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준거하여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한자어 사용을 진단하였다.

2)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의 진단 절차

누리집 첫 화면의 진단을 위하여 18개 정부 부의 누리집 첫 화면을 7월 27일 업무시간이 지난 이후 일괄적으로 갈무리하여 취합하였다. 진단 대상은 누리집 첫 화면에서 클릭 없이 보이는 모든 내용과 알림창(팝업창)이다. 다른 기관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배너 광고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진에서는 누리집 첫 화면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나 꼭 필요하지 않은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를 전수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안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단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전수 조사

과도하게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의 대안어를 제시하기에 앞서 각 기관의 누리집 첫 화면에 사용된 모든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목록을 전수 조사하였다.

먼저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첫 화면과 알림창(팝업창)을 갈무리하여 그림으로 저장하였다. 이후 한글 파일에 옮겨 적어 추출 작업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누리집 첫 화면은 제한된 화면에 많은 정보를 압축하여 담아야 하는 특징이 있어 주로 단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어종과 표기 문자에 따라 누리집 첫 화면에 사용된 단어를 구분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차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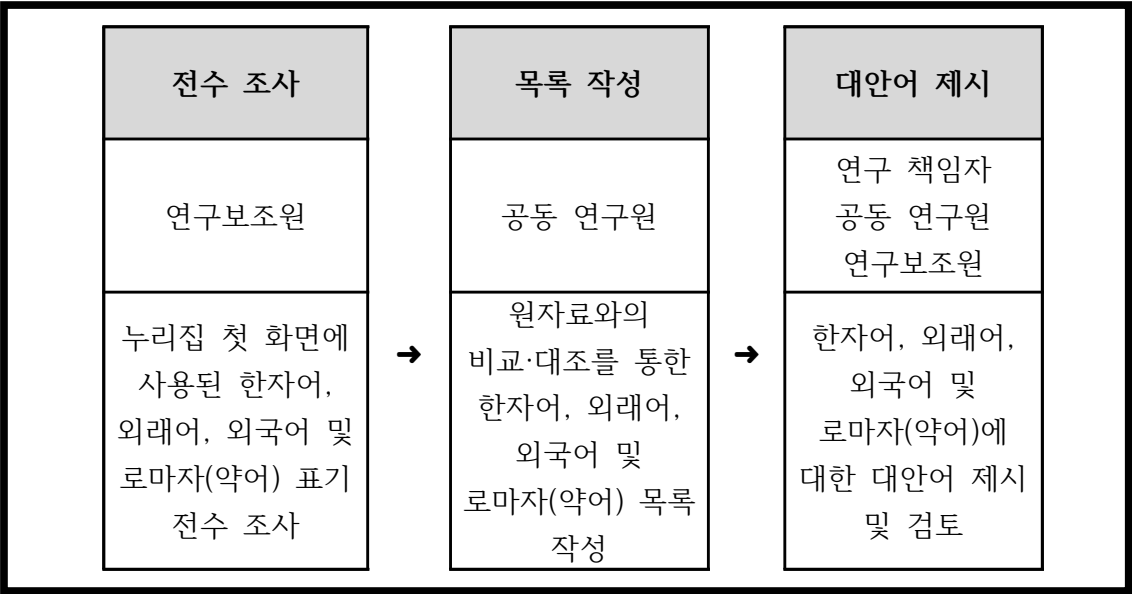
을 작성하였다.

②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목록 작성

갈무리한 화면을 바탕으로 연구보조원이 작성한 1차 목록에 대하여 공동 연구원이 갈무리한 화면과 비교하여 목록을 재검토하였다. 1차 조사에서 잘못 분류되거나 누락된 단어를 확인하여 목록을 수정하였다. 1차 목록의 경우 누리집 첫 화면에 나타난 모든 단어를 포함한 것이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나 고유명사 등 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공동 연구원은 해당 단어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진단 대상을 확정하고 기관별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③ 대안어 제시 및 검토

진단 대상이 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꼭 필요하지 않은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목록을 확정된 뒤 각각에 대응하는 대안어를 제시하였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과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에서 해당 단어에 대한 순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였다. 로마자 중 두문자어로 작성된 기관명, 단체명은 쉽게 풀어쓰고 한글로 표기하였다.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된 순화어가 없는 어휘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원이 국어사전, 외국어 사전, 신문 기사,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법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어를 제시하였고 이를 연구진 전체가 검토하였다. 누리집 첫 화면은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달리 정책명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정책명을 다듬는 과정은 제외하였다.



[그림 13]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 진단 체계

3)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의 진단 결과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외래어의 사용이 많고 로마자 약어의 사용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집 첫 화면에 사용된 단어 중 최종 확정된 목록에서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필요한 한자어의 경우 한 기관당 평균적으로 4.56개, 외래어는 11.22개,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는 6.06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의 사용 양상은 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기관별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사용 양상은 다음 [표 35]와 같다.

연번	기관명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
1	고용노동부	9	13	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	9
3	교육부	6	15	5
4	국방부	3	12	4
5	국토교통부	2	12	4
6	기획재정부	4	6	9
7	농림축산식품부	8	11	4
8	문화체육관광부	4	9	2
9	법무부	8	12	4
10	보건복지부	5	14	4
11	산업통상자원부	7	13	10
12	여성가족부	2	12	4
13	외교부	4	9	20
14	중소벤처기업부	1	13	2
15	통일부	4	4	5
16	해양수산부	3	17	5
17	행정안전부	4	9	2
18	환경부	7	16	11
총(개)		82	202	109
평균(개)		4.56	11.22	6.06

[표 35] 누리집 첫 화면에 사용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 사용 양상

이에 본 연구진에서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에 대하여 기관별로 대안어를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별도의 심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제안 사항을 별도의 자료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4)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 진단의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정부 내 18개 부 단위 기관의 누리집 첫 화면을 진단한 결과, 누리집 첫 화면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꼭 필요하지 않은 외국어, 외래어 및 로마자(약어)가 사용되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는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책과 소식을 어렵게 느끼게 하여 소통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진에서 소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용어들에 대한 대안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누리집 첫 화면에 대안어를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의 화면에 압축적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누리집 첫 화면의 특성상 과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역시 소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한 대안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누리집 첫 화면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첫 화면 내용 구성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 누리집 첫 화면 진단에서는 2018년 연구를 통해 제안된 대안어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함께 누리집 첫 화면의 효과적인 내용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언어 관계망을 활용한 보도 자료 소통성 평가 결과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국립국어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보도 자료의 소통성을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도 주요 과업 중 하나로 보도 자료의 소통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간 보도 자료의 소통성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왔다. 우선,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평가단의 수가 충분치 않아 평가 결과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평가의 실용성 측면에서는 평가단을 위촉하여 진행하는 평가 시스템 자체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혁신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통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통성 평가 기준을 정량화하고, 정량화

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특정 연구진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 관계망을 활용하여 보도 자료의 소통성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소통성 평가 기준의 정량화가 가능한지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2) 분석 대상 자료와 분석 방식

① 분석 대상 자료 개관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이 제출한 총평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은 소통성 평가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5점 척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 뒤에 평가 대상에 대한 총평을 추가 기술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출된 자료 중 총평 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2017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의 전체 평가 기간 동안 시민 평가단 18명, 전문가 평가단 9명이 위촉되어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만, 한 평가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도 자료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보도 자료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중 한 그룹의 자료만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각각의 보도 자료는 6명의 시민 평가단, 3명의 전문가 평가단에 평가를 받은 셈이 되었다.¹⁴⁾ 그 결과로 수합된 평가 총평은 시민 평가단에 의한 것 1,053건,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것 1,947건, 도합 3,000건이다. 평가 총평은 전체 318,695음절, 74,610어절 규모이다.

② 분석 방식

본 연구에서는 언어 관계망 분석을 활용하여 보도 자료에 대한 평가단의 총평을 분석하였다. 언어 관계망 분석이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 연결망으로 표현하여 추상적인 의미 구조를 구체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심 개념과 주변 개념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연결된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도 자료의 소통성 평가 결과로 수합된 평가단의 총평 자료를 언어 관계망 방식으로 분석하여 공공언어로서의 보도 자료에 대한 소통성 평가 요소의 구조를 심도 있게 파악해 보려 한 것이다. 자료 분석 방식은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그림 14]는 그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14) 세 개의 그룹은 보도 자료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고려하여 구분한 것이다. 전체 평가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은 최홍열 외(2014)에서 처음 시도된 이래 최홍열 외(2015), 구본관 외(2016), 김미선 외(2017) 등에서 같은 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다.

자료 수집	전처리 과정		분석 과정		
2017년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 소통성 평가 총평 수집	→ 형태소 분석 후 명사만 추출	출현 빈도 상위 1,000개 단어에 대한 국어학 전문가 7인의 내용 타당도 검토	→ 출현 단어의 빈도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분석 및 연관성 분석	언어 관계망 분석

[그림 14] 언어 관계망 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 분석할 대상 자료는 비정형 자료인 문자 텍스트 자료로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비구조화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전처리 과정이다. 평가 총평 원자료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태소 분석을 통해 단어 수준으로 자료를 변환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통성 평가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분석 대상을 명사로 제한하였고, 출현 빈도 상위 1,000개 단어로 목록을 구성하였다. 다만, 어떤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다 할지라도 평가의 주요 요소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보도 자료’의 경우 이것이 소통성 평가의 주요 평가 요소라기보다는 평가 대상 자료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주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어를 ‘불용어’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불용어 제거를 위해 앞서 언급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한 출현 빈도 상위 1,000개 단어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1,000개 단어에서 불용어를 제외하는 작업에는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7명의 국어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한 1,000개 단어를 7명의 국어학 전문가에 전달하여, 평가 요소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에만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결과 7명의 전문가 모두가 평가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표시한 단어가 20개 단어로 추려졌고, 6명의 전문가가 표시한 단어는 80개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정제된 단어들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출현 단어를 확인하였다. 또한 단어 간의 연결 관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의 소통성 평가 총평 안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들을 확인하여 동시 출현 단어들의 행렬을 생성하고, 단어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출현 단어로 구성된 언어 관계망의 구조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동시 출현 단어 및 단어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평가 총평 자료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동시 출현이란 하나의 총평 자료 내에서 동시에 출현한 단어들의 쌍이라는 의미이다. 즉, 어떤 평가자가 어떤 평가 자료에 대해 평가한 총평이 하나의 총평 자료가 되고, 그 총평 자료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들이 언어 관계망 분석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동시 출현 단어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3) 소통성 평가 총평에 대한 언어 관계망 분석 결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평가단의 평가 총평을 분석하여 주요 평가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통성 평가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평가 총평에서 나타난 개별 단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출현 빈도를 살펴봄으로써 평가 총평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를 통해 주요 평가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표 36]은 출현 빈도가 상위 50위 이내에 속하는 단어들과 출현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순위	단어	빈도(회)	출현 비율(%)	순위	단어	빈도(회)	출현 비율(%)
1	문장	895	3.2	26	단어	144	0.5
2	정보	662	2.4	27	구체	143	0.5
3	이해	581	2.1	28	관련	138	0.5
4	구성	538	2	29	일부	137	0.5
5	적절	451	1.6	30	중요	136	0.5
6	설명	418	1.5	31	부제	130	0.5
7	핵심	408	1.5	32	밑줄	121	0.4
8	전체	383	1.4	33	사례	119	0.5
9	제목	361	1.3	34	부족	113	0.4
10	문단	299	1.1	35	주요	113	0.4
11	표현	258	0.9	36	길이	112	0.4
12	정리	246	0.9	37	표시	110	0.4
13	글씨	240	0.9	38	독자	105	0.4
14	구분	239	0.8	39	단락	104	0.3
15	용어	239	0.9	40	의미	99	0.4
16	효과	231	0.8	41	연결어미	95	0.3
17	리드	214	0.8	42	비교	94	0.4
18	본문	212	0.8	43	전반적	93	0.3
19	시각적	211	0.7	44	이용	90	0.3
20	활용	211	0.8	45	어려움	89	0.4
21	간결	192	0.7	46	어색	87	0.3
22	위계	190	0.7	47	언어	87	0.3
23	전달	169	0.6	48	완결	84	0.3
24	보도	153	0.6	49	단순	83	0.3
25	강조	148	0.5	50	방식	83	0.3

[표 36] 평가 총평에 나타난 주요 단어 목록

평가 총평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들은 ‘문장(895회, 3.2%)’, ‘정보(662회, 2.4%)’, ‘이해(581회, 2.1%)’, ‘구성(538회, 2.0%)’, ‘적절(451회, 1.6%)’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⁵⁾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소 거친 수준에서 의미 부여해 보자면, 평가단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하며, 보도 자료의 소통성을 평가함에 있어 전체적인 구성 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심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평가 총평에서 1번 이상 집계된 단어는 전체 3,839개 단어인데, 그중 상위 50개 단어는 전체의 약 1.3%에 불과하다. 그러나 누적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50개 단어들이 전체 출현 단어의 약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총평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들이 평가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평가 총평에서 언어 관계망을 구성하는 설명력이 높은 단어를 선별한 결과는 아래의 [표 37]과 같다.

15) 괄호 안의 수치는 각각 출현 빈도와 상대 빈도를 의미한다.

단어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문장	0.036	208.102
적절	0.026	17.826
활용	0.023	18.169
글씨	0.023	25.445
리드	0.023	18.671
이해	0.023	4.667
핵심	0.023	3.500
정보	0.022	5.167
제목	0.022	2.500
구성	0.022	1.750
전체	0.022	0.167
위계	0.020	0.000
구분	0.020	0.250
문단	0.020	0.667
정리	0.020	0.000
용어	0.020	0.000
설명	0.020	0.333
길이	0.019	0.000
완결	0.019	0.000
일부	0.019	0.000
간결	0.019	0.000
표현	0.019	0.000
연결어미	0.019	0.000
밑줄	0.016	0.393
시각적	0.016	0.000
효과	0.016	0.393

[표 37] 평가 총평의 언어 관계망 분석 결과 지표¹⁶⁾

언어 관계망 분석을 통해 도출한 출현 단어는 중심성 지표 확인을 통해 그 단어가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 지표 중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지표와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지표를 통해 언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근접 중심성은 각 단어가 언어 관계망 구조 내에서 얼마나 중심 위치에 놓여 있는지와 관련된

16) [표 37] 내의 단어는 근접 중심성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개념인데, 단어 간 거리를 근거로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단어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단어 간의 거리를 모두 합산해 중심성을 측정한다.¹⁷⁾ 다시 말해, 근접 중심성이 높을수록 많은 단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접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하나는 적절(0.026), 핵심(0.023), 활용(0.023), 이해(0.023), 정보(0.022), 구성(0.022), 설명(0.020), 정리(0.020) 등 글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단어들인데, 소통성 평가 요소 중 정보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글씨(0.023), 리드(0.023), 제목(0.022), 전체(0.022), 문단(0.020), 용어(0.020) 등 글의 요소와 관련된 단어들이며, 이는 소통성 평가 요소 중 용이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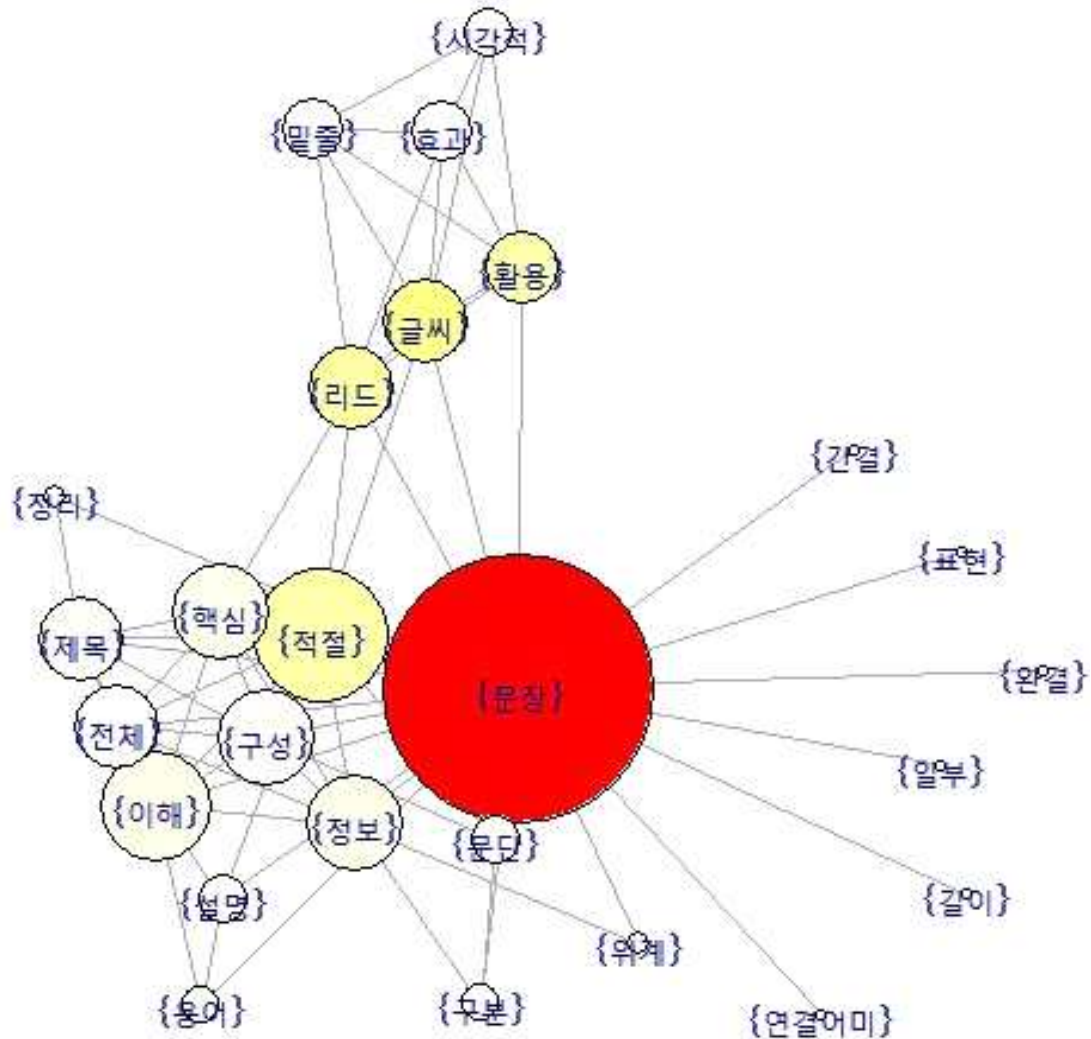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근접 중심성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가 언어 관계망 내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출현 빈도 분석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리드’, ‘활용’, ‘위계’, ‘길이’, ‘연결어미’, ‘완결’은 출현 빈도가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접 중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언어 관계망 구조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개 중심성은 언어 관계망 내에서 한 단어가 담당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정도로 중심성을 측정한다. 한 단어가 관계망 내의 다른 단어들 사이의 최다 경로 위에 위치하면 할수록 그 단어의 매개 중심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즉, 단어 간의 연결을 이어주는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개 중심성에서는 거의 모든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208.102)을 제외하고는 글씨(25.445), 리드(18.671), 활용(18.169), 적절(17.826) 등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주변 단어들이 빈번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는 평가 총평의 언어 관계망을 시각화한 것인데, 이 자료를 통해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의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기존의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 소통성 평가 요소로 규정된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요소들에 대해 평가단들은 특정 영역에 좀 더 주목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즉,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의 세 영역을 골고루 평가하고 있다기보다는 특정 영역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17) 여기서 ‘단어’라고 표현된 사항은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노드’ 또는 ‘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개념과 관련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림 15] 평가 총평의 언어 관계망 시각화

[그림 15]를 [표 37]의 수치와 함께 살펴보면, ‘문장’은 근접 중심성이 .036이고, 매개 중심성이 208.102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가 총평에서 ‘문장’이 핵심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소통성에서 좋은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적절’, ‘정보’, ‘이해’, ‘구성’, ‘핵심’ 등 보도 자료의 목적인 정보 전달을 평가하는 단어들이 강한 연결성을 나타냈다. 즉 정보성과 관련된 단어들은 관계망 내에서도 비교적 가운데에 위치하며,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정보성에 관련된 평가 총평 자료는 보도 자료의 정보성이 높을 때에도 혹은 정보 전달이 부족할 때에도 모두 언급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보 전달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소통성 평가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보통 평가를 할 때 가점식과 감점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는데¹⁸⁾,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등의 영역별로 평가자들의 점수 부여 방식이 달랐고, 정보성 영역이 가점식, 감점식을 모두 적

18) 가점식은 기준 점수를 상정하여 긍정적 평가 요인에 대해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평가 방식을 말하며, 감점식은 역으로 부정적 평가 요인에 대해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을 말한다.

용할 수 있는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중심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15]에서 좌상단에 위치한 ‘리드’, ‘글씨’ 등을 중심으로 ‘시각적’, ‘효과’, ‘밀줄’ 등이 강한 연결성을 보였다. 이러한 용이성과 관련된 평가 요소는 최고 수준의 중심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심성을 보이므로, 용이성에 대한 주목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 관계망 분석 결과에서 공공성과 관련된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평가단들이 정부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가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총평을 쓰지 않았을 수 있다. 혹은,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판별 기준을 가늠하기 어려워 총평을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만, 공공성에 대한 질문과 공공성 위배 예시가 평가 지침에서 가장 앞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의 이유로 공공성과 관련된 총평이 적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간결’, ‘표현’, ‘완결’, ‘일부’, ‘길이’, ‘연결어미’ 등의 단어가 언어 관계망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른 단어들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단어는 소통성 평가 항목이 아닌 정확성 평가 요소를 내포하는 단어들이다. 소통성 평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성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출현했다는 것으로 소통성 평가에서 정확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정확한 표기나 표현이 소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통성의 큰 범주 내에 정확성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통성의 범주 내에 정확성 평가가 포함된다면 정확성 평가는 감점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므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수준의 정확성 오류 항목들을 중심으로 감점을 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언어 관계망 분석과 관련한 결론과 소통성 평가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공언어 소통성 평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 과정에서 수집된 소통성 평가 총평 자료를 언어 관계망 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여러 가지 함의에 대해 기술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 ① 소통성 평가에서 평가단은 정보성 요소에 가장 주목했고, 용이성 요소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반면, 공공성 요소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평가 총평의 주요 어휘 사용 양상을 통해서도 드러나거니와, 언어 관계망 분석에서 살펴본 중심성 지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이다. 즉, 근접 중심성 지표와 매개 중심성 지표에서 모두 정보성, 용이성과 관련한 단어들이 언어 관계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소통성 평가를 위한 점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성과 용이성 요소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② 당초에 소통성 평가에서는 정확성 요소가 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소통성 평가의 하위 항목으로 정확성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정확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에서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정확성 평가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소통성 평가단에게 정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성을 소통성 평가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한다면 정확성 오류 가운데 소통성을 위배할 정도의 정확성 오류만을 검출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공공언어로서 보도 자료가 어떤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유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평가 총평을 분석하여 평가단이 공공언어로서 보도 자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은 공공언어 소통성 개선의 한 과정일 뿐,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상태로 제시되었을 때 선호도가 높은지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소통성 평가 점검표가 생성되면 그 점검표로 평가하는 주체가 평가단이 되어야 할지, 연구진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Ⅵ. 보고서 활용 및 정책 제언

1. 보고서 활용 방안

일련의 공공언어 진단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본 연구는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정확성과 소통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보도 자료를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소통성을 확보하였는지 진단하였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어려운 행정 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도록 대안어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8년 공공언어 진단 사업의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1) 각 기관의 국어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

이제까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간의 공공언어 개선 노력이 많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의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5월, 7월, 9월, 11월에 수집된 보도 자료의 정확성과 소통성 평가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결과를 도표화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보도 자료에서 나타난 오류를 집계하여 기관별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각 기관 보도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관별로 미흡한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보도 자료의 정확성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어법에 맞는 표현 숙지

2018년 공공언어 진단의 정확성 평가에서는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은 아직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문장 성분이 호응하지 않거나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문장이 읽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면 소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장을 바로 쓰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쉽고 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공문서 작성에 지침이 될 것이라고 본다.

3) ‘쉽고 바른 용어와 표현’의 명확한 기준 파악에 도움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용어의 순화에 공공언어 진단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도 공공언어의 소통성을 저해하는 요소이기에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만큼 쉽고 친근한 어휘 사용은 공문서 작성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언어에 어려운 한자어나 국적 불명의 외래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정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런 용어를 자주 접하기 때문에 어휘의 난해함이나 생소함을 잘 느낄 수 없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통성 평가 위원들이 어렵다고 지적한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 로마자 등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행정 용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기에 보고서의 어려운 용어 목록은 앞으로 공공언어 작성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4)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의 대안어를 활용하여 공문서 작성에 활용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보도 자료 이외의 새로운 범주를 발굴하여 진단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18개 부의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누리집 첫 화면도 진단하여 진단의 대상을 확장하였다.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로마자(약어)가 소통성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이 단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어를 제시하였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쉽고 바른말로 다듬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보도 자료와 공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이 보고서의 대안어가 공공언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2. 정책 제안

1) 소통성 평가 방식의 개선

현재는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 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별로 돌아가면서 보도 자료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사업 초기에 평가단을 모집한 후, 그 평가단이 4번의 평가를 하고 있다. 전문가 평가단 9명, 시민 평가단 18명이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진단하는 작업을 도맡아서 한다. 평가단의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인원수를 현재보다 더 많이 늘린다면 평가를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가 평가단을 많이 영입하기 어렵다면 시민 평가단만이

라도 수를 늘려서 두 번씩만 평가하도록 한다면 소통성 평가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 문장 바로 쓰기’ 교육의 필요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도 자료의 정확성 평가에서 ‘표기의 오류’는 많이 줄었는데 ‘표현의 오류’는 빈번히 나타났다. 특히, 문장 성분의 호응 오류나 필수적인 문장 성분 생략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문장을 길게 쓰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 문장을 짧게 쓰도록 교육을 하거나 한 문장에 몇 어절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은 어문 규범 교육보다 문장 바로 쓰기 교육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욱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문장 바로 쓰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한국어 문장 오류 교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현재의 공공언어 진단은 이미 공표된 보도 자료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언어 오류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보도 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장 오류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공공언어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교정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문장 교정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에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다. 한국어 문장 오류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문장의 호응에 어긋나거나 문장이 길어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자가 쉽게 오류를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축적한 공공언어 오류 사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공표 전에 공문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붙임1] 2018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연수회 일정표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4:00~14:05 (‘05)	[개회사]	국립국어원장
14:05~14:10 (‘05)	[인사말]	문화예술정책실장
14:10~14:15 (‘05)	[현황 보고] - 2018년 보도 자료 평가 분석	국립국어원 (담당 연구사)
14:15~14:55 (‘40)	[특강1] 공공언어 진단의 방향 - 평가 개요: 정확성·소통성 평가 방법	김미선 교수 (중앙대학교)
	[휴식]	
15:10~15:40 (‘30)	[특강2] 보도 자료 소통성 평가 분석 - 소통성 평가 총평, 핵심어 분석	임현열 교수 (중앙대학교)
15:40~16:10 (‘30)	[발표] 우수 부처 사례 발표 - 보도 자료 평가 우수 부처 활동 세부 사례	환경부, 해양수산부
16:10~16:40 (‘30)	[특강3] 올바른 공공언어 쓰기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및 공무원 솔선수범 중요성 등	이경우 (서울신문 어문팀장)
16:40~17:00 (‘20)	[공공언어 개선] - 2019년 평가 개선 (보도 자료, 업무계획, 정책 용어 등 평가 확대) - 공공언어 개선 관련 협조사항 (정책 용어, 국민제보, 필수 행정 용어 개선 100개 사용 등)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붙임2] 보도 자료에 나타난 어려운 한자어 목록

아래의 목록은 보도 자료에 대한 정확성 진단 과정에서 보도 자료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를 조사한 것이다. 기관별로 중복되는 어려운 한자어는 목록에서 제외하여 개수를 파악하였음을 밝혀둔다.

군	기관명	어려운 한자어 목록	개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반의사불벌, 공표, 시설주, 행정질서벌, 불허, 수어, 색신, 공무담임권, 약도, 입직, 계호	12
	국민권익위원회	노무, 공관병, 이첩, 도과, 위해, 편취, 공상, 고산악훈련, 축탁, 수렴, 시책, 봉인	12
	기상청	이중편파, 대국민적, 미소지진, 책정, 수렴, 항행, 묘화, 각고	8
	농촌진흥청	양수분, 열과, 적환무, 동반식물, 익충, 결구채소, 파종, 수량성, 유묘기, 습해, 어분, 상토, 식의약, 농생명, 유전체, 생리활성, 적과, 부착량, 격지, 열독, 악혈, 육종, 모본	23
	문화재청	애호의식, 공모, 환국, 가설 비계, 박락, 정밀실측, 방재, 해빙기, 교잡종, 현상변경, 고도, 부잔교, 호안, 수탈, 접주	15
	문화체육관광부	필진, 유랑, 지향점, 무작위, 침선, 가미, 창출, 증강현실, 가상객체, 탈중앙, 원장, 신시장, 용역, 초안, 책정, 공모, 준용, 기로, 고부가화, 진작	20
	법제처	전수조사, 국민법제관, 정비의견, 선제적, 필수조례, 출자, 순회, 법제교육, 개호비, 도검, 사문화	11
	병무청	병리검사, 감별검사, 고충처리, 퇴출, 체불, 철폐, 관보, 최일선, 면탈	9
	산림청	선제적, 거점화, 유발효과, 착수, 양모, 국유림율, 변위, 함수비계, 계도, 실화, 양여, 수대부자, 생육, 조림지, 공한지, 석력지	16
	새만금개발청	창출, 매립, 미이행, 선도적, 특화, 신인도, 추경, 사석, 유수, 강소	11
	소방청	용역, 사후관리, 증축, 시정조치, 미비치, 차압수치, 선조치, 피난약자, 위험저감, 구명환, 수난, 만반, 내습	13
	여성가족부	미구분, 정형화, 비양육, 면접교섭, 집합교육, 양육역량, 초동조치	7
	통일부	미인가, 이적지, 궤적, 소회, 계기수업, 당면, 양묘장	7
	해양경찰청	영법, 현행화, 선저폐수, 관제, 예인선, 부선, 고정익, 선적국, 오발신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취약지대, 교량, 계측, 비산, 법면, 수방자재, 훈증	7

군	기관명	어려운 한자어 목록	개수
나군	경찰청	조서, 유치인, 계도, 요구조자, 형기차, 과료, 구류, 조도, 구태, 수권, 장구, 채증, 독직폭행, 소명절차, 생안, 몰수보전, 편취, 여죄, 오관, 주거주, 임의성, 간수자, 담합, 일선, 표식	26
	공정거래위원회	특약, 내장목, 예규, 영치 피규제자, 하도급, 시정, 독려, 익월, 시정, 담합, 투찰, 舊, 수취, 교부, 전가	21
	국가보훈처	변제, 재가복지, 전수, 비속, 중상이, 자주포, 제적원부, 추서, 국기, 진력, 선양	12
	국방부	파복, 제고, 내사, 조서, 훈령, 국직기관, 국직부대, 계류, 훈령, 미산입, 구제, 산재, 사로, 피탄, 열화상	15
	국세청	조세일실, 불복청구, 기장, 직능, 세적, 비식별화, 노출제어, 미시자료, 수증자, 의제(하다), 세정, 무자력자, 필지, 가공경비, 계상, 父, 탈루, 안분계산, 공제, 수취, 유동성, 가공수출, 포탈, 미환류소득, 예납, 공급가액, 출연	31
	대검찰청	환형유치처분, 구료, 과료, 만전, 기화, 성년후견개시심판, 직구속, 성본창설, 직권, 구공판, 금일, 공보, 인선, 호선, 고지, 평성, 비상상고, 非, 전관, 신병	21
	방위사업청	소요결정, 유연근무제, 훈령, 절충교역, 만전, 가치승수, 지체상금률, 체계업체, 부정당업자, 체계업체, 가액, 향응, 담합, 소요군, 신인도, 초도, 조종수, 현가	18
	법무부	비송, 절차보조인, 감치, 소멸시효, 변제, 영치, 검방, 연출, 폐방, 관약, 사약, 무인, 검방, 출역 소지, 검식, 잔형, 차폐, 계호, 구금, 변제, 숙려	21
	보건복지부	보수보험료, 유병률, 자법인, 수검률, 사각, 기제, 상회, 회송, 피임의, 접종력, 결련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수, 다중, 위해, 조사, 가소제	5
	인사혁신처	恨, 제고, 시보임용, 추서, 비위, 징계양정, 징계의결, 조문, 인용, 평정, 근평, 실국별, 초과현원, 직류, 직렬, 과소대표, 준용, 소정	19
	조달청	신인도, 제고, 조달, 하도급, 조문, 귀속, 은닉, 필지, 이관, 세입, 지정맥, 원도급, 내용연수, 정수물품, 기성검사	17
	해양수산부	집적, 유희화, 용수, 위판장, 피견인, 도산, 양해각서, 해기사	8
	행정안전부	시달하다, 금번, 평정, 보임, 전보, 제고, 도급, 구동기, 초동, 공부, 편제, 호조	12
	환경부	불투과율, 광투과, 전구물질, 용수, 편익, 적색목록, 식재, 감리, 계도, 계고장, 용수, 저감, 산정, 도수관, 관측정, 세륜, 다중	19

군	기관명	어려운 한자어 목록	개수
다군	고용 노동부	신중년, 동, 기반구축, 일체, 적합직무, 부합하다, 경, 상기, 사유, 일탈, 보전금, 제고, 이행, 비산, 비계, 계도, 불시에, 다류, 종전, 적시, 동기	22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제고, 고시, 강구하다, 부각되다, 점증하다, 추세, 강구하다, 가시화, 사안, 선제적, 저해하다, 혁파하다, 현장착근, 계간축열, 既	17
	관세청	소액, 누락하다, 제고하다, 부합하다, 일환, 인도장, 협소하다, 미인도, 사전에, 차단하다, 회수하다, 관할, 동, 대비, 당해, 동종, 감경, 하역, 적하, 하기, 선용품, 적재, 하선, 공조, 원천	26
	교육부	역할, 구축하다, 조속하다, 추정되다, 수렴, 탑재하다, 배포하다, 제고, 경감, 격상	11
	국토 교통부	만실, 준수하다, 상환, 호당, 구현하다, 의제, 도입, 상단, 구축, 수립, 경, 제고, 적기, 영위, 타설, 절개지공사, 저감, 비산, 비계	19
	금융 위원회	제고, 자체, 부여, 업권, 시현, 과도한, 조달, 수신, 업권, 추세, 미흡하다, 포용, 공제, 공시, 기재하다, 제고하다, 존치, 유희, 내주, 月, 內, 차주, 공여, 양수도	25
	기획 재정부	의견개진, 제고하다, 금일, 귀속되다, 하, 예규, 조기에, 하도급, 동, 제고, 상기, 구현하다, 시달, 기, 계량, 비계량, 국세물납, 금번, 유희, 원도급, 적시	25
	농림축산 식품부	부착, 두, 잔존, 동, 예찰, 개소, 거점, 달하다, 금번, 적격, 제고, 추이, 등외, 유희, 시달, 거출	19
	방송통신 위원회	도달, 확충, 고취하고	3
	산업통상 자원부	범부처, 저감, 개소, 대폭, 청사진, 운용, 부응하다, 감쇄	8
	외교부	개진하다, 빈발, 아국인, 별무, 서한, 성과, 파상적, 국, 적시, 금번, 동기, 항구적, 공여, 사의	16
	원자력안 전위원회	제염, 준수하다, 지참하다, 오, 공극, 이행, 개진, 조기에, 대폭, 부응하다, 착수, 시사하다, 차폐, 선량, 시료, 선량평가, 시료, 피폭선량, 임계, 주급수, 유량, 소개	22
	중소벤처 기업부	초래하다, 경감하다, 구현, 거점, 발족, 내역, 기만하다, 고취시키다, 제고, 동일, 동, 영위, 동, 입보, 기보, 출연	17
	통계청	공표, 제고, 부응하다, 제고하다, 오남용, 근간, 추계, 사계열, 공표, 정합성, 개소, 동, 개진, 익년	15
	특허청	출원, 다소, 부각되다, 동향, 달하다, 인수, 발동	7

[붙임3] 보도 자료에 나타난 외래어 전체 목록

아래의 목록은 보도 자료에 대한 정확성 진단 과정에서 보도 자료에 사용된 모든 외래어를 전수 조사한 것이다. 기관별로 중복되는 외래어는 목록에서 제외하여 개수를 파악했으며, 기관명 또는 업체명에는 ‘_기’, 사업명에는 ‘_사’, 정책명에는 ‘_정’으로 표기해 두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 모니터링, 유엔, 프로그램, 리스크, 통합관제센터_기, 캄보디아,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_정, 현장인권상담센터_기, 건강서비스, 유엔고문방지위원회_기, 서비스, 마스크, 인권경영포럼_사, 글로벌, 이슈, 제곱미터, 휠체어, 인권교육센터_기, 센터, 브로커	21
	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 골프, 헬기레펠, 한국콘텐츠미디어_기, 플랫폼, 프로젝트, 프로그램, 패널, 트램펄린, 키즈카페, 크롬, 콜센터, 카페인, 카타르, 취업포털, 천연가스, 잡코리아_기, 자유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유엔_기, 유엔, 월드컵, 워크넷_기, 온라인, 엔진, 에어바운스, 에너지 드링크, 아이디어, 아르바이트생, 시스템, 스포츠클럽, 스크린야구장, 쇼핑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서비스, 빅데이터, 블록, 블라드, 방탈출카페, 미니기차, 모니터링, 리콜, 로비, 드링크, 노하우	45
	기상청	시스템, 레이더, 서비스, 모바일, 드론, 포털, 그래프, 아이디어, 온·오프라인, 컨벤시아, 유엔환경계획_기, 파리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_기, 에너지, 퍼센트, 순 제로(net-zero), 모델, 트위터, 캠페인, 온라인, 레이더, 레이더테스트베드, 기상레이더센터, 프로그램, 인터뷰, 브리핑	26
	농촌진흥청	프로그램, 알레르기, 토마토, 바질, 안데스, 오크라, 디자인, 쿠키, 스트링, 토코페롤, 비타민B, 안토시아닌, 비타민A, 카로티노이드, 마요네즈, 모차렐라치즈, 캠핑, 버터, 스프, 토스트, 아이스크림, 에너지, 폴리페놀, 헥타르, 앱, 밴드, 소셜미디어, 네이버, 니코틴, 옐로드림, 스위트퀸, 이노센스, 브릭스, 오프리(O-free), 오메가-5-글리아딘, 셀리악, 글루텐프리, 스래그, 아이디어, 힐링, 글로벌공공정책연구원, 소셜미디어(SNS), 비타민, 칼륨, 칼슘, 비닐, 탄산칼슘, 카올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프리카, 씨스트선충, 바이오장기, 포스트게놈, 빅데이터, 베일, 스트레스, 코르티솔, 프로젝트, 그룹화, 그룹, 시즌2, 허브, 센터, 플랫폼	65
	문화재청	매뉴얼, 머그잔, 디자인, 디자이너, 유네스코_기, 프로그램, 데이터, 스캔, 페이스북, 스토리텔링, 웹페이지, 콘텐츠, 포털, 스토리, 팜투어	15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이벤트, 아이디어, 플랫폼, 웹툰, 디자인, 큐레이션, 페이스북, 메시지, 버스, 커피, 포스터, 게임, 디지털, 채널, 쇼핑, 매뉴얼, 북트레일러, 갤러리, 칼럼, 다큐, 온라인서비스, 콘서트, 미	82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디어, 칼럼리스트, 뮤지컬, 에세이스트, 커뮤니케이터, 인터뷰, 코너, 메뉴, 캘리그라피, 케이스, 책카페, 도쿄올림픽, 슬로건, 엔트리, 러닝 타깃, 시스템, 와이파이, 월드컵, 스포츠, 온라인, 필로티홀_기, 시티투어, 브랜드, 플라타너스, 버스터미널, 리플릿, 부스, 팝업스토어, 패럴림픽, 캠페인, 루돌프, 콜라보, 릴레이, 리빙랩, 팀, 센서, 블록체인, 웹, 애니메이션, 클라우드, 캐릭터, 포털, 테마, 호텔, 컨설팅, 디자이너, 노하우, 엔지니어링, 컨설팅리포트, 마트, 비알코올, 쇼핑몰, 시디(CD), 비전, 포럼, 푸름이닷컴_기, 북	
	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 센터, 앱, 로드맵, 메인화면, 클릭, 아이디어, 애플리케이션, 인터넷뱅킹, 인터넷, 컨설팅, 스크린도어, 드론, 네거티브, 리스트, 온라인, 서비스, 세미나, 워크숍, 노하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뉴스, 프로그램, 태블릿, 커피, 카페인,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벨트	34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모바일, 알림톡, 시스템, 서비스, 스마트폰, 앱, 디지털, 알리지, 휴대폰, 시스템, 사이트, 버스, 온라인, 스포츠, 레저, 팩스, 이슈, 국방헬프콜_사, 고려에스엠_기, 센터, 원스톱, 발송서비스, 카카오,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온·오프라인, 아이디어, 워크숍, 밴드, 알로에, 토렌식	33
	산림청	서비스, 인프라, 앱, 코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유한김벌리_기, 하이원, 숲길, 조성_정, 강원랜드_기, 수목진단, 센터_기,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네이버_기, 밴드, 지원시스템, 복지서비스, 알파인, 유엔사막화방지(UNCCD), 건조지녹화파트너십(GDP), 유엔환경계획(UNEP), 와르자자트지역, 창원이니셔티브, 파트너십, 비전, 드론, 팀, 팸투어, 서비스, 로드맵, 테마, 스토리북, 트렌드, 패널, 템플스테이, 아이템, 매니저, 통합입법예고센터_기, 기아자동차_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_기, (사)그린라이트_기, 산림서비스, 스쿠터, 헬케어	48
	새만금개발청	레저, 베스트웨스턴 호텔_기, 클러스터, 드론, 홈페이지, 노마드_사, 페스티벌_사, 페이스북, 슬로건, 오토캠핑장, 브랜드, 세계잼버리대회_사, 글로벌,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_기, 텐진바이오톨업과기유한공사_기, 새만금관광레저_기, 잼버리, 호텔, 보성컨소시엄_기, 타운홀, 미팅, 스마트, 콘셉트, 소호(SOHO), 베니스, 두바이, 온라인, 엔타이시, 엔타이형방그룹_기, 남산그룹_기, 신동총린그룹_기, 용대식품그룹_기, 완화실업그룹_기, 베이징, 쿤룬호텔, 시에프엘디(CFLD)산업발전그룹_기, 레저.헬스케어, 패널, 인프라, 랜드마크, 노마드(NOMAD), 프로그램, 버스킹, 랜드, 타일, 바이오, 풍림파마텍_기, 아이디어, 팀, 페이스북_기, 블로그, 네이버_기, 다음_기, 에너지	54
	소방청	서비스, 홈페이지, 시스템, 터미널, 아이디어, 안전컨설팅, 온라인, 마이크로페이지, 베테랑, 필로티, 모니터링, 터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30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카카오내비_기, 원내비_기, 티맵_기, 테스트, 댐퍼, 리콜, 로트, 팬, 플래카드, 가스, 펌프, 캠페인, 이메일, 인터넷, 콜센터, 로밍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프로그램, 서비스, 센터, 캠페인, 모니터링, 온라인, 매뉴얼,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단, 미투, 리벤지포르노, 북, 이미지, 인터뷰, 앵커, 온라인광고, 유튜브, 블로그, 카페, 기상캐스터, 스키, 스케줄, 가이드라인, 콜센터, 포럼, 파워포인트(PPT), 모듈식, 애플리케이션, 배너, 콜_기, 오피스텔, 팀, 마사지업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_기, 콜레스테롤, 인터넷, 다운로드, 건강in, 시스템, 메시지,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스토킹, 데이트, 데이트_정, 스토킹_정, 씨씨티비, 유스호스텔, 채팅, 캡처, 이메일	52
	통일부	센터, 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 유니콘_기, 워크숍, 패널, 코리아나, 호텔, 캠프_정, 스카이하출, 캠페인, 통일리더, 타워, 벤처, (주)시호비전_기	16
	해양경찰청	시스템, 레저,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트러젠, 워터파크, 홈페이지, 퍼센트, 노하우, 허베이스파리트호_기, 베테랑, 프로그램, 캠프, 포스터, 카드뉴스, 콘텐츠, 퀴즈, 체크, 포털, 데이터, 드론, 유콘시스템_기, 멀티콥터, 상황센터_기, 시뮬레이터, 엔진, 팩, 캠페인, 원스톱, 전자정부민원포털, 테스트, 배터리, 해상교통관제센터_기, 테마, 브로커, 리플렛	3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캠퍼스, 컨설팅, 샤워, 센터, 서비스, 허브, 스미소니언박물관_기, 인스티튜션_기, 베를린, 제임스 시물 갤러리, 리즈박물관_기, 디스커버리센터_기, 글래스고우_기, 트리쉐이드,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 비알티, 에너지, 아이디어, 디자인, 컨소시엄, 노하우, 타워크레인, 모니터링, 시스템	25
나군	경찰청	시시티브이(CCTV), 센터, 인터넷, 팀, 홈페이지, T/F팀, ○○캐피탈_기, 가이드라인, 노트, 도박사이트, 리조트, 매뉴얼, 메모, 모델_정, 미투 운동, 벨, 사이드카, 사이버, 셉테드(CPTED)_사, 소통채널, 스위치, 시스템적, 아파트, 어린이통학버스, 온라인, 온라인 커뮤니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로사업, 체크리스트, 추적수사팀, 치매안심센터_기, 카메라, 카페, 캐리커처, 컨트롤타워, 코너, 특별팀, 파일, 페이스페인팅, 포털, 플랫폼, 하이닉스_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_기, 핫라인	44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콘텐츠, 쿠폰, 팩스, (디지털)포렌식, TV홈쇼핑, 냅킨, 다이어트, 대형 마트, 대형마트, 더 유닛,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_기, 디스크, 디지털, 라이프, 매니지먼트, 믹스나인, 복합쇼핑몰,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_기, 블랙리스트, 블로거, 서비스, 센터,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소셜미디어, 소셜커머스_기, 쇼핑몰, 슈퍼마켓, 시스템, 신고센터_기, 아울렛, 아티스트, 아파트, 오디션,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유통, 워피드_기, 위메프, 유튜브_기, 이미징, 인스타그램_기, (주)YG엔터테인먼트)_기, (주)위메프_기, (주)티몬_기, 컨설팅업체, 쿠	60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팡, 쿠팡(쑈)_기, 타이머, 티몬, 팀, 파일, 포크, 프로그램, 한국스테노_기, 한국인터넷광고재단_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_기, 해시(값), 미니스톱_기, 휴먼	
	국가 보훈처	서비스, 홈페이지, 아파트, 네트워크, 단가스(가스를 끊음), 드라마, 롯데월드_기, 마스터, 모니터링, 미스터 션샤인_드라마제목, 배지, 복지타운, 블로그, 빅데이터, 서울랜드_기, 센터, 시스템, 심포지엄, 씨네라마, 아너스 워크_사, 아이디어, 아쿠아리움, 어드벤처, 온라인, 온라인 게임, 원스톱, 웨딩(홀), 이벤트, 인턴십, 전산시스템, 주니어 보드, 집중센터, 캠페인_사, 캠페인_정, 컨설팅, 테마파크, 포스터, 프로그램, 하와이, 해시태그	40
	국방부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 아이디어, 인터뷰, 인트라넷, 팀, 게임, 국민디자인단_기, 국민디자인단_사, 글로벌리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다큐멘터리, 레이저, 레일, 리그, 링거, 마일즈 장비, 마케팅, 멘토링, 모니터링단_사, 벤처 콘트롤타워, 벤치마킹, 블로그, 사이버지식정보방, 센서, 센터, 스타트업(START-UP), 시스템, 아이템, 영상스크린, 오프라인, 워크숍, 위키피디아, 이메일, 이벤트, 인권모니터단_사, 인큐베이팅, 제로화, 챌린지, 청렴옴부즈맨_정, 카메라, 카페, 컨벤션, 클라우드 펀딩, 크로스미팅, 패러다임, 페이스북, 포스터 온라인, 프로세스, 헬스장, 휴대폰	5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시스템, 온라인, 모바일 앱, 메인(화면), 모바일, 서비스, 센터, 매뉴얼, 서비스_정, 신용카드, 아이디, 인터넷, 팀, 클릭, 프로그램, 조사팀, ARS(전화), 공공데이터, 과세인프라(기반), 국세통계센터_기, 다운계약, 다운로드, 데이터집합, 리모델링, 메시지, 멘토링, 멘토링_사, 모니터링, 모바일 조회 서비스, 모바일화, 버튼, 법인카드, 벤치마킹, 보이스피싱, 빅데이터, 상담센터, 상징스티커, 소통데스크_사, 스마트폰, 스토어, 시스템_정, 신고도움서비스, 신용(체크)카드, 아이콘, 아트홀, 아파트, 앱스토어, 오픈마켓, 웹툰, 유튜브, 이메일, 카드, 컨설팅, 통계마스터, 파일, 팝업창, 패러다임, 팩스, 포스터, 포인트, 플제_정, 플랫폼, 핀테크, 홈페이지	66
	대검찰청	인터넷, 스마트폰, 온라인, 프로그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_기, 근무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트, 디수과장, 디지털, 디지털수사, 디지털포렌식학, 라오스, 레퍼런스, 멀티미디어복원, 몸캠, 몸캠피싱, 미투, 뱅킹, 베리타스 홀_기, 베트남, 보이스피싱, 브리핑, 사법통역시스템, 사이버수사, 사이트, 센터, 센터_기, 수사시스템, 스마일센터_기, 스마트폰앱, 아이디어, 애플리케이션 조사가이드, 앱, 유엔_기,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지로, 지휘라인, 채팅, 콘트롤타워, 컴퓨터, 컴퓨터 과학, 콘퍼런스, 토크 콘서트, 트럭, 파라다이스호텔_기, 파일, 패널, 포럼, 폭력삼진아웃제, 폰, 프레젠테이션, 하이패스, 해킹	54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방위 사업청	홈페이지, 레이더, 워크숍, 다중빔안테나부, 로켓발사기, 모니터링, 벤 처기업, 벤치마킹, 서비스, 선회링, 세미나, 순환펌프 케이스, 시스템, 원가상당 코너_정, 원진엠엔티_기, 유텔_기, 인센티브, 인터넷, 전투차 량사업팀장, 컨설팅, 컨설팅_정, 컨소시엄, 쿼터제, 킨텍스_기, 타이어, 파트너십, 해킹	27
	법무부	서비스, 비자, 시스템, 온라인, 트라우마, 포털, 앱, (스마일)센터, 공공 데이터, 교정민원콜센터_기, 글로벌, 달러,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리모 델링, 매뉴얼, 비자포털, 빌라, 센터, 스트레스, 시스템_정, 아파트, 오 디오카툰, 오픈, 오픈매장, 오피스텔, 웹사이트, 인센티브, 인터넷, 인 프라, 제곱미터, 채널, 챗봇, 카드뉴스, 캐릭터, 케어, 콘텐츠, 팩스, 프 로그램, 프로젝트, 피지컬케어	41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센터_기, 서비스, 시스템, (전문가)폴, 그룹홈, 노하우, 니코 틴, 디지털, 로드맵, 매뉴얼, 모델, 모바일, 모토, 백신, 베이비부머, 센 터, 스마트, 스마트폰 앱, 스튜어드십 코드_정, 아웃제, 에어로졸, 온라 인, 운영모델, 원스트라이크, 유엔, 인텐티브_정, 인플루엔자, 커뮤니티 케어, 컨벤션, 컨설팅, 케어플랜, 콜센터_기, 포인트, 프랜차이즈	35
	식품의약 품안전처	홈페이지, 다이어트, 모니터링, 스마트폰, 앱, 온라인쇼핑몰, 인터넷, 카드뉴스, 팟캐스트, (첨부)파일, 가이드라인, 굿바이나트륨_제품명, 그 리닝스무디_제품명, 그린틴트_제품명, 글루, 나트륨, 디톡스, 런천미트 _제품명, 레이저, 로고송, 로그인, 마스크, 모델, 바름, 배너, 사이버조 사단,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셀레늄, 시스템, 아조염료, 아침 에 그린_제품명, 안티몬, 알레르기, 알칼리이온수, 염소화페놀류, 영리 더, 온·오프라인, 온라인, 웰그린 클렌즈 퍼플_제품명, 지엠오, 카드뮴, 칸나비디올, 캠페인, 캄필로박터, 콜레스테롤, 크롬, 클렌즈주스, 클릭, 클린즈 주스_제품명,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_제품명, 팀, 파인애플, 팩스, 포름알데히드, 포인트, 프로그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한나 클 렌즈주스 비기너_제품명, 헤이리 깔라만시_제품명, 혼합프레스햄	61
	인사 혁신처	홈페이지, 온라인, 컨설팅, 미투(Me, too) 운동, 가스, 그래프, 네트워 크, 노하우, 데이터, 러시아, 매뉴얼, 베타카로틴, 벤처기업, 비전, 빅데 이터, 사이버보안_정, 상용메일, 서비스, 센터, 시스템, 아시아, 아프리 카, 에너지자원, 연구팀, 워크숍, 이메일, 이슈, 인터뷰, 콘텐츠, 포스코 _기	30
	조달청	시스템, 종합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모니터링, 온라인, 인센티 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e-발주시스템, 가드레인, 가이 드라인, 검색엔진, 국가기준데이터, 기술서비스, 까르보(불닭볶음면), 데이터, 리터, 마케팅, 메뉴, 멘토, 모바일, 백업, 브리핑, 비전, 상품정 보시스템_정, 소프트웨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 어플, 업 그레이드,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카달로그, 카드, 캐쉬백, 컴퓨터, 코	43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스, 패키지, 포인트, 프로테제, 프리미엄, 플랫폼	
	해양 수산부	온라인, 톤, 아이디어, 인센티브, (해)리포터, R&D, 글로벌_정, 네트워크, 뉴질랜드, 대형마트, 레저, 레저관광_사, 레저포털_기, 롯데마트_기, 모니터링, 바다마트_기, 방문객센터, 벨트, 브랜드, 블로그, 서비스_정, 선물세트, 세트, 센터, 스마트, 스마트폰, 스케줄, 실크로드, 어묵바, 온라인_정, 워크숍, 워터파크_기, 웨스턴조선포털_기, 유럽, 이니셔티브, 이마트_기, 이메일, 인터넷, 컨테이너, 케이 피시, 콘텐츠, 콜라, 클러스터, 텍스터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트레일러, 트롤어선, 팝콘, 프로그램, 프로젝트, 프로젝트_정, 플랑크톤, 플랜트, 핀란드, 해양레저포털_기, 홈플러스_기	56
	행정 안전부	스마트, 온라인, 데이터, 센터, 시나리오, 시스템, 인터넷, 인프라, e호조시스템, 가이드북, 게임, 골든타임, 구동체인, 국가위기관리센터_기, 네이버_기, 노드링크, 더 임파서블, 드론택배, 디지털, 러시아워, 로그인, 매뉴얼, 매칭, 모델, 모바일 메신저, 문서유통시스템, 백신, 버스, 브레이크, 비닐하우스 쓰나미, 빅데이터, 서비스, 서비스_정, 솔루션, 스마트시티, 스마트폰, 스프링클라우드_기, 시스템화, 신용카드, 앱, 앱스토어, 에스엘_기, 오픈, 워크숍, 응급카드, 이동케이블, 주민센터, 카젠_기, 카카오_기, 카카오톡_기, 카페, 캡처, 컨설팅, 컨트롤타워, 택시, 테이터포털, 텅크웨어_기, 포털, 포트홀, 프로그램	60
	환경부	톤, 웹하드, 니켈, 벤조피렌, 브랜드, 온실가스, LG사이언스 파크_기, SK플래닛_기, SPC클라우드_기, 가스, 가스 에너지, 가이드라인, 댐, 디클로로메탄, 뚜레쥬르_기, 라벨, 레미콘, 롯데 멤버스_기, 마크, 매뉴얼, 멸종위기종복원센터_기, 모니터단, 모니터링, 모델, 병커C유, 베릴륨, 벤젠, 부타디엔, 브롬, 비닐, 비닐쇼핑백, 빅데이터, 삼성/신한카드_기, 삼성엔지니어링_기, 샴푸, 서비스, 센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틸렌, 시멘트, 시스템, 씨제이(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_기, 아세트알데히드, 아스콘, 아크릴로니트릴, 안드로이드_기, 알루미늄, 암모니아, 애플_기, 앱스토어, 에스피씨(SPC)그룹 _기, 에틸벤젠, 엔진, 엘포인트(L.Point)_기, 염화비닐, 오케이(OK)캐쉬백_기, 요구르트, 웹사이트, 유로, 인터넷, 카드뮴, 카메라, 컵, 쿠폰, 클로로포름, 클린_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튜닝, 트리클로로에틸렌, 파리바게뜨_기, 파리크라상_기, 패스트푸드, 펠트(병), 포스코건설_기, 포인트, 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한국프레스센터_기, 해피포인트_기, 홈페이지	81
다군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매칭, 서비스, 시스템, 캠페인, 교육서비스업, 특화캠퍼스, AW컨벤션_기, CJ오쇼핑_기, GS칼텍스_기, LG전자_기, SK이노베이션_기, 가이드, 거트_기, 고용보험시스템, 고용센터, 콜센터, 노년플래너,	78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노하우, 대형마트, 더블유(W) 네트워크_정, 데브구루_기, 데이, 데이터 사전, 마이스터고, 마케팅, 메디포스트_기, 메시지, 모바일 오피스, 미투운동, 부가서비스, 블라인드, 사회서비스형, 산업카운슬러, 서비스형, 센터, 스마트워크센터_기, 스타트업, 스트레스 익명신고센터, 슬로건, 시스템비계, 신고시스템, 신고채널, 아카데미_기, 아파트, 안전관리컨설턴트, 알고리즘, 알바, 여성팀장, 용인물류센터_기, 워라밸, 워크넷, 워킹맘, 원스톱, 웹툰, 이베이 코리아_기, 이슈, 인센티브, 인프라, 자바 하이브리드 앱, 지비스타일_기, 지역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창업스쿨, 창업컨설팅, 취업성공패키지, 컨설팅, 키워드,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_정, 토크 콘서트, 톡쇼_사, 티켓다방, 팀 안전캠페인, 퍼포먼스, 페이스북, 플랫폼, 한국에자이미래나노텍_기	
	교육부	센터, 온라인, 컨설팅, 콘텐츠, 프로그램, 멘토,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드론, 매뉴얼, 모니터링,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캠프, 플랫폼, 링크, 서비스, 3D 프린팅, VR자전거 시뮬레이터, 가이드, 교육프로그램, 관리시스템, 네트워크, 다운로드, 디자인, 디지털, 디지털교과서, 로봇, 로잉머신, 마이스터고, 마이크임팩트스퀘어_기, 매칭, 맵, 멀티미디어, 메이커, 메이커 스페이스, 멘토링, 무선인프라, 미션, 바이오, 밸런스보드, 벤처_기, 브레인, 블로그, 비전, 사업모델, 서포터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소프트웨어, 수업콘서트_사, 스내그골프 스크린, 스마트, 스마트패드, 스키 시뮬레이터, 스타트업, 스포츠, 스포테인먼트, 시나리오, 어린이통학버스, 에듀넷, 온·오프라인,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운영 매뉴얼, 워크북, 워크숍, 원스톱, 이러닝, 인스타그램, 인터뷰, 인프라, 중앙컨설턴트, 지식채널e_기, 센터_기,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찾아가는 컨설팅_사, 청소년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_사, 체육진로직업카드, 카톡 ID, 캠퍼스, 콜센터, 토크 콘서트, 파일, 페스티벌, 페이스북, 포럼, 프로젝트형, 프린터, 플레이스토어, 핸드북,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	91
	관세청	홈페이지, 달러, 사이즈, 아세안, 이메일, 인터넷, 카드 뉴스, 팩스, 마스터AWB, ERP시스템, 가스, 공공서비스,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_기, 광디스크, 기반시스템, 기어박스, 데이터, 라벨같이, 라운지, 마이크로필름, 메일링 서비스, 물류서비스, 베트남, 보루, 블로그, 블록체인, 빅데이터, 샴푸, 서버, 서비스, 성실신고지원팀, 세라믹, 센터, 스캔, 싱가포르, 아프리카, 안내서비스, 에너지, 워킹그룹, 원피스, 자사 시스템, 체크리스트, 콜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터미널 베트남, 패러다임, 포털, 포털사이트, 프로그램, 플랫폼	50
	국토교통부	시스템, 서비스, 홈페이지, 오피스텔, 인터넷, 팩스, 플랫폼, IOS 앱스토어, O2O서비스, 고속버스, 온라인서비스, 굿모닝 미리(MiRi)_사, 드론, 레미콘, 레일, 로드맵, 리더십, 리모델링, 리스크, 마이홈, 메뉴, 모	56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니터링, 모바일, 모바일 앱, 서버, 서울메트로_기, 센터, 소프트웨어(S/W), 솔루션,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센터_기, 시스템 아파트, 아르바이트,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안전벨트, 앱, 예약 서비스, 온·오프라인, 온라인, 웹, 위즈덤_기, 이메일 서비스, 이슈, 인터페이스, 주민센터, 참여이벤트, 컨설팅, 코레일_기, 타워크레인, 터미널, 팀, 표준정책패널, 프로젝트사업부_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_기, 핸드레일, 환승센터	
	금융위원회	서비스, 시스템, 펀드, 홈페이지, 가이드라인, 감리시스템, 금융상담센터, 금융서비스, 등록코드, 마케팅, 메리츠_기, 모바일, 미팅, 뱅카, 벤치마킹, 보금자리론, 보이스포싱, 비즈니스, 세미나, 소파, 스튜어드십코드, 신고센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_정, 아이디어, 앱,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워크아웃, 유안타_기, 유암코_기, 이메일, 인터넷, 인터뷰, 정책모기지, 제로섬, 중소벤처, 캠프_기, 팀장, 파일럿 프로그램, 프로그램, 플레이어, 핀테크, 혁신모험펀드, 혁신벤처기업, 휴대폰	45
	기획재정부	아이디어, 오프라인,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디지털 플랫폼, 로또_기, 모니터링, 배드민턴, 벤처기업_기, 블로그, 블록체인, 서비스창업, 센터_기, 소셜, 오픈, 온실가스, 워크숍, 이노비즈_기, 이슈, 인센티브, 인터뷰, 재정현장 컨설팅 서비스, 치료프로그램, 카라반, 카프로_기, 캐시노트_기, 컨트롤타워, 컨퍼런스, 콜버스 사업, 콜버스랩_기, 티맥스OS_기, 팀, 파트너, 프로그램	35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포럼, 내비게이션, 네트워크, 바이러스, 백신, 서비스, 세미나, 스마트, 컨설팅, 포털 사이트, 다음_기, aT센터 세계로움_기, USB 펜, 가이드라인, 과학자문그룹, 그룹, 글로벌, 네이버_기, 네트워크, 노하우, 농심엔지니어링_기, 농업시스템, 농촌관광시스템, 다운, 동아시아, 리조트, 리플릿, 메론(멜론), 멘토링, 모니터링 캠페인, 배너, 뱃지, 벤치마킹, 부스, 브랜드, 사회서비스, 산지유통센터(APC)_기, 삼정 KPMG_기, 세션, 센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 스마트팩토리, 스템프 투어, 슬로건, 아나나스푸드_기, 아이디어, 어플, 업로드, 워크숍, 원스톱, 웰촌 홈페이지, 웹페이지, 유튜브, 이미지, 이벤트, 이슈, 인삼브랜드, 인터넷, 인터넷포털, 채널, 체험프로그램 매칭, 카드, 카드뉴스, 카카오톡, 캠페인, 컨퍼런스, 컨퍼런스_사, 컵과일, 쿼터, 클러스터_기, 토마토, 토크 콘서트, 토크쇼, 톤, 파트너십, 파프리카, 팜파티, 패러다임, 페이스북, 포럼, 푸드팩토리_기, 프로그램	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 센터, 시스템, 빅데이터, 에너지, 온라인, 인프라, 프로그램, 센터_기, 로봇, 매칭, 벤처기업, 블록체인, 아이디어, 인터넷, 포커스 그룹, 플랫폼, 핀테크, 지엘레페, 커뮤니티, LG유플러스_기, SK브로드밴드_기, SK텔레콤_기, 가이드북, 갈라파고스 규제, 공동인프라, 교육프	103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로그랩, 국가,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글로벌, 기술로드맵 샌드박스, 기술마케팅,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_기, 기후산업육성모델, 네거티브, 네트워크, 노벨상, 노하우, 데이터, 델리메트로_기, 답메디, 레티널, 로그인, 연구데이터, 롯데시티호텔_기, 리튬-이온전지, 마케팅, 모바일, 미션, 바이오 노플러그인(No Plugin), 뱅크사인_기, 비즈니스, 샌드박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폰, 스마트폰 카메라, 스타트업 팩토리, 시범프로젝트, 신용카드, 신재생에너지, 아스팔트, 아이템, 안전모니터링, 알뜰폰, 암흑데이터, 액티브X, 앱(App), 에어컨, 연구데이터, 오픈사이언스, 온라인_정, 온실가스, 워크숍, 원스톱, 웹표준, 유엔아이솔루션즈_기, 이노비즈센터_기, 이니텍_기, 인터넷기업, 정보처리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체인아이디_기, 친환경에너지타운, 카카오페이_기, 컨설팅, 컨트롤타워, 컴퓨팅, 콘텐츠진흥원, 클라우드웍스,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통신민원조정센터_기, 팩스, 포털사, 프로젝트, 하드웨어, 하이브리드, 한국세라믹연구원, 행정서비스_정, 홈페이지, 희망아이템	
	방송통신위원회	서비스, 홈페이지,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 프로그램, 모바일, 스마트폰, 이벤트, 시스템, 캠페인, 포털, 사이버 폭력, KT 스카이라이프_기, 게임, 교육프로그램, 구글_기, 글로벌, 기프트콘, 다큐멘터리, 드라마, 드라마공작소, 드론, 디지털, 리모컨, 마이크로소프트_기, 마케팅, 메뉴, 메뉴화면, 메시지, 모티브, 뮤지컬, 비즈니스 네트워킹, 사물인터넷(IoT), 사이버안심존_사, 사이버폭력, 사이트, 서비스 모델, 소셜로그인, 쇼핑, 스모비, 스타트업, 스포츠, 시청자미디어재단, 아파트, 알리미서비스_사, 애니메이션, 앱, 업데이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원스토어_기, 원스톱, 월드컵, 유료콘텐츠, 유튜브_기, 음성스팸, 이모티콘, 인터넷기반 서비스_사, 인터넷리더, 인터넷윤리, 장르, 전문채널, 정기모니터링, 좀비(zombie), 지역아동센터, 체크, 치유프로그램, 카드뉴스, 캐릭터, 캠프, 컨설팅, 케이블, 케이블TV, 콘텐츠, 콜백 시스템, 크리에이터, 클릭, 퍼포먼스,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한국인터넷드림단, 핵심키워드, 휴대폰	84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프로그램, 국제 컨퍼런스, 데이터, 벤처기업, 비즈니스 모델, 빅데이터, 세미나, 세션, 스타트업, 시스템, 아이디어, 에너지, 원스톱, 플랫폼, 스마트 이마켓_사, R&D대전_사, 그린버튼_사,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기계프레스 믹서기, 기술거래플랫폼, 달러, 드론봇, 드론쇼 코리아, 디지털, 레이싱, 렌탈, 로닉_기, 로봇, 리스계약, 마케팅 프로그램, 매칭 상담회, 맥도날드_기, 머시닝센터, 머신, 메시지, 모터, 바이어,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플러스_정, 바이오헬스, 바잉오퍼, 발광다이오드, 백신, 베이커리, 벅스코, 벤처, 벤처캐피탈, 보안	111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 환경 모니터링, 부스, 붐, 브랜드, 블로그, 비전, 비즈니스, 사물인터넷(IoT), 사업 관리시스템_기, 서비스, 서비스 모델, 서비스산업, 섯다운, 소비패턴, 수출마케팅, 수출바우처, 스마트 팜, 스크러버, 스타벅스_기, 스토리, 신재생에너지, 아세안, 아이피티비, 아트센터_기, 앱, 에너지 신서비스_사, 에이비엘바이오_기, 엘지유플러스_기, 온라인 시스템, 온실가스, 운수·물류서비스, 웹, 이벤트, 인코어드_기, 인텔, 주스, 캘리포니아 차이에너지_기, 컨설팅, 코엑스_기, 코오롱생명과학_기, 콜라보레이션 쇼, 콜센터, 컬컴, 클라우드, 클라우드 드론 관제시스템, 클릭, 테스트베드, 투자 유치 포럼, 트렌드, 트리파드 밥티스트, 파나시아_기, 파트너링, 패러다임, 패턴, 포털, 프랜차이즈, 프로젝트, 프린팅, 플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_기, 헬스케어,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밸브, 터빈, 토론, 센터, 라돈, 리콜, 매트리스, 모나자이트, 모델, 밀리시버트, 비닐, 콘크리트, 라돈, 매트리스, 가스켓 후프, 독립스프링매트리스Q, 동계올림픽, 드론, 디스크, 라디오, 매트, 메모텍스, 모자나이트, 브랜드,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샘플시료, 샤워, 성지베드산업_기, 세트, 속커버, 스파크, 스펀지, 슬러지, 심포지엄, 엘빈 PU 가죽, 에넥스_기, 에어컨, 음이온 시스템, (주)까사미아_기, (주)티앤아이_기, 지원센터_기, 코호트, 콜센터, 컨침대, 토퍼, 티앤아이_기, 패럴림픽, 펌프, 폼, 프로그램, 플러그, 헬기, 홈쇼핑, 홈페이지	55
	외교부	글로벌, 서비스, 메시지, 영사콜센터, 인프라, 포럼, 프로그램, 세이프가드, N서울타워, 가이드북, 네트워크, 네트워킹, 뉴스레터, 니스 테러, 다운로드, 대테러센터, 대테러활동, 데스크톱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_사, 동아시아, 디자인, 라디오, 로스쿨, 리더십, 멘토링, 모니터링, 모멘텀, 반덤핑, 배럴, 백업용, 법률핸드북, 비자, 비즈니스, 사이버사무국, 서아프리카, 세미나, 세이프가드, 스마트폰,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아시아, 에너지, 에볼라 바이러스, 에피클로로히드린, 엔진시험장, 예스24, 오프셋잉크, 온라인, 올림픽, 외교톡톡_사, 워크숍,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마케팅사, 웹페이지, 유럽, 유엔_기, 이슈, 이슬람, 인턴, 임차버스, 제로 형거, 채널, 카르툼, 캠페인, 컨트롤타워, 코너, 콜센터, 콩고민주공화국, 탄도미사일, 태블릿 컴퓨터, 테레프탈산, 토크콘서트, 트랙, 파트너십국장, 패럴림픽, 포스터, 폴리부타디엔고무, 피드백, 협력센터, 홈페이지, 해외안전지킴센터_기	8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시스템, 마케팅, 벤처, 서비스, 스마트 공장, 온라인, 센터, 라벨같이, 솔루션(설루션), 컨설팅, 다운로드, 네이버_기, 네트워크, 모바일, 성공모델, 패키지, 통합콜센터, 풀, 프로그램, 프로젝트, 플랫폼, CJ푸드빌_기, LG생활건강_기, O2O플랫폼사_기, PG사, QR코드, SK하이닉스_기, VAN사, 경영노하우, 공영홈쇼핑_기, 공	129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정시물레이션, 교육인프라, 규제샌드박스형, 글로벌, 글로벌엑셀러레이팅, 기술개발테마, 기술로드맵, 넛지 방식, 네거티브화, 노하우, 벤처펀드, 데이터, 드론, 레드카드, 로봇, 롯데GRS_기, 롯데홈쇼핑_기, 마더테란_기, 매거진, 매뉴얼, 매칭, 맥스타일_기, 멘토링, 모델, 모태펀드, 미스매치, 미팅, 바리스타, 벤처_기, 벤처기업, 벤처투자, 부스투어, 블록체인, 비즈_사, 빅데이터, 성공노하우, 센서, 센터_기, 소상공인페이_사, 소셜벤처, 쇼핑, 스마트, 스마트벤처캠퍼스, 스마트창작터, 스크럼 방식, 스타트업, 스토리, 시니어창업지원, 신용카드, 아이디어, 아임쇼핑_기, 앱투앱, 어젠다, 엑스포_사, 오픈바우처, 오픈이노베이션, 온라인게임, 온오프라인, 원클릭, 위더스코리아_기, 유튜브_기, 을지OB베어_기, 이랜드월드_기, 이메일, 인센티브, 인터넷, 인프라, 전동킥보드, 전동휠, 주니어보드, 첨부파일, 체인화, 카카오페이_기, 캠페인, 캠페인, 피칭대회, 컨소시엄, 케이뱅크_기, 코엑스_기, 콜옵션, 클러스터, 테마관, 토스_기, 토크 콘서트, 롤모델, 틱스타운_기, 패러다임, 패턴, 펀드, 페이먼트_기, 페이스북, 포럼, 포스코_기, 프랜차이즈화, 피노스_기, 핀테크, 홈쇼핑	
	통계청	센터_기, 홈페이지, 디자인, 서비스, 통계포스터, 팀, 포털, 다운로드, 데이터, 데이터과학, 빅데이터, 온라인, 웰빙, 인터넷, 패키지, 플랫폼, 마이크로데이터, 센서, 한글화일, e- 나라 서비스_사, 갤러리 투어, 거버넌스, 게임, 국가지표 통합서비스_사, 국가통계승인마크, 국민디자인단, 국민서비스디자인단_기, 그래프, 그리드, 글로벌 어젠다, 등록센서스, 디자이너, 디지털, 마라톤, 마우스, 마이크로데이터, 마인드맵, 맵, 모니터링, 모바일, 브레인스토밍, 세션, 소통코너, 스마트, 시나리오, 시스템, 실버, 아이디어, 어울림세터, 엘리베이터, 오아시스, 온라인 서비스, 워크넷_기, 워킹맘, 원격서버이용, 이미지, 이슈분석, 이용센터, 인크루트_기, 차트, 체크, 컨벤시아_기, 컨싱턴리조트_기, 콘텐츠, 키즈, 테이블, 템플릿, 토론세션, 통계마인드, 통계서비스, 통계시스템, 통계정책관리시스템, 통계토크쇼, 통계포커스, 통계프리즘, 통계플러스, 통합서비스 워크숍, 패러다임, 퍼실리테이터, 포럼, 포털사이트, 프로그램, 해킹	83
	특허청	서비스, 구글_기, 디자인, 아이디어, 배터리, 벤처, 벤처기업, 센터, 콘텐츠, 핸드폰, IAM 매거진_기, OR코드, 가스레인지, 가이드라인, 검색엔진, 네이버_기, 넥쏘_기, 다운, 데이터, 도요타_기, 드라마, 디지털, 라이선싱, 레저, 마스크, 마이크로소프트_기, 메모리북, 모델 페이스북, 모바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미투, 백신, 베개커버, 비디오테이프, 비즈니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트, 셀, 솔루션, 수수료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스캔, 스타트업, 스티커앨범, 스포츠, 엑	92

군	기관명	외래어 목록	개수
		싯, 엔드플레이트, 엘지_기, 오디오테이프, 온라인, 웨어러블, 웹툰, 웹표준, 위니아_기, 인터넷, 인테리어, 전자출원사이트, 주성엔지니어링_기, 지멘스_기, 채소주스, 캠핑, 컨설팅, 컨소시엄, 컴퓨터, 케이스, 케이티지_기, 코너, 코웨이_기, 코펠 홈페이지, 콘센트, 쿨컴_기, 텔레비전, 투싼_상, 특허바우처, 특허정보시스템, 특허폴리오, 팀, 파일, 파트장, 폐친, 포인트, 포터블, 포털사이트, 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_상, 하트플로우_기, 홈페이지, 휴대폰	

[붙임4] 18부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어려운 정책 용어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1	고용노동부	K-Move 스쿨	청년 국외 취업 지원 사업	□ 다양한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 ○ (해외취업) 한일 대학간 3+1제도 활성화*, K-Move스쿨 집중지원 등을 통해 일본 아세안 지역 1만명('18~'20년) 취업 지원**
2	고용노동부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근무 혁신 성과급제	일하는 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도입('18년 모델 개발→ '19년 시범실시)
3	고용노동부	시니어 헬스 케어	① 어르신 건강 관리 ② 노년층 건강 관리	(신중년 특화과정 운영) 기술·기능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폴리텍*을 통해 시니어헬스케어 , 자동차복원 등 6개 과정 제공 * 서울 정수, 서울 강서, 남인천, 대구
4	국토교통부	ex-HUB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 정류장	□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혁신 ○ (대중교통 연계) 고속도로 본선, 휴게소 등에서 광역버스·철도 등과 환승 가능한 ' ex-HUB ' 단계적 확대('17년 9개소 → '20년까지 13개소) □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동서화합지역) 섬진강 양안의 자연 문화자원을 아우르는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방안(동서통합대교, ex-Hub 고도화 등) 마련
5	국토교통부	K-City	자율 주행 자동차 실험 도시	· (자율차) 가상 실험도시 K-City 를 개방하여 스타트업·연구소가 활용하고, 평창 자율차 시연과 서울 도심 시승행사를 개최하여 성과 공유 기회가 확대됩니다.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6	국토교통부	PPP 사업	민관 협력 (투자 개발) 사업	<p>* 해외건설 수주액(억불) : ('13) 652 → ('14) 660 → ('15) 461 → ('16) 282 → ('17) 290</p> <p>◇ 해외진출 지원공사를 설립하여 투자개발사업(PPP)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점국가 대상 선단형 진출을 통해 해외수주 제2의 도약 추진</p> <p>* 수주액 : '15, '16년 전년대비 급감 (30%이상↓)하였으나, '17년 290억불 (3%↑)로 다소 회복세</p>
7	국토교통부	RTMS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p>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 추진</p> <p>* 자금조달계획을 RTMS로 모니터링 하고, 과태료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p>
8	국토교통부	세일 앤 리스 백 리츠 → 세일 앤드 리스 백 리츠	매각 후 재임대 투자 기금	<p>○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p> <p>- 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침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필요시 역전세난 등 서민 피해 방지방안 마련</p> <p>* 세일앤리스백리츠를 도입하여 한계 차주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로 제공하는 방안 등</p>
9	국토교통부	SWC(Smart Water City)	(친환경) 물 특화 도시	<p>□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 물관리 실현</p> <p>○ ICT를 접목하여 수량 수질을 실시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SWC(Smart Water City) 시범사업 추진(세종시, '18.4~'20)</p>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10	국토교통부	마이홈	우리말 작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시 등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등록임대 여부, 임차인 권리(임대무기간 내 계약갱신청구 등)를 고지토록 하고, 마이홈*을 통해 임대등록 과정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상세 안내
11	국토교통부	셀프 백 드롭 서비스	수하물 자동 위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공항 서비스 - 수하물을 승객이 직접 처리하는 셀프백드롭 서비스 확대('18.1, 인천, 김포·김해·제주 연내), 직항승객의 액체류 보안봉투 폐지('18.7) 추진
12	국토교통부	스마트 톨링	통행료 자동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관리 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 '20년 스마트톨링 본격 시행에 앞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18.3)하고, 국민적 공론화('18.5)* 및 남해선 시범사업 중간점검('18.9)
13	국토교통부	오픈 캠퍼스	(지역 대학생 대상) 열린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강화 ○ (혁신도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도시별 발전테마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 마련('18.10)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18.1, '22년까지 30%), 인재양성을 위한 오픈캠퍼스 개설('18.7),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역할 강화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14	국토교통부	콜 버스	호출 버스	<p>□ 철도 이용객 서비스 편의 제고</p> <p>○ (취약지역 접근성 제고) 고속철도가 직접 닿지 않는 지역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하고, 주요 역사에 카셰어링 전용 구역** 설치</p> <p>- 콜버스, 리무진 등 신교통서비스를 철도역사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철도역 접근성 향상(철도역 연계교통 확대방안 마련, '18.10)</p>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BS 제도	연구 과제 중심 제도	<p>출연(연), 대학 혁신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연) 역할·책임(R&R) 확장(삶의 질 향상, 국방, 에너지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PBS 제도 획기적 개편방안 마련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패키지형 투자 플랫폼	통합 투자 기반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으로 기술-산업-제도 통합 지원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래그십 프로젝트	대표 사업	<p>4차 산업혁명의 원유, 빅데이터 활용 3배 확대 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질 제고에 활용 플래그십 프로젝트 <p>* 미세먼지 분석, 교통사고 예보, 재난위험 예측 등</p>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 (제도)	<p>범부처 규제이슈 선제적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위치정보 범위 명확화 비식별조치 법제화 ICT 규제샌드박스
19	교육부	평생 교육 바우처	평생 교육 이용권	<p>모두의 평생교육을 향한 첫 발자국 평생 교육 바우처 신설</p> <p>>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로 교육 격차 해소(5,000명 내외, 연35만원)</p>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20	국방부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축체계 관련 전력 확보 사업 추진 - Kill Chain : 軍정찰위성 체계개발 착수, F-35A 美현지 인수, 자항기뢰 양산 계약 등 - KAMD :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계약 등 - KMPR : 특수작전용무인기 입찰 공고, 양안형야간투시경·산탄총 구매 시험평가 등
21	국방부	Kill-Chain	선제 타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축 체계 조기·적기 구축을 위한 최우선 예산반영('19~'23 국방중기 계획) * (Kill Chain) 북한 쏠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식별 및 타격능력 향상
22	국방부	KMPR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축체계 관련 전력 확보 사업 추진 - Kill Chain : 軍정찰위성 체계개발 착수, F-35A 美현지 인수, 자항기뢰 양산 계약 등 - KAMD :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계약 등 - KMPR : 특수작전용무인기 입찰 공고, 양안형야간투시경·산탄총 구매 시험평가 등
23	국방부	WMD 대응 센터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강화 * 합참 內 '핵·WMD 대응센터' 신편('17.1.1부),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신편(12월)
24	기획재정부	K-City	자율 주행 자동차 실험 도시	<p>□ (자율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K-City'* 착공('17.8) 후 일부구간을 우선 개방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임시 운행허가를 확대('16, 11대 → '17, 30대)</p>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25	기획재정부	MICE 산업	기업 회의·포상 관광· 국 제 회 의 · 전 시 회 (MICE) 산업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으로 기술-산업-제도 통합 지원
26	기획재정부	VR 종합 지원 센터	가상 현실 종합 지원 센터	계속 도전하기+혁신 도미노 - 경제 사회·전분야로 확산 • 문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 1천억원, VR 종합지원센터 조성 • 관광: 웰니스 wellness관광, MICE 산업 육성, 新고나광서비스 창업 촉진
27	기획재정부	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 (제도)	새로운 시도를 촉진하는 시스템 1. 신속한 행정입법 신기술·신산업 발전 저해 법령 및 훈령·고시 등 ‘그림자 규제’ 일괄정비 2. 유권해석제도 활성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에서 쏘3분야로 확대, 적극 행정 면책 활성화 3.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28	기획재정부	멘토링 프로그램	① 성장 지원 프로그램 ② 우수 기업 육성 프로그램	함께 해결하기+혁신 공감대 - 공론화, 참여 • 공모전·경진대회, 다큐멘터리, 토론회, 토크콘서트 등 실시 • 혁신성장 우수기업 포상식 개최,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29	기획재정부	스마트 시티형 도시 재생 사업	첨단 도시형 도시 재생 사업	속도 따라잡기 + 변화 - 핵심 선도사업 집중 SMART CITY • 신규부지 선정 '18년 1월말 • 스마트시티형 도시 재생 사업 추진
30	농림축산식품부	골든 시드 프로젝트	① (수출용) 우량 종자 육성 사업 ② 황금 종자 사업	□ 종자·농생명 소재, 곤충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분야 개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골든시드 프로젝트 로 국산우수품종 수출 확대, 기능성소재 7대 중점분야* 중심의 R&D 및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31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혁신 밸리	① 첨단 농장 혁신 단지 ② 지능형 농장 혁신 단지	□ 스마트팜 확산과 혁신창업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스마트팜 단지 기반조성과 같은 기존사업 연계, 민간 참여 프로젝트 발굴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조성 계획 마련(~’22, 4개소)
32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R&D 벨트	① 식품 연구 개발 지대 ② 식품 연구 개발 집합 지구	○ 산학연 전문가의 기술 애로 진단과 세무, 인허가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소’ 운영(’18.3) ○ 클러스터 중심으로 식품 R&D 벨트 (국가식품클러스터-한식연-농진청 등)를 조성하고 지역 우수인력과 입주기업 간 일자리 연계
33	농림축산식품부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 육성 (사업)	□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등 식품·외식 분야 창·취업 역량 강화
34	농림축산식품부	창업 지원 Lab	창업 지원 연구소	□ (취·창업 지원)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식품·외식 분야에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內 ‘창업지원 Lab’ (’17년 4개팀→’18년 16)으로 가공식품 시제품제작 및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35	농림축산식품부	푸드 플랜	① 먹거리 종합 정책, 먹거리 종합 전략 ② 먹거리 종합 계획	[국가 푸드플랜] □ 정부·생산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핵심아젠다*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과제 구체화 ○ 국가 푸드플랜 마련을 위해 부내 전담 T/F를 구성(’18.1)하고, 식품 안전·복지·영양균형 등 세부 정책프로그램 구체화(연구용역, ~’18.9)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36	문화체육관광부	VR 종합 지원 센터	가상 현실 종합 지원 센터	계속 도전하기+혁신 도미노 - 경제 사회·전분야로 확산 • 문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 1천억원, VR 종합지원센터 조성 • 관광: 웰니스 wellness관광, MICE 산업 육성, 新고나광서비스 창업 촉진
37	문화체육관광부	맞춤형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	① 어르신 맞춤형 체력 단련 서비스 ② 노년층 맞춤형 체력 단련 서비스	○ (응용기술 개발) 문화기술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시장 수요 및 실제 서비스를 고려한 기술 개발 * (예시) 가상현실 콘텐츠 기술 및 서비스, 인공지능+정보자료 활용기술, 맞춤형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 , 생활스포츠 운동능력 요인 측정 및 트레이닝 기술 등
38	문화체육관광부	백 스테이지 투어	무대 뒤 견학	국립단체 지역순회 및 학교 갈라공연, 해설, 체험교실 운영 * 백스테이지 투어 (25회, 국립극단), 지역순회(55회), 찾아가는 발레교실(7회), 학교오페라(135회), 무용학교(54회) 및 오픈-업 프로젝트(현대무용단) 등
39	문화체육관광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이야기 창작 협력 지구	○ (이야기) △이야기 유통 플랫폼 '스토리움'의 사업화 지원(10건), △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구축(진천, 착공), △지역 이야기 수집·발굴* * 지역 문화유산·도시·개인기억 이야기 수집·보존 시스템 구축 컨설팅('18년, 1개소)
40	문화체육관광부	아트 배너전	'예술적 띠 광고' 전시회	○ (문화행사) △(대회 전) 평창 겨울음악제, 아트배너전 등, △(대회 중) 백남준 비디오아트, 국·공립 예술단체 공연 등, △(한중일) 호랑이 미술전, 전통극 공연 등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41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옴부즈맨단	온라인 정책 자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전하는 정책) 제작·확산·환류 등 정책소통 전 과정에 국민 참여 - (제작·확산) 국민소통포럼, 청년크리에이터, 정책기자단 등 - (환류) 국민소통 모니터링단*, 온라인 옴부즈맨단, 자문위원회 등 <p>* 지역·성·직업·학력별 1,000명의 국민 모집, 월 1-2회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p>
42	문화체육관광부	원 캠퍼스	산학연 융합 캠퍼스	<p>(콘텐츠 창의인재) △(청년) '원캠퍼스(One Campus)'를 구축하고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 양성(4개 과제), 현장 밀착형 멘토.멘티 훈련 및 견습지원(10개 기관, 200명), △(청소년) 중고교 대상 '창의체험스쿨' 운영(5개 소)</p>
4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콘텐츠 페어	지역 콘텐츠 박람회	<p>② 문화 분권_지역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시상(사업·홍보지원 인센티브), △지역콘텐츠페어 등
44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 투어 카드	한국 관광 교통 카드 (코리아 투어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역 교통·숙박·안내 등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p>(교통)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도' 제작, 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 출시,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 활동 특성이 반영된 '관광교통패스' 도입</p> <p>* ('18) 강원 지역 관광 관련 할인혜택 제공 / 남해안 지역 에디션 개발</p> <p>** 시니어(노년층)/내일로(청년)/문화누리(취약계층)</p>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45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멀티 유즈 랩 → 콘텐츠 멀티 유즈 랩	콘텐츠 복합 활용 연구소	<p>○ (IP 활용) ‘멀티유즈랩(’17.12월 개소)’을 기반으로 캐릭터·만화 등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를 다른 콘텐츠로 재창작 촉진</p> <p>* (멀티유즈랩) IP 아카이브 구축, 타 분야 기업과 IP 보유기업 매칭, 법률지원 등</p>
46	문화체육관광부	트래블 패스	여행자 카드	<p>○ (숙식·교통 개선) 숙박·음식점·공중화장실·도시경관 시설 정비 및 서비스 교육, 외래 관광객 교통 편의 제공 및 특별교통대책 시행</p> <p>* △문체부(식당·숙박시설 개선, 외국어 메뉴판/간판 지원, 트래블패스 판매 등), △국토부(도로포장, 노후건축물정비), △행안부(공중화장실, 꽃길), △강원도(대중교통증편, 차량2부제등)</p>
47	문화체육관광부	한민족·문화 다양성 아카이브	한민족·문화 다양성 자료 보관소	<p>○ (인문의 생활화) ‘인문360°’(온라인 인문학 플랫폼) 테마별 콘텐츠 제공 등 기능 강화*,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심화(지역 특화과정 확대, 85개관)</p> <p>* 전국 43개 인문한국연구소(교육부), 지역잡지네트워크(민간), 박물관·미술관·문화원, 한민족·문화다양성 아카이브(우리 부) 등과 네트워크 구축</p>
48	문화체육관광부	할랄 레스토랑 위크	이슬람 음식 홍보 주간	<p>(개별관광객 유치) 외국인 선호를 반영한 테마별 관광콘텐츠 선정 및 온라인 광고·상품화, 환승관광프로그램 운영 공항 확대(인천→부산)</p> <p>- (무슬림) 이동식 기도실 설치 등 무슬림 관광객의 시설 접근성 제고, 할랄산업엑스포(8월) 연계 할랄 레스토랑 위크 확대 개최(8~10월)</p>

번 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49	법무부	법률 홈닥터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3.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 법률홈닥터 증원, 마을변호사 확 대 배치 - 제도 홍보 및 전문화로 서비스 내 실화
50	법무부	스마일 센터	범죄 피해 통합 지원 센터	3.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 범죄피해자 법률적 지원 강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상근 진술 조력인 배치 확대 • ' 스마일센터 ' 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 확대
51	보건복지부	매칭 플러스 센터	노인-일자리 연결 센 터	○ 노인일자리를 확대('17년 46.7만 →'18년 51.0만명)하고 직무역량지표 개발, 양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 ○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등으로 민간 시장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 -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칭플 러스센터 모형개발 등 통합서비스 제 공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생산물 공동 브랜드화, 상권분석 등 지원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52	보건복지부	스마트 헬스케어	① 첨단 건강 관리 ② 지능형 건강 관리	5.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 ◆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으로 혁신성장 견인 □ (스마트 헬스케어)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53	보건복지부	양코르 라이프 캠퍼스	우리말로 쉽게 작성 필요	□ (노인일자리)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공익활동, 민간분야 일자리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제고 프로그램 지원 *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발표(2월) ○ 노인일자리 확대('17년 46.7만 → '18년 51.0만명)하고 직무역량지표 개발, 양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
54	보건복지부	양육 크레딧 → 양육 크레딧	① 양육 기간 인정 제도 ② 양육 기간 산입 제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적정성 강화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 확대·개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및 지급수준 적정성 검토 추진 * (현행) 월 20일 이상 → (개선) 월 8일 이상 / 약 75만명 가입 목표 ** 양육크레딧 으로 명칭 변경, 첫째 아부터 지원('83년 기준 530만→705만명)
55	산업통상자원부	9-Bridge	① 9개 분야 협력 ② 9개 다리 (9-Bridge)	Ⅲ. 혁신성장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 추진 ① ASEAN·인도 파트너십 확대 ② 9-Bridge 추진 본격화 ③ 美·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④ 무역 2조불 시대 혁신적 수출·투자정책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56	산업통상자원부	K-City	자율 주행 자동차 실험 도시	· (자율차) 가상 실험도시 K-City 를 개방하여 스타트업·연구소가 활용하고, 평창 자율차 시연과 서울 도심 시승행사를 개최하여 성과 공유 기회가 확대됩니다.
57	산업통상자원부	V2G 서비스	전기 차와 전력망 간의 충전 방전 호환 서비스(V2G 서비스)	② V2G(Vehicle to Grid) · 전기차 저장전력의 전력망 연결·활용 실증사업 추진 * 양방향 충전(OBC) 등 요소 기술 · V2G 서비스 제도 마련 * 요금제, 전력판매 규정 등
58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헬스케어	① 첨단 건강 관리 ② 지능형 건강 관리	5.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 ◆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으로 혁신성장 견인 □ (스마트 헬스케어)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59	산업통상자원부	월드 클래스 300	① 세계적 기업 300 ② 세계적 기업 300개 육성	②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산업별 핵심 R&D 참여 활성화 *R&D 예산('18, 억원): 로봇 781, 자동차 772, 바이오 368, 전자 200 등 · 新산업 중심 월드클래스 300 추진 * '18년 30개사 추가 선정, '19년 2단계 추진('19~'22년 130개사 선정)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60	여성가족부	방과 후 아카데미	① 방과 후 교육 ② 방과 후 수업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로 지역사회 가족돌봄 허브기능 강화 - 보편적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센터 단계적 확대 - 지자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아카데미 등 지역 내 돌봄지원 기관간 연계·협력(돌봄협의체 구성 등)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61	여성가족부	비즈 쿨	창업 교육 과정	○ 학교 밖 청소년 취 창업 기반조성 - ‘창업동아리’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의인재로의 성장 지원 * 비즈쿨 (중기부 협력) :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지원 등
62	여성가족부	성평등 보이스	① 성평등 문화 확산 남성 모임 ② 성평등 실천 남성 모임	□ 청년여성,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 5대 권역별*로 성평등에 선도적인 남성이 참여하는「 성평등보이스 」 출범·운영('18.7월), 성평등 남성 참여 모델을 지역으로 확산 * 5대 권역 : 서울·경기, 충청, 강원, 호남, 영남
63	여성가족부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 →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스	① 여성 친화 도시 시민 참여단 ② 여성 친화 도시 홍보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 ○ 남녀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 -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주도 조직(주민협의체) 구성 시 지역 내 여성 공동체 활동가* 참여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참여 전문가 등 참여 보장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64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전자 역사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을 개편하여 전문성 있는 콘텐츠 확산 *다국어 페이지 추가 구성 및 e-역사관 개편 방안 모색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관한 기록을 전 세계에 확산·공유
65	중소벤처기업부	B+ 프리미엄 샵 → B+ 프리미엄 숍	준고급형 제품 판매점	□ 공적 기능 강화 등 유통망 전면적 혁신 ○ (정책매장) '행복한백화점'의 브랜드 정체성을 백화점에서 '아이디어 생활용품 전문매장'으로 전환하여 명칭*과 매장 개편** ('18.상) * 예시) "행복한마켓", "아임스타즈 하우스", " B+프리미엄샵 (전문점)" 등
66	중소벤처기업부	GMD	세계 시장 개척 전문 기업	'18년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사업 [사업명] • 수출성공패키지 • 고성장수출역량강화 • 아시아하이웨이 • 전자상거래수출지원 • GMD
67	중소벤처기업부	Open Community	① 열린 공동체 ② 지역 혁신 창업 센터	□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의 창업허브 조성 ○ (혁신센터) 지역의 창업·중소 벤처 기업, 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민간의 혁신주체들이 상시 교류·협력하는 " Open Community " 조성
68	중소벤처기업부	TIPS	(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 혁신성장 지원 자금의 대폭 확대 (5,460억원 증액) ○ 창업지원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17. 16,500 → '18. 18,660억원) 하고, 유망 창업기업 연계지원 자금 별도 운용* * TIPS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기업 연계 지원(1,000억원)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69	중소벤처기업부	굿잡 보증	일자리 창출 기업 특별 보증	<p>(특별보증)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Good Job 보증)하여 중소기업 고용 여력 확보 (5,000억원, 기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창출(점핑잡, 쉐어링 잡)과 고용유지(베스트잡) 유형으로 나누어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등 지원 내용을 차별화 <p>* 굿잡 보증 신규공급(계획) : ('17년, 시범) 1,000억원 → ('18년) 5,000억원 보증비율 확대(최대 95%), 보증료 0.4%p 감면, 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 등</p>
70	중소벤처기업부	단체 바우처 해외 전시회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사업	<p>'18년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사업 [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단체바우처 해외전시회
71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p>① 도전! 한국 창업 초기 기업</p> <p>② 도전! 한국 새싹 기업</p>	<p>○ (문제해결형 창업경진대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추진</p> <p>-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를 통해 드론, AI 등의 분야 창업팀 문제해결 과정을 TV방송으로 방영</p>
72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문화 행사	창작자 문화 행사	<p>-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플랫폼 등 인프라 지원과 융·복합 프로젝트, 메이커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p> <p>* (일반형) 일반인 대상 '18년 60개소, (전문형) 전문 창작활동과 사업화 연계 지원 '18년 5개소</p>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73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① 열린 제작실 ② 창작 활동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커스페이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작활동과 창업시도를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신설('18년 235억, 65개소 신규)
74	중소벤처기업부	베스트 잡	① 양질의 일자리 ② 좋은 일자리	<p>(특별보증)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Good Job 보증)하여 중소기업 고용 여력 확보 (5,000억원, 기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점핑잡, 셰어링 잡)과 고용유지(베스트잡) 유형으로 나누어 보증비를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등 지원 내용을 차별화
75	중소벤처기업부	소셜 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① 사회적 혁신 기업 보증 강화 제도 ② 사회적 혁신 기업 우대 보증 제도	<p>□ 신규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p> <p>① 소셜벤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 소규모의 사회적 기업 우대 보증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로 확대 개편(42→300억원)하고 전액 보증 허용 등 지원 강화
76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인큐베이터	① 수출 지원 (제도) ② 수출 육성 (제도)	<p>[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전자상거래수출지원 • GMD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 온라인수출지원 • 융복합기술교류촉진
77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컨소시엄	수출 연합체	<p>- 해외단체전시회,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선정 시 인도, ASEAN 등 아시아 시장에 가점을 부여하여 비중점진적 확대*</p>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78	중소벤처기업부	쉐어링 잡 → 셰어링 잡	일자리 나누기	(특별보증)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Good Job 보증)하여 중소기업 고용 여력 확보 (5,000억원, 기보) • 고용창출(점핑잡, 쉐어링 잡)과 고용유지(베스트잡) 유형으로 나누어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등 지원 내용을 차별화
79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 하이웨이	아시아 진출 활성화 사업	중국진출 전용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 로 확대·개편하여 ASEAN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80	중소벤처기업부	엔젤 매칭 펀드	민관 투자 지원 기금	- 민간투자와 연계한 제도전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재창업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발굴. 투자하는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1억원), R&D(1.5억원), 엔젤매칭펀드 (1억원), 사업화 후속지원(0.5억원) 등 매칭지원
81	중소벤처기업부	월드 클래스 300	① 세계적 기업 300 ② 세계적 기업 300개 육성	[R&D] • 기술혁신기술개발 •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월드클래스 300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상용화 기술개발
82	중소벤처기업부	일안 자금	일자리 안정 자금	- 일안자금 홍보 상황실을 설치하여 기관별 일일 홍보실적 점검 - 일안자금 신청기업이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여 집행 촉진
83	중소벤처기업부	임팩트 투자 펀드	사회적 기업 투자 기금	(벤처투자)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 임팩트 투자 펀드 ' 조성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84	중소벤처기업부	점핑 잡	일자리 늘리기	(특별보증)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Good Job 보증)하여 중소기업 고용 여력 확보 (5,000억원, 기보) • 고용창출(점핑잡, 셰어링 잡)과 고용유지(베스트잡) 유형으로 나누어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등 지원 내용을 차별화
85	중소벤처기업부	차이나 하이웨이	중국 진출 활성화 사업	중국진출 전용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확대·개편하여 ASEAN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86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창업 클러스터	혁신 창업 산학 협력 지구	(지역 혁신창업클러스터 조성) 지역에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생태계를 지방에도 조성
87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인큐베이팅	협업 육성	◦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업인큐베이팅 신설,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지원 인프라 확충 - 조합원 신뢰구축, 조합 특화교육, 비즈니스모델 설계 등 체계적 설립을 위한 '협업인큐베이팅' 신설
88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코디네이터	협업 조정자	◦ (매칭 시스템) 협업 기업 발굴 매칭을 위한 온·오프라인 협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업 코디네이터' 양성 추진
89	중소벤처기업부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취업 통합 지원	◦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8,000명)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90	해양수산부	K • S E A F O O D Global Week	한국 수산 식품 세계 홍보 주간	수출 시장 다변화 > 美, ASEAN, EU 등으로 시장 다변화 - 해외 현지 수출지원센터 확대 (7개소→10개소) - 'K • SEAFOOD Global Week' 운영* '18.11월(2주간)/10~15개 국가 동시 개최
91	해양수산부	NEW START	해운 산업 재건	01.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 해운산업 NEW START 와 항만 민간투자 확대 2.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3.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
92	해양수산부	마리나 비즈 센터	해양 레저 산업 지원 센터	1. 해양수산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 • 마리나 대중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 거점 마리나 항만 확충(3개소), 맞춤형 마리나 항로 개발 > 요트 제조·수리·금융·판매 등 연관 산업 육성 *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착수, '18.2), 대형 요트 시제선 건조 (100ft급)
93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Project	어촌 부흥 정책 300대 계획	어촌 뉴딜 300 Project 3. 추진방안 해수부, 해경, 어촌어항협회, 해운조합 등 합동 T/F 운영 ⇒ 300개 선도 대상 선정(유형별 우선순위 선정) ⇒ 단계적 현대화 및 성과 확산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94	해양수산부	해양 바이오 बैं크	해양 생물 자원 은행	해양신산업육성 >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연관산업 융복합(강원 고성) > 해양바이오 बैं크 구축('18.9) 및 상 용화 지원 > 조류·파력 에너지 실험장 조성
95	해양수산부	해양 치유 Biz 모델	해양 치유 사업 모델	3.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 • 관광콘텐츠 개발 > 해중경관 시범지구 지정('18.上), 수중레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태안, 완도 등 4개소를 중심으로 해양치유 Biz모델 개발(1,000억원)
96	행정안전부	e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본인 확인 내역 조회 및 회원 탈퇴 지원 서비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실질화 - 이용한 정보, 위탁내역 등을 국민 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통지 -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를 통한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강화
97	행정안전부	Smart-Nation 서비스	① 지능형 정부 서비스 ② 전자 정부 서비스	○ 주민생활과 밀접한 첨단기술 기반 Smart-Nation 서비스 * 구현 * 지능형 CCTV 스마트관제 서비스, 전국공통 안심귀가 서비스 등
98	행정안전부	국가 데이터 맵	① 국가 자료 지도 ② 국가 데이터 지도	□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지원 ○ 국민·기업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제고 - 공공데이터 소재 및 연관관계를 시 각화한 ' 국가데이터맵 ' 구축 공개 - 민간의 데이터개방 요구에 신속하 게 답변하는 '데이터1번가' 본격서비 스

번호	부처명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안	해당 용례(출처)
99	행정안전부	디지털 원 패스	전자 정부 서비스 통합 인증	<p>□ 쾌적하고 편리한 정부 홈페이지 실현</p> <p>○ 본인확인절차 간소화로 편리한 전자정부 인증체계 도입</p> <p>-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원패스’ 실시</p> <p>- 전자정부서비스에 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 본인확인 방식 적용</p>
100	행정안전부	저작권 프리 존	<p>① 저작권 자유 이용 공간</p> <p>② 저작권 자유 이용 영역</p> <p>③ 국가 기록물 공유</p>	<p>□ 국가기록관리의 공정성·전문성 강화</p> <p>○ 국가기록의 철저한 관리 공유 확대를 위한 기록물법* 전면 개정</p> <p>* 기록 처분동결제도 법제화, 대통령 기록 지정 관리 열람 절차 재정립 등</p> <p>○ 「저작권 프리존」 운영, 소장 기록물의 자유로운 활용 지원</p>
101	행정안전부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 창업 컬래버 프로젝트	<p>① 창업 협동 사업</p> <p>② 협동 창업 과제</p>	<p>□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지원</p> <p>○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및 강소 데이터 기업 육성</p> <p>- 공공데이터 창업을 소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창업콜라보 프로젝트’ 추진</p>

연구책임자 김미선

공동연구원 임현열, 조윤정, 최유숙

연구보조원 고랑원, 김보현, 안예림, 이지연, 정윤희

담당연구원 김미현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인 쇄: 유일문화사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18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2018-01-46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